

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

심포지엄 자료집

2016. 6. 24(금) 10:00 ~ 19:00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주최/주관 한국공간환경학회, 서울연구원

프로그램

09:40~10:00	등록
10:00~10:20	개회사 김용창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 환영사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
10:20~11:00	기조발표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11:00~12:00	제1부 : 희망의 도시,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도시인의 소외와 정의로운 도시> 강내희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도시에 대한 권리와 시적 정의>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 <예술인간의 탄생과 반자본주의적 공통도시의 전망>
12:00~13:10	점심식사
13:10~14:30	대담 : 박원순 서울시장과 데이비드 하비 교수 서울, 희망의 도시를 향하여 연구소개와 대담안내(5분)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발표(15분) 조권중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포용도시 서울의 성과와 과제> 대담(60분) 박원순 서울시장, 데이비드 하비 뉴욕시립대학교(CUNY) 교수
14:30~14:40	휴식
14:40~15:40	제2부 : 희망의 도시, 정치적 대안은 무엇인가? 박배균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자본주의 헤게모니와 대안적 도시 이데올로기>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도시공동체와 공유지> 장세용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공간 점거에서 수행성과 (비)재현 공간 행동주의>
15:40~16:40	제3부 : 희망의 도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도시 인클로저와 거주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 신현방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지리환경학과 교수 <투기적 도시화,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권> 정현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젠더 차별을 넘어 희망의 도시 상상하기>
16:40~17:00	휴식
17:00~18:00	제4부 : 희망의 도시, 대안적 정책은 무엇인가?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도시의 진보와 진보도시의 조건>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발전도시 위기와 포용도시로의 도시정책성의 재정립>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적 경제와 대안적 도시만들기>
18:00~19:00	종합평가 사회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토론 차성수 금천구청장, 서왕진 서울특별시 정책특보, 강내희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

* 오후 1시 10분부터 2시 30분까지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 본 심포지엄은 사전 신청을 받지 않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목 차

희망의 도시, 기조발표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1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제1부: 희망의 도시,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

도시인의 소외와 정의로운 도시	19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도시에 대한 권리와 시적 정의	37
(강내희,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예술인간의 탄생과 반자본주의적 공동도시의 전망	53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	

제2부: 희망의 도시, 정치적 대안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헤게모니와 대안적 도시 이데올로기	69
(박배균,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도시공동체와 공유지	81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공간 점거에서 수행성과 (비)재현 공간 행동주의	95
(장세용,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제3부: 희망의 도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도시 인클로저와 거주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 113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투기적 도시화,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권 133
(신현방,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지리환경학과 교수)
- 젠더 차별을 넘어 희망의 도시 상상하기 143
(정현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제4부: 희망의 도시, 대안적 정책은 무엇인가?

- 도시의 진보와 진보도시의 조건 155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 발전도시 위기와 포용도시로의 도시정체성의 재정립 171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 사회적 경제와 대안적 도시만들기 197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희망의 도시, 기조발표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최병두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 현재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

현재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재 처해 있는 위기는 이를 경험하거나 이해하는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는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을 목격한다. 예로, 지난 5월 중순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남성에게 2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고, 6월 초순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의 젊은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이번 사건들이 도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이 사건들은 과거처럼 단순히 개인적 사건으로 치부되어 묻혀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두렵게’ 하거나 ‘비정규직 하청회사의 청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를 안타까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추모 열기를 만들어내었다. 이 사건들은 오늘날 도시 공간에서 하위계층뿐만 아니라 중간층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이 울분을 터뜨리는 사회공간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재벌 대기업들과 경제 관련 전문가들도 한국 경제가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공감한다. 한 언론사(한국일보, 2016년 1월 1일)가 2016년 1월 1일 최상위 그룹의 재벌과 주요 대기업 CEO 45명과 국내 경제·경영학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경제가 처한 운명의 시간을 ‘밤 11시 이후’로 답한 응답자가 64.4%”에 달했고, “‘밤 11시 50분 이후’, 즉 우리 경제가 극한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시간이 채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 응답자도 26.7%”나 되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한국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요인(복수응답)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60.4%), ‘기업의 수출 경쟁력 상실’(54.7%), ‘중국의 경기 둔화’(39.6%), ‘가계부채’(30.2%)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한국 경제의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하게 노정되는 세계경제의 위기와 관련된 요인들에 주목하고, 이어서 국내의 사회경제적 위기의 도화선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매우 심각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의 모색에서 정부가 보여준 인식은 재벌 기업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연말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의 입법화를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비효율적 노동시장’을 경제위기 요인으로 꼽은 CEO는 13.9%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유발하는 국내 요인으로 지적된 ‘가계부채’는 사실 정부가 지난 2년여 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지만, 실제 이로 인해 오히려 가계부채는 급증했고, 소비는 위축되었으며, 결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도시 서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위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지구경제의 위기와 더불어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 단지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정치적 통치 전략에 필요한 정책만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선 오늘날 도시인들이 죽음과 생존의 위험이 노정되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현대 도시가 단순히 각종 재난 사고들이 발생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서 억압과 소외

에 의한 적개심이나 비정규직 하청 노동에 의해 내몰리는 위협에 의해 언제든지 ‘죽음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은 다시 낯선 타자(특히 젠더화된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를 무작위로 혐오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적 공간은 공포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계층적으로 분화된 노동시장에서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도시 노동자들은 생명을 건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결국 죽음을 맞기도 한다. 이와 같은 파국적 위기 현상들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나 책임이 아니라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울분을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를 유발하는 경제·정치적 배경에 관한 분석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달리 말해, 오늘날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기는 이들이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관련되며, 또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의 한계에 기인하는가를 밝히고, 나아가 삶의 희망을 열어 나갈 새로운 도시 공간을 모색하도록 요구한다.

물론 한국 경제의 극단적 위기 상황을 인식한 재벌 기업인들도 이에 대처하고자 하겠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를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할 뿐이다. 이들은 당면한 위기의 핵심 요인으로 세계 경제의 침체와 국내 가계 부채의 급증을 꼽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가 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경제 위기가 어떻게 도시 위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와 결합되어 있는가를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관련 학자들조차 그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 또는 자본 축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또한 위기를 유발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도시화 과정, 즉 도시 내 및 도시 간 건조환경(엄청난 규모로 확장된 도시의 사무·주거·공공 건축물들과 공간,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리적 인프라 또는 고정자본)을 통한 자본순환이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물론 도시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순환은 한국 경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핵심적 과정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도시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축적 과정은 세계적 금융위기를 유발했으며, 이러한 점에서 하비(Harvey, 2009)는 오늘날 경제위기를 ‘도시의 위기’라고 주장한다.¹⁾

국가의 임무들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책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의 대응책은 위기에 대한 전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기보다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정책들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위기는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되거나 새로운 양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 제고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관련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압박했던 정부의 통치 양식은 점점 더 비소통적 권위주의 경향(여성 대통령에 의한 가부장적 통치방식은 아이러니하다)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동안 추진했던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은 한편으로 도시 건조환경에의 투자가 자본 축적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대출규제 완화와 같은 금융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오히려 전세 및 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위기와 더불어 소비 위축으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는 부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이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정치권력의 자기 재생산에 기여할지는 모르지만,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위기의 심화와 기업 및 국가 전략의 한계는 이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당하는 도시인들에게 위기에 대한 각성과 대안적 실천을 요구한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 축적과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경제적 힘이 지배하는 도시 공간에서, 도시인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공간적 질서가 어떻게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체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안에 거주함으로써 점점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위험을 막연하

1) 즉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397건의 금융위기가 있었으며, 이러한 금융위기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도시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미국에서 이 위기의 기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의해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기가 아니라 도시 위기이다”라고 주장한다(Harvey, 2009).

게 느끼고 있을 뿐이다. 도시의 건조환경은 자본 축적 과정에 편입·통합되고, 도시의 공적 공간은 자본과 국가 권력에 의해 안전이 보장되기보다 오히려 위험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도시에서 절망과 위험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진되어 가는 주체성을 끌어 모아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는 도시 공간의 틈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나갈 것인가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 답은 분명하다.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전제로서, 도시 공간이 자본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며, 특히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 그리고 도시의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와 기업의 한계는 무엇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진정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2. 도시의 발달과 자본 축적

인간이 처음 이 지구상에 출현하였을 때는 자연 속을 헤매면서 수렵과 채취로 생존했지만, 자연환경에 대한 인지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인간이 모여드는 도시가 형성되게 되었고, 이에 터전을 두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문명은 도시와 함께 시작되었고, 도시는 인간 문명의 저장고라고 일컬어진다. 물론 이러한 도시의 기원에 관한 설명은 문명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명과 자연 간의 변증법적 관계성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고대 그리스의 유랑시인 호메로스의 서시시 <오디세이아>는 고향 도시로 귀환하는 오디세이아가 어떻게 미지의 자연을 과학적 지식과 더불어 신화적(또는 시적) 상상력으로 헤쳐 나가는가를 서술하고 있다.²⁾ 여기서 도시는 인간이 필사적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생존의 공간, 과학적 지식 및 시적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무지의 자연과 사악한 인간과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내는 해방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카우퍼(J. M. Cowper)의 말을 빌려 이러한 도시의 의미를 표현하면,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물론 도시의 기원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겠지만, 도시의 형성과 발달은 정착생활과 더불어 누적된 잉여물이 집합·저장되는 장소, 그리고 이러한 잉여물을 전유하고 관리하는 정치·경제적 지배계급, 즉 비생산계급의 거주지로서의 기능과 관련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는 주변 농촌 지역이나 다른 도시들로부터 수탈한 잉여물을 이용한 화려한 건축물들이 누적되고 지배계급의 사치스러운 생활양식이 영위되는 공간이었다. 인류 역사의 초기 사적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았던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이러한 잉여물을 공동으로 소유·이용하면서, 도시(공간)를 ‘공통재’를 인식했을 것이다. 또한 아렌트(Arendt, 1959)가 <인간의 조건>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polis)처럼 도시공간은 물질적 해방을 전제로 자유로운 시민들이 민주적 정치를 논하는 공론의 장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잉여물은 누구에 의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든지 간에 소수의 지배집단에 의해 전유되고 관리된다는 점에서, 도시는 잉여물의 생산계급과 이를 전유하는 비생산계급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계급 투쟁의 장이기도 했다. 즉 도시는 잉여생산물의 사회·공간적 집적지였으며, 도시화 과정은 언제나 계급적 힘 관계 또는 계급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잉여물의 집적지이며 저장소로서 도시, 그리고 인간 생존의 조건이며 또한 동시에 계급투쟁의 장으로서 도시의 역할은 고대사회와 봉건제 사회를 거쳐 자본주의 하에서도 지속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도시가 이

2) 아도르노(Adorno, 1999)는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신화와 계몽(과학적 이성)의 ‘부정’ 변증법으로 이해한다. 즉 고대 신화 속에서 계몽적 요소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지만, 근대 이후 도구적 이성에 기초한 현대 문명은 인간 해방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을 새로운 종류의 야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된다.

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은 과거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고 강력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잉여가치의 지속적 생산을 필수적으로 전제하며, 도시공간은 이러한 잉여가치 생산의 단순한 장일 뿐 아니라 도시공간의 생산을 통해 잉여가치가 생산되고 재투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Lefebvre, 1973)는 도시 공간이 자본주의 역동성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그 역동성이 전개되는 장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가 그 자신을 지속적으로 존립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산하고 재생산해야 할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하비(Harvey, 2012, 28)는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고 더욱 나아가 자본주의 발전과 도시화 간의 불가분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즉

자본주의의 토대는 잉여가치(이윤)의 영속적 추구이다. 하지만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자본가는 잉여생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실은 자본주의가 도시 공간의 형성에 필요한 잉여생산물을 끊임없이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역도 성립한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생산한 잉여생산물을 흡수하려면 도시 공간의 형성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Harvey, 2014, 28).

이와 같이 자본주의에서 도시 공간은 단순히 그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생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존립 수단이 되었다. 전자본주의 사회는 도시를 시골로부터 분리시키고 이들 간 모순을 심화시켰다면, 자본주의는 시골을 포함하여 사회(한 국가에서 나아가 세계) 전체를 도시화하는 과정, 즉 자본의 도시화 과정을 통해 발전하며 그 모순을 심화시키는 체제로 이해된다.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 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세 도시의 해체와 새로운 근대적 자본주의 도시의 발달을 동반했다. 자본주의 도시는 장거리 무역과 약탈을 통해 부를 누적시키는 한편, 봉건영주로부터 해방된 농노들이 자유 임금노동자로 모여드는 장소였다. 토지 '인클로저'(울타리치기)는 도시의 임금노동자의 형성과 더불어 봉건적 토지 소유관계를 근대적 사적 소유(그리고 이로 인한 공유지의 소멸)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사적 소유와 토지로부터 농노의 분리 및 이에 따른 도시 임금노동자의 증대는 자본 축적을 위한 초기 자본 형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시원적 축적'의 발판이 되었다. 이러한 시원적 축적과정과 공간의 인클로저는 그러나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자본 축적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하비는 이를 '탈취에 의한 축적'이라고 지칭한다(Harvey, 2005).

물론 자본주의 경제발전, 즉 자본 축적의 확대 재생산에서 핵심적 과정은 임금노동자에 의한 가치와 잉여가치의 생산과 실현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잉여가치의 발생은 그 특유한 생산방식, 즉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받는 것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생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노동자에 의해 생산된 이러한 가치와 잉여가치는 상품 그 자체에 내재된 것처럼 간주되고, 이는 시장에서 상품의 판매를 통해 얻게 되는 화폐 수입을 통해 실현된다. 이렇게 실현된 잉여가치는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자본가들은 생산물의 가치와 생산과정에서 지출된 임금 및 자본재의 가치 간 차이, 즉 잉여가치를 전유한다. 자본가에 의해 전유된 잉여가치는 이윤과 이자, 지대 등으로 배분되어 일부는 사치재로 소비되지만, 자본 축적의 확대재생산을 위하여 자본 순환 과정에 재투입된다. 즉 자본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잉여가치가 생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가치와 잉여가치가 재투자될 수 있어야 한다.

하비(Harvey, 1982)의 자본순환 이론에 의하면, 창출된 잉여가치를 흡수할 수 있는 자본의 순환 경로는 3가지 유형, 즉 직접적인 생산-소비과정과 이를 통한 재투자 과정, 건조환경(고정자본과 내구성 소비재)에 의 투자, 기술·과학 및 사회적 지출(교육, 보건, 복지, 이데올로기, 치안, 국방 등)부문에의 투입으로 이루어진다. 하비는 이러한 자본의 순환 경로들을 각각 1차, 2차, 3차 순환이라고 지칭했으며, 특히 그의 자본순환론은 자본 축적의 위기(또는 공황)이론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자본순환의

경로는 한 영역에서 발생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영역으로 자본의 흐름을 유도하지만, 새로운 영역에서도 결국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그의 자본순환론은 자본주의 도시 공간이 단순히 자본 순환의 장이 아니라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 축적의 핵심적 부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하비의 자본순환론은 각 영역으로의 자본 흐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또한 과잉축적으로 유희화된 자본이 제3차 순환 영역, 즉 기술과학 및 사회문화적 지출(즉 비물질적 생산)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탈산업경제 이후 과학기술 및 사회문화 부문에 대한 투자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으로의 자본 흐름의 배경과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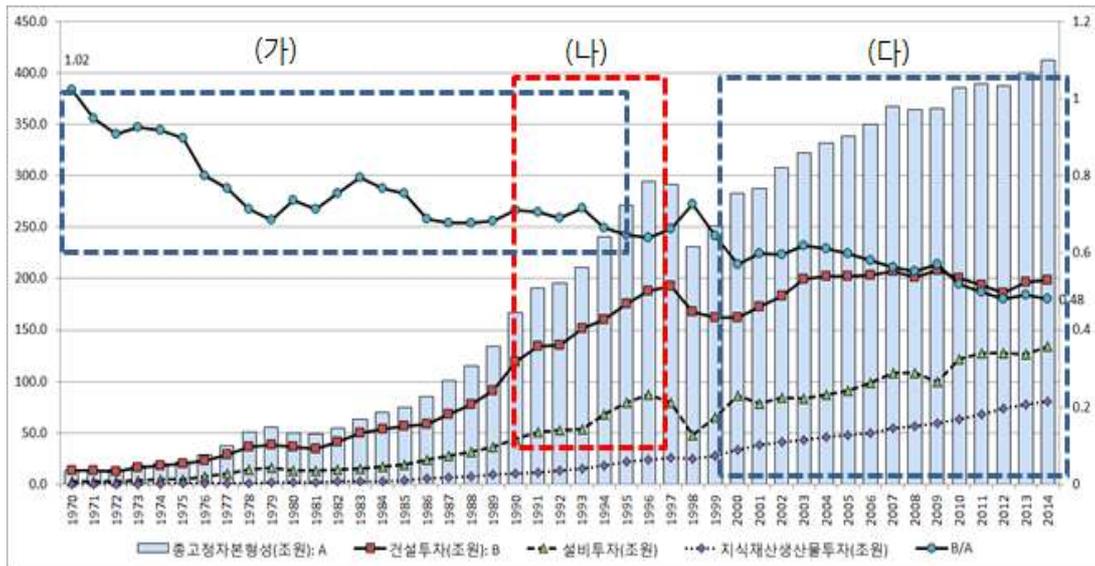
이러한 도시의 발달과 자본 축적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우선 한국의 자본축적과 도시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오랜 역사는 농촌 잉여물의 생산과 수탈, 도시 비생산(양반)계급에 의한 전유, 그리고 이에 따른 도시 공간의 형성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축적의 맹아는 조선 후기 또는 일제 강점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논의도 있다. 즉 조선시대 후기 자본 축적의 맹아적 단초와 새로운 중인계급이 주도한 도시 경제가 발달했다는 주장이 있으며, 또한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이식된 자본주의 체제가 곡물과 자원의 수탈(즉 탈취에 의한 축적)에 바탕을 두고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성장과 자본의 축적 과정은 분명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경제의 초기 단계 성장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자원을 수입하여 저임금 노동력과 결합하여 생산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던 정부와 군부 엘리트에 의해 총원된 기술 관료들은 국가 '경제성장'을 최고의 통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기획·추동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발전주의' 국가에 의한 자본축적과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본주의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자유 시장경제의 형성과 확대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할지라도,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이 일본이나 대만등과 마찬가지로 국가주도적으로 추동되었으며, 이는 서구의 자유주의 경제발전과는 구분된다는 점에서 발전주의(또는 발전)국가라고 개념화될 수 있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국가가 외국 차관뿐만 아니라 한일협정 청구금, 월남전 수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자를 유치하였으며, 이렇게 유치된 외자의 대부분은 국가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공단, 도로, 항만 등의 건설부문에 집중 투자되었다는 점이다. 예로 1968년 착공하여 1970년 완공되었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총 공사비로 당시 약 430억원이 공식 투입되었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각종 세금의 확대뿐만 아니라 도로국채 발행, 통행료 수입등과 더불어 양곡차관과 비공식적으로 베트남 전쟁 특수에 따른 국가수입과 대일 청구자금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군사장비가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의 탈취가 이루어지기도 했다.(최병두, 2009)³⁾

<그림 1>은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고정자본의 형성을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생산투자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으로, 이 3가지 유형의 투자는 하비의 자본순환론에서 3가지 경로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70년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 부문의 건설투자는 13.2조원, 공장과 기계 등 설비투자는 2.3조원, 지식재생산물 투자는 0.2조원으로, 건설투자가 다른 영역의 투자 보다 월등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이후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 1990년대 중반이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70%이상을 유지했다. 이 점은 건설부문 투자가 한국의 경제성장(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견인하는 지대한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1997년 IMF 위기 이전까지 건설부문 투자는 비중이 다소 감소했지만 절대액이 크게 증가하여, 설비투자의 급속한 증가와 더

3) 즉 당시 “군수와 읍면장이 땅 주인에게 ‘국가발전을 위해 땅을 국가에 헌납하거나 헌납은 하지 않더라도 짠 값으로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점에서(손정목, 2003, 111), 건설투자를 통한 고정자본의 형성에서 이른바 ‘탈취에 의한 축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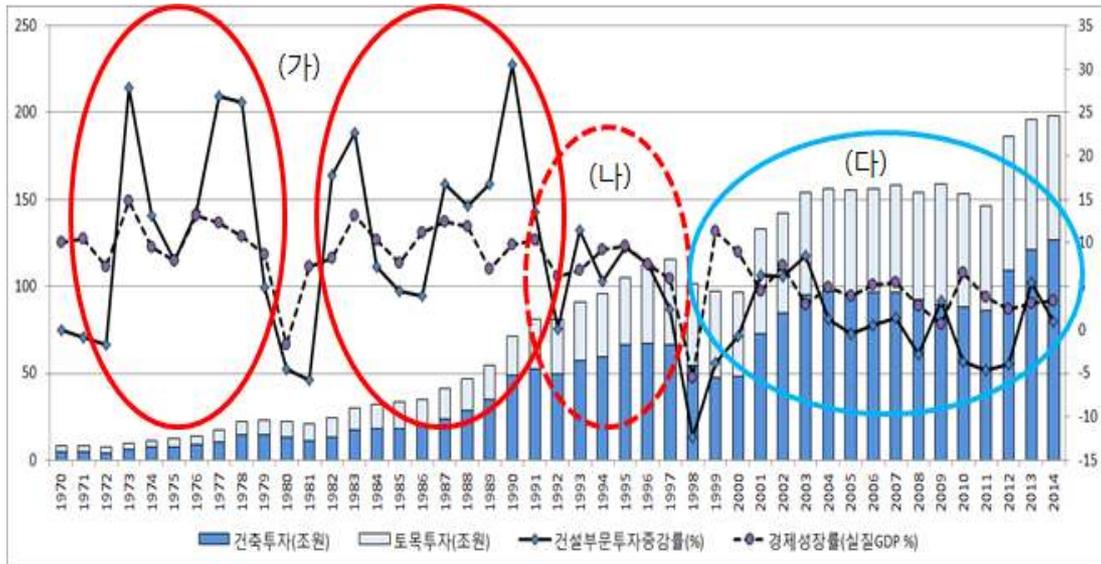
불어 내수시장의 확충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설비투자와 지식재생산물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건설부문투자는 절대금액이 거의 늘지 않았고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좀더 세밀한 분석을 요한다.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1> 한국의 부문별 고정자본형성 추이

이와 같은 건설부문의 투자는 결국 도시 내 주거, 사무, 공업용 건축물의 건설(즉 건축부문)이나 도시 간을 연결하는 도로와 항만, 공항 등의 인프라 구축과 확충(즉 토목부문)을 위해 투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는 이러한 건설부문 투자 증감률이 경제성장률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또한 이들이 어떤 주기를 가지고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건설부문 투자 증감률은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또한 197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대체로 10년 주기로 호황과 침체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건설부문 투자 증감률에서는 4~5년 정도의 소주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실물경제와 부동산경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경제 침체기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은 건설부문 투자를 촉진했고, 이에 따라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부문 투자가 위축된다. 하지만 실물경제의 급성장 이후 맞게 되는 과잉축적의 위기로 인해 유희화된 자본이 부동산시장으로 투입되면서 다시 건설부문 투자가 급증하지만, 결국 경제침체와 더불어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건설투자도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건축투자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계속 유지되었고 이 사업이 끝난 후 다소 감소했지만 2012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잉축적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기 침체나 또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초래된 위기 국면은 국가와 기업의 부동산 관련 전략에 따라 번번이 조정되어 왔다. 이러한 위기의 조정 전략에서 가장 우선적이며 빈번하게 동원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도시 건조환경의 확충과 도시 공간의 재편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역동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2> 건설부문 투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이와 같이 건설부문의 막대한 (재)투자를 중심으로 한 총고정자본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또는 자본축적이 도시 내 및 도시 간 건축과 토목 투자, 즉 도시화 과정의 물적 토대(건조환경) 구축을 통해 촉진되었으며, 또한 자본축적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부(즉 유희자본)의 상당 부분이 도시의 건조환경에 재투입되어 도시 공간에 체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의 건조환경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 그 자체가 자본 순환의 기본적 대상이며 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작동하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 위기를 공간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의미의 도시화 과정, 즉 도시 공간의 편성 과정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동시에 진행되었다면, 오늘날 탈산업화 과정에서 첨단기술경제, 지식기반경제, 창조경제 등 비물질적 생산부문이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자본축적 과정은 아직도 상당히 도시 공간의 재편 과정에 의존하고 있다. 도시 재생 또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등을 통한 새로운 도시화과정은 서구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봄을 일으키면서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 또는 ‘행성적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Merrifield, 2013; Lees et al., 2016). 이러한 도시화 과정은 그 동안 자본축적과정에서 사회적 부를 누적시키면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주요한 근원이 되었지만, 도시 건조환경에의 투자 붐은 결국 과잉투자·과잉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유발하고, 나아가 전세 및 월세 급등으로 인한 주거위기와 난개발에 따른 환경위기 등을 초래하면서 직·간접적 피해를 고스란히 도시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3. 경제의 위기에서 도시의 위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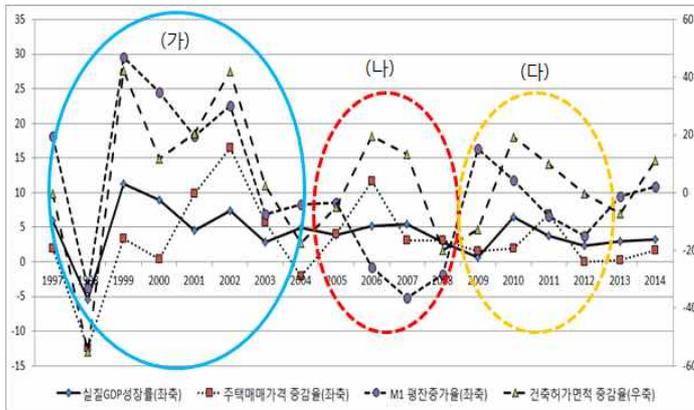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는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또는 경기순환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황이나 침체 국면이 아니라 자본축적과정에 내재된 구조적 모순의 표출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우선 직접 생산영역에서 과잉축적의 위기로 나타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과 국가의 전략으로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즉 실물생산에서 과잉축적의 위기는 신용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자본의 흐름을 다른 부문으로 전이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되지만, 또 다른 위기들, 특히 금융위기, 부동산위기를 유발하게 된다. 실물생산 영역에서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시장의 포화가 발생하게 되면, 과잉축적의 위기, 또는 하비가 위기의 제1차 국면이라고 불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과잉축적의 위기는 상품 재고의 누적, 생산설비의 불완전한 가동, 과잉 화폐자본, 노동력의 유향화 등으로 나타나고, 실질이윤을 저하를 초래한다.

그러면 이러한 1차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즉 소비를 촉진하여 (잉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용체계가 발달하게 된다. 신용체계는 미래에 발생할 수입을 앞당겨 지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제적 자본'을 작동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신용체계의 구축과 발달은 노동시간, 상품의 생산 및 유통 기간, 자본의 회전기간 등을 결정하며, 자본축적에 필수적인 계기가 된다. 신용체계에 기반을 둔 금융자본의 발달은 실물생산 부문에서 자본축적을 지원하고 과잉축적의 위기 상황에서 완충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자본은 생산자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의제적 성격을 띤 자본(신용카드, 국가와 기업의 채권, 주택담보대출 등)이며 일정한 투자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순전히 과잉 또는 유향화된 자본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금융자본의 자기 증식과정은 결국 생산자본과 괴리되어 부동산 및 금융 시장에서 투기적 성향을 보이게 되며, 특히 미래의 생산이 불확실한 상황(즉 경제침체 또는 저성장)에서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해져서 결국 금융시장이 붕괴하는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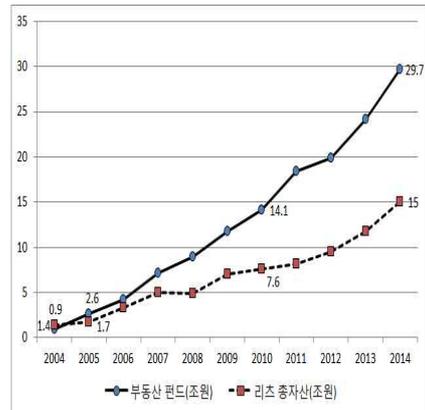
이와 같이 과잉축적으로 유향화된 자본은 신용체계의 발달에 의존하여 부분적으로 일반상품 생산으로 재투입되지만, 또한 다른 영역으로 경로를 바꾸게 된다. 유향자본이 흘러가는 2차 순환경로는 도시의 건조환경 영역, 즉 물질적 고정자본과 내구성 소비재 영역이다. 도시 건조환경 부문에의 투자는 물론 경제성장 과정 전반에서 진행되지만, 특히 실물경제의 위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또한 고정자본(공단과 공장, 기계 등과 같은 설비투자와 물리적 인프라 등 건설투자)과 내구성 소비재(주택, 자동차, 여타 가전제품 등)에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생산 및 소비에 바탕이 되지만, 자본의 투자 규모가 크고, 회전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융자본과 국가 정책의 지원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금융자본은 도시의 건조환경(건축물과 대규모 인프라와 같은 고정자본과 주택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을 통한 자본순환 과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의 부동산 자본은 미래의 지대에서 파생되는 의제적 자본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신용체계의 발달과 금융자본의 기능을 통해 팽창한다. 또한 금융자본은 내적으로 부동산 증권화(부동산펀드, 리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입(개발)을 전제로 투기적 자본과 모험적 건설자본 간 연결고리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 실질적인 개발과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결국 부동산자본과 금융자본은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즉 실물경제에서 과잉축적의 위기는 신용체계의 발달과 도시 건조환경 부문으로 자본 흐름이 전이로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결국 도시 부동산·금융의 위기로 확대된다.

물론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과정에서 한 국가의 경제적 위기는 단지 국가에서 내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축적과정과 이에 내재된 모순의 발현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국제 금융자본의 투기적 작동으로 이른바 IMF(외환)위기를 맞았으며, 이로 인해 실물경제 시장이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고정자본에의 투자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용체계의 구축과 통화량의 증대 및 여타 금융자본의 확충을 통해 유동성을 강화시키는 한편, 경기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시행하고 또한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자본의 순환 경로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했다. 자본의 유동성 증가를 위한 신용체계의 활성화는 건설부문의 투자 증대와 더불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좌우했다.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3> IMF 위기 이후 통화량과 건축관련 지표 변화



자료: 한국리츠협회

<그림 4> 부동산펀드, 리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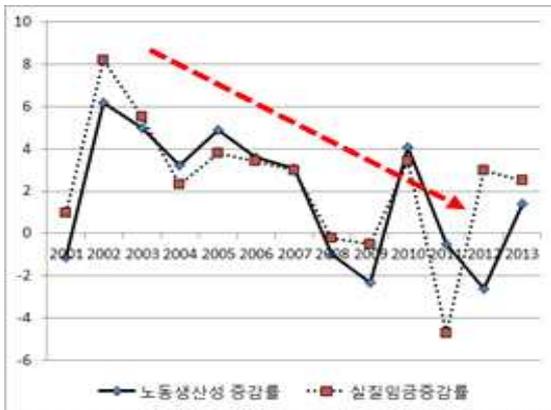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IMF 위기에 따라 1998년 경제지표들이 급락한 후, 1999년 다시 전반적인 반등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통화량(M1 기준)이 대폭 확대되고, 4) 건축허가면적도 급증하면서 서로 비슷한 변동성을 보였다. 그 후에도 통화량의 증감은 건축허가면적 증감을 1~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선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이 시기에는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토목사업 등으로 건축허가면적은 증대하지만 실제 주택매매가격의 큰 상승은 없었고, 오히려 2013~14년 통화량의 증가와 더불어 건축허가면적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신용체계의 정비, 특히 금융자본의 발달이 부동산 시장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물론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부동산시장에 투입되는 금융자본으로 부동산펀드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자산의 급증 추세에서 그 일면을 확인해 볼 수 있다(그림 4). 즉 우리나라의 리츠 총자산은 2004년 1.4조원에서 2014년에는 15조원으로, 부동산 펀드는 0.9조원에서 29.7조원으로 각각 15배에서 30배정도 급증했다는 사실은 이 시기 부동산 관련 금융과 투자가 얼마나 확장되었으며, 국가의 제도적, 체계적 지원 하에서 얼마나 민영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도시의 주택·토지시장은 흔히 수요의 변동성과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불균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금융대출과 여타 방식으로 투입된 금융자본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통제(또는 조작)되며, 정부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고 공급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격이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부동산 개발과 실수요의 한계로 부동산시장 및 이와 연계된 금융시장은 붕괴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은 부동산·금융 시장의 붕괴 또는 국제 금융자본의 공격 등으로 초래되는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잉여가치를 재투자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시키지만(외환보유고, 잉여금 사내 보유 등), 다른 한편으로 부채(즉 의제적 자본)를 동원하여 자본순환을 촉진한다. 이로 인해 국가 및 기업의 부채는 점점 더 누적되고, 실물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가계 대출 규제도 완화되지만, 결국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의 덩어리에 빠지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 사회적(국가 및 기업) 잉여의 누적과 다른 한편으로 부채의 누적적 증대 간 모순은 자본축적의 한계와 이로 인한 다양한 위기, 특히 도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한국 경제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심각하게 둔화되었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는 크게 위축되었다(그림 5).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출을 주도했던 재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4) 여기서 통화량은 '협의의 통화량'(M1, 즉 현금통화량과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합한 것에서 이 금융상품의 예금취급 기관 간 상호거래분을 제외한 통화량)을 자료로 사용한 것이며, '광의의 통화량'(M2) 자료를 사용할 경우 그래프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업의 총이익잉여금은 2001년 48.4조원에서 2010년 674조원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이 가운데 기업 내 유보율은 2001년 4.6%에서 2007년 26.7%로 급증했고 2008년 금융위기로 다소 줄었지만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6).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올리면서 사내에 누적시키는 것은 한편으로 일정한 이윤율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영역을 찾지 못했고, 다른 한편으로 앞으로 언제든지 찾아 올 금융위기(특히 유동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실질임금의 저하와 더불어 실물경제에서 자본 순환을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사회적 잉여를 내적으로 누적시켜 왔다. 예로, IMF 경제위기 이후 국제수지의 흑자 등에 힘입어 국가의 외환보유액은 1997년 89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7년 2622억 달러로 증가했고 2008년 2012억 달러로 줄었으나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3년 3465억 달러에 이르렀다.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5> 노동생산성 및 실질임금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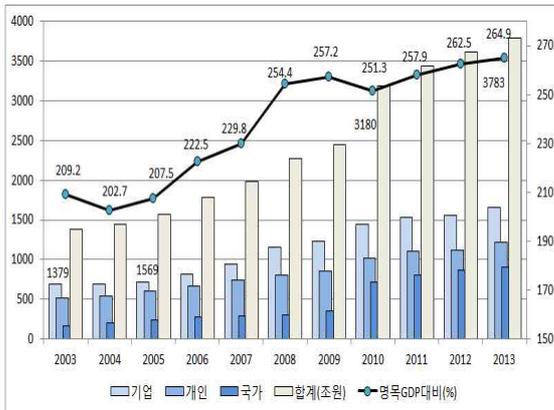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보고서

<그림 6> 기업의 이익잉여금과 사내 유보율

이와 같이 기업과 국가는 막대한 잉여금을 누적시키는 한편, 동시에 엄청난 부채를 증가시켜 왔다. 200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 및 실질임금이 저하되는 한편, 국가와 기업은 막대한 잉여를 누적시키면서도 확대 재생산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음에 따라 자본 순환의 전반적 정체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국면에서 각 경제주체들은 부채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려는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 즉 가계는 소비를, 기업은 생산을, 정부는 재정 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채에 의존했다. 이로 인해, 2003년에서 2013년 10년 사이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부채는 276조원에서 908조원(3.3배)로, 민간기업의 부채는 860조원에서 1652조원(1.9배)로, 가계 부채는 559조원에서 1223조원(2.2배)로 급증했다. 국가의 총부채는 1,379조원에서 3,783조원으로 엄청나게 증가했고, GDP와 대비하면 209%에서 265%로 증가했다. 2013년 경제주체별 부채를 GDP 대비로 보면, 정부는 40.1%, 가계는 91.6%, 기업은 158%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정부 부채를 제외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이미 임계치를 능가한 것으로 평가된다.⁵⁾ 이 처럼 부채 수준이 임계치를 초과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점은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회복되기 어려운 여건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5) Cechett et al.(2011)가 OECD 18개국에 대해 1980~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GDP 대비 부채수준이 가계 85%, 기업 90%, 정부 85%를 초과하면 GDP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한국은행

<그림 7> 경제주체별 부채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8>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현황

이러한 각 경제주체들의 부채 증가는 도시 위기를 가중시킨다. 정부의 부채는 금융안정화(외환매입기금 등에서 이자 및 원금 상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주요 원인들 중 하나는 대규모 공공사업(도시 뉴타운, 고속철도 건설, 4대강 사업 등)이었다. 기업의 부채는 은행 대출금, 장단기 기업채 등으로 구성되며 이미 2000년대 초에 임계치를 초과했지만, 특히 건설업체들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가장 높고 빠르게 증가하여 2007년 14.7%에서 2012년 205%에 달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예금은행 대출은 2005년 305.5조원에서 2015년 563.7조원으로 10년 사이 84.5%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005년 68.1%를 차지했고, 2008년 다소 줄었지만 2013년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71.3%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계대출의 증가,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도시의 서민들에게 주택 구입을 유도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자금 대출을 받아 건설·공급한 주택들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⁶⁾

이와 같이 각 경제주체들의 부채 위기는 도시의 건조환경과 공간 재편을 통한 자본축적 과정에 내재된 모순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의 건조환경은 과잉자본의 흡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도시 공간을 끊임없이 재편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그 동안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1970~80년대의 도시재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에서부터 2000년대 이후 도시재생, 뉴타운과 도시르네상스, 경제자유구역 건설이나 특구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거대한 아파트단지들의 재개발뿐만 아니라 초국적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유통자본의 쇼핑몰, 재벌기업의 오피스빌딩, 그리고 거대한 경기장이나 전시관 등이 조성되었고,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토지는 강제 매수되면서 서민들의 주거지와 생계형 가게들은 철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공간의 재편과정은 항상 사회적 약자의 배제와 공적 공간의 탈취를 전제로 했다. 이러한 도시 재개발은 도시 공간이 자본의 지속적 축적과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과잉축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는 핵심적 수단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재개발을 통한 자본 흡수의 또 다른 측면은 이른바 ‘창조적 파괴’였다.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도시 인클로저 등은 한편으로 도시 건조환경의 창출을 통해 도시 공간의 독점적 사유화와 이를 통한 자산 이득의 배타적 전유를 가능하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적 도시 장소의 파괴와 도시 서민들의 사회공간적 배제를 초래했다. 이와 같이, 자본축적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위기는 도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도시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축적의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와 희생은 강요받는 도시 서민들의 사회적 위기, 요컨대 도시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6) 물론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할지라도 주택 구입용도가 아닌 생활자금 목적으로 지출될 수도 있는데, 특히 2013년 이후 주택시장 금융규제 완화 이후 이 비중이 증가했는데, 2013년 9월 전환대출의 19.7%, 추가대출의 17.8%에서 2014년 9월에는 각각 25.3%, 26.3%에 달했다(한국일보, 2014년 12월 1일). 이는 도시 서민들이 실질임금의 위축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로 생활자금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생계가 어려워졌음을 보여준다.

4.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1) 도시 위기 대응 전략과 한계

오늘날 도시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건조환경이 자본의 축적 과정에 형식적, 실질적 그리고 금융적으로 포섭되고 이에 따라 도시공간이 재편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특히 도시 공간은 실물생산 자본의 집중뿐만 아니라 새롭게 급부상한 부동산자본과 금융자본이 작동하는 무대이며 수단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 공간은 자본축적을 위해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또 이를 재흡수해야 할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오늘날 도시공간의 생산은 자본에 의해 점점 더 장악되게 되었고, 국가는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도시공간은 이러한 전략들에 의해 실제 개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이익(즉 미래의 개발을 전제로 한 지대 수취)을 노리는 투기의 장이 되었다. 기존의 건조환경과 공적 경관은 새로운 건설과 공간 조성을 위한 창조적 파괴로 사라졌고, 새로운 도시 경관들은 자본과 국가 권력의 상징적 이미지들을 재현하는 스펙터클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 건조환경은 잉여가치 창출의 주요 수단이고, 유희화된 자본과 노동이 재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배 권력의 스펙터클로 전환하게 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과정은 가속적으로 촉진되고, 놀라울 정도로 규모를 확대시켰으며, 선진국들뿐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웅장한 건조환경을 자랑하는 메가시티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축적과 도시 공간의 재편과정은 처음에는 실물경제에서 발생한 과잉자본을 흡수하여 위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잉자본을 흡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도시 재개발을 통해 추진된 도시 공간의 재편과 더불어 이러한 도시 건조환경의 재구축을 위해 촉진된 규제 완화 전략은 결국 도시 부동산시장의 만성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도시 재개발로 경관은 외형적으로 확대되고 정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도시 내부 공간의 지나친 고밀화와 도시 주변의 난개발이 촉진되었고, 나머지 도시 지역이나 주변지역은 노후화, 황폐화되면서 개발로부터 소외되었다.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은 국가의 재정 부족과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명분으로 민영화되면서, 공적 공간에 대한 민간 자본의 유치와 이에 의한 민간 운영이 당연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시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금융 운영과 가계에 대한 부동산 금융대출의 확대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위기 속에 빠지도록 했다. 도시 건조환경을 통한 잉여가치의 창출과 이의 재투자 과정은 결국 도시 부동산시장의 만성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고, 도시 서민들의 사회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도시 서민들은 실물생산 영역에서 실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주변화될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의 개발, 관리, 운영으로부터 배제됨에 따라, 사회에 대한 소외감과 적대감이 점점 더 확대되게 되었고, 다양한 유형(즉 극히 개인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에서부터 연대적이고 공감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으로 사회에 대한 저항적 행동을 보이게 되었다. 도시는 잉여가치의 창출과 재투자의 장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를 둘러싼 저항의 장소가 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이 경제위기가 도시위기로 전환 또는 중첩되면서 심화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본축적 과정 자체가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기업은 경제의 저성장(즉 이윤율의 하락) 경향과 도시의 공간적, 사회적 위기 노정에 대응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우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처럼 ‘노동 개혁’과 ‘산업구조 조정’을 명분으로 해고와 실업을 더욱 유연화하고, 이를 통해 임금 압박과 비정규직 확대 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실물생산부문에서 과잉축적과 이로 인한 이윤율 하락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임금과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는 결국 구매력 감소를 촉진하고, 가계의 부채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그동안 위기 국면에 직면하여 흔히 그렇게 해 온 것처럼, 도시 건조환경의 추가 개발을 지속·확대시키고,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동산자본의 금융화, 민영화 전략을 강화하고, 또한 부동산시장을 관리·조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도시 건조환경의 실질적 수요에 대한 한계에 봉착하여 부동산 거품의 붕괴(또는 의제적 자본의 가치 실현 불능)로 인한 부동산·금융위기를 심화시키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정부와 기업은 과잉자본을 과학기술 및 사회문화 영역으로 투입하여, 비물질적 생산 부문을 확대하고 상품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른바 탈산업사회로의 전환 이후, 기업들은 기술, 지식, 정보, 디자인, 문화(방송과 영상 이미지)에서부터 지역 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등 비물질적 생산을 통해 새로운 자본축적의 계기들을 마련하게 되었고, 국가는 지식경제, 문화경제, 창조경제 등의 이름으로 이를 촉진하고자 했다. 사실 오늘날 대도시들에서 생산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토지나 다양한 천연자원 등 물질적 요소라기보다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어, 이미지, 지식, 코드, 습관, 관행 등 비물질적인 것들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들은 이러한 비물질적 요소들의 생산과 소비를 위해 화려한 스펙터클을 만들어내면서, 도시의 건조환경에 새로운 상징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물질적 생산 영역을 통한 자본축적 역시 실수요를 전제로 하지만 실물생산이 위축된 상황에서 생산된 잉여가치가 실현되기 어렵고, 또한 그 자체적으로도 인간의 창의성, 언어와 기호, 지식과 문화까지 상품화시킴으로써 인간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3가지 대응 방법들은 사실 자본 순환의 3가지 경로와 관련된다. 만약 정부와 기업이 진실로 경제 위기와 도시위기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면, 이 방법들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정부와 기업은 실질임금의 인상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구매력을 향상시켜서 국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비록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 봉착했다고 할지라도 국내 실물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잉축적된 자본의 일부를 도시 건조환경의 개발에 투입하여 미래의 생산(인프라)과 도시인들의 생활(주택)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실질적 수요에 조응할 수 있도록 개발을 통제해야 할 것이며, 도시 건조환경으로 유입되는 투기적 자본을 차단하고, 부동산자본의 과도한 금융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금융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 및 사회문화 영역으로 과잉자본을 투입함으로써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를 촉진할 수 있지만, 이 부문의 생산방식의 특성(지적재산권에 근거한 정보재의 초과이윤 또는 독점지대)을 고려하여 사용료 인하 또는 무료 개방 등으로 접근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당면한 경제위기 및 도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3가지 정책 즉 실질임금 인상과 내수시장의 실물경제 활성화, 실수요에 조응하는 도시 건조환경의 개발과 공적 운영, 비물질적 재화 및 서비스의 탈상품화와 접근성 증대 정책 등이 제안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자본축적의 메커니즘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제적 위기와 도시의 사회공간적 위기를 해소하면서 자본축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 즉 이 방안들이 자본축적의 메커니즘에 단기적으로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에 의해 기피되게 된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방안들은 자본 축적의 기본 논리, 즉 '축적을 위한 축적'을 무시한 채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성에 기여하게 되는 개량주의적 대안이라고 비판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공유재로서 도시 잉여의 관리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보다 근본적인 의문을 전제로 한다. 경제 위기 나아가 도시 위기는 도시 공간의 형성과 재편을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재투자하기 위한 자본의 순환과정에 내재된 모순에서 발생한 것

이라면, 달리 말해, 도시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재흡수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 수단이라면, 대체 이 잉여가치는 누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즉 누구의 것인가? 흔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잉여의 처분권은 국가나 기업이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시장경제의 복귀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잉여의 관리를 민영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오늘날 도시공간은 민간자본의 이윤 추구, 나아가 자본의 확대 재생산(잉여가치의 생산과 재투자)의 지속을 위해 재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도시 공간에 산재해 있던 공적 공간은 파괴되고 공유재들은 사유화되며, 이와 더불어 도시 서민들이 소유하던 소규모 주택들과 영세 가게들은 철거되고 그 토지는 민간자본에 의해 탈취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창출된 도시의 잉여는 자본과 도시 상위계급에게 편향적으로 배분되고 관리되며, 이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된다.

고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사회적 잉여(물 또는 가치)의 존재, 도시공간에 잉여의 누적 그 자체는 부정되기보다 오히려 생활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잉여물은 누가 생산한 것이며, 누가 관리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날 잉여가치는 자본축적 과정에서, 특히 자본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누적된 것이며 또한 경제적, 도시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는 분명 도시 서민, 정확히 말해 도시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된 것이며, 따라서 이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도시의 건조환경에 물질적으로 체현될 뿐만 아니라 그 경관에 부여된 문화적 상징자본을 포함하여 도시의 잉여가치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이고, 따라서 도시의 잉여가치는 공유재로 인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 동안 도시 공간을 통한 잉여가치의 생산과 재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따라서 도시의 잉여가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공유재는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되어 왔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적적으로 증가한 도시 공유재가 오늘날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파괴·소멸되면서 사적으로 전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 공유재에 대한 대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예로, 하비에 의하면, 지난 30여년간 기승을 부린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는 잉여관리를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며, 국가 이익과 기업 이익을 통합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창출하여 이를 정당화시켰다. 이들은 화폐 권력(금융자본)과 국가기구를 동원하여, 도시화 과정에서 창출된 잉여가치의 관리권을 점차 사적 또는 준사적 이익집단에 의해 장악되도록 했다. 그러나 도시의 잉여는 도시인들이 생산한 공유재이기 때문, 도시의 “공유재를 사용할 권리는 공유재를 생산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하트와 네그리는 과거 공장에서 이루어졌던 잉여가치의 생산이 오늘날에는 도시 전체로 확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기술가 정보, 지식의 생산에서부터 도시경관의 스펙터클과 이미지의 생산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의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는 오늘날 메트로폴리스가 거대한 공통재의 생산과 소비의 공간이 되도록 했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도시의 문화 공유재는 “노동의 산물임과 동시에 미래를 생산하는 수단”이며, 이러한 “공유재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구축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과 관련하여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에 관한 해결 방안, 나아가 공유재 관리를 둘러싼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68년 하딘(Hardin)이 제안했던 ‘공유지의 비극’에 관한 논의는 한정된 규모의 공동목장에 가축을 과잉 방목함으로써 결국 공동목장 전체가 황폐화될 것임을 전제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적 방안은 공유지를 사유화하여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도시 공유재의 소멸을 전제로 한다. 자유주의(제도주의)적 방안은 공유지를 사용규칙에 따라 분권적 자치를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공유지 사용자들 간 사용규칙 제정과 합의 준수를 전제로 한다. 근본주의(사회주의)적 방법은 가축(생산물 또는 잉여가치)을 공유화하고 공유지(생산수단)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사적 소유제의 부정을 전제로 한다. 좀더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논의에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롬(Ostrom, 1990)은 공유재의 관리를 위한 일반원칙으로 분권적 제도와 다중심적 거버넌스를 제안하며,

사회생태주의자 북친(Bookchin, 1992)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자치제의 연합네트워크를 제시한다. 하비(Harvey, 2012)는 오스트롬의 제안을 일부 인정하고(공유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의 조합과 국가 인정 부분), 또한 북친의 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 공유재의 비상품적 재생산과 질의 확대를 위한 전유와 이용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진보적 학계 및 사회운동 전반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도시 공유재(또는 잉여)의 생산과 이용의 민주적 관리를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하비(Harvey, 2012, 148)에 의하면, 도시화는 “도시 공유재...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사적 이익집단이 도시 공유재를 끊임없이 전유하고 파괴하는 과정”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를 생산한 집단적 노동자가 도시권을 요구할 근거”를 가진다. 하비가 강조하는 도시권의 개념은 사실 르페브르(Lefebvre)가 1968년에 처음 제시한 것으로, 당시 프랑스를 휩쓸었던 사회·학생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도시권 개념은 아직 체계적 의미를 갖추지 못했으며, 또한 자본과 상위계급이 일반 도시 서민들보다 더 강하게 도시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권에 관하여 보다 진보적 입장에서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예로, Mitchell, 2005; 강현수, 2010 등 참조). 그러나 도시권 개념을 채우기 위해 반드시 르페브르(그리고 하비)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도시권 사상은 [도시의] 거리에서,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것”이며, 억압과 소외로 “절망하는 사람들의 도와달라는 절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Harvey, 2012).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권에 바탕을 둔 도시운동은 도시의 공적 공간이 더 이상 사적으로 전유되지 않도록 실천적으로 점거하고자 하며, 바로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점령’운동과 그 후 서구 도시들로 도시 공적 공간 점유운동이 전개되었다(Vasudevan, 2014).

도시권의 개념과 이에 기반을 둔 도시운동은 도시 서민들이 도시의 잉여를 생산하는 조건(즉 노동조건)과 더불어 생산된 잉여의 이용과 재투자에 대한 민주적 관리를 주장한다. 도시 서민들은 도시 공유재에 대한 권리를 요구함으로써 자신이 생산한 잉여의 생산과 분배를 사회화하고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동의 부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들은 도시의 잉여가 자신들의 노동의 결과물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시공간에 재투입하는 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 즉 자신의 희망에 따라 도시를 재창조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권은 도시에 산재한 공적 자원에 대한 접근 권리 또는 단순한 도시 자원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요구와 실현을 넘어선다. 즉 도시권은 자신이 창출한 도시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도시를 재창출하려는 ‘생산적 정의’의 실현을 함의한다.

5. 희망의 도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도시는 인간 생존의 장소이며, 잉여의 저장고이다.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대 도시도 여전히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도시에서 잉여가치가 생산되고 재투자되는 과정은 과거의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다. 자본주의 도시공간은 단지 잉여물이 유통하거나 집중·저장되는 장소라기보다 그 자체가 잉여가치의 생산과 실현을 위한 핵심적 수단이 된다. 이로 인해 자본축적에 내재된 경제 위기는 도시 위기로 전환된다. 경제적 위기는 도시 건조환경에의 투자를 통해 일시적, 부분적으로 조정되지만, 부동산·금융자본의 작동의 한계로 도시 위기를 초래한다. 국가와 기업들은 이런 도시 위기 속에서도 추가적인 도시화가 필연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신자유주의적 전략들(상품화, 민영화, 금융화 등)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기적 현상들

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본축적에 내재된 모순들이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도시 위기는 도시인들의 생활 속에서 사회공간적 위기를 초래한다. 도시인들이 직면한 사회공간적 위기상들은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 고용 불안,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육아·교육·보건의료부문과 고령사회화에 대비하는 복지 부족 등과 같이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소외와 배제, 정체성과 노동 동기의 상실, 억압감과 적대감 등과 이로 인한 정신분열적 증상(예로, 분노조절장애와 왜곡된 여성혐오) 등 정신적 병리 현상들이 도시 공간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도시인들의 정신적 위기는 물질적 위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이데올로기 전략에 의해 조정·은폐되어 왔다. 도시인들은 이러한 위기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자본축적의 둔감한 규정력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잊고 살아간다. 이러한 점에서 박영균(2009, 154)은 “현대 도시의 위기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망각되며 조정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위험이자 공포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도시공간에서 목격하는 여러 위기적 증후군들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을 보면, 도시의 위기에 대한 인내는 이제 거의 한계에 달한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도시는 자본축적의 메커니즘에 의해 완전히 포섭되고 신자유주의적 국가 전략이 철저히 관철되는 공간이 되었지만, 또한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 저항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연대와 실천의 희망이 발아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절망과 희망의 교차하는 현실 속에서, 당면한 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이를 유발하는 자본축적과정과 이를 뒷받침했던 국가 정책의 한계에 관한 과학적(정치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도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 공간,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인간적(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자본축적 과정에 내재된 모순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가 어떻게 도시적 위기로 전이·확대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분석적 연구는 도시인들이 자신의 생존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 자신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를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즉 희망의 도시에 관한 연구는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생성적이며,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성찰적이고,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희망의 도시를 이론화하기 위하여, 예로 도시인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권 개념에서 나아가 시적 정의와 생산적 정의가 관철되는 정의로운 도시, 또는 반자본주의적 공동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예술인간을 정의로운 도시인으로 묘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희망의 도시를 위한 정치적 대안으로 자본주의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대안적 도시 이데올로기를 모색하거나 도시 공동체와 공유지를 위한 새로운 사고를 개발하고, 도시권에 따른 도시 공간 점거에서 나타나는 수행성과 (비)재현의 공간행동주의를 고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인클로저와 거주 위기에 대응하는 거주자원의 공유화를 강조하고, 투기적 도시화를 촉발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반대하는 도시권 개념을 재부각시킬 수 있으며, 자본주의의 가부장적 정치경제 체제 하에서 억압된 여성들이 꿈꾸는 새로운 도시를 그려 볼 수 있다. 또한 희망의 도시로 나아가는 도시의 진보와 이를 위한 진보도시의 조건을 고찰하거나 과거의 발전도시에서 벗어나 포용도시의 개념으로 새로운 도시 정체성의 재정립하거나,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안적 도시 만들기를 시도하는 정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희망의 도시에 대한 연구와 담론은 다양한 주제들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희망의 도시에 대한 의지와 잠재력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인간의 삶과 그 삶이 영위되는 도시를 바꾸어 왔다. 물론 인간의 역사는 단지 희망의 역사가 아니라 생산양식들 속에 함의된 모순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심지어 자본주의 하에서도 유토피아적 도시를 꿈꾸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지만, 자본 축적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가 말하고 하비가 공감한 것처럼, “희망은 모순 속에 숨어 있”(Harvey, 2012,

384). 희망의 도시에 관한 연구는 위기의 도시 속에서도 새로운 도시 공간이 가능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현시켜나가기 위한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본성 속에 위기의 도시를 새로운 희망의 도시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잠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역량이 현실 세계에서 최대한 발현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책세상.
- 박영균, 2009, “욕망의 정치경제학과 현대 도시의 위기,” *마르크스주의 연구*, 6(2), 152-186.
- 손정목, 2003,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도시 체계,” *도시문제*, 411, 106-117.
- 이진우-태정호 역, 1996, 인간의 조건, 한길사(Arendt, H., 1958, *Human Con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윤홍근 역,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하우스 코리아(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UP., Cambridge).
- 최병두, 2009, “경부고속도로: 이동성과 구획화의 정치경제지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312-334.
- 최병두, 2012, 자본의 도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정책, 한울.
- 최병두 역, 1995, 자본의 한계, 한울(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Blackwell, Oxford).
- 최병두 역, 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한상연 역, 2014,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에이도스(Harvey, D.,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s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 London).
- 홍승용 역, 1999, 부정변증법, 한길사(Adorno, T., 1992, *Negative Dialectics*, Trans. Aston, E. B., Continuum, New York)
- 황성원 역, 2014, 자본의 17가지 모순, 동녘(Harvey, D., 2014, *Seventeen Contradictions and the End of Capitalism*, Profile Books).
- Bookchin, M., 1992, *Urbanization without Cities: The Rise and Decline of Citizenship*, Black Rose, Montreal.
- Cecchetti et al., 2011, The Real Effect of Debt, BIS Working Paper.
- Harvey, D., 2009, The right to the city and alternatives to neoliberalism, <http://wsf2009.wordpress.com/2009/01/30/the-right-to-the-city-and-alternatives-to-neoliberalism/>.
- Lees, L., Shin, H-B., Lopez-Morales, E., 2016, *Planetary Gentrification*, Polity, London.
- Lefebvre, H., 1973, *The Survival of Capitalism: Reproduction of the Relations of Production*, St Martin's press, New York.
- Merrifield, A., 2013, The urban question under planetary urban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3), 909-922.
- Mitchell, D., 2005,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 Guilford Press.
- Vasudevan, A., 2014, The autonomous city: Towards a critical geography of occup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doi:10.1177/0309132514531470).

제1부

희망의 도시,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

<도시인의 소외와 정의로운 도시>

최병두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도시에 대한 권리와 시적 정의>

강내희 |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예술인간의 탄생과 반자본주의적 공동도시의 전망>

조정환 |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

도시인의 소외와 정의로운 도시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도시적 소외는 소외의 다른 모든 형태들을 담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지속시킨다(Lefebvre, 2003, 92).

1. 서론

오늘날 도시인들은 점점 더 깊어가는 소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도시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소원한 외적 힘에 의해 점점 더 강하게 압박감으로 느끼고 있다. 도시공간에서 우리는 이러한 압박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공간적 병리현상들을 점점 더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 현대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소외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저임금 노동(실질임금의 저하)과 고용 불안(실업과 비정규직화), 세분화된 분업과 발전된 기술에 의한 통제, 점점 심화되는 소득·자산의 양극화, 상업광고와 대중매체들에 의해 강제되는 과시적 소비, 부채 급증과 투기적 부동산·금융자본의 횡포, 낯선 도시 경관과 인위적으로 조작된 도시 문화, 빈번한 재해와 자연으로부터 거리감, 이들 모두는 도시공간에서 다양한 유형의 소외를 유발하는 요소들이다. 도시적 소외를 유발하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은 여러 원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자본축적 과정에 내재된 모순들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도시가 직면한 위기의 한 면은 자본축적의 모순에 따른 위기라고 한다면, 도시 위기의 또 다른 면은 점점 심화되는 소외로 인해 도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소외에 관한 이론적 철학적 논의는 헤겔과 마르크스의 초기 저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Cox, 1998/2009, Musto, 2010/2011). 이들은 소외를 인간 노동과 관련된 보편적 현상으로 파악했지만, 후기 저술들에서 마르크스는 소외의 개념 대신 상품의 물신성 개념을 강조했으며, 이 개념은 루카치의 사회적 물상화 개념에 반영되었다. 이들의 소외론은 기본적으로 임금노동에 의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 즉 경제적 측면의 소외에 초점을 두었다. 르페브르는 마르크스의 초기 저서와 하이데거의 후기 연구에서 제시된 소외의 개념을 결합시키고, 생산영역의 소외된 노동과 상품 물신화와 관련된 개념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이며 특히 일상생활의 모든 생활영역들로 확장된 개념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특히 마르쿠제와 프롬)도 소외의 개념을 인간의 보편적 조건 또는 일반적 감정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소외는 경제적 영역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개념사적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소외에 관한 논의는 1960~1970년대에 정점을 이루었지만 그 이후 철학자나 사회이론가들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소외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사라진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Yuill, 2011),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소외 현상이 완화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소외는 자본축적에 내재된 모순과 위기의 심화로 인해 계속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외 개념의 연구과정에서, 이 개념이 1970년대 이후 왜 학자들의 관심에서 사라졌는가라는 의문과 더불어, 르페브르(Lefebvre, 2003)가 소외 현상이 자본주의 도시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유발된 것으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의 도시적 양상이나 배경에 관한 논의, 즉 ‘도시적 소외’의 개념은 그 이후 왜 이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Fraser, 2015). 물론 여러 철학자 및 사회이론가들이 제시한 소외 개념이나 이론들은 암묵적으로 도시를 전제로 하거나 도시 공간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소외 연

구가 정점을 이루었던 1970년대에는 명시적으로 ‘도시 소외’를 다룬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다(Seeman, 1971; Fischer, 1973 참조). 그러나 당시 도시 소외에 관한 연구는 소외 현상들이 도시(인)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날 뿐 아니라 도시 그 자체가 소외를 유발하는 결정적 매체가 된다는 점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산업 자본주의 및 탈산업(후기) 자본주의의 도시에서 나타나고 또한 매개되는 다양한 소외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소외 현상과 이에 관한 개념이 새롭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편으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가 더욱 심화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또한 새로운 유형의 소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 할 수 있다. 즉 하비(Harvey, 2012, 104)가 이러한 점에서 ‘보편적 소외’(universal alienation)라고 주장한 것처럼,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문명이 직접 빚어낸 야만에 넌더리를 내며 외면함에 따라 보편적인 소외감이 훨씬 위협적인 수준으로 증폭하고” 있다. 그러나 하비가 소외에 관심을 가지는 더 중요한 점은 자본축적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즉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떤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적 주체성이 결집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 개념으로 가장 절적인 것이 소외의 개념”이라는 점이다(Harvey, 2014, 387). 물론 소외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적 주체성이 결집하는 것은 (특히 도시적) 소외를 극복하고 탈소외된 노동과 도시 공간 나아가 세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희망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탈소외된 도시가 어떻게 정의로운 도시로서 전망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근대 도시의 발달과 소외의 근원

인간의 역사에서 도시는 기본적으로 자연 속에서 인간의 집단적 거주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르페브르(Lefebvre, 1991b, 234-252)가 서술한 것처럼 고대의 도시 공간은 자연과 대립하여 구축된 인간의 거주지라기보다 자연을 신성시하는 상징적 건축물들의 입지 장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공간은 잉여물의 전유를 위해 점차 그 주변 공간(즉 농촌 공간)과 갈등에 들어가고 계급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시골 간의 갈등은 봉건제 하에서 다소 완화되었지만, 자본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근대 도시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도시 주변에서 나아가 전체 사회 공간을 도시화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도시는 생태적 손상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입은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잉여가치를 추출하기 위한 활동이 가장 먼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다. 이러한 도시의 발달은 인간과 자연 간 신진대사적 상호행위를 혼란시켰다. 물리적 측면에서, 도시인의 필요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이 가속적으로 증가하여 도시로 이동했지만, 도시인들이 소비한 폐기물들은 자연으로 되돌아가지 못했다. 도시 노동자들의 노동 및 주거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농촌 노동자들의 경작 양식의 변화와 자연의 파괴가 초래되었다(Marx, 1976, 637; 최병두, 2009, 254-255).

그러나 근대 도시의 발달은 단지 자연의 순환과정과 이로 인한 인간의 생산 및 생활 조건을 물리적으로 악화시키는 것만이 아니었다.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이며 또한 동시에 ‘자연적’이다. “인간의 물리적, 정신적 활동이 자연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간단히 “인간은 자연 일부”라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자연과의 상호관계에서 인간은 다른 종들과는 달리 능동적이며, 노동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연과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본성을 (재)생산하고, 사회를 (재)구성·발전시키게 된다. 인간은 대상적 세계, 즉 자연에 대한 그의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유적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 도시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을 자연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함으로써, 유적 존재로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점점 더 박탈하게 되었다. 근대 도시에서 자연으로부터

터의 소외는 단지 자연으로부터 멀어짐 즉 거리감 그 자체라기보다는 자연으로부터 인간 본성의 괴리에 따른 것이다.

근대 도시화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는 인간본성으로부터의 소외이다. 근대 도시의 발달에 따른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는 특히 자본주의 경제와 기술의 발달로 심화된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와 교환가치의 일반화는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를 심화시킨다. 사적 소유제로 인한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자의 분리는 “인간을 그 자신의 신체 그리고 외적 자연과 정신적 측면, 즉 그의 인간적 측면으로부터 괴리시킨다”(Marx, 1977, 69). 또한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서 상품(그 사용가치)과의 촉감을 통한 접촉은 사라지고 자연과의 감각적인 관계는 막혀 버렸다”(Harvey, 2014, 389). 자본주의적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를 더욱 촉진한다. 도구와 기술은 인간과 자연 간을 매개하는 노동의 연장이며 이를 통해 자연과의 효율적 신진대사 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근대 사회(도시)에서 기술은 인간에 의한 자연의 대상화와 지배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는 최근 자본과 국가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자연 관리(또는 생산)전략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환경적 조정’은 자연의 모든 측면들을 사유화, 상품화, 화폐화하고 있다. 공해오염물질의 처리시설에서부터 유전물질의 복제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생산하는 과정은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었다(최병두, 2009b), 또한 자연을 구성하는 무수한 이질적이고 다양한 구성요소들은 상품화와 사유화 과정에서 교환가치로 환원됨에 따라 동질화, 정량화, 추상화되게 되었다. 추상화된 자연은 그 내용물을 상실하고 도구적 기술의 지배 대상이 되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 본성으로부터 소외되고 또한 인간 본성을 소외시키게 된다. 요컨대 자본주의 도시의 발달과 자본축적을 위한 ‘환경적 조정’은 인간과 자연과의 신진대사 관계를 점점 더 자본의 지배하에 두도록 했으며, 이로 인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는 결국 인간 본성과 인간 종이 지닌 잠재력으로부터의 소외를 동반한다.

이러한 자연의 구성요소들 가운데 인간 생활과 자본축적 과정에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요소가 토지이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공여물’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사적 소유제의 확립과 이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정은 토지에 가격을 매겨서 마치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물신화시킴으로써 이에 따른 도시적 소외의 주요 근원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공유지의 사유화 과정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났던 인클로저(울타리치기)와 이에 따른 ‘시원적 축적’ 과정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16~17세기 장원체제에서 근대적 토지소유관계로 전환하면서 자행되었던 인클로저는 토지의 사적 소유관계를 확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노들을 토지로부터 분리시켜 도시의 자유 임금노동자가 되도록 했다. 즉 이러한 인클로저는 영세농민들의 토지 이용을 박탈하고 토지를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자본의 순환 과정에 투입될 초기 자본의 형성에 기여했으며, 또한 봉건영주로부터 뿐 아니라 생산수단(토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도시의 임금노동자의 누적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인클로저와 이를 통한 토지의 사유화와 상품화는 단순히 농촌 공동체의 해체나 장소성의 상실에서 나아가,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농업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소외를 심화시키는 물상화 과정이며, 또한 명목상으로 자유로운 주체가 도시의 노동시장과 자본축적의 객체로 전환하는 소외 과정이었다(Amaral, 2015). 인클로저에 의한 토지의 탈취 과정은 자본주의 초기 즉 시원적 축적단계에서 나타났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도시에서도 만연해 있다(Sevilla-Buitrago, 2015; 김용창, 2016). 즉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과정은 이러한 인클로저의 현대판으로 간주된다.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도시 재개발과정은 도시 공간의 기존 사용가치(또는 공적 가치)를 제거하고 도시의 약자들을 축출·배제하여 토지로부터 소외시키는 한편, 토지 그 자체가 마치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물상화시킴으로써 더 높은 교환가치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

시킴으로써 하는 현대 도시 공간에서의 유틸리티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도시에서 소외를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은 자연(그리고 토지)으로부터의 소외와 더불어 인간 노동의 소외이다. 농촌을 떠난 (즉 생산수단을 상실한) 도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하여, 즉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임금을 대가로 자신의 유일한 소유물인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사용권을 정해진 기간 동안 임금을 받고 자본가에게 양도(소외)한다. ... 노동자는 노동계약 기간 동안, 그리고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이후에도 다른 노동자로부터, 자연과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들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의 산물에서도 멀어진다. 박탈과 탈취는 노동자 자신의 창조적 본능이 좌절된 데 대한 슬픔과 상실의 감정으로 경험되고 내면화된다”(Harvey, 2014, 388). 이와 같이 노동력이 양도되기 위해, 우선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상품화와 화폐에 의한 축적이 전제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 노동은 시간단위로 계산되는 추상적 노동이 된다. 이러한 노동의 상품화는 노동시장에서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업장(즉 생산과정)에서는 불평등한 관계와 소외의 근원이 된다.

상품화된 노동은 작업장에서 자신이 받은 임금보다 더 많은 가치 즉 잉여가치를 생산하지만, 실현된 잉여가치는 자본가의 이윤으로 전유된다.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작업장의 생산과정은 잉여가치(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상품의 교환가치 생산을 중심으로 조직되지만, 노동자들은 생산과정과 이를 통해 생산된 상품들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상품은 분명 노동의 생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신비화, 즉 물신화된다. 상품의 물신성과 이를 매개하는 교환가치는 인간들의 사회적 연계를 사물들의 사회적 관계로 전환시킨다. 이에 따른 “사물의 인격화와 인간의 사물화”는 노동의 조건이 마치 자율적인 힘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며, “노동의 물질적 조건이 노동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그것들에 의해 지배받는” 관계를 만들어낸다 (Marx, 1976, 1054). 노동자는 가치를 생산하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가치에서 소외되고 노동의 조건으로 지배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도시)사회에서 소외란 개인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며 실제 권력의 문제로 이해된다. 즉 소외는 생산과정에서의 임금노동에 기인하며, 그 결과 사람들 간 사회적 관계가 상품(사물)들 간 관계로 전환하고, 이에 의해 지배됨을 의미한다.

자연과 노동의 상품화와 이에 따른 소외는 이들 간의 관계에 개입하는 기술 및 분업의 발달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 기술은 자연에 개입하는 인간 노동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과정에 투입되는 기술은 노동자의 존재를 풍요롭게도 할 수 있고, 또한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다. 기술은 분명 노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에 수반된 고통과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변화의 역동성은 노동자의 권력을 빼앗고, 노동의 참여 기회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기술은 자연을 도구적인 방식으로 대상화하고, 진정한 노동의 실현 기회를 박탈했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은 그 자체로는 양면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자본축적 과정에서 생산성과 잉여가치의 증대에 동원되는 기술은 자연을 더 많이 지배하고 또한 이를 위하여 인간의 노동과정, 나아가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자 한다. 특히 산업혁명을 전후하여 장인-도제 관계와 주문자 생산에 주로 의존했던 가내수공업에서 대량생산 공장제 기계공업으로의 전환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계조작자, 기계의 부속물이 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장제 공업의 발달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장소(작업장)와 비노동(여가)시간의 장소(일상생활의 장소)를 분리시켰다.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자신의 삶을 위한 것으로 느끼지 않게 되었고, 시계시간에 맞춘 작업장 출근은 도시인들을 소외의 공간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작업장의 주문제 수공업의 장인 노동이 공장제 기계공업의 조립라인 노동으로 전환하면서, 노동의 소외는 더욱 증대하였다. 반면 포드주의에서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에 따른 유연적 전문화 노동은 ‘인간화된 노동’, 즉 소외가 경감되거나 해소된 노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주장되기

도 한다.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첨단기술의 발달은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나아가 도시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첨단기술 서비스나 지식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보통 높은 교육과 지식, 체화된 기능을 가지며, 이들의 노동과정은 작업장의 육체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덜 소외된 노동이라고 추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더 많은 지식과 기능을 가진 노동, 상당한 책임감과 통제력을 가진 노동과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근본적으로 자본축적 과정에 더 깊게 편입됨에 따라 소외를 오히려 더 심화시키게 되었다.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이른바 지식기반경제나 창조경제에서 인간의 창조성(정신적 노동)까지 상품화되고 인간 자신이 아니라 자본의 축적에 기여하도록 추동된다. 달리 말해, 자본주의에서 과학과 지식의 발달과 기술과 정보의 역동성은 인간 창조성이 상품화·화폐화될 수 있을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왜곡시킴으로써 자아 상실감을 오히려 촉진하고 인간의 실존적 영역을 축소시킨다. 이러한 기술 혁신의 궤적은 노동자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양립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은 이에 내재된 도구적 합리성과 이를 추동하는 기술관료적 계획에 의해 도시적 소외를 촉진한다. 하이데거의 주장처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은 과잉 발전했고 과잉 가치화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는 “과잉 가치화된 기술에 내재된 위험”을 인지하고, 근대 기술의 본질적 위험을 기술적 생산물이나 과정에서 찾기보다는 특정한 재현양식(또는 그가 명명한 ‘틀지우기’(enframing))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술의 위험은 자연의 물리적 파괴만이 아니라 틀지우기가 모든 다른 재현 양식들을 배제하게 되는 세계(그리고 공간)의 소외라고 할 수 있다. 기술관료적 (도구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이러한 공간의 재현은 단순히 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의 물신화된 표현이라기보다 “체험된 경험에 대해 무서운 환원적 권력을 휘두르는 추상화”의 기술로 기능한다(Lefebvre, 1991b, 52). 예로, 기술관료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공간의 재현은 오늘날 도시 공간의 계획과 재편이 도시인의 삶을 배제하고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는 추상공간을 만들어 내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도시의 소외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임노동에 기반을 둔 소외라기보다 노동에 활용되는 기술관료주의적 속성에 더 많이 근거를 둔다고 주장될 수 있다.

기술의 발달이 자연과 인간 간의 노동과정에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고도화하는 것이라면, 분업의 발달은 노동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식을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업은 인간의 개별적인 신체적, 정신적 조건에 근거를 두고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 간 사회적, 기능적 분화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자원 분포의 지리적 차이에 근거하는 생산의 지역적 특화와 이에 따른 생산물의 교환, 즉 노동의 공간적 분업도 생산성의 증대와 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공간적 분업 역시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분리, 생산체계의 공간적 분화, 그리고 이에 따른 교환에 전제되는 사적 소유와 상품화의 촉진 등을 통해 자연과 노동의 소외를 심화시켜왔다. 우선 사회공간적 분업의 발달은 특정 지역에 특정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생산 지역의 자원 고갈과 소비 지역의 폐기물 누적을 초래한다. 생산과 소비의 사회공간적 분리는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다른 어떤 집단이나 지역에서 소비될 것인가를 알기 어렵게 하고, 또한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생산자는 소비에 대해, 소비자는 생산에 대해 소외되도록 한다. 즉 노동의 분업은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동과 자연의 능력을 착취하는 것이고, 이들의 존엄성을 박탈함으로써 이들로부터의 소외를 심화시킨다.

오늘날 노동의 사회공간적 분업은 생산체계의 분화로 더욱 촉진되고 있다. 즉 상품의 생산체계가 원료 생산에서 부품이나 중간재의 생산, 그리고 완제품의 생산에 이르는 다양한 단계들로 분화되고 특히 상품을 기획하고 연구·개발하는 구상기능과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실행기능 간 분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실 공간에서 구상기능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작업장 공간에서 실행기능을 담당하는 육체노동자들에 비해 노동의 물리적 강도는 약화되고 노동 시간과 이에 대한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공장노동자들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노동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무실 노동자들도 컴퓨터와 각종 전자사무기기에 의해 억매인 노동을 하고 있다. 요컨대 노동자들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분업체계 안에서 자신이 생산하고자 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생산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분업 체계 내의

한 지점에 붙들려서 파편화된 객체로 전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고립·개별화되고, 경쟁에서 서로에게 소외되며, 전체에 대한 느낌이나 의식을 상실하게 되었다. 분업의 사회공간적 확장으로, 지역적 불균등과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소외는 더욱 깊어가고 있다.

3. 후기 자본주의 도시와 소외의 심화

산업 자본주의에서 후기 (탈산업)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소외를 완화시켰는가 또는 더 심화시켰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Archibald, 2009). 일부 학자들은 작업장에서 소외된 노동이 오늘날 높은 소비 수준에 의해 보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력의 상승과 기술의 체화로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력이 증가함에 따라 소외가 점차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증거가 더 많다는 주장도 있다. 후기 자본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은 우선 지구-지방화과정에서 생산체계는 지구적 규모로 확장·분화되고, 각 지역의 생산과 소비는 지구적 거리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초국적 자본에 의해 통제되게 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또한 도시인들은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생활수단들이 상품화되면서 소외된 소비로 내몰리게 되었고, 소외된 생산과 소비는 물질적 부문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부문(다양한 생산자서비스 부문들과 과학과 지식, 정보, 이미지, 등의 생산과 소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과잉축적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과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전략은 금융화와 건조환경을 통한 ‘탈취에 의한 축적’을 만연시킴에 따라 도시적 소외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즉 후기 자본주의 사회와 도시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시장과 작업장에서 피고용자의 지위 향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으로 소외를 줄였다기보다는 여전히 실업과 고용 불안에 겪고 있는 노동의 소외에 더하여, 자본주의 경제(분업체계)의 지구-지방화, 소비 및 여가 나아가 일상 생활 전반의 상품화,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의 역할 증대, 도시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 순환의 확대, 금융자본의 발달과 도시공간의 금융화 등에 의한 소외가 중첩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우선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 또는 지구-지방화로 인해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이 세계적으로 유통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과 소비 간 관계, 생산체계의 각 부문들 간 연계, 그리고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가 세계적 규모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소외의 조건은 지구적 맥락으로 확장되었다. 자유무역과 세계 시장의 통합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국가간 교역을 가로 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함에 따라 생산과 소비 간의 물리적 거리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소외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소원함은 아니지만, 생산과 소비 간 물리적 거리의 확장은 상품의 기능적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관계가 상품들 간의 관계로 치환되는 것을 더욱 촉진한다. 하비(Harvey, 2014, 196)가 서술한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즉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매일 아침 식사를 차리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낫선 이들에게 이렇게도 깊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직접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지방화 과정에서, 사회공간적 분업은 지구적 규모로 확장되고 다규모화된다. 즉 자본이 생산성 증대와 잉여가치의 창출을 위해 생산-소비관계와 더불어 생산체계 내 노동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자 함에 따라, 분업은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세세한 분업에서부터 지역들 간 분업, 국가 간 국제적, 지구적 분업에 이르기까지 다규모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적 압축과 더불어 생산체계의 지구적 확장과 재구축은 상품 생산의 각 과정이나 단계들을 담당하는 공장들을 세계의 어떤 지점이든지 간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입지한 분공장 또는 다공장체제는 지역 경제와 지역 노동자들과는 무관하게 역의 초국적기업에 의해 좌우된다.

제3세계의 분공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얼마인지에 관심을 가질 뿐이고, 자신의 노동과정과 생산품이 누구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는지를 더욱 알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지방화 과정은 세계도시체계의 발달, 또는 지구적-도시화 또는 행성적 도시화를 동반했다. 중심-준주변-주변 도시들 간의 포섭 관계를 나타내는 세계도시체계는 오늘날 대도시들이 인접한 주변도시들보다는 세계적으로 더 큰 규모의 대도시들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구적-도시화란 오늘날 도시화가 도시 주민들에 의한 내생적 발전이 아니라 지구적 자본과 권력(초국적기업, 국제금융자본, IMF, 세계은행 등)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성적 도시화란 “지구적 규모의 광대한 영역들이 도시적 공간 편성의 확장을 통해 지구적 노동분업 속으로 재설계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Merrifield, 2013). 이러한 도시체계의 발달이나 도시화 과정은 세계가 단일의 도시경제로 통합되거나 고밀도로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초메가시티로 발전하거나 또는 대도시의 정체성이 세계시민주의로 재구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의 모든 도시들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초국적자본(이들의 분공장이나 금융자본)의해 통제되고, 노동자들은 고용기회와 임금에 따라 낮은 환경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의식은 단절화, 파편화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행성적 차원에서 소외되게 되었다.

후기 자본주의에서 도시적 소외는 자본주의적 생산체계 그리고 생산-소비 관계의 지구적 (외연적) 확장뿐만 아니라 자본에 의한 소비 영역의 지배 그리고 생산 영역에서 물질적 생산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생산의 (내포적) 포섭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본에 의한 소비 영역의 지배는 생산과정(즉 잉여가치의 생산)에 기본적으로 근원을 두었던 소외가 잉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의 촉진과 소비과정 및 여가생활 자체의 상품화를 통한 일상생활의 소외를 동반하게 되었다. 대도시에서의 소비는 개인의 물질적 필요의 충족에서 나아가 서로 차별화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적 소비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오늘날 유행하는 명품 소비(심리)는 자본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사용가치가 동일하거나 더 적지만, 값은 오히려 더 비싼 상품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식의 광고와 마케팅 홍보를 통해, 자본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특정 상품의 구매가 사치스러움과 여유, 행복감과 신분감을 높여 준다는 식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충동소비 또는 과시적 소비는 인간의 필요나 욕구의 충족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이러한 상품은 ‘보상심리 해소용 상품’에 불과하다. 오늘날 도시인들은 “소비주의적 도시공간에서 길을 잃고, 넘쳐 나는 보상심리 해소용 상품 속에서 허우적댄다”(Harvey, 2014, 398).

이러한 점에서 자본에게 더 필요한 것은 도시인들의 필요(사용가치로 파악되는)의 충족이라기보다 필요(교환가치로 비교되는)의 새로운 창출이다. 도시인들은 자본에 의해 창출된 이러한 필요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소외된 소비를 위하여 (즉 자신의 필요에서 소외된) 도시인들은 과도한 장시간 노동도 마다하지 않지만, 반면 금전적 보상이 없는 활동은 더 이상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과시적 소비는 소비상품에 대한 경쟁을 통해 개인주의를 부추김으로써 사회적 연대와 결속력을 해체하는데도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주의는 과잉생산에 따른 상품시장의 포화와 더불어 임금 억제로 인한 유효수요의 저하나 기술에 의한 노동의 대체로 인한 대규모 실업의 발생에 따른 잉여가치 실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드보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업무시간이 끝나면, 노동자는 갑자기 생산의 조직과 감시의 모든 측면에서 그토록 노골적으로 가해 지던 총체적 멸시로부터 벗어나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지극히 공손하게 어른 취급을 받게 된다. 바로 이 순간 상품의 휴머니즘은 노동자의 ‘여가와 인간성’을 책임지는데 그 이유는 단지 정치경제가 이제 이러한 영역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지배해야 하기 때문이다(Debord, 2002, 13; 무스토, 2011, 98 재인용).

이러한 소비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소외의 심화는 물질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소비뿐만 아니라 특히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의 소외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 드보르는 이미지들에 의해 매개되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스펙타클로 개념화하고, 스펙터클의 사회적 기능은 구체적인 소외 생산"이며, 스펙터클을 통해 "상품의 물신숭배는 ... 궁극적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Debord, 2002, 11-12).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는 개인들에게 자본에 의해 창출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하도록, 즉 '지배적인 이미지들과 동일시' 하도록 하여, 개인들을 자신의 실제 필요의 충족, 실제 자신의 존재로부터 더욱 멀어지도록 한다. 보드리야르도 드보르와 유사하게 소외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후기 자본주의의 소비 사회를 비판한다(김남희, 2002 참조). 그에 의하면, 오늘날 (도시)사회에서 일상적 삶은 상품의 생산보다 기호(또는 코드)의 법칙에 의해 틀어지며, 상품의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소외를 유발한 것처럼, 특정한 기호가 그 지시대상으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소외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즉 산업자본주의에서 상품의 교환가치적 질서에 의해 착취와 억압 그리고 소외가 주도되었다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은 기여에 부여된 이데올로기(지시 대상과 괴리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시 대상(물질적 상품)과 괴리된 기호가치로 의해 발생하는 소외의 개념은 언어나 지식, 문화와 습관, 관행과 제도 등 다양한 비물질적 요소들의 생산과 소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 경제활동은 물질적 생산에서 비물질적 생산들, 예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새로운 디자인과 이미지 창출,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활용, 암묵적 지식과 공동학습, 상호협력과 사회적 자본 등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인해 오늘날 소비자들은 물질적 재화보다 정보, 이미지, 메시지 등 다양한 상징적 재화의 구입과 소비에 점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전반에서 물질적 재화의 생산과 소비보다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비물질적 재화를 제공되는 서비스경제(교육과 의료, 연구개발, 금융·보험, 법률·경영자문, 광고와 시장조사 등)가 중심을 이루게 되었고, 축제와 관광, 스포츠 경기, 다양한 전시 및 예술 활동 등의 문화산업이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의 급속한 팽창은 도시 생활과 공간의 재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조정환, 2011, 255-271; 하트와 네그리, 2014). 산업도시들에서 자본축적이 대규모 생산설비와 거대한 사회간접시설 등에 물질적 기반을 두었다면, 후기 자본주의의 포스트모던 도시들은 상징적 가치들이 도시공간을 화려했던, 물신화된 스펙터클의 생산과 소비를 자랑한다.

이러한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를 통한 경제활동은 물질적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징적 영역 모두를 상품화시키고 자본의 순환과정에 편입되도록 하며 나아가 도시 공간 전체를 자본축적 과정에 실질적으로 포섭되도록 한다. 즉 과거 물질적 생산(그리고 소외된 노동)이 작업장(공장)에 한정되었다면, 오늘날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는 공장을 벗어나 가정(사적 공간)이나 거리(공적 공간)를 막론하고 심지어 사이버공간을 포함하여 도시 공간 전체로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공간에서 생산, 유통, 소비의 구분이 어렵게 되었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소외되게 되었다. 특히 도시 공간에서 비물질적 이미지의 생산(엄격히 말해 재현)과 소비는 물리적 시공간에 의해 분리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결합한다. 예로 거리의 전자 광고판은 끊임없이 상징적 언어들을 생산하고,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유통되고, 소비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 없이 무작위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물신화의 극치를 이룬다. 또한 언어, 이미지, 지식, 정동, 코드, 습관, 관행이나 도시경관의 상징성이나 심미성, 역사성 등은 사회적 생산물 또는 인공적인 공통재이고 이들이 작동하는 공간은 누구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적공간이지만, 이들은 점점 더 자본축적 과정에 포섭되어 사적으로 전유되면서 도시인들로부터 소외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도시공간에서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의 역할과 이로 인한 소외에 관한 관심 증대는 도시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서 물질 토대의 역할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시의 물질적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순환의 메커니즘과 이에 내재된 모순은 도시적 소외를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되었다. 즉 후기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생산체계와 생산-소비 연계의 지구적 확장, 잉여가치 실현을 위한 소비영역의 지배, 그리고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 부문의 편입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임금노동에 의한 확대재생산)뿐만 아니라 도시의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순환 경로의 확장과 이와 관련된 금융자본의 발달 및 도시 공간의 금융화를 통한 축적, 하비가 지칭한 ‘탈취에 의한 축적’을 통해 축적을 지속시키고자 한다. 탈취에 의한 축적은 “도시토지의 상품화(도시 ... 주민들을 그들의 보금자리로부터의 추방을 유도하는), 공적 자산의 민영화와 상품화(자연자원과 토지, 공적 서비스와 기관들을 포함하여), 소유권의 전환, 국가 부채와 신용체계의 이용(노동과 토지의 장기적 탈취의 수단으로서 금융화), 토착적 생산[그리고 생활]형태의 억압, 교환의 화폐화[즉 사용가치에 대한 교환가치의 지배]등”을 통해 이루어진다(Bayirbag and Penpecioglu, 2015; Harvey, 2005). 그러나 이와 같은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의 순환, 탈취에 의한 축적을 위한 도시공간의 재편은 도시공간의 생산에서 소외와 건조환경의 물상화를 더욱 심화시킨다(Amaral, 2015).

도시 재개발과정은 토지 이용의 집약화뿐 아니라 토지 소유권의 전환과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축적을 촉진시키고자 하지만, 동시에 도시 서민과 영세상인들의 토지 소유와 이용을 박탈하고 이들을 생산 및 생활 수단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소외를 심화시킨다. 이와 같이 기존 토지 소유 및 이용관계를 해체하고 토지를 사유화하고 자본축적 과정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인클로저는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구적 규모로 전개되면서 지구화된 경제에서 도시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김용창, 2015). 이러한 도시의 건조환경 또는 도시 공간의 재편은 분명 도시인들(보다 분명히 말해, 도시 노동자들의 생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에 의해 사적으로 전유되고, 일반 도시인들은 통제할 수 없는 생산과 생활의 객관적 조건으로 대상화된다.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축적은 이와 같이 도시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 또는 이용하던 토지나 공적 공간으로부터 축출되어 소외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낸 도시 건조환경(이에 부착된 경관도 포함하여)은 자본의 통제 하에 물상화되어 도시인들을 억압하는 외적 조건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는 [도시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의 실현 영역에서는 탈취에 의한 축적에 시달리며 누적된 불만이 끓어 넘친다. 자유는 지배가 되고, 노예의 삶이 자유를 대신한다”고 서술한다(Harvey, 2014, 389).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도시공간에서 소외의 본질적 유발요인은 바로 이러한 탈취에 의한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건조환경을 둘러싼 자본축적(특히 탈취에 의한 축적)과정은 건설 및 부동산자본에 의해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과 국가의 개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로나 철도 기타 인프라 등 도시 건조환경의 구축과 운영은 기본적으로 공공적 목적을 전제로 하며, 투자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 건조환경은 금융자본이 뒷받침하는 건설·부동산자본에 의해 조성·운영되고 있다(최병두, 2012). 금융기관은 건설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건설회사는 이를 투입하여 토지를 구입·개발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다. 금융기관은 또한 구매자들에게도 자금을 대출해 주고, 구매자들은 이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한다. 주택 구매자는 실수요자일 수 있지만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자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주택가격이 침체·하락하는 경우 자신의 수입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대출에 의존한 주택 구매자들은 자신의 미래 수입 일부에 대해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경기가 하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자는 대출금이 주택가격을 능가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구매자는 자신의 미래 수입에 대한 통제권의 상실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도시 건조환경에서 작동하는 금융자본은 기본적으로 대출한 원금에 이자가 붙어 환수되기를 기대하고 투입되는 ‘의제적’(fictitious) 자본이다. 의제자본의 순환은 부동산 가치의 생산과 실현 과정을 완결시키는데 필수적이지만, 원칙적으로 미래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매우 취약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막대한 양의 의제자본이 주택금융으로 유입되어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부추겼지만, 실물경제에서 실질임금에 의해 대출금(원금+이자) 상황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도시 부동산시장에서 작동하는 금융자본은 물론 단지 은행(대출)자본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들(부동산펀드, 리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확보되지만, 공통적으로 투기성이 매우 높은 의제자본이다. 의제자본의 작동은 신용체계의 발달에 기반을 둔다. 창출된 잉여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신용체계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소비자들은 예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내구성 소비재나 고가의 과시적 소비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신용체계에 바탕을 둔 소비는 창출된 잉여가치의 실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지속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적 자본의 순환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용체계의 발달은 상품 세계의 물신화를 촉진하고 도시인들의 소외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고조시킨다. 의제자본의 순환과정은 어떤 가치를 창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아무런 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주택 구매자에게 대출된 자금은 이자가 붙어 자본으로 환수되지만, 여기서 이자는 실물생산에서 얻어진 수익의 일부를 전유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은 실물생산과 괴리된 채 이에 기생한 것이다. 도시 부동산시장에서 작동하는 각종 금융자본의 유통뿐만 아니라 각종 선물시장에서 작동하는 금융자본과 파생상품들은 이러한 화폐의 물신성을 엄청나게 확장시킨다. 화폐의 물신성이란 “화폐는 다른 모든 상품의 겉모양을 벗겨낸 것이자 보편적 소외의 산물”임을 의미한다(Marx, 1976. 205). 화폐의 물신성으로 인해 화폐의 거대한 힘은 마치 그 자체로 자연적 속성과 같이 작동한다. 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자본주의적 물신숭배의 두드러진 사례이며, 그 절정은 ‘이자 낳은 자본’(즉 의제적 자본)이다(콕스, 2009).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금융자본의 물신성이 자본축적의 지속에서 중요한 모멘트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곳들로 침투하고 있다. 주택구입에서부터 학자금 대출이나 생계 유지를 위해 가속적으로 증가한 도시 서민들의 부채는 이런저런 형태의 비참한 문제들을 유발하고, 결국 인간 노동과 생존의 조건을 억압한다. 생산과 소비의 현재 영역들을 넘어서 미래의 삶의 조건까지 확대된 자본주의적 소외와 물신성,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모순 해결과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탈소외로서 정의로운 도시

1) 소외 극복을 위한 이론과 현실

헤겔의 소외론과 이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마르크스의 소외 및 물신화이론 이후 소외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이론가들은 소외에 관한 비판적 논의와 더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마르크스는 초기 저술에서 임금노동과 사적 소유 및 노동의 분업으로 인해 자유로운 인간이 노동과정에서 자유를 상실하고 소외되었음을 지적하고, 사유재산제와 노동의 분업의 폐지를 통한 소외의 극복을 주장한다. 사적 소유제의 폐지는 노동자가 자연(토지)과 자신이 맺는 소외된 관계, 그리고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의 사적 전유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자본주의적 분업의 폐지는 화폐에 의해 기능적으로 연계된 생산-소비 관계를 극복하고 자율적인 공동체적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추정된다. 마르크스는 후기 저작에서는 상품의 물신성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생산수단의 공유와 임금노동에 의한 생산체계의 극복이 주장된다. 대신 다양한 형태의 노동력이 자각하여 사회적 노동력으로 확장된 자유인들의 연합체를 결성하고, 여기서 결합된 생산자들이 자연과의 신진대사를 합리적으로 통제(최소 노력과 인간성에 조응하는 관계)할 것을 제시한다(최병두, 2009). 탈소외를 위한 마르크스의 이러한 제안은 물론 이론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에 관한 의문과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소외는 생산영역

에서 벗어나 사회공간적으로 모든 영역들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요구한다.

현대적 소외가 생산영역에서 사회공간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된 대안들의 대표적 사례들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마르쿠제와 프롬의 소외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무스토, 2011 참조). 예로, 마르쿠제(Marcuse, 1966)에 의하면, 소외에 대한 비판은 노동과 기술 일반에 대한 비판이며, 소외의 극복은 생산활동에서 부정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유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제시된다. 즉 그는 마르크스가 제기한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에 기반을 둔 탈소외된 사회의 가능성을 폐기하고, 오직 노동의 종말과 리비도(libido)의 실현만이 소외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프롬은 생산과정에서 유발된 소외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적 인간’과 ‘건강한 사회’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생산적 인간(또는 ‘생산적 성격 유형’)은 인간이 이성에 의해 인도되어질 때 가능한 것으로 자기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이용하고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인간(성격) 유형을 의미한다(Fromm, 1949). 마르쿠제의 대안은 기술 지배 일반에 반대하면서, 모든 노동을 자유와 희열과 대립시키고, 노동의 영역 밖에서 탈소외의 계기를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프롬의 대안은 생산적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자기의 힘을 자신이 실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본성의 회복을 강조하지만, 생산적 인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이성이 아니라 진정한 노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하지 않았다.

탈소외에 관한 르페브르의 견해는 마르쿠제나 프롬과는 다르다. 후자는 노동의 영역 밖에서 탈소외의 계기를 찾고자 하지만, 전자는 소외된 노동 또는 소외된 일상생활 자체에서 탈출의 계기를 찾고자 한다.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에 있어 비판은 “가능성, 아직 완수되지 않은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판의 과제는 이러한 가능성과 완수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논증하는 것이다”(Lefebvre, 1991a, 18-19). 이러한 점에서 일상생활은 기술관료적 생산주의에 종속되어 있지만, 또한 이에 저항적이며, 따라서 소외의 영역이면서 또한 가능한 ‘탈소외’의 자리이기도 하다. 일상적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소외되었음을 의식함으로써 탈소외의 가능성을 찾게 된다. 소외(낯섬에 대한 인식을 낫설게 하는)에 관한 의식은 우리를 소외로부터 해방시키거나 해방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인간은 소외에 관한 의식을 통해 그 자신을 탈소외시킬 수 있다. 일상적 인간은 실천 인간이며, 실천만이 그를 소외로부터 그를 해방시킬 수 있다(ibid, 20-23). 이러한 일상생활의 소외 의식으로부터 탈소외의 가능성 모색은 그가 <공간의 생산>에서 제시한 추상공간에서 차별공간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인 것 내에서 가능한 것의 추구, 즉 기존의 도시 공간(그리고 이의 재현)에 존재하는 잠재적 탈자본주의 공간을 의미한다. 즉 추상공간의 소외에 관한 비판은 추상공간이 차별적 공간의 가능한 탈소외에 대립적으로 이해될 것을 요청한다(Wilson, 2013).

르페브르가 제시한 탈소외 공간으로서 차별공간은 자율성 또는 자주관리(autogestion)와 이를 위한 차이의 정치 등에 바탕을 둔 ‘혁명적 낭만주의’에 관한 그의 관심과 관련된다. 일상생활을 생산주의적 규정력에 종속되도록 하는 기술관료적 도구적 합리성은 추상화를 통해 사회를 지속적으로 지배하고자 한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추상공간의 소외된 현실에 개입하여, 탈생산주의적 공간으로서 차별공간의 인식과 실천을 강조한다. 자율화 또는 자주관리는 교환가치에 대한 사용가치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생산의 집단적 자기관리를 의미한다(Lefebvre, 1991b, 18). 이러한 자율화, 즉 탈소외의 정치는 동질화, 추상화에 의한 체험된 경험의 지배에 반대하는 차이의 정치를 통해 일상생활을 차별의 공간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차별공간의 생산은 교환가치에 대한 사용가치, 동질성에 대한 차이, 정량화에 대한 정성화, 인지된 것에 대한 체험된 것의 우선성, 그리고 생산주의의 극복과 탈생산주의적 사회로의 전환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생산주의의 극복은 노동에 의한 생산의 포기가 아니라 기술관료적 성장 이데올로기의 극복을 의미한다. “성장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은 침체된 내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와 창조적 자유의 탈소외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Wilson, 2013, 10). 르페브르의 혁명적 낭만주의는 그의 평생 연구에서 이러한 가능성의 집단적 실현을 위한 희망의 표현이었다.

탈소외에 관한 르페브르의 주장들은 이론적 및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을 가지도록 한다. “인간은 소외에 관한 의식을 통해 그 자신을 탈소외시킬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물론 현대 사회(도시)의 소외된 일반 시민들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헤겔과 마르크스 이후 많은 철학자와 사회이론가들이 소외의 근원과 그 심화과정에 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소외는 어떻게 점점 더 심화되었고, 반면 탈소외의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었는가? 이러한 의문은 소외를 심화시키는 자본축적과정과 이에 내재된 모순들에 관하여 더 체계적인 연구를 요청하며, 또한 소외의 심화로 인한 도시인들의 주체적 의식과 실천 가능성의 소진에 관해서 더 심각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탈소외를 위한 이상적 전망과 현실적 대안 간의 괴리에 주목하고, 대안의 실현가능성과 더불어 진정성/의사성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예로 오늘날과 같이 지구적 인구 성장과 생산체계의 지구적 확장, 그리고 이에 따른 행성적 도시화 과정에서, 탈소외를 위한 노동의 사회공간적 분업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폐기될 수 있는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현대(도시)사회에서 소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이를 유발하는 자본과 국가가 소외(의 외형적 표출)를 일정하게 통제하거나 또는 소외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소외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실 그동안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자본과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외를 경감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전략들을 수행해 왔다(Bayirbag and Penpecioglu, 2015). 고용·해고 조건 및 (최소)임금 수준 통제, 노동조직의 제도화, 작업장 환경 개선(표준화) 등은 노동자의 소외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정책만으로 소외를 관리하기 부족하여 일상생활과 생활공간에 대한 다양한 제도들이 모색되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제도들은 노동자들의 소외를 비노동공간에서 부분적으로 경감시켜주기 위한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때 논의되었던 노동계급의 자산보조 정책이나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기본소득 보장 정책은 소외를 경감시키기 위한 유의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공급, 임대차 보호, 공유재(또는 공공재, 예로 버스와 지하철)의 확충 등은 생활공간의 보호를 통해 작업장에서 소외의 부정적 영향을 보다 쉽게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외 완화/경감을 위한 복지 정책들은 공적 재원의 한계와 더불어 경제체 국면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환으로 인해 급속히 축소되었다.

시장 경제로의 회귀를 전제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에 따른 도시화 과정은 노동의 양적 유연화를 강화하면서 고용·해고 조건과 작업장의 노동 조건을 심각하게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소득 및 자산보유의 격차를 크게 확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유재의 민영화와 시민들의 토지 및 주거의 탈취와 배제, 공적 공간의 인클로저에 의한 사유화와 상품화, 복지보다 경제 성장과 도시 개발을 우선하는 기업주의 도시, 역외 자본의 유치과 저임금 이주노동자의 활용, 도시 브랜딩이나 마케팅 등을 통한 소비주의의 촉진, 그리고 세계화 또는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국가(도시) 발전 담론, 인간의 창조성까지 상품화하고 자 하는 창조경제 전략 등은 현대 도시에서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전략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인들이 자신들의 소외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들이 소외의 의식화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공적 공간의 상품화와 탈취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관련사업에 직접 참여(보장)하거나 공적 담론을 홍보하여 민간 자본에 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공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예로 민자도로의 건설과 운영). 또한 도시적 소외를 심화시키는 정책들은 대부분 공동체적 결속을 도시경제에 편입시키는 담론을 가지거나(예로, 공동학습, 사회적 자본 등), 또는 역으로 공동체적 기반을 파괴하거나(도시재개발) 불만의 조직적 표출을 억제하는 이데올로기적 또는 폭력적 대책을 강구하기도 한다(용산참사처럼).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도시의 위기는 “자본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소외의 효과로 인해 유발된 잠재적 불만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전략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Bayirbag and Penpecioglu, 2015).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소외 억제 전략들은 분명 한계를 가지고, 소외의 문제를 더욱 확대·심화시킬 뿐이다.

2) 도시권에서 생산적 정의로

소외의 문제가 마르크스와 그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자본 축적의 확대 재생산에 기인한 것이며, 소외에 대한 진정한(이론적이라기보다 실천적) 의식의 부족과 더불어 이를 경감 또는 억제하기 위한 자본과 국가의 전략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르페브르의 탈소외이론이 가지는 또 다른 유의성은 그의 이론을 현실 세계에서의 실천(또는 운동)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68운동이 프랑스를 휩쓸던 시기에 제시된 그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그의 관심을 일상생활에서 도시로 전환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68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에 의하면, 도시는 그 자체가 작품(oeuvre)이다. 즉 화폐와 상업, 교환과 생산물을 추구하는 경향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작품은 사용가치이고 생산물은 교환가치이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도시에서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중시되고 이로 인해 집합적 작품인 도시가 소외되고 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거주자들이 공동작품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 도시 생활에 대한 권리, 부활된 도시중심성에 대한 권리, 만남과 교류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생활 리듬과 시간 사용에 대한 권리, 완전하고 완벽한 시간과 장소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인 것이다”(Lefebvre, 1996, 66-67).

르페브르에 의하면, 도시에 대한 권리는 공동작품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 사적 소유권과 교환가치에 대해 사용가치를 우선한 전유의 권리, 도시 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도시 재개발로 인해 배제된 도시 중심부에 대한 권리, 도시 공간의 동질화에 반대하는 차이의 권리와 도시 공간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권리,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시민권보다 도시 주거에 기반한 거주자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강현수, 2010). 이러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그의 탈소외 개념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Purcell(2013, 49)에 의하면, “마르크스가 자본이 생산수단과 노동의 생산물을 노동자로부터 소외시킨 것으로 이해한 것처럼, 르페브르는 재산권이 도시공간을 도시 주민들로부터 소외시켰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도시공간을 탈소외하기 위한, 이를 사회적 연계성의 망으로 재통합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해한다. 그는 전유의 관점에서 이러한 탈소외를 논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에 관한 그의 사고는 도시에서 공간을 전유하는 주민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기보다 그가 주장한 탈소외와 자주관리를 위하여 즉 도시의 공간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다시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실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최근 하비의 <반란의 도시>에서 재조명되면서 대안적 도시를 모색하는 연구자와 실천가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비에 의하면 도시권은 기본적으로 도시화 과정에서 전개되는 “잉여의 생산과 이용의 민주적 관리”에 관한 권리이다(Harvey, 2012, 56). 그에 의하면 도시화는 잉여가치를 끊임없이 생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한 잉여생산물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권은 도시 공간의 형성과 재편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잉여의 생산과 배분, 재투입에 관한 집단적 권리로 이해된다. 특히 하비는 도시를 온갖 유형과 계급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유재를 생산하는 장이며, 따라서 도시권은 도시인들이 공동으로 생산한 공유재에 대한 집단적 권리로 규정한다. 이러한 하비의 도시권 개념은 분명 그의 자본순환론과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지만, 하비는 도시권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기보다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할 개념으로 간주한다. 그에 의하면 “도시권 개념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르페브르의 지적 유산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도시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전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Harvey, 2012, 12). 나아가 그는 도시권을 “내재적이고 초월적이지 않은 여러 가능성으로 채워져야 하는 텅 빈 기표”로 간주한다(Harvey, 2012, 232). 이러한 점에서 도시권은 도시의 주민이나 노동자들에게만 주어질 것

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가와 도시 개발업자가 홈리스나 불법 이민자들보다 더 강하게 도시권을 요구할 수도 있다(Harvey, 2012, 18).

하비가 주장하는 것처럼 “권리를 정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투쟁의 대상이며, 또 권리를 정의하는 투쟁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병행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Harvey, 2012, 18). 달리 말해, 도시권은 ‘내재적이고 초월적이지 않은 여러 가능성으로 채워져야’ 할 기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권 개념을 단지 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채워야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도시권에 대한 요구와 그 내용은 일상생활의 위기에서 비롯된 실존적 고통, 즉 소외로 인한 불만과 저항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인들이 자신의 소외를 의식하고 탈소외를 주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도시권을 인식하고 이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진정하게 구성되고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비가 도시권 개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석한 것처럼 도시권의 개념과 이에 대한 요구가 왜 중요한가의 문제는 신용체계의 발달과 의제자본의 순환 과정, 공유재로서 도시문화와 독점지대 등과 나아가 자본축적 과정에 내재된 모순들, 특히 오늘날 도시공간에서 자행되는 탈취에 의한 축적을 배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권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다시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 및 공간의 생산에 관한 이론 특히 소외/탈소외의 개념과 좀더 긴밀하게 관련시켜 이해하고, 나아가 마르크스의 소외론이나 물신화이론까지도 소급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르페브르가 소외/탈소외와 관련하여 논의한 핵심적 개념들 가운데 하나는 기술관료적 생산주의 비판이다. 생산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에 의하면, “성장의 문제와 이에 내포된 정량주의가 근본적 문제이며 전략적 목표는 무한한 성장이라는 사고”에 기인한다(Lefebvre, 1973, 100). 여기서 재검토되어야 할 점은 기술관료적 생산주의에 의한 추상화(그리고 추상공간) 그 자체가 소외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생산주의가 추상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과 일상생활을 통제하여 지속적으로 생산과정에 투입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산주의는 ‘거대한 규모’의 공간을 생산할 수 있는 조직적 능력을 갖춘 국가 형태의 발전을 요구하면서, 그 효과를 전체 영토, 국가, 대륙으로 확장시키지만, 다른 한편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을 강제하고 그 결과물을 국가 관리로 전환시킴으로써 소외를 심화시킨다(Wilson, 2013). 이러한 점에서 탈소외를 위한 탈생산주의로의 전환은 사적 소유제의 폐지에 기반을 둔 분배의 문제라기보다 강제(소외)되지 않은 노동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생산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탈소외된 도시의 추구 또는 이를 위한 도시권의 요구는 자유 노동을 위한 생산적 정의 및 인정의 정의와 관련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을 중심으로 ‘공간적 정의’ 또는 ‘정의로운 도시’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고 있지만, 이들은 소외/탈소외의 개념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도시’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지는 못했다. 예로, 소지(Soja, 2010, 6)는 오늘날 도시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르페브르에서 기원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투쟁하기 위한 ‘공간적 정의’의 모색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의한 지리(공간)의 생산에 관한 비판이나 공간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요구에서도 르페브르가 논의한 소외/탈소외에 관한 개념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Yiftachel et al(2009)는 도시적 정의의 핵심요소로 인정(recognition)의 개념을 강조한다. 즉 “인정 또는 인정의 부재는 사회적 및 공간적 정의를 향상시키거나 손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의 정의 개념을 주로 인정과 재분배 간 관계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시켜 이해하면서, 이 개념의 근원이 소외에 관한 헤겔의 연구에서 기원함을 간과한다.

탈소외로서 정의로운 도시의 관점에서 도시권의 개념은 도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당한 분배의 요구, 즉 분배적 정의를 내포한다. 도시 서민들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소득(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 주어져야 하며 또한 개인적 소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의한 재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분배는 개인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한편으로 구매력 부족과 다른 한편으로 과시적 소비로 인해 소비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도시 공간의 배타적

사적 소유와 이용을 지양하고 도시 공유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도시 재생,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 인클로저를 통한 도시 공간의 소유권 이전이나 공적 공간의 사유화, 나아가 거의 모든 부문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취에 의한 축적은 기본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축적은 사실 새로운 부를 생산하기 보다는 기존에 생산된 사회적 잉여가치를 사적으로 전유함으로써 분배적 부정의와 도시적 소외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화를 통한 탈취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엄청난 부채는 미래의 노동까지도 소외키시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완화되어야 한다.

오늘날 도시적 소외는 이러한 분배적 정의의 새로운 방안들의 모색만으로 극복되기 어렵다. 자본주의적 도시 소외의 핵심은 노동 및 생산과정에 있다. 노동은 인간이 물질세계와 관계를 맺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계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잉여가치의 창출을 위한 임금노동으로 전락함으로써 소외의 가장 핵심적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노동이 소외되었다고 해서, 노동의 영역 밖에서 탈소외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비록 그 바깥에서 탈소외의 가능성을 실현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의 영역은 여전히 소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생산적 정의가 필요하다. 생산적 정의란 노동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과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 즉 양질의 일자리는 최대한 제공되어야 하고, 반면 임금을 줄이기 위한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은 축소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잉여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임금노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지나친 기술의 발달과 분업의 세분화는 억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생산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은 노동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체화되어야 하며, 분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이 생산체계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또는 자신의 생산이 누구에 의해 소비되는가를 이해하고 관리될 수 있는 정도로 한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도시적 소외의 극복은 헤겔의 소외론에서 기원하는 인정의 정의를 요구한다. (상호) 인정은 타자와의 대상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상호보완적 과정이며, 자기의식은 상호보완적 행동의 구조 즉 '인정을 위한 투쟁'의 결과로 이해된다. 이러한 투쟁에서 상호인정이 아니라 타자의 삶을 억누르고 거부하게 되면, 자아는 자기 삶의 불충분, 즉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는 호네스가 주장한 것처럼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에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즉 "생산함에서 한 사람은 그 자신을 실현할 ..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그의 상호행위 상대자들 모두가 필요를 가진 공동주체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들을 애정 깊게 인정하게 된다"(최병두, 2009, 330 재인용). 이러한 인정의 정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주체들의 관계도 매개하는 노동이 매개 대상물들의 상호인정, 즉 자연에 대한 인간의 배려와 더불어 물신화된 사회적 관계를 인간적 관계로 재전환시켜 줄 수 있다. 이러한 인정의 정의는 특히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이 가지는 정체성이나 차이의 상호인정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분배적 정의와 생산적 정의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

참고문헌

-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 김남희, 2002, “자본주의와 후기 자본주의, 그리고 인간 소외,” 한국시민윤리학회보, 15, 321-343.
- 김용창, 2015,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 (1): 이론적 검토,” 대한지리학회지, 50(4), 431-449.
- 무스토, 마르셀로, 2011, “마르크스 소외 개념에 대한 재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8(2), 85-113(Musto, M., 2010, Revisiting Marx's concept of alienation, *Socialism and Democracy*, 24(3), 79-101).
- 양영란 역, 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로(Lefebvre, H., 1991b[1973],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 유재홍 역, 2014, 스펙타클의 사회, 울력(Debord, G., 2002,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Hobgoblin).
- 정남영·윤영광 역, 2014, 공동체: 자본과 국가 너머 세상, 사월의 책(Hardt, M. and Negri, A., 2009, *Commonwealth*, Harvard University Press)
- 조정환, 2011, 인지자본주의: 현대 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 갈무리.
- 최병두 역, 2007, 신자유주의, 한울(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최병두, 2009a,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
- 최병두, 2009b,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1) 자연과 자본축적 간 관계,” 마르크스주의연구, 6(1), 5-51.
- 최병두, 2012, 자본의 도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정책, 한울.
- 한상연 역, 2014,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에이도스(Harvey, D.,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s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
- 황성원 역, 2014, 자본의 17가지 모순, 동녘(Harvey, D., 2014, *Seventeen Contradictions and the End of Capitalism*, Profile Books).
- 콕스, 주디, 2009, “마르크스의 소외론,” 마르크스 21(3), 189-220(Cox, J., 1998, An introduction to Marx's theory of alienation, *International Socialism*, 79).
- Amaral, C., 2015, Urban enclosure: Contemporary strategies of dispossession and reification in London's spatial production, <http://www.enhr.net/pastwinners>.
- Archibald, W. P., 2009, Marx, globalization and alienation: received and underappreciated wisdoms, *Critical Sociology*, 35(2), 151-174.
- Bayirbag, M. K. and Penpecioglu, M., 2015, Urban crisis: 'Limits to governance of alienation, *Urban Studies*, DOI: 10.1177/0042098015617079.
- Fischer, C. S., 1973, On urban alienations and anomie: powerlessness and social iso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311-326.
- Fraser, B., 2015, Urban alienation and cultural studies : Henri Lefebvre's recalibrated Marxism, in Fraser, B.(ed.), *Toward an Urban Cultural Studies: Henri Lefebvre and the Humanities*, Palgrave McMillan, London, 43-67.
- Lefebvre, H., 1973, *The Survival of Capitalism: Reproduction of the Relations of Production*, St Martin's press, New York.
- Lefebvre, H., 1991a[1947],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 1*, London, England: Verso.
- Lefebvre, H., 2003[1970], *The Urban Revolu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efebvre, H., 1996, The right to the city, in H. Lefebvre(ed.), *Writings on Cities*, Blackwell,

- Oxford, 63-184.
- Marx, K., 1976, *Capital: Vol. 1*, Penguin, Harmondworth.
- Marx, K., 1977,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London, England: Lawrence & Wishart.
- Merrifield, A., The urban question under planetary urban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3), 909-922.
- Purcell, M., 2013, Possible worlds: Henri Lefebvre and the right to the city, *Journal of Urban Affairs*, 36(1), 141-154.
- Seeman, M., 1971, The urban alienations: Some dubious theses from Marx to Marc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2), 135-143.
- Sevilla-Buitrago, A., 2015, Capitalist formations of enclosure: space and the extinction of the commons, *Antipode*, 47(4), 999-1020.
- Soja, E., 2010, *Seeking Spatial Justi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Yiftochel, O., Goldhabar, R., and Nuriel, R., 2009, Urban justice and recognition: affirmation and hostility, in Marcuse, P. et al.(eds.), *Searching For the Just City*, Routledge, 130-143.
- Yuill, C., 2011, Forgetting and remembering alienation theory,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24, 103-119.

도시에 대한 권리와 시적 정의

강내희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1. 서언

‘도시에 대한 권리’ 또는 줄여서 ‘도시권’이 오늘날 인류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떠오른 듯싶다. 도시권이 중요해진 것은 인류가 도시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이 권리를 보장하고 행사하는 여러 양상이 인간적 삶의 성격, 방식, 질 등을 크게 결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오늘날 대중의 삶에서 도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는데, 이런 점은 도시인구가 세계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도시인구는 2010년에 세계인구의 50%를 넘어섰고, 2014년에는 53.4%에 이르렀고(World Bank, n.d.), 도시인구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2014년에 나온 유엔의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도시인구는 세계 전체인구의 6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4). ‘도시권’이 오늘날 인류의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것은 그렇다면 세계인구가 이처럼 불가역적으로 도시인구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고 하겠다.

하지만 인류의 삶이 갈수록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는 별도로, 도시권은 아직은 개념으로서 널리 승인되거나 그 중요성이 깊이 인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앙리 르페브르가 ‘도시권’을 핵심적인 인권 개념으로 제기한 것이 벌써 반세기 전의 일이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소수의 이론가들과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동안 도시권에 대해 주목한 사람들은 일부 공간 이론가들, 비판적 도시연구자들로서, 인문사회과학 영역 전반에서 그들의 논의는 아직은 제한된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뿐이고, 그런 점 때문인지 도시권 개념을 공간 생산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도 드물고, 그에 대한 대중적 이해 또한 일천한 편이다. 한국의 경우 도시권에 대한 논의는 르페브르가 펼친 공간이론이 소자(Soja, 2000; 2010), 미첼(Mitchell, 2003), 하비(Harvey, 2008; 2012) 등을 통해 소개되고, 2000년대 초반에 세계 사회포럼, 아메리카 사회포럼, 세계 도시포럼, 바르셀로나 회의 등을 거치며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현장’이 채택되면서 생겨난 관심과 궤를 함께해왔다. 김용창(2009), 강현수(2009), 황진태(2010), 광노완(2010; 2011) 등의 연구가 나온 것은 그런 맥락의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도시권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개념 소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 않으며, 그래서 더 심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내가 살펴보려는 것은 도시권과 ‘시적 정의’의 관계라는 문제다. 이런 주제를 논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오늘날 인류 최대의 문제에 속하게 된 도시 문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함이다. 그동안 도시, 특히 도시권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온 도시이론가들은 전통적인 인문학과는 거리가 있는 편에 속한다. 하비, 미첼, 소자 등 최근에 들어와 도시권을 중요한 의제로 살펴보기 시작한 외국 학자들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 학자들도 대부분이 사회과학자들이다. 사회과학자들이 도시권을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유의미한 학문적 기여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도시의 문제나 도시와 관련해 행사되는 권리의 문제를 사회과학이 독점해 다뤄야 할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인문학 분야가 그동안 도시권에 대해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그것대로 중대한 문제라고 하겠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인문학이 도시 문제가 인류에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지적 태도의 징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 개

념을 애초에 처음 제기한 사람이 철학자인 르페브르였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는다면, 인문학은 자신의 전통도 제대로 잊지 못한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글은 시적 정의와 도시권, 또는 시와 도시의 관계를 생각해봄으로써 도시, 도시 문제, 도시권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소통시키려는 통합학문적 시도에 속한다.

2. 도시와 시

도회적 삶, 도시의 결은 시적이라기보다는 산문적이라는 통념이 있다. 농촌과 자연이 시의 세계에 속한다면 도시는 산문의 세계에 속한다는 생각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도시생활을 버리고 양치기의 생활을 주제로 삶을 노래한 고대 로마 이후의 목가시 전통, 도회의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은거해 들어가며 「귀거래사」를 쓴 중국 동진의 도연명, 자본주의적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시 대신 자연을 예찬하던 영국 낭만주의 시 전통 등을 머리에 떠오르게 한다.¹⁾ 하지만 도시를 시와는 거리가 있는, 또는 시를 허용하지 않는 공간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속단이다. 도시란 시와 단절된 곳이라고 본다면, 예컨대 샤를 보들레르가 19세기의 파리를 대상으로 『악의 꽃』에 포함된 시편을 써서 모더니즘 시 전통을 개척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시 전통에서도 도시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내 세대의 시인들만 보면, 김정환이나 황지우 등 도회적 감성을 기반으로 해 시를 쓴 시인들이 적지 않다. 도시를 시와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은 따라서 도시를 노래한 시의 존재를 아예 무시한 것이 아니면 시를 너무 협소하게 정의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야말로 도시를 형성하는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힘으로 여기는 전통도 강력하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시와 도시의 관계가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시는 그 최초의 문자적 의미를 살펴보면, ‘관청의 말’이라는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런 해석은 동아시아 문화의 주류적 위치를 차지해온 유학 전통에서 시가 이해되어온 것과는 좀 어긋나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후한의 경학자 허신(許慎)이 지은 『설문해자(說文解字)』를 보면 “시는 뜻이다”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 정의에 대해 청나라 고증학자 단옥재는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에서 『모시서(毛詩序)』를 인용하며, “시란 뜻이 가는 바다. 마음에 있으면 뜻이 되고, 말로 나타내면 시가 된다”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段玉裁, 1988, 90). 이런 해석에서 시는 일견 도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시가 마음속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도시나 시골이라는 장소적 구분을 넘어서는 보편적 표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자 ‘시(詩)’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지 않다.

‘詩’는 보다시피 ‘말씀 언(言)’과 ‘절 사(寺)’가 합쳐져 이루어진 글자다. 이 글자가 ‘관청의 말’ 또는 ‘공적인 말’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소리 및 의미 부분을 이루고 있는 ‘시(寺)’ 때문이다. ‘시(寺)’는 통상 ‘절 사’로 불리지만, 그런 발음과 의미가 생겨난 것은 공원(公元) 전후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의 일로서, 이전에는 다른 소리(즉 ‘시’)와 의미를 가졌었다. 원래 ‘寺’는 발뒤꿈치가 땅에 닿아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멈출 지(止)’와 ‘일을 하다’라는 뜻을 지닌 ‘도울 우(又)’가 합쳐져 “어느 한 곳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혹은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장의균, 2014, 345). ‘시(詩)’가 ‘공적인 말’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은 ‘寺’가 선 상태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이 일하는 곳을 가리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시와 도시의 관계는 통상 자연과 과학의 관계를 통해 이해되곤 했다. 과학의 발전으로 문명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도시가 삶의 중심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연과 시는 퇴보한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에세이스트 토머스 매콜리가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 시는 거의 필연적으로 퇴보한다”(Macaulay, 1891, 4)고 한 것이 대표적인 언명이다.

‘시(詩)’에 대한 이런 어원학적 해석은 허신의 『설문해자』와 단옥재의 『설문해자주』가 따르고 있는 경학 적 해석과도 사실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유가의 경학 전통이 시를 이해할 때 특히 강조하는 것이 ‘뜻’ 이므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뜻(志)’은 ‘멈출지(志)’와 ‘마음 심(心)’이 합쳐진 말로 ‘마음이 가다(바라다)’를 의미하며, ‘마음속의 생각’이라는 의미의 ‘뜻 의(意)’, ‘어떤 기호나 표시를 새기다’라는 의미를 지닌 ‘새길 시(戠)’와 ‘말씀 언(言)’을 더해 ‘제대로 알고 적었다 혹은 적힌 걸 알았다’를 의미하는 ‘알 식 또는 적을지(識)’, 그리고 ‘살마리를 일으키다’라는 의미의 ‘일어날 기(己)’와 ‘말씀 언(言)’을 더해 ‘어떤 일의 살마리를 삼기 위해 보다 뚜렷한 표시를 하다 또는 말을 써두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적을 기 또는 외워둘 기(記)’ 등과 상통하는 글자다(段玉裁, 1988, 502; 장의균, 2014, 386, 260, 426). 이런 의미의 ‘뜻’은 마음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심적 작용이라기보다는 오래 품은 그래서 간절한 생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뜻’은 사특한 것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때의 뜻은 성인, 현자가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뜻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공자가 『논어』의 「위정」 편에서 자신이 모은 시 300여 수의 근본 취지를 “한마디로 말해 ‘사무사(思無邪)’다” 하고 규정했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시를 언행의 표준으로 삼도록 가르쳤다고 전해지는데, 그것은 그가 시는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공적인 역능을 지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의 근본 취지가 ‘사무사’라는 것은 그것이 관청의 말, 공적인 발언이라는 것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시가 공적인 말이라는 것은 시가 형성되었을 때 이미 사람들의 ‘더불어 삶’ 즉 도회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된다. 오늘날 『시경』으로 불리는 책에 실린 시는 300여 수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공자가 원래 있었던 3000여 수 가운데 일부만 골라냈기 때문이다. 원래 시는 주나라에서 채시관이 시정을 돌며 수집한 것으로 전해져 온다. 이런 사실은 오래 존재했겠으나 정식 시로 인정되지 않던 다양한 언어적 표현물들이 국가 관리에 의해 채집됨으로써 시라는 공식 정체성을 얻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²⁾ 시의 존재는 그렇다면 도회적 삶과 그것을 관리하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공적 제도의 존재와 작용을 전제하는 셈이다. 시를 시로서 채집한 관리가 있었다는 것은 국가, 이 국가의 중심부로서 도성, 그리고 거기서 영위되는 도회적 삶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다. 시가 공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이런 점에서 시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이라는 말도 된다.

시와 도시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인식은 서유럽의 문화전통에서도 확인된다. 그리스 신화에서 도시를 건설한 사람은 전형적으로 시인으로 등장하는데, 이런 신화는 르네상스에 와서 새롭게 왕성하게 살아나기도 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평론가 조지 퍼트넘은 『영시의 기술(The Arte of English Poesie)』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의 직과 그 용도는 처음부터 아주 오래된 것으로, 많은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듯이 인간들 사이에 문명한 사회가 생기기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있었다. 왜냐 하면 시는 사람들이 전에는 숲과 산에서 야수들처럼 헤매 다니며 흩어져 살고, 벌거벗은 채 멋대로 굴며, 혹은 옷도 거의 입지 못하고, 자양물을 제공할 좋은 필수적 식량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채로 있던 풀이 들판의 금수와 하등 다름 바 없을 때, 그들이 최초로 이런 집결의 원천적 원인이라 이유였다고 전해져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 시대 두 시인 암피온과 오르페우스 가운데 한 사람 즉 암피온은 도시를 세우고 감미롭고 감동적인 설득으로 냉정하고 돌 같은 마음을 누그러뜨림을 보여주며 자기 하프 소리에 무더기로 움직이는 돌로 벽을 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르페우스는 야생 동물을 불러 모아 무리지어 자기 음악을 들으러 오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길들였으니, 이는 그런 식으로 조화 있게

2) ‘시’로 공식 분류된 표현물은 이후 공자가 그 중 소수를 선정해 『시경』에 올림으로써 더 한 층의 경전화(canonization) 과정을 거친다. 시가 공적인 발언이 된 것은 이렇게 보면 국가의 공적인 인준, ‘성인’ 공자의 도덕적 인준을 받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말한 시력 깊고 건전한 교훈에 의해 또 고운 선율의 악기로 그가 어떻게 거칠고 미개한 사람들을 더욱 문명화되고 예의바른 삶으로 이끌었는지 암시해주는바, 인간의 잔인하고 완고한 심통을 고치고 교화하기로는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 없어 보인다(Puttenham, 1589, 22-23).

여기서 퍼트넘은 시가 도회적 삶의 시작을 알리는 인간의 군집 생활을 위한 “원천적 원인과 이유”로 작용하게 된 까닭을 그것이 “냉정하고 돌 같은 마음”을 지닌 자연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는 데서, 동물 들처럼 흠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을 고운 선율과 교훈이 깃든 말로 서로 함께 어울리는 “문명화되고 예의바른 삶”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데서 찾고 있다. 이렇게 이해된 시는 인류의 역사에서 도시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힘이자 도시의 유력한 최초의 형성인(形成因)으로 간주되는 셈이 되겠다.

시가 도시 건설의 원인과 이유라는 생각이 성립하는 것은 시가 그만큼 큰 힘을 갖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퍼트넘의 시론이 나온 지 1세기가 더 지난 1699년에 발표된 『인문교육론(On Humanistic Education)』에서 잠바티스타 비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이유로 정말 현명한 시인들은 칠현금으로 야생동물을 길들인 오르페우스와 음악에 따라 저절로 배열되는 돌들을 자신의 노래로 움직여 테베의 벽을 세울 수 있었던 암피온에 대한, 시로 된 그들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 자신들이 행한 위업 덕택에 한 사람의 칠현금과 다른 사람의 돌고래가 하늘로 내던져져 별들 사이에 보이고 있다. 그 돌들, 그 오르나무 가지들, 그 야생동물들은 사람들 가운데 바보들이다. 오르페우스와 암피온은 그들의 수사법(eloquence)으로 신적이고 인간적인 일들에 대한 지식을 결합하고 고립된 인간들을 화합으로, 즉 자기애에서 인간 공동체의 돌봄으로, 나태함에서 목적을 지닌 활동으로, 제멋대로의 방종에서 법의 순종으로 이끌었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힘을 억제하지 못하는 자들을 약자들과 하나로 묶었다(Vico, 1993, 130-31).³⁾

‘원형적’ 시인으로서 오르페우스와 암피온은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로 그들은 노래, 음악, 이야기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시를 통해 사물과 금수를 감동시키는 신비로운 일을 해낸다. 그들은 노래로 돌을 움직이고 음악으로 돌고래를 부리는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립적 삶의 한계를 벗어나 집합적 삶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해준다. 비코는 집합적 삶에 필수적인, 사람들 간의 조화와 화합을 조성하기 위해 시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수사법’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수사법은 이때 시인들 고유의 화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그것은 인간적 화합의 촉매제로 간주된다. 이처럼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로 작용한다면, 시와 그 수사법은 집합적 삶의 장소인 도시 형성에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비코의 인용문이 확인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시는 질서의 힘으로서 법적 강제성을 행사하기 때문에 도시 건설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적인 수사법은 짐승이나 사물들 수준에 머문 인간 ‘바보들’의 고립된 삶을 공동체적인 화합적 삶으로 이끌지만, 이런 ‘승화’는 방종한 삶의 방식을 억제하고 법에 순종할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강제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시를 통해 인간의 삶이 조화와 화합에 바탕을 둔 질서를 이룬다면, 그리고 그에 따라 도회적 삶이 구축되는 것이라면 이런 강제가 어떤 식으로든 통하기 때문일 터, 이는 시가 유도하는 삶은 자연적 삶으로부터의 일정한 거리 두기, 단절을 전제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암피온과 오르페우스가 “법적 화합의 (우화적) 창시자”(Irvin, 2014,

3) 비코가 여기서 돌고래를 언급한 것은 암피온과 아리온을 혼동한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해적들을 만나 죽을 고비에서 노래를 부르자 돌고래가 나타나 목숨을 구한 것은 아리온이었기 때문이다. 칠현금을 연주해 테베의 성벽을 쌓았다는 시인은 암피온이고, 죽음의 세계에 빠진 아내 에우리디케를 찾아가다가 바위와 산에 대고 노래를 불러 호랑이의 마음을 녹이고 오르나무로 하여금 자리를 바꾸게 한 것은 오르페우스였다.

71)로 불리는 것도 이런 점에 기인한다고 하겠는데,⁴⁾ 시란 그래서 우화, 수사, 화법, 표현이 중시되는 예술적 효능만 지닌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수립하는 정치적 기능도 갖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시는 이렇게 법적 질서를 강제해 내는 힘을 발휘하는 셈인데, 이것은 또한 시가 지닌 문화적 힘이기도 하다.

도시 건설의 전설 가운데는 도시가 시적인 소환—이것이 비록 강제성을 띠었다고는 하더라도—에 의해 화합의 장소로 제시되기보다는 반대로 폭력과 살인의 장소로 이해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전형적인 도시의 하나로 꼽히는 로마의 설립 과정에서 끔찍한 형제 살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좋은 예다. ‘로마’의 이름은 아이네이아스의 후손 로물루스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로물루스가 새로 건설한 도시의 지배권을 놓고 쌍둥이 형제 레무스와 다투다가 그를 죽이고 혼자 왕이 된 결과다(Livy, 1919, 25). 기독교 전통에서도 도시 건설과 관련된 형제 살해 이야기가 전해온다. 동생 아벨을 죽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간주되는 카인이 아들 이름을 따서 최초의 성 또는 도시 에녹을 건설했다고 말하는 성경의 창세기 4장 17절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처럼 형제 살인자가 건설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기독교 전통에서는 도시가 저주의 공간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크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의 도시』에서 카인이 ‘최초의 도시’ 에녹을 건설했다는 이야기를 주해하면서 인간이 악의 지배를 받는 이 ‘지상의 도시’보다는 ‘천상의 도시’ 또는 ‘신의 도시’가 대안임을 주장한 것이 좋은 예다(Augustine, 1890, 465).

형제 살해를 포함한 도시 건설 이야기에는 시가 도시 건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그 까닭은 “인간의 잔인하고 완고한 심통을 고치고 교화하”(Puttenham, 위의 글)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힘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원초적 폭력이 난무하는 공간에서는 시가 아무런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로물루스가 행한 형제 살인이 시와 연결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형제 살인의 순간에는 폭력이 지배하겠지만, 일단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질서가 구축될 수 있다. 레무스의 피가 흐른 땅에 건설된 로마는 ‘영원한 도시’가 된 뒤, 팍스 로마나의 기반이 되었고, 세계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강력한 질서의 중심이 되었다. 레무스가 살아남아 로물루스와 로마 지배권을 놓고 계속 다퉈들라면 로마가 누린 질서와 평화는 구축되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질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질서라고 해야 하겠지만, 그런 질서를 구축한 도시가 시의 화합 기능을 배척한다고 볼 수는 없다.⁵⁾

이상 몇몇 문헌을 통해 시는 도시와는 무관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도시의 탄생 및 그 유지에 시와 그 기능이 깊숙이 관여함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우는 시와 도시는 상호-전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게 된다. 시는 이때 교화와 문화 또는 문명화의 힘으로서 도시가 도시로서 설립되고 유지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울러 기억할 점은 신화의 세계 또는 고대 사회에서 시는 엘리트적 권력을 표상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유가 전통을 보면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 요임금에 이어 성인정치를 펼쳤다는 순임금은 기(夔)를 전악(典樂)의 자리에 임명하고 왕공귀족 자제에게 시를 가르치도록 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왕조의 공영달에 따르면, 순임금의 명령은 “시악으로 세상의 적장자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정직하되 온화하고, 너그럽되 위엄 있고,

4) 매튜 어빈은 기독교 전통의 다윗도 오르페우스와 암피온처럼 시를 ‘법적 화합’의 수단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다윈은 음악가-시인이면서 동시에 왕이었다는 점에서 시와 예술을 정치와 결합시켜 사회적 질서를 구조해낸 셈이며 따라서 ‘법적 화합’의 창시자인 것이다. 어빈은 중세 영국의 시인 존 가우어가 도시에 정의, 평화, 화합을 가져오려면 사랑이 중요하며, 향해 도중 풍랑을 만났으나 하프를 연주해 돌고래를 타고 살아 돌아왔다는 아리온(Arion)을 그런 사랑의 시인인 것으로 본 점을 중시한다(Irvin, 2014, 70-72). “아리온은 도시를 세우거나 지배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적절함(decorum)과 고결함(honestas)으로, 사랑의 정치체가 지닌 평화로 되돌려준다”는 것이다(71).

5) 기독교 전통에서 도시는 인간적 삶의 구원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곳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는 최초의 살인, 그것도 형제 살인을 범했다는 카인이 처음 건설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의 도시’를 인간을 구원할 공간으로 제시한 것은 로마로 상징되는 ‘지상의 도시’를 버린 셈이 된다.

곳곳하되 가혹하지 않고, 간소하되 오만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孔穎達, 1980; 陈飞, 2005에서 재 인용). 시는 엘리트 교육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공자가 채시관이 모은 시 3000여 편 가운데 300여 편만 따로 골라낸 것도 시의 교육적, 나아가 교화적 효능을 더 강화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시가 교화의 수단으로 간주된 것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코에 따르면, 시가 “고립된 인간들을 화합으로” 이끈 것은 사람들의 삶에 “목적을 지닌 활동”, “법에의 순종”, “동등한 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 화법 또는 수사법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기능은 “감미롭고 감동적인 설득”(Puttenham, 위의 글) 이고, 따라서 직접적인 폭력 행사와는 분명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강제성이 없지는 않다. 비코는 시가 사람들을 “제멋대로의 방종에서 법에의 순종으로 이끌었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힘을 억제하지 못하는 자들을 약자들과 하나로 묶었다”(Vico, 위의 글)고 말한다. 여기서 시는 교화만이 아니라 강제와 작용도 하는 문화적 힘으로 나타난다. 이때 문화적 행위는 이미 통치의 행위다.⁶⁾

3. 도시권과 시적 정의

이제는 ‘도시권’과 ‘시적 정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는 위에서 시와 도시는 긴밀한 상호-전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거기서 시가 하는 역할에는 통치, 교화 등 엘리트적 역할이 포함된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 도시의 문제를 권리의 문제로, 그리고 시의 역할을 정의의 차원에서 생각해보려는 것은 이와 같은 관점, 다시 말해 도시를 지배의 관점에서 보고, 시를 교화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엘리트주의적, 지배자의 관점을 교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시권은 도시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리로서 다양한 개념적 층위를 지닌다. 도시권 개념을 처음 설정한 르페브르는 그것을 1) 도시를 작품으로 취급할 권리, 2) 도시를 전유할 권리, 3) 도시에 거주할 권리, 4) 도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5) 도시에서 차이공간을 생산할 권리, 6) 도시 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권리, 7) 도시 중심에 대한 권리, 8) 도시생활에 대한 권리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다.⁷⁾ ‘시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도시권의 이들 차원들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도시를 작품으로 취급할 권리’가 아닐까 싶다. 곧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시적 정의는 허구적 정의에 속하며, 허구란 ‘작품’을 생산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도시를 작품으로 취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도시권의 다른 측면들도 당연히 중요하다. 예컨대 도시에 거주할 권리나 도시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도시를 작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도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도시를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크게 제한될 것이며, 차이공간—르페브르가 공간적 동질성을 생산하는 자본주의적 추상공간의 대안 형태로 제시한—을 생산할 권리가 없다면 작품으로 만들어지더라도 도시가 오늘날 지배적인 자본주의적 공간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작품으로서의 도시에 초점을 맞춰 도시권을 생각하려는 것은 이런 점에서 도시권의 다른 측면들을 외면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측면들을 전제된 가운데 작품-도시에 대한 권리가 시적 정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 된다.

시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왜 작품-도시에 대한 권리가 특히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적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작품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품 세계

6) 통치로서의 문화 개념은 한국에서도 지배적인 것이었다. ‘문화’는 19세기 말 일본에서 영어 ‘culture’의 한자 번역어로 채택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기 전까지는 ‘문치교화’의 약자로 이해되었다. 서양 근대에 문화와 통치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문학 교육의 발생을 사례로 삼아 보여주는 연구로는 Hunter(1988) 참고.

7) 여기서 언급한 도시권 종류는 강현수(2009, 50-58)와 박노완(2011, 203)을 참고해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는 허구성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는 세계로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시’다. ‘시’는 여기서 좁은 의미의 ‘시’만이 아니라 넓게는 문학과 음악과 미술을 포괄하는 예술, 나아가 인문학과 과학 등 허구적 창조 가능성의 지닌 인간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전반을 가리키며, 그리스 사람들이 “포이에시스”라고 부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이에시스는 좁게는 시로, 넓게는 창조의 의미로 쓰이며, 창조는 이때 무에서 유를 존재케 하는 것으로서 없는 일을 사실처럼 만든다는 의미의 허구와 통한다(Plato, 2008, 42). 도시를 작품으로 만들어낼 권리는 이렇게 볼 때 도시를 허구와 창조의 대상으로 볼 권리를 말한다고 하겠으며, 시적 정의는 이 맥락에서 도시가 작품 세계로 변할 경우 그 위에서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정의가 되겠다.

‘시적 정의’는 17세기 후반 영국의 비평가 토마스 라이머가 만들어낸 용어로, “문학작품 끝 부분에서 여러 인물들의 미덕 또는 악덕에 따라 현재의 보상과 처벌이 배분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용어를 만들어내며 라이머가 가졌던 생각은 “시(드라마의 비극을 포함하는 의미)란 그 자체의 이상적 영역으로서 적절함과 도덕의 이상적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흔히 사태가 풀리듯 무작위인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Abrams and Harpham, 2009, 270). 시적 정의는 따라서 정의의 이상적 형태에 해당한다. 작품 세계에서 선량한 인물은 보상을 받고 악덕한 인물은 징벌을 받는 것은 시 또는 문학의 세계에서는 구성적 원칙 또는 이념으로서보다는 규제적 원칙 또는 이념으로서 정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점에서 정의의 이상적 형태가 구현되는 셈이다. 칸트에 따르면 구성적 이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주어진 대상에 대한 생각이라면, 규제적 이념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정은 할 수 있는 생각에 속한다(Kant, 1996). 예컨대 ‘지구’나 ‘사회’, ‘신’ 등은 우리의 직접 경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정된 대상이며, 그런 점에서 어떤 것을 이해하는 데 지침이 되는 규제적 원칙 또는 이념으로 간주된다. 시적 정의가 규제적 이념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허구적으로 구현해 내는 정의의 이상적 상태가 실제 세계에서는 구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적 정의가 그런 염원을 충족해줄 수 있는 능력은 그 허구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헤아려진다.

‘시적 정의’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 ‘poetic justice’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7세기일지 몰라도, 공원 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네메시스(nemesis)’에도 비슷한 개념을 볼 수 있다. 네메시스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당한 행운 또는 불운에 대해 느껴지는 고통, 또는 정당한 행운 또는 불운에 대해 느껴지는 기쁨에 대해 고대인들이 제출한 이름”(Curzer, 2012, 244에서 재인용)으로 이해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메시스를 포함해서 정의란 기본적으로 어떤 바람이거나 요청인 것이지만 미리 주어진 현실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다. 설령 어떤 정의로운 상태가 현실로 구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일 뿐이다. 정의 실현이 흔히 윤리적 요청의 형태로 제시되곤 하는 것도 그것이 현실성을 갖기 어렵거나 드물기 때문이다. 이 결과 네메시스는 당위나 허구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것이 시적 정의와 결합되는 경향이 큰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적 정의는 시가 구성하는 작품 세계에서 정의가 허구적으로 실현된 형태다. 허구—또는 창조—는 이때 현실에서 쉽게 구현되지 않는 네메시스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우호적인 환경 즉 작품-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도시권을 시적 정의의 측면에서 생각해볼 여지도 여기서 나오는 듯하다. 오늘날 도시권을 시적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려는 것은 네메시스처럼 그것이 어렵거나 드물게만 구현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 글을 시작하며 나는 도시권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떠오른 주된 이유를 “세계인구가 불가역적으로 도시인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최근 들어와 더욱 뚜렷해진 도시화의 급속한 전개에서 찾고자 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도시화 전개라는 ‘객관적’ 사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도시권이 지금 시급한 인권 사안,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소수의 특정 세력이 그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해 대다수 인구를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은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도시화는 이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적 지배 또는 자본 축적을 위한 도시화로서, 무엇보다도 도시화를 통해 그런 지배와 축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리킨다. 도시화는 물론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르페브르가 1960년대 말 도시에 대한 권리를 “하나의 외침이요 하나의 요구”(Lefebvre, 1996, 158)라고 강조한 것도 이미 그때 도시화가 불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도시를 전유하고 도시를 작품으로 만들어낼 권리, 만민의 장소이자 사용가치가 우선성을 갖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더 중요해졌다고 본 때문이다. 그는 농촌, 자연까지 도시화 과정에 포획된 나머지 “구입되고 판매되는 교환가치와 상품”(Lefebvre, 같은 책)이 되고 만 상황에서는, 자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가짜 권리에 굴복해 오히려 도시화의 흐름에 동참하는 셈이라고 여기고, 도시 또는 도회적인 것에 대한 권리 회복이 더욱 긴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시화는 르페브르가 주목한 1960년대의 도시화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도시화의 정도가 훨씬 더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를 통해 작동되는 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에도 일정한 변동이 생겼으며, 그 효과 또한 더욱 파괴적이 된 것이다.

에드워드 소자에 따르면 최근의 도시 형태는 “포스트-포드주의적이고 포스트모던한 메트로폴리스”의 그것으로 이 메트로폴리스를 대규모로 구축하는 것이 오늘날 도시 과정의 주된 경향이다. 포스트메트로폴리스화는 전통적인 메트로폴리스화의 변형으로서, “삶의 도회적 방식과 교외적 방식 간의 분명한, 전형적으로 단일 중심적인 분할”을 특징으로 하는 후자와는 달리, “옛 경계들을 허물고 전례 없는 규모와 복잡성을 띠며 확장하는 도시 권역과 권역적 도시로 이루어진 다중심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크다(Soja, 2010, 194). 소자가 이때 주목하는 것은 도시의 형태론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도시로 하여금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만든 기본적인 사회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할 듯싶다. 포스트메트로폴리스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197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했고, 제3세계 속 해있던 국가들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그 과정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말이고, 더 큰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루어진 일이다.⁸⁾

포스트메트로폴리스화는 자본주의적 공간 생산 과정인 도시화의 새로운 형태에 해당한다. 도시화는 자본의 축적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자본의 축적 체제가 바뀌면 그것의 양상 또한 바뀌게 되어 있다. 1960년대까지 ‘관리형 도시’ 또는 ‘복지 도시’가 도시의 주요 형태였던 것은 그때는 케인스주의 또는 수정자본주의 축적 체제에 의해 국가의 공적 기능이 도시의 생산 및 관리에서 중심축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축적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형’으로 바뀌기 시작한다(강내희, 2014, 393-94). 이 변화를 추동한 주된 요인은 자본의 축적이 금융화 전략에 의해 지배된 데서 찾을 수 있는바, 최근 공간의 금융화가 심화된 것도 이 결과다. 공간의 금융화는 공간 생산의 금융 자본 의존 경향을 가리키며, 이런 경향은 금융자본과 부동산 시장의 결합, 다시 말해 도시화를 촉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회적 하부구조 프로젝트, PPP[공공민간협력] 사업 등—의 금융적 매개 또는 중개가 증가하는 현상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강내희, 2014, 384-91). 오늘날 부동산 개발 등의 공간 생산을 위한 자원 조달은 “새로운 금융 수단의 개발 및 제도화”로 인해 “지역의 축적망으로부터 탈착”되어 있고, “지구적 자본시장으로 휩쓸려” 들어가

8) 한국에서 포스트메트로폴리스화가 시작된 시점은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가 주택 200만호 건립 정책으로 위성도시들을 건설하기 시작한 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 말에 시작된 이 도시화는 포스트메트로폴리스화를 본격적으로 추동한 금융자본의 영향을 아직은 크게 받지 않았던 편이다. 1990년대 말 이후 급속한 포스트메트로폴리스화가 진행된 것은 그 무렵부터 금융파생상품, 기획금융(PF), ABS, MBS, ABCP, CMO, CDO, CDS, 리츠, 뮤추얼 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제 및 금융상품이 도입되면서, 대대적인 신자유주의적 공간 생산이 진행된 결과에 해당한다.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Gotham, 2009, 363). 21세기에 들어와서 부산과 서울권 등 한국의 대도시 권역에서도 초고층 건물이 빈번하게 건설되는 것을 볼 수 있다.⁹⁾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심화가 이루어져 “건조환경 시장이 갈수록 지구적 규모로 조직되고, 그 위에서 기능하게 되기 때문이다”(Theurillat, 2011, 6).

도시권의 측면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오늘날 도시권에 대한 요구가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면, 그것은 도시권이 소수의 특권으로 둔갑해 대다수 사람들은 도시권을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도시권의 개념이 새롭게 설정될 필요가 생겨나는 것도 그런 점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하비가 도시권을 새롭게 이해할 것을 요청하며 하는 말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에 따르면,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자원에 접근할 개인적 자유 훨씬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도시를 바꿈으로써 우리 자신을 바꿀 권리인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이 변혁이 불가피하게 도시화 과정을 고쳐 만들 집합적 권력 행사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권리라기보다는 공통적 권리다(Harvey, 2008, 23).

하비가 도시권을 “개인적 자유”, “개인적 권리”를 넘어선 권리로 볼 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도시 자원에 접근할” 권리로서 “개인적 자유”는 사실 이미 너무 많이 허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금융화에 기반을 둔 자본 축적 전략을 통해 추진되는 신자유주의적 공간 생산은 바로 그런 자유, 통상 말하는 ‘소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 지배적 특징이기 때문이다. 도시 자원을 활용하는 개인적 자유는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주로 ‘협치(governance)’라고 하는 형태로 보장되었고, 이런 의사-민주주의적 정치 행위는 공간 생산에 적용될 경우 공간을 실제로 생산한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갈수록 프레카리아트로 전환되고 있는 민중은 배제한 채 정치인, 행정가, 학자, 법률가, 사업가, 금융가, 시민사회 지도자 등 소수 전문가 집단의 전유물이 되었다.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예가 부동산 개발에서 널리 활용되는 공공-민간 협력(PPP)이다. 통상 협치의 형태로 진행되곤 하지만, PPP는 공공 부문과 개인 부문에 대한 사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사-민주주의적 의사결정 행위에 속한다.¹⁰⁾ 카놈에 따르면, “PPP의 언어는 다른 전략들과 목적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게임이다. 그런 목적의 하나는 민영화이고, 사적 제공자들로 하여금 공적 조직에 손해를 입히며 공적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Khanom, 2008, 7). 공통적 권리로서의 도시권을 강화하자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도시권을 소수의 특권적 자유로 국한시키는 PPP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공간 생산 방식을 중단시키고, 그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위해 공통적인 것을 복원하거나 확대하자는 제안이라고 하겠다.

4. 시적 정의와 민주주의

오늘날 도시권의 구현을 위해 시적 정의가 요청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도시권을 공통적 권리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 하에서 공통적 권리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한 개인적 권리 성격을 더 강하게 띠고 있는 도시권을 공통적 권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환경이 필요할 것이다. 이 환경을 ‘시적 정의의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은 현실에서는 쉽사리 주어지지 않는 만큼 ‘이상

9) 한국은 2015년 현재 50층 이상 건물 수가 104개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건축문화신문, 2016년 1월 1일)

10) 공공 부문과 개인 부문, 사적 부문 간의 차이와 관계에 대해서는 광노완(2011, 207-08) 참조.

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 이 이상적 공간이 꼭 비현실적인 상상의 세계로만 존재하지는 않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시적 정의는 통상 '허구적'인 세계—상상된 판 세상, 시적 또는 서사적 작품의 내부 세계, 작중 인물들이 거주하는 '이야기' 세계—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런 허구적 세계가 꼭 비현실적인 이차원(異次元)에서만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릇 정의를 구현하려는 노력은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오르페우스와 암피온이 “제멋대로의 방중에서 법의 순종으로”(Vico, 1993, 131) 이끌었을 때 사용했다는 수사법은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던 도시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허구-구성적 효과를 갖지만, 그로 인해 법적 질서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강력한 정치적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며, 나아가서 그 질서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실-구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적 정의 구현이 허구의 세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계가 현실의 한 층위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허구적 세계는 이때 시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실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에 해당하는 셈이고, 도시권의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은 '또 다른 세상' 또는 '작품-도시'를 만들어 내려는 다양한 실천들—도시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 작품-도시를 위한 기획과 토론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것이다.¹¹⁾ 허구적 실천은 그렇다면 시적 정의 구현을 위해 요청되는 어떤 현실적 차원, 윤리와 당위의 실현을 위해 현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실천이기도 한 셈이다.

이런 실천 영역을 확보하는 일이 탁월하게 정치적일 것임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도시권을 공통적 권리로 확보하기 위한 허구적 실천 즉 시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실천은 도시권을 개인적 자유로 전유해 공통적 권리로써의 도시권을 억압하려는 세력—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도시권을 독점하고 있는 갈수록 적은 특권적 소수—과의 투쟁과 더불어 일어나기 마련이다. 여기서 말하는 허구적 실천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의 초기 건설 과정에서 시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대체로 시가 교화, 문명화의 힘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는 도시권, 즉 공통적 권리로써의 도시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적 정의의 구현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상상으로 해결하는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도시권의 구현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결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합이 허구라는 장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허구는 이때 현실과 이차원에 걸쳐서 작동하는 어떤 '가능성의 장치'가 된다고 하겠다.

이런 역할을 하는 허구가 탁월하게 정치적 성격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적인 원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구의 능력은 상상의 능력이며, 상상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효력을 갖는다. 소설과 같은 작품 세계에서

상상은 공감과 같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겪은 것을 모두 경험할 수 없지만 허구적 작품에서는 아무리 가공할 사람일지라도 이해할 수가 있다. 훌륭한 소설은 사람들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이들 인물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소설이다. 그래서 소설은 민주적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소설이 민주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성상 민주적이라는 것이다(Nafisi, 2003, 32; Hess, n.d., 18에서 재인용).

나피시는 여기서 소설이 “본성상 민주적인” 이유를 궁극적으로 그것이 상상의 산물이라는 데서 찾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타자의 경험을 공유하기 어려워도 작품 속 인물의 목소리를 듣거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한 것은 소설이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상상적이고 허구적인 세계를 구축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의 민주주의는 그렇다면 무엇보다 소설이 공감의 가교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에서 기원하는

11) 개인 차원에서 이런 공간은 버지니아 울프가 말한 '자기만의 방'을 환기시킨다. 울프는 여성이 창작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려면 “1년에 500파운드와 문에 자물쇠가 붙어있는 방 하나”가 필수적이라고 봤다(Woolf, 1977, 113). '자기만의 방'은 현실 속 건물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판 세상의 것이 아니다.

셈이다. “소셜은 우리를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대면시키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인물들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Hess, n.d., 7). 여기서 언급되는 “우리과 다른 사람들”은 나파시가 말하는 “가공할 사람” 이외에도 타자화되어 배제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타자-인물들에 대한 공감 능력은 민주주의의 실행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타자-인물들과의 공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허구는 “본성상 민주적”일지 모르지만, 이때 민주주의는 자칫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허구는 모든 또는 최대한의 가능성에 열려 있고, 그런 점에서 일정한 위험을 내포하는 셈이다. 어느 누구와도 상상에 의한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면, 허구가 정의와는 위배되는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악인을 보상하고 선인을 징벌하는 질서를 찬양하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시적 정의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허구를 바탕으로 구현되기는 하지만, 정의의 이상적 형태로서 “그 자체의 이상적 영역”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모든 것이 가능한 허구적 작품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사태가 풀리듯 무작위한 방식”이 아니라, “적절함과 도덕의 이상적 원칙”(Abrams and Harpham, 2009, 270)이 작동되어야만 시적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말이다.¹²⁾ 이런 점은 시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허구적 실천에 의해 구현된다 하더라도 동시에 허구적 실천에 ‘올바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원리로 작용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허구적 실천에서 시적 정의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도시권 개념을 수정할 때에도 시적 정의의 원리를 고려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인다. 도시권은 어느 누구의 권리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도시권은 사실상 ‘텅 빈 기표’로서 어떤 허구적 실천에 의해 누가 채우느냐 따라 그 구체적 의미와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다. 오늘날 도시권이 소수에 의한 배타적 독점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하겠는데, 도시권의 재개념화에서 시적 정의가 요청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비의 다음 말이 시사적으로 들린다.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언젠가 정말 존재했다손 치더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도시에 대한 권리는 텅 빈 기표다. 모든 것은 누가 그것을 의미로 채우게 되느냐에 달려있다. 금융가와 개발업자도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할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맑스가 『자본론』에서 말하듯이 “동등한 권리와 권리가 서로 맞섰을 때는 힘이 문제를 결정한다”[맑스, 2015: 313]는 점을 인식하되, 누구의 권리가 인정받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면할 수밖에 없다. 권리의 정의는 그 자체로 투쟁의 대상이며, 그 투쟁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동반해 이루어져야 한다(Harvey, 2012, xv).

도시권은 도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겠지만, 문제는 맑스의 말대로 동등한 권리와 권리 사이에 경쟁과 투쟁이 발생하면 늘 힘이 센 쪽이 이기고 만다는 것이다. 이 결과 오늘날 신자유주의적으로 정의된 도시권을 개인적 소유권이 아니라 공통적 권리로 새로이 만들어내려면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요청되는바, 이 투쟁의 도덕적, 윤리적 근거를 시적 정의 또는 그와 유사한 개념이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시적 정의는 도시권이 지금 과두세력의 협치에 의해 장악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런 상황을 허용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원리라고 하겠다.

12)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시와 역사 또는 연대기를 구분하면서, “연대기 작가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시인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는 연대기보다 더 철학적이고 고귀하다”고 말한다(아리스토텔레스, 2010, 196). 시인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가 개연성의 원칙에 의해 재현 대상을 다룬다는 말이다. 실제 역사에서는 악인이 성공하는 경우가 허다한 반면에 시의 세계에서는 네메시스가 실현될 수 있다면, 그것은 시가 개연성의 원리에 의해 이야기를 꾸밀 수 있기 때문이다.

5. 시적 정의와 도시 재창조

시적 정의의 관점을 취하면 도시권의 다양한 의미 가운데 특히 작품으로서의 도시에 대한 권리가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한 바 있다. 도시권이 이제는 공통적 권리로써 근본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면, 작품-도시에 대한 권리로써의 도시권의 의미도 새롭게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도시는 소수 전문가 또는 엘리트 집단의 계산과 상상에 의해 그들만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왔다. 공공민간협력(PPP)에 의한 ‘도시 개발’,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도시 재생’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¹³⁾ 하지만 시적 정의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된 도시권이 행사된다면, 작품으로서의 도시도 이제 그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재창조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요청되는 도시권은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권리”, 다시 말해 지금까지 소수에 의해 도시를 개발하고 재개발하는 권리와는 구분된다는 점을 다시 환기하자. 하비가 지적하고 있듯이 도시권은 이제 “도시를 완전히 다른 이미지의 사회주의적인 정치적 통일체로서 재건하고 재창조할 권리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Harvey, 2012, 138). 여기서 언급된 “사회주의적인 정치적 통일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 형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도시로부터 ‘배제되는 자들’을 다시 도시로 끌어안으려는 지향을 지닌 사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도시가 그런 경향을 갖기 위해서는 “영속적인 자본 축적을 촉진하는, 도시화의 파괴적 형태들 생산”(같은 글)이 중단되어야 한다. 시적 정의의 관점에 입각한 작품-도시의 재창조는 신자유주의적 지배 체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로부터의 계획이 아니라 배제된 자들이 제출하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도시는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하는 것일까? 새로운 도시 형태는 오늘날의 지배적인 도시 공간 생산 방식과는 다른 형성 원리를 따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도시화가 파괴적인 형태를 띠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시공간과 그 직조, 다시 말해 도시의 역사성이나 장소, 결 등이 자본 축적 논리에 의해 유린됨으로써 생겨난 결과다. 도시 형태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수직적인 축과 수평적인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공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직성의 원리가 도입된 것은 오래 전부터, 예컨대 높은 성루나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했을 때부터이지만, 수직성이 도시의 지배적인 시각적 특징을 구성하기 시작한 것은 자본 축적이 도시 건설을 지배하기 시작한 뒤부터다. 이런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세기 초 이후 마천루가 대표적인 도시적 건물로 등장했다는 점일 것이다. 마천루는 오늘날 사적 소유 건물만이 아니라 공공 및 국가 건물들의 지배적 형태가 되었고, 그 “오만한 수직성은 시각적 영역에 남근적인, 더 정확히는 남근-지배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Lefebvre, 1991, 98). 자본주의적 도시가 이런 형태론적 특징을 드러내게 된 것은 자본 축적을 위한 추상공간으로 작용해 ‘작품’보다는 ‘제품’으로서의 자신의 성격을 강화한 결과다. 제품은 여기서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가 중시되는 자본주의적 산물로서, 오늘날 도시의 수직적인 시각적 특징을 만들어내는 마천루들은 대부분 자본 축적의 논리에 따라 건설되었다는 점에서 제품인 셈이다. 이런 건물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투기를 야기하는 한국의 타워팰리스 같은 주상복합건물 사례가 보여주듯이 자본 축적을 위한 탁월한 경쟁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마천루의 수직성이 자본 축적의 집중화를 표상한다면, 도시 형태가 수평적으로 포스트메트로폴리스를 지향하는 것은 자본 논리가 외연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일 것이다. 포스트메트로폴리스화는 ‘슈퍼 도시’의 형성과 궤를 함께 한다. 슈퍼 도시는 개별 도시들 간, 또는 농촌과 도시 간 구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13) 도시의 개발 및 재생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획금융(PF)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PF는 “금융, 법률, 도시계획, 정치 등의 분야 전문가나 엘리트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전문적 금융공학”(강내희, 2014, 49)에 속한다. PPP나 젠트리피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공간 생산 방식인 것이다.

스프를 현상, 즉 도시적 직조의 확산을 통해 구성되며, 오늘날 도시화의 최종 산물이다. 도시의 이런 수평적 확장이 멈추지 않는 것은 도시 공간이 갈수록 자본 축적을 위한 핵심적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도시화는 이때 자본 축적의 단순한 수단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 자본이 자신의 축적을 위해 갈수록 더욱 의존해야만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농촌과 도시의 구분이 거의 소멸해가고 있고, 곳곳에 마천루가 들어서고 있는 것은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는 도시적 공간의 생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시적 정의와 도시권의 결합으로 제출되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는 이런 상황에서 도시에 대한 공통적 권리 회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공통적 권리로서의 도시권을 회복하려면, 도시로부터 배제되고 주변화된 사람들, 도시 ‘중심’—자유로운 접근의 대상, 만남의 장소, 집단적 토론과 의사결정의 공간으로 작용하는—이 제공하는 각종 기회와 권리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도시를 그들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도시권은 이때 “도시를 바꿈으로써 우리 자신을 바꾸는 권리”(Harvey, 2008, 23)가 될 것이다. 즉, 도시의 변화를 통해 우리 자신을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권의 회복일 것이라는 말이다. 새로운 도시의 탄생과 우리 자신의 변화는 그렇다면 어떤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양자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결정한다기 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전제하는 변증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도시가 새롭게 탄생하면 우리 자신도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겠지만, 새로운 도시 공간을 만들어내려면 우리 자신의 역능이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공통적 권리로서의 도시권의 회복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소수 세력에 의해 장악된 도시를 새로운 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의 집합적 역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는 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기회의 발휘를 통해 바뀐 공간 형태 속에서 우리 자신이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때 시적 정의의 관점이 중요한 것은 그동안 도시화 과정에서 역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배제된 집합적 주체로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와 관점, 희망, 욕망을 되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공간적 변화와 그것을 통한 우리 자신의 변화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창조적, 허구적, 시적 능력이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발휘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도시를 보고 상상하고 만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오늘날 도시를 지배하는 관점이 있다면 그것은 확장된 판옵티콘적 시선 또는 판옵티콘적인 ‘정점 시선(zenith view)’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도시 공간을 수평 축과 수직 축으로 나눠 한꺼번에 정밀 주사(走査)하는 시선으로, 인공위성에서 지표면의 세세한 부분까지 झा어내는 ‘이글 아이’ 또는 ‘고공 시선’에 의해 단적으로 표상된다(강내희, 2016, 235-37).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주시하고자 하는 이런 시선이 우리 각자를 자본주의적 공리계, 자본 축적의 시공간적 좌표, 또는 자본주의적 추상공간의 한 위치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동정하는 시선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오늘날 도시에서 공통적 권리를 회복하고 시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런 구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새로운 시선과 관점, 그리고 그와 함께 도시를 새롭게 보고 상상하며 그려낼 수 있는 역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능은 넓은 의미의 창조적 능력, 즉 포이에시스로서의 시적 능력에 속한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요청되는 시적 능력은 공통적 권리로서의 도시권 회복을 위해 요청되는 것인 만큼 신화적 도시 건설에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교화 및 문화의 힘으로서의 시와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은 더 이상 지금 지배적 위치에 있는 고공 또는 정점 시선이라 할 수 없다. 미셸 드 세르토의 표현법을 빌리자면, 이런 시선은 마천루 꼭대기 층과 일치하는 ‘전략적’ 위치에 속할 것이다. 세르토는 이런 위치만 고집할 경우 ‘아래’를 결코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아랫것들’의 ‘전술’이 지닌 전복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Certeau, 1985).¹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은 차라리 ‘불결한 시선

14) 세르토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도 없지 않다. 전략만 고집해도 안 되겠지만 전술만으로도 사회 변혁은 불가

(impure view)'일는지 모른다. 도시를 볼 때 사람들은 “관찰자의 원거리 시각”을 취하기 쉬운데, 이는 “이미 창조된 순수하고 손대선 안 될 멋진 것들을 정관하는 수동적 태도”(Escobar, 2009, 138)로서 자신도 모르게 지배적인 정점 시선에 종속된 모습이다. ‘불결한 시선’과 그 관점은 그런 습속의 전복을 지향한다. 그것은 수직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아래’에 위치할 것이고, 수평적 확산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변두리’에 위치할 것이다. 불결한 시선의 채택은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적 공간 생산에 대한 문제제기, 나아가 새로운 공간 생산에 대한 지향의 의미가 있다. 그런 시선을 취하는 것은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려는 시도입과 동시에 상상의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불결한 시선은 새로 보기, 새로 생각하기, 새로 상상하기에 필요한 시선으로서, 소유에 의한 지배가 ‘일상의 질서’가 된 상황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시선일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권과 시적 정의의 결합은 이런 점에서 도시의 문제를 상상의 문제, 허구의 문제로도 이해하도록 만든다.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또 다른 도시를 창조하려면 도시권과 시적 정의의 결합은 필수적인바, 이 결합이 더 풍부해지려면 새로운 상상적, 허구적 실천이 꼭 필요한 것이다.

6. 결어

지금까지 도시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도시권이 소수의 개인적 자유권으로 행사되지 않고 배제된 자들의 공통적 권리로 행사되어야 하고, 도시의 형태를 바꿔내는 데 배제된 자들의 상상력이 가동될 수 있으려면 시적 정의가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도시권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 것은 도시 문제, 도시권 문제가 인류 전체의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권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주로 사회과학자들이 주도해왔으며, 인문학자들은 그런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다라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편이다. 여기서 도시권의 일부 측면들을 시적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해본 것은 나 자신 인문학자로서 그런 안이한 태도를 지양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전개한 논의가 다른 인문학자들은 물론이고 사회과학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더 정교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능하다고 봐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강내희(2016, 229-232) 참조.

참고문헌

- 강내희, 2016, 길의 역사—직립 존재의 발자취, 문화과학사.
- 강내희, 2014,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 강내희, 2011, “인문학과 향연—시학과 발명학으로서의 인문학,” 영미문화, 10(3), 1-27.
- 강현수, 2009.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32, 42-90.
- 건축문화신문, 2016년 1월 1일, “세계 4위 초고층 건물 보유국, 안전한가?”.
- 곽노완, 2011, “도시권에서 도시공유권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8(3), 202-220.
- 곽노완, 2010, “21세기 도시권과 정의의 철학,” 시대와 철학, 21(4), 1-30.
- 김용창, 2009. “물리적 도시재개발에서 도시권으로,” 창작과 비평, 37(2), 339-353.
- 맑스, 칼, 2015, 자본론—정치경제학비판 1[상],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 아리스토텔레스, 2010, 시학, 로즐린 뒤풍록/장 랄로 주해, 김한식 역, 펍킨클래식코리아.
- 황진태, 2010, “신자유주의 도시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 해치맨 프로젝트를 사례로,” 공간과 사회, 34, 33-59.
- 孔穎達, 1980, 尚書正義 卷三 舜典 孔穎達 疏文, 北京, 中華書局 十三經注疏本.
- 段玉裁, 1988.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 陈飞, 2005, “发言为诗”说, 文学评论, 2005年第1期.
- Abrams, M. H. and Geoffrey G. H., 2009,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9th ed., Boston, MA: Wadsworth Cengage Learning.
- Aristotle, 1984,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Ed. J. Barn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ugustine of Hippo, 1890, The City of God, in Philip Schaff(ed.), *St. Augustine's City of God and Christian Doctrine*, Trans. Marcus Dods.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Certeau, M. de, 1987, Practices of Space, in Marshall Blonsky(ed.), *On Sign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urzer, H. J., 2012., *Aristotle and the Virtu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scobar, M. G., 2009. Derives and Social Aesthetics in the Cities: Urban Marks in El Raval de Barcelona, Spain, *Journal of Alternative Perspectives in the Social Sciences*, 1(2), 136-151.
- Gotham, K. F., 2009. Creating Liquidity out of Spatial Fixity: The Secondary Circuit of Capital and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3(2), 355-371.
- Harvey, D., 2008, The Right to the City, *New Left Review*, 53, 23-40.
- Harvey, D.,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London & Brooklyn, NY: Verso.
- Hess, C. L., n.d. A Novel Approach to Justice: The Power of Fiction in Working for Justice, Available at: http://old.religiouseducation.net/member/06_rea_papers/Hess_Carol_Lakey.pdf. 접속일자: 2016.5.24.
- Hunter, I., 1988, *Culture and Government: The Emergence of Literary Education*. London: Macmillan.

- Irwin, M. W., 2014, *The Poetic Voices of John Gower*. Rochester, NY: Boydell & Brewer.
- Kant, I., 1996, *The Critique of Pure Reason*, Trans. Werner S. Pluhar. Indianapolis/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 Khanom, N. A., 2009, Conceptual Issues in Defining Public Private Partnerships(PPPs), Paper for Asian Business Research Conference 2009.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 Donald Nicholson-Smith. Oxford, UK & Cambridge, USA: Blackwell.
- Lefebvre, H., 1996, *Writings on the Cities*. Trans. Eleonore Kofman and Elizabeth Lebas. Blackwell.
- Livy, 1919, *The History of Rome: Vol. I*,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Macaulay, T. B., 1891, *Select Essays of Macaulay: Milton, Bunyan, Johnson, Goldsmith, Madame D'Arblay*. Boston/New York/Chicago: Allyn and Bacon.
- Mitchell, D., 2003.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 New York: Guilford Press.
- Nafisi, A., 2003, *Reading Lolita in Tehran: A Memoir in Books*. New York: Random House.
- Plato, 2008, *The Symposi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tenham, G., 1589, *The Arte of English Poesie*. London.
- Soja, E. W., 2000, *Postmetropolis: Critical Studies of Cities and Regions*. New York: Wiley-Blackwell.
- Soja, E. W., 2010, *Seeking Spatial Justice*, Minneapolis, MN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Theurillat, Thierry. 2011. "The negotiated city: between financialization and sustainability." Available at: http://www2.unine.ch/files/content/sites/socio/files/shared/documents/publications/workingpapers/wp_2009_02_e.pdf.
- The World Bank. n.d. "Urban Population (% of Total) in World." Available at: <http://www.tradingeconomics.com/world/urban-population-percent-of-total-wb-data.html>. 접속일자: 2016.5.8.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New York. Available at: <http://esa.un.org/unpd/wup/Publications/Files/WUP2014-Highlights.pdf>. 접속일자: 2016.5.8.
- Vico, G., 1993, *On Humanistic Education*. Trans. Giorgio A. Pinton and Arthur W. Shippe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Woolf, V., 1977. *A Room of One's Own*. London: Grafton.

예술인간의 탄생과 반자본주의적 공동도시의 전망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

1. 공통장으로서의 도시와 그것의 두 차원

나는 도시를 인간 및 자연의 사회적 관계가 공간적으로 경관화되어 나타나는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인 신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거시적 도시는 미시적 도시들의 복합체이다. 지구상에 서식하는 무수한 생명개체들은 그 자체로 복수의 전 개체적 힘들이 서식하는 미시적인 도시들이며 일종의 애벌레 도시들이다. 도시는 개체적인 차이와 전 개체적인 차이들의 마주침과 갈등적 공존의 공간이며 그런 의미에서의 공통장(場)이다.

도시 공통장에서 잠재적인 차원과 현실적인 차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적 공통장은 모든 현실적인 것들이 놓이는 미분적 공존의 표면이며 현실적인 것은 그 공존의 표면에 놓인 차이들의 적분적(통합적) 실현의 장이다. 잠재적 공통장은 역량(puissance)의 장이며 현실적 공통장은 권력(pouvoir)의 장이다. 들뢰즈는 이것을 몸체의 '위도'(latitude)와 '경도'(longitude)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²⁾ 위도는 역량의 특정한 정도에 따라, 또는 이 정도의 한계들에 따라 몸체가 취할 수 있는 정동들(affects)의 집합이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역량들이 자신들의 한계에 따라 나타내는 내포적이고 강도적인 정동들의 장이 위도이다. 반면 경도는 특정한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 등의 상대적 관계 아래에서 몸체에 속하는 물질적 요소들이 이루는 집합(Deleuze and Guattari, 1979, 493)으로서, 외연적 부분들이 특정한 관계 아래에서 조직되는 것을 지칭한다. 예컨대 진드기가 1) 빛에 이끌려 나뭇가지의 침점까지 오르고 2) 포유동물의 냄새를 맡아 그 동물 위로 떨어지고 3) 털이 적게 난 곳을 느껴 그곳의 피부 밑으로 파고드는 사례에서, '이끌리다', '맡다', '느끼다', '오르다', '떨어지다', '파고들다' 등의 내포적 분자적 진동들을 진드기의 위도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외연적으로 수행하는 진드기의 눈, 머리, 가슴, 다리, 배, 주둥이 등과 같은 유기체적 기관들과 그것들의 운동과 정지, 느림과 빠름의 운동들과 그 관계를 진드기의 경도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도시의 위도는 그 속에서 내포적으로 전개되는 무수한 자연적 인간적 기술적 인지적 진동들이며, 도시의 경도는 그 진동들이 외연적으로 재현되고 경관화되는 관계와 운동들이다. 조금 규모가 큰 사례로,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에 지진이 폭발하고 해일이 덮쳐 수많은 사람들과 가옥이 물에 잠기고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어 사람들, 동물들이 오염되고 두려움에 빠진 시민들이 정보망에서 정보를 얻으면서 대피했을 때, 폭발하고 덮치고 빠지고 누출하고 다치고 두려워하고 소통하고 도망하는 물리적이고 정동적인 미시적 진동들이

- 1) 나는 여기에서 공통장(共通場)을 '공유지'(commons)와 '공통적인 것'(the common)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공유지(commons)는 근대 이전의 공동영유지를 지칭하는 역사적 용어이고 '공통적인 것'(the common)은 공유지를 넘어서 공기, 물, 바람, 태양, 지구 등의 자연적인 공통적인 것과, 언어나 사회화된 노동력과 같은 사회적인 공통적인 것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멕시코(사빠띠스따)나 에콰도르(CONAIE)의 원주민 운동에서 보이듯 오늘날도 세계 전역에서 공유지를 위한 투쟁이 여전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서 '공통적인 것'을 사고하기 위해서는 이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한데, '場'이 흙 '土'와 태양이 솟아오름을 뜻하는 별 '易'이 결합된 것으로 1) 물리학적 분자적 운동의 공간 2) 생물학적 발생의 공간 3) 사물의 유통의 공간 4) 사회적 구조화의 공간 5) 연극적 정치적 인지적 공간 등을 두루 지칭할 수 있는 용어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 시대의 공통된 물리적 생물적 사물적 사회적 인지적 공간을 지칭하기 위해 '공통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한다. 이러한 공통장을 창조하고 변형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을 공통인(commoner)으로 명명한다.
- 2) "몸체의 **경도**라고 불리는 것은 역량의 특정한 정도에 따라, 또는 차라리 이 정도의 한계들에 따라 몸체가 취할 수 있는 변용태들이다"(Deleuze and Guattari, 1979, 487)에서 '경도'는 '위도'의 잘못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affect를 '변용태'보다 '정동'으로 새긴다.

후쿠시마와 그 주변지역의 위도라면 그것들로 인해 아비규환의 공간으로 바뀐 후쿠시마,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가동 중지되어 멜트다운될 위기에 놓인 원자력발전소, 과도한 접촉으로 마비되어 버린 통신시설,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 등의 상태와 그것들의 운동적 관계가 후쿠시마와 그 주변지역의 경도이다.

『자본론』 제8편 ‘이른바 시초축적’은 중세도시들이 해체되고 자본주의적 근대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 위도와 경도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생산수단인 토지로부터 농민들의 폭력적 ‘분리’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농촌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수탈하여 자기노동에 입각한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Marx, 1954, 973). 그 분리는 다르게, 교회재산을 약탈하거나 국유지를 사기적으로 양도하거나 공유지를 횡령하거나 봉건적 및 씨족적 소유를 약탈하여 그것들을 근대적 사적 소유로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Marx, 1954, 922). 이러한 분리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하나는 토지를 자본에 결합시켜 자본주의적 농업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도시의 산업을 위해 필요한 무일푼의 자유로운 프롤레타리아라는 주체를 공급하여 자영수공업자 중심의 중세 자치도시들을 자본가와 노동자로 분리된 자본주의적 근대도시로 바꾸는 것이다(Marx, 1954, 900, 922).

국가 수준에서 전개되는 폭력은 이 두 가지 과정을 촉진하고 또 완성시킨다. 토지로부터 농민의 분리와 신흥 도시에서의 그들의 흡수 사이의 시간 간격에서 나타나는 ‘떠뚱’을 제거하고 ‘떠돌이’들을 신속하게 도시 프롤레타리아로 전화시켜 도시에 흡수되도록 만드는 작업들이 그것이다. 국가권력은 부랑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부랑자를 태형, 감금, 낙인, 고문, 노동교화, 사형 등으로 처벌함으로써 분리와 프롤레타리아화를 촉진했다.³⁾ 또 이미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국가권력은 최고임금을 규정하되 최저임금은 규정하지 않는 노동법이나 단결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시초축적을 촉진하는 기계장치로 기능했다. 시초축적은 국내적 수준에서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전개되었다. “아메리카에서 금은의 발견, 원주민의 섬멸과 노예화 및 광산에서의 생매장, 동인도의 정복과 약탈의 개시, 아프리카 상업적 흑인수렵장화”(Marx, 1954, 944)와 같은 식민제도, 생활수단에 대한 무거운 과세(이른바 ‘근대적 조세제도’)에 기초한 국공채의 발행, 보호무역제도와 지구를 무대로 하는 유럽 국민들의 무역전쟁(Marx, 1954, 952) 등이 그것이다. 자본주의적 근대도시를 위한 시초축적의 요소는 이러한 계급적 인종적 착취와 수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 과정은 무자비한 성적 착취를 수반하는데 맑스가 누락한 이 측면은 살비아 페데리치에 의해 상세히 규명되었다(Silvia, 2004, 235-308). 그녀에 따르면, 맑스가 말한 피의 입법과 거의 동시기에 전개된 여성에 대한 테러 전쟁, 즉 마녀사냥이야말로 시초축적에 대한 이해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다. 국가와 자본은 예술가들을 동원하여 마녀들의 인물과 악행에 대한 상상된 세밀화를 그리게 하고, 법학자 변호사 정치가 과학자 신학자 치안판사 악마연구자들 같은 지식인을 동원하여 마녀박해를 위한 지적 법적 장치들을 체계화했다. 또 유럽의 국가들은 법적 행정적 사회적 수준에서 유사한 제도들을 도입함으로써 마녀박해를 위한 범 유럽적 수준의 연대관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전 사회적이고 전 유럽적인 수준에서 고안된 마녀박해의 기획은 고발-고문-자백-화형으로 이어지는 처벌절차를 통해 마치 농민으로부터 공유지를 박탈 하듯이 여성들로부터 신체를 박탈했다. 끔찍한 화형식 광경은 자본주의적 노동규율과 양립할 수 없는 관습, 신념, 사회적 주체를 파괴하고 여성과 남성을 성적으로 분리시키며 여성을 부불가사노동을 담당하는 하위계층로 배치함으로써 여성 신체를 오직 가사노동과 노동력 재생산만을 위한 기계장치로 전락시켰다. 로자 룩셈부르크 이후에, 이러한 시초축적의 요소들을 이미 지나가 버린 일회적인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일상적으로 되풀이 되면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들을 재생산하는 현행적인 요소들로 파악하는 인식은 널리 공유되고 있다. 오늘날도 더욱 확대되고 더욱 심화된 규모로, 그리고 변형된 형태로 성적 인종적 계급적 착취와 수탈의 장면들을 재생산하고 있는 이러한 시초축적의 미시적 요소들이 자본주의적 근대도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의 외연적 경도들을 가져오는 내포적 진동들, 즉 위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 주제는 미셸 푸코에 의해 정신병과 정신병동의 탄생이라는 고고학적 문제의식 하에 더욱 깊이 연구되었다.

2. 풍경의 '발견'과 풍경의 '창조'

일반적으로 도시의 외연적 경도는 '풍경'으로 나타난다. 풍경이 외부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근대의 내면화된 인간에 의해 도착(倒錯)적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가라타니 고진의 생각이다(柄谷行人, 1980, 11). 그런데 근대화란, 무관심한 마음으로 외부세계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을 가공 가능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시대가 아니었던가? 다시 말해 풍경을 창조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근대화의 효과가 아니었던가? 근대 이후에 자연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근대 이전의 자연이 인간이 깃들여 주어진 집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근대 이후에 그것은 아직 인간의 가공이 가해지지 않은 것, 하지만 인간이 주체로서 자신의 것으로 가공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자연은 이제 인간의 것, 즉 능동적 인간의 '비유기적 몸'(몸스)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은 '외부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내면화된 인간'이라는 가라타니의 표상과 모순된다. 외부세계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심이 근대화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 모순은 세계인식의 계급적 분화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파악하면서 세계에 대한 능동적 관심을 표현했던 것은 부르주아지였다. 프롤레타리아에게 있어서 세계는 부르주아지의 것이며 자신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을 통해 이 세계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동신체이지만, 사적 소유체제 하에서 강제되는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소외,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자기자신으로부터의 소외와 같은 몇 겹의 소외로 인해 세계로부터의 소외를 겪게 되고 외부세계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수동성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가라타니가 말하는 내면화된 인간이란 근대인 일반의 특징이 아니라 근대의 프롤레타리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특징은 사적 소유 체제에 의해 부과되고 강제된 것으로서, 외부세계에 무관심한 그 '내면화된 인간' 자신이야말로 외부세계를 실제로 개조하고 창조하는 바로 그 주체라는 사실이 지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대 이후에, 주어진 풍경들을 깨뜨리면서 도래하는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들, 풍경을 자신의 세계로 전유하고자 하는 운동들, 아래로부터의 반란과 혁명들이 그것을 증언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풍경은 모순과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긴장된 사회사적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풍경이 여러 사회적 장치들의 긴장 속에서 꾸며지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제주도의 영등굿은 바다의 신인 '영등할망'을 모시는 굿으로 매년 음력 2월 1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행해진다. 1일의 굿을 영등환영제, 15일의 굿을 영등송별제라 부른다. 제주도민들은 영등할망이 강남천자국에 살면서 매년 2월 1일에 제주의 서쪽 끝인 비양도를 통해 들어온 후 보름에 제주 동쪽 끝인 우도를 거쳐 본국으로 떠나기까지 한라산과 제주바다를 돌며 꽃씨를 뿌리고 들판에는 오곡의 씨를 바다에는 소라, 전복, 해삼 등 해산물의 씨를 뿌린다고 믿어왔다. 영등제는 이 영등할망을 지극정성으로 모셔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전통적 의식(儀式)이다. 이 제사굿은 이 보름간에 걸쳐 영등할망의 이동시간을 고려하면서 제주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16년 음력 2월 14일 제주 동북쪽 북촌리 영등제에는 십 여 대의 카메라와 수 대의 드론이 동원되어 ① 큰대세움 ② 초감제 ③ 요왕맞이 ④ 씨드림 ⑤ 지아뵈 ⑥ 산받음 ⑦ 배방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촬영했다. 영등신을 본국으로 보내는 제차로서 스킨로폼으로 작은 배를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물을 조금씩 실어 바다에 띄워 보내는 배방선 절차에서는 보트에 탄 카메라맨들이, 제물을 어선에 싣고 바다로 나가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해녀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지상, 상공, 해상에 걸친 입체적 시점에서 '풍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날 우도에서 열린 영등송별제에는 카메라맨만이 아니라 (제주 민예총 소속의) 예술가들도 참여하여 영등제의 풍경화에 한 몫을 했다.

무당과 드론의 이러한 마주침, 그리고 오래된 전통축제와 포스트모던 영상기술의 만남, 그리고 방송과 주민 및 지역예술가들의 이러한 연결은 원주민들의 전통축제를 관광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도

시의 산업기획의 일부다. 이런 방식으로 제주도가 품어온 영등제 풍습은 미디어화를 통해 일종의 미디어마크가 됨으로써 랜드마크 제주도에 다른 풍경을 부여한다. 풍경은 이제 더 이상 자연풍경이나 사회풍경만이 아니다. 풍경은 점점 미디어화되고 있고 또 미디어화됨으로써만 풍경으로서 기능한다. 산업자본주의에서 인지자본주의로의 이행은 점점 미디어화되지 않은 풍경을 더 이상 풍경으로 간주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은 랜드스케이프를 미디어스케이프를 만들어내고 다시 미디어스케이프를 랜드스케이프로 만들어 내는 장치들로 기능한다. 카메라를 앞세운 미디어화와 예술가를 앞세운 쟁쟁화를 통해 추진되는 산업적 투어리즘이 제주도의 국제관광도시화의 실상인데 이것은 ‘풍경의 발견’을 넘어 ‘풍경의 창조’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므로 풍경의 혁신을 사유함에 있어서 현대도시의 풍경을 낳는 내적 진동들, 그 내포적 위도들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주어진다.

3. 스펙터클 투어시티와 그 구성요소

사진기술이 인간의 지각을 ‘손’에서 ‘눈’으로 옮긴다고 말한 사람은 발터 벤야민이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눈은 생물학적 눈이라기보다 기계에 의해 매개된 ‘기술적 눈’이다. 하늘을 나는 드론기술은 ‘인간의 눈’의 원근지각 외에 ‘새의 눈’의 부감지각을 가능하게 만든다. 원근경험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라면 부감지각은 전체를 조망하는 지각이다. 편집은 이 두 지각양식을 결합시킬 것이다.

드론에 앞서 인공위성이 부감지각을 대중화시켰다. 구글맵은 우리에게 부감된 지도의 풍경을 제공한다. 오늘날 투어는 단순한 둘러봄이 아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인공위성의 눈으로 본 지도에서 여행할 곳을 선택한 후에 그곳을 둘러본다. 전체적 조망이 부분적 둘러봄에 선행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체와 부분의 편집, 원근법과 부감법의 결합을 일반화시킨다. 금융자본은 세계 전체를 광속으로 돌아다니는데, 그 투어는 지구 전체의 기업분포를 조감한 후에 국지적 투자지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전쟁 투어 역시 지구의 분쟁지역에 대한 전체적 조망 위에서 국지적으로 수행된다. 높이의 기술이 거리와 넓이를 지배한다.

투어지각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것은, 휴일활동에 국한되었던 일상의 관광지각을 넘어서 레저, 사업, 또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꽤 장기적으로 자신의 통상적 환경 외부에서 머무르면서 이동하는 지각형태 모두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러한 지각형태는 점점 일반화되어 ‘워킹홀리데이’에서 보이듯 노동이나 학업 등에게까지도 투어적 지각양식, 즉 관광객적이고 구경꾼적 지각이 나타난다. 이 뿐일까? 기 드보르는 이 구경꾼적 지각양식의 출현을 자본주의의 변형과 연결시킨다. 이러한 지각양식은 사회생활이 이미지들, 스펙터클의 거대한 축적으로 되고 직접적으로 체험되었던 것들이 단순한 이미지적 재현으로 되는 자본주의 단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Debord, 1992). 가라타니 고진이 근대화와 연결시켰던 외부세계의 풍경화는 세계의 스펙터클화 속에서 더 거대하게 재생산된다. 일상의 삶으로부터 분리된 이미지들은 하나의 공동의 흐름 속으로 녹아들고 실재는 관조의 대상으로 된 하나의 보편적 유사세계로, 비-삶의 자율적 운동, 삶의 구체적 전도로서의 스펙터클로 된다는 것이다. 기 드보르는 스펙터클이 단순히 이미지들의 집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들에 의해 매개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스펙터클에서는, 가라타니의 경우에서처럼 풍경에서 독립된 ‘내면화된 인간’이 풍경 건너편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술적으로 매개된 스펙터클 속에서 서로 관계 맺는 구경꾼들만이 있을 뿐이다.

기 드보르의 스펙터클론은 주로 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었지만 우리 시대에는 텔레비전이 스펙터클을 일반화하는 더 대표적인 장치다. 텔레비전을 통해 이미지의 삶이 누구나의 보편적 삶의 형태로 자리잡기 때문이다. 지금은 성별, 계급, 인종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텔레비전 화면에 구현되는 풍경화된 세계, 세계-

풍경과 관계를 맺는다. 컴퓨터그래픽은 체험을 넘은 환상적 세계를 꾸며내고, 초고속카메라는 극사실적 장면을 연출한다. 안방에서 시청자들은 카메라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세계 구석구석을 구경할 수 있으며 인공위성 카메라를 통해 격전지의 생생한 상황까지 현장감을 느끼며 응시할 수 있다. 나아가, 문자발생기를 이용한 문자, 기호, 도표, 만화, 이모티콘 영상자막들은 시청자들이 직접 느끼고 사고할 필요성을 없애면서 제작자의 감각양식과 지각양식을 시청자에게 부여한다. 이런 방식으로 구성된 미디어스케이프가 랜드스케이프로 전화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은 집 밖을 나가지 않고서도 이미 구경꾼이며 관광객이다. 누구나가 관광객이며 매일이 관광시간이다. 삶은 그 자체로 관광, 즉 경관을 구경하는 투어이다. 투어리즘의 시간은 이제 휴일에 국한되지 않는 매일이며, 그것의 공간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곳이며, 특정한 계층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투어리즘의 행위자이다.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이미지들로 축적되어 연속적이고 독자적인 흐름으로 나타나는 스펙터클이 사람들을 항상적 투어리스트로 만들면서 자기자신을 유일무이한 삶으로 주장하는 시간이 인지자본주의의 시간이다. 스펙터클화한 자본만이 유일한 주체성으로 나타나는 이 보편적 시간 속에서 시청자는 고전적 의미의 '구경꾼'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부적합할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들은, 구경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흥미'나 '관심'은 물론이고 '내면화된 자기'조차 잃어버린 채, 미디어화된 랜드스케이프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관찰카메라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하고 화려하며 사실적인 가상들로 사람들을 이처럼 수동화시킨 이 스펙터클 도시, 흔히 '창조도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불리곤 하는 이 도시는 어떤 얼굴들, 어떤 관계들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첫째로 신자유주의적 스펙터클 도시는 축적의 도시이다. 이미지의 거대한 축적은 무엇보다도 금융화된 자본의 거대한 축적이며 미디어화되고 무수히 반복되는 도시의 풍경들은 세계에 대한 지각양식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고정시키는 거대하게 축적된 권력이다. 이 도시는 더 큰 부가가치, 더 큰 이윤, 즉 자본의 더 큰 축적을 향해 정향된다.

둘째로 스펙터클 도시는 스펙터클이라는 통합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적으로 양극화된 도시, 즉 두 개의 도시로의 분열을 은폐한다. 마이크 데이비스가 분석하듯이, 마천루들이 즐비한 도시의 뒷골목에는 그것들의 그림자처럼 넓게 슬럼가가 펼쳐져 있다(Davis, 2006). 스펙터클들은 이 공간에서 전개되는 범죄를 집중적으로 노출시켜 악마화하고 여기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마천루에서 전개되는 더 큰 범죄들은 은폐한다.

셋째로 스펙터클 도시는, 울리히 벡이 분석하듯이, 위기도시이다.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적 가상에 의존하는 스펙터클 도시는 핵위기, 환경위기, 교통위기, 전쟁위기 등 다가오는 혹은 이미 닥친 재난의 얼굴을 은폐한다. 스펙터클 도시의 저변에서 발생하고 또 발전하고 있는 이 재난적 위기들은 사람들의 평상적 지각능력을 벗어나 있다. 또 위험은 도시의 양극적 구조에 따라 다르게 분배되는데 스펙터클은 그 위험에 다량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의 지각을 수동적인 구경꾼적 지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이 위험에 대한 도시의 대응능력을 위축시킨다.

4. 스펙터클 도시와 예술인간, 그리고 공통장

스펙터클 도시가 이렇듯 자신의 분열되고 위험하고 고압적인 다른 얼굴들을 가리면서 자신을 친밀하고 자상하며 다정한 봉사의 주체로 내세우지만 스펙터클의 시청자들은 끊임없이 채널을 돌린다. 비록 이 채널 돌림이 이미 주어진 채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뿐이지만, 이것은 그들이 스펙터클 이미지들에 점점 시들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것은 시청자들이 권태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종의 고통의 증상이다. 왜 시청자들은 화려한 이미지들로 포장된 스펙터클

의 저 친절하고 자상한 봉사활동을 권태로워 하는 것일까?

그 권태는, 지금 스펙터클의 구경꾼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들이 사실은 스펙터클로 통합되는 무수한 인간적 기계적 사물적 구성요소들의 창조자들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스펙터클 도시 그 자체가 자신의 창조물인데도 그것이 그들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들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권태의 계기가 주어진다. 산업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생산수단, 생산물, 그리고 공장으로부터 분리되어 소외되듯이, 인지자본주의에서 창조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기계장치들, 이미지들, 그리고 도시로부터 분리되어 소외된다. 스펙터클은 창조물들이 창조자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생겨나는 도착의 효과이다. 스펙터클 도시는 그 창조자들을 그들 자신의 도시로부터 체계적으로 분리시키고 소외시키는 장치다. 텔레비전이 홍수처럼 하루 종일 정보를 쏟아내지만 시청자들의 감각과 지각의 양식, 정동구조와 사유양식을 그들 자신의 삶의 필요로부터 분리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보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정치권력이 자본의 이익을 국익으로 선언하고 사법권력이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자들의 이익을 정의로 심판하며 사유화된 국가나 소수의 대주주들에 의해 장악된 미디어기구들이 본질적으로 사적인 이해관계를 공중의 일반이익으로 제시하는 현실에서 스크린, 모니터, 지면을 채우는 스펙터클의 풍경들은 인지적 창조자들의 삶의 행복과는 배치되는 풍경들, 다시 말해 고통스러운 정도로 지루하고 역겨울 정도로 외설스럽고 슬플 정도로 맹목적인 풍경들이다. 이러한 풍경들의 일상적 반복이 우리의 지각습관을 고정시키고 정동능력을 교란시키며 행동능력을 침식한다.

만약 도시에서 스펙터클 장치에 의한 분리가 없다고 한 번 가정해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맑스가 그려본 것처럼, 도시의 삶에서 대상들의 상호적 가치가 우리들 자신의 상호적 가치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도시에서 창조자들인 다중의 생산과정은 그들의 개성과 특이성을 대상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개성적인 생명외화를 향유할 것이고 그 대상들을 직관하면서 개성적인 기쁨을, 감각적으로 직관 가능한 것으로서의 자신의 인격을 향유할 것이며, 그리하여 자신의 의심할 수 없는 힘을 향유할 것이다(맑스, 2013, 208-209).” 둘째로 도시에서 다중의 생산물을 타인이 향유하고 사용하는 동안에 다중은 “자신의 노동에 의해 타인의 인간적 필요를 만족시켰다는 의식을, 인간적 본질을 대상화했다는 의식을, 그리하여 다른 인간적 본질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대상을 창조했다는 의식을 직접 향유할 것이다(맑스, 2013, 209).” 셋째로, 도시의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당신과 유(Gattung) 사이의 매개자일 것이고 당신 자신에 의해서 나는 당신의 고유한 본질들의 보충으로, 당신 자신의 필연적 일부로 인정되고 또 느껴지게 될 것이며, 또한 나는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인정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맑스, 2013, 209).” 넷째로 도시의 “나의 개성적인 생명의 외화 속에서, 나는 당신의 생명의 외화를 직접 경험할 것이고, 나의 개성적 활동 속에서 나는 직접적으로 나의 진정한 본성을, 나의 인간적 본질을, 나의 공동본질(Gemeinwesen)을 입증하고 실현할 것이다(맑스 2013, 209).”

이렇게 자유로운 생명외화이고 그 생명의 향유일 다중의 상호적 창조와 향유의 활동은 사적 소유와 그에 기초한 스펙터클적 분리의 장치를 매개로 그 창조자로부터 분리되어 생명소외로 귀착된다. 이렇게 되면 창조활동은 살기 위해, 생활수단을 조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활동으로 변질되고 더 이상 창조활동은 생명활동이 아니게 된다. 그리하여 “나의 개성은 나의 활동이 내게 증오스럽게 느껴지고 고통이 되고 활동의 가상과 다름없는 것이 될 정도로, 그리하여 내적으로 필연적인 필요가 아니라 단지 외적이고 우연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에게 강요된 활동이 될 정도로 소외된다(맑스, 2013, 210).” 자신의 강제된 창조활동의 산물인 도시가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물끄러미 바라보아야만 하는 이미지-대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자기상실과 무기력의 명백한 표현으로 되며 오직 권태만이 그 자기상실과 무기력의 표현이자 동시에 그것에 대한 약한 거부를 함축하는 이중의 감정으로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스펙터클 앞에서 느끼는 다중의 권태감은 그러므로 다중 자신이 “인간적 공동본질”, 즉 공통장의 창조자

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역설적 현상이고 스펙터클적 도시관계와는 다른 도시관계, 도시형태를 창조할 필요성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다. 『예술인간의 탄생』에서 서술했듯이, 스펙터클 도시는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 체제 하에서 예술인간 도시가 나타나는 도착적 이미지이다(조정환, 2015, 210-220).

스펙터클이 도착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간들의 창작품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함의하는가? 오늘날의 다중은 창조하도록 요구받을 뿐만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만 그 존재이유를 입증 받는다. 지식, 정보, 상징, 정서, 소통의 생산이 주요한 생산영역으로 되고 독창성이 지적재산권의 핵심축으로 규정되고 있는 엄현한 현실이 다중들로 하여금 매순간 인지적 창조능력을 보이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지식이나 상징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활동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돌보고 보살피는 활동에서도 남다름과 창조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들의 소통으로부터 축적하는 플랫폼들이 더 늘어날수록, 남다르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들의 의미는 점점 커진다. 심지어 사물들의 생산조차 편리함, 편안함, 즐거움, 따뜻함, 달콤함, 멋짐, 귀여움, 안전함, 만족함, 빠름, 화끈함, 무서움 등 감각적이거나 감성적인 것을 생산하기 위한 물적 구성요소로 위치지어지면서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창조성에 대한 요구는 한층 커진다. 지금까지 예술가들이 보여주었던 능력과 자질이 생산하는 다중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이 된다. 누구나가 예술가이기를 요구받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예술인간의 탄생과 성장의 조건이다.

스펙터클 풍경은 다중의 이 모든 예술적 창조능력을 자본과 권력의 축적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포획하고 집적, 집중시키고 편집하고 재구성한 산물이다. 그 결과 개별적 수준에서 다중의 다양한 지식들은 사회적 수준에서 집합적인 무지를 낳는 소음들로 배치되고, 따뜻함과 달콤함을 생산하는 능력은 양극적 사회의 잔인하고 냉혹한 풍경을 가리는 스크린으로 작용하며, 안전함과 만족함을 생산하는 능력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위험, 불안, 공포를 잊게 만드는 위안기제로 작동하고 다중의 부단한 중얼거림과 소통의 능력은 스펙터클 속에서 소통의 극단적 단절과 고독함을 창출하는 것으로 귀결되며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능력은 스펙터클 속에서 더 없이 낡고 타성적인 것의 무한 반복으로 된다. 이처럼 스펙터클 속에서 예술인간의 잠재력은 냉소기계의 에너지로 기능하며 그 속에서는 가상풍경과 실제풍경의 분리, 가상풍경에 의한 실제풍경의 은폐, 실제풍경의 가상풍경으로의 대체가 체계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하지만 스펙터클 장치들이 무지와 둔감과 단절과 냉소의 효과를 낳는다고 해서 인지화된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그러한 것을 생산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 그러한 것을 생산하는 존재임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한편에서 인지화된 노동자들은 집단지성적 방식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소통을 생산하지만 그것들이 놓이는 스펙터클적 상황과 스펙터클적 편집은 그것들을 무지와 불통의 요소로 전화시킨다. 다른 한편에서 인지화된 노동자들은 스펙터클이 요구하는 인지적 능력들만을 발휘하도록 억압당하기 때문에 비스펙터클적 지식과 수평적인 소통, 그리고 스펙터클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생산하는 길에서 제약을 받는다.

스펙터클 도시는 사람들을 압도적 힘으로 통합시킴으로써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데 스펙터클의 통합할 수 있는 힘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인간의 공통본질(Gemeinwesen)을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메트로폴리스에서 어떻게 인간의 공통본질이 스펙터클로 전화하는 것일까? 메트로폴리스의 스펙터클들화에서 우리는 세 가지 과정에 주목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미디어타이제이션(mediatization), 투어리피케이션(tourification)이 그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물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미디어타이제이션은 정신적 공간을 대상으로, 투어리피케이션은 소비공간을 대상으로 전개된다. 요컨대 미술관을 비롯한 문화공간을 건축하고 예술행사들을 일상적으로 펼치며(젠트리화) 미디어를 통해 이 사실들을 유통시키고(미디어화)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러오도록 유혹하는 것(투어화)이다. 이것들은 다중들의 창조활동과 인지적 소통, 그리고 다차원적 교류를 가치축적망 속에 가두는 스펙터클 장치들이다(조정환, 2015, 214). 이러한 스펙터클들이 예술가들, 기술자들, 지식인들 등을 앞세워 전개된다는 사실은 스펙터클 도시가 공통장을 창조하는 예술인간적 능력에 기초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랜드마크들의 구축, 예술 프로그램들,

문화예술적 투어 등이 물리적 정신적 생산공간과 물리적 정신적 소비공간 모두에서 도시를 갱신하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네그리가 말하듯, 예술들이 도시 속에서 공통장으로 기능할 특이한 언어들을 발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Negri, 1989, 40). 다시 말해 예술형식이 특이성들을 기초로 한 집단적 결정과 공통적인 협치의 사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시의 갱신은, 그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수단이 되는 경우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랑을 받는 이러한 공통성의 예술형식, 예술인간적 다중의 힘을 필요로 한다.

5. 인지가본주의에서 공통장으로부터의 배제와 소유도시

이번에는 서울 도심지에서 벌어진 사례를 놓고 생각해 보자. 싸이가 건물주가 된 후에, 자신들이 구축한 공간에서 추방될 운명을 맞은 한남동 ‘꿈데 거리’의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작가들의 작업공간이자 전시공간이자 동시에 서점이다. 영화 <건축학개론>의 주인공이 앉아서 차를 마신 촬영지로 이용된 카페이기도 하다. 이곳은 삼성 리움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리움과는 달리 권위적인 화이트큐브를 거부하고 지역 및 예술가들과 밀접히 소통하는 ‘접는 미술관’을 추구한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연명하는 예술적 창작방식의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커피 열풍을 적용한 예술 레지던시 카페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이 예술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카페 공간 전부를 작업실로 제공하면 작가는 그 지역 및 카페를 방문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카페를 창작물로 채운다. 카페를 방문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는 고객이기도 하지만 예술가의 창작을 고무하는 창작참여자이고⁴⁾ 또 예술작품을 즐기는 관람자이기도 하다.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되는 메뉴판은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소식과 작품을 소개하는 일종의 신문의 역할을 하며 음식들도 입주한 작가의 주제를 재해석해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입주 후에 랜드마크 패션매장 꿈데가르송이 바로 맞은 편에 들어서면서 이 지역은 일명 ‘꿈데 거리’라는 이름의 예술, 전시, 패션의 공간으로 부상한다. 이것이 지대를 상승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누가 보아도 건물가치의 상승은 건물주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예술적 감수성으로 공간을 변화시키고 유통시키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들였던 예술가들, 그들의 활동에 참여하고 관람하고 이 공간을 사용했던 이용자들, 이 지역의 주변 거리를 가꾸고 지켰던 지역민들과 노동자들, 지역의 성격과 어울리는 가로수 심기와 관리와 같은 이 지역의 주변 환경에 대한 공적 투자, 미디어의 주목과 재현, 해당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 등, 요컨대 공통장의 확장이 가져오는 이른바 ‘외부효과’이다. 그런데 건물주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권에 기초하여 그 가치상승의 효과를 지대차액으로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통장의 확장에 기여했음에도 상승한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예술가들을 추방하는 역설적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다.

공통장을 형성한 후에 그것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은 예술가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다. 자연공간과 사회공간에서는 예술가라는 직업을 갖지 않은 무수한 생명개체들이 공통장의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고 추방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은, 헤아릴 수 없고 가시적이지도 않은 수많은 생명개체들의 공동의 작품이며 또 마을은 마을주민들과 방문객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많은 행위자들이 함께 가꾸고 지켜가는 공통장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존재들의 감성적 예술적 노력이 없이 자연이나 마을은 구축되지도 유지되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과 마을은 집단창작품이며 이런 의미에서 자연과 마을에서의 삶은 예술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적 젠트리피케이션은 수익성 있는 사용(즉 ‘공통장’의 자본주의적 사용)을 위해 이러한 자연적인 공통장과 사회적인 공통장을 파괴한다. 제주 강정 마

4) 내가 테이크아웃드로잉을 방문했을 때, 한 만화가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만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곳에 앉은 나는 실시간으로 그 만화가 그려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필요하다면 창작작업에 개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화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글을 모니터에 쓰고 화장실로 갔다.

을의 구럼비를 깨뜨리고 평화롭던 마을을 군사훈련이 전개되는 해군기지로 만든 것은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공통장을 깨뜨린 예다. 수도권 전기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도심지를 잇는 구간에 송전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밀양의 자연환경과 마을공동체를 깨뜨린 것도 같은 사례이다. 이외에도 신도시들의 건설 과정은 이미 무수히 많은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공통장들을 파괴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그것은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공통장으로부터의 분리를, 즉 강제이주를 가져왔다.⁵⁾

추방은 좀더 인지적인 공간인 미디어스케이프에서도 전개된다. 신문, 방송, 그리고 디지털 매체 등 미디어는 과학기술의 집단지성적 발전과 그것을 이용하는 ‘공중’의 형성에 의해 형성되는 공통장이다.⁶⁾ 오늘날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용자 참여의 확대로 미디어들은 다중의 공통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미디어스케이프에서도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 이주민들, 동성애자들 등등의 소수자들은 미디어스케이프의 스크린이나 지면에서 배제되어 그 존재 자체가 은폐된다. 랜드스케이프에서 빈민촌, 슬럼가, 사창가 등이 가려지고 은폐되었듯이, 미디어스케이프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와 얼굴은 체계적으로 차단된다. 미디어에서의 배제되면 폴리스케이프(Political Landscape)에서도 제대로 재현되기 어렵다. 폴리스케이프가 미디어스케이프에 의해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들이 자신을 대의할 정치가나 정치정당을 갖기도 어렵지만 어렵사리 그러한 정치가나 정치정당을 확보한 경우에도 미디어스케이프에서 집중적으로 공격당하고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그 존재조차 인정받기 어렵다.⁷⁾ 공통장으로부터의 추방과 배제, 표현에 대한 금지와 재현에 대한 제한은 이처럼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스펙터클 도시의 작동 메커니즘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스펙터클 도시는 공통장으로부터 공통인(commoner)들을 추방하고 배제함으로써 성립되는 소유의 도시이다. 하지만 이 소유의 도시는 공통장과 공통인으로부터 분리되어 그것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 소유도시와 공통장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가 구분한 세 가지 철학적 범주를 적용해 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초재적인 것, 초월적인 것, 내재적인 것이 그 세 범주이다. 우선 초재적인 것(the transcendent)이란 내재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그것에 대립하는 것으로, 공통장 외부에서 그 공통장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통인들의 권리를 정지시키고 법 위에 군림하는 군주권력이나 독재권력, 혹은 예외상태 같은 것이 초재적인 것의 예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주로 권위와 폭력에 의존한다. 이와 달리 초월적인 것(the transcendental)은 내재적인 것의 추상으로서, 내재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초재적인 것과 같지만 내재적인 것을 포섭하고 전유하여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그것과 재접속된다는 점에서는 초재적인 것과 구별된다. 초월적인 것은 공통장으로부터 분리되지만 공통장을 기반으로 삼고 공통장의 발전을 꾀한다. 법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시민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지배하는 근대 국가권력이나 다중들의 소통활동을 촉진시키는 플랫폼을 통해 사적 축적을 도모하는 구글 같은 것이 초월적 권력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재적인 것(the immanent)은 자기생성하는 존재론적 차이로서 초재적인 것 외부에서 그것에 대립할 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것 안에서 그것에 대항하며 새로운 것을 구성하는 힘이다(조정환, 2014, 568-569). 공통장 그 자체가 바로 이 내재적인 것의 사례이다. 이러한 구분법에 따르면 스펙터클적 소유 도시는 초재적이거나 내재적인 도시라기보다 초월적인 도시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유도시는 소유를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소유는 소유도시에서 사회적 삶의 실제적 경험 조건이다. 그래서 소유도시에서는 ‘인간’이 공통장에 거주하는 공통인으로서가 아니라 소유에 따라 규정된 개인들(즉 소유자들)로 나타난다. 소유도시에서 소유 그 자체는 공통인들로부터 분리되어 대립하는 초재적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범주는 공통인들을 추상하면서 적법성의 형식

5) 이른바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불리는 1971년 성남 지역 일대의 주민봉기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대규모 저항이었다.

6) Tarde(1989)의 1장 ‘공중과 군중’을 참고하여라.

7) 20대 총선 비례대표에서 녹색당은 0.7%를 득표했고 노동당과 민중연합당은 그 이하로 득표했다.

속에 그들을 재규정하여 포섭하는 초월적 형상으로 가능하다. 소유를 기준으로 조직된 소유도시에서 소유하지 못한 개인들의 위치는 이중적이다. 형식적으로 그들은 법적 인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사회와 인간의 경계 밖으로 배제된다. 이런 배제를 거친 후, 소유하지 못한 개인들은 다시 소유의 위계에 종속된 기계적 부품으로, 소유자들에게 이용될 공통장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그 소유체제에 재편입된다. 소유도시에서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들은 배제와 재편입이라는 이 이중적인 사회적 관계와 과정을 구조화하는 초월적 장치들이며 공통장을 공통인들의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의 독점물로 항구화하는 장치들이다(조정환, 2014, 569).

그러므로 이로부터 분명해지는 것은, 소유도시의 부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예술인간인 공통인 다중들에게는 소유도시의 잔여인 내재적 공통도시를 소유도시에 대항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필요는 소유관계에 의해 일그러져 있는 공통장을 소유자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통인들의 해방, 자유, 행복을 위하는 방향으로 재정향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그런데 소유도시가 초재적이지 않고 초월적이며 공통인들이 그 도시의 시민-개인들로 위치지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공통도시의 실현은 세 가지 계기를 포함한다. 첫째는 소유관계에 포획되고 있는 공통장들을 기초로 소유관계에 대항하는 반란(저항)의 계기이며 둘째는 공통장들 자체를 소유도시의 체계로부터 분리시키는 도주의 계기이고 셋째는 저항하고 도주하는 공통장들이 카오스로 빠져들지 않도록 공통장들의 공통장을 구축하는 구성의 계기를 포함한다. 이제 이 각각의 계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6. 소유도시에 대항하는 반란과 탈주

데이비드 하비는 금융투기가 낳은 창조적 파괴의 손실이 치유하려면 잉여가치와 잉여분배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새로운 부의 공통장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공통장 이론의 부활이 갖는 중요성에 주의를 돌린다(Harvey, 2013, 86-87). 그는, 만약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재가 줄어들거나 사적 축적의 단순한 도구로 되면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오직 그들 스스로 공통재를 공급하는 것 뿐인데, 볼리비아의 엘 알토에서의 물공급 투쟁이 그 한 사례라고 말한다. 볼리비아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여 수도사업권을 초국적 수도회사인 일리마니 사(社)에 넘기자 원래 지리적으로 물이 부족했던 엘 알토에서는 이로 인하여 수도공급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맞서 주민들은 동맹파업과 단식투쟁 등으로 일리마니 사(社)를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하비가 보기에 이러한 반란의 성공사례는, 사회적 혜택을 위해 공통장이 생산되고 보존되고 이용될 수 있다는 정치적 인식이야말로 자본주의적 권력에 저항하고 반자본주의적 이행의 정치학을 다시 사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Harvey, 2013, 87).

인지자본주의에서, 시장메커니즘은 공통장에 대한 제도적 약탈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유공화국은 공통장을 사유화하는 합법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약탈되어 사유화됨으로써 다중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린 물질적 비물질적 공통장을 재전유하고 그것을 다중의 필요에 맞게 재목적화하여 재생산하는 것은 소유도시를 공통도시로 전환시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일임이 분명하다. 공통장의 재전유는 결코 갈등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반란이라는 계기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2003년에서 2005년에 걸쳐 전개된 볼리비아의 엘 알토 투쟁만이 아니라 1994년 공유지인 에히도의 사유화에 맞서 일어난 멕시코 사빠미스파 봉기, 세계시장에 지역을 편입시킬 철도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원주민 공유지를 수용하려던 푸에블라 파나마 플랜에 맞선 2006년 멕시코의 와하카(Oaxaca) 투쟁, 2008년 서울

시청광장과 청계천광장의 촛불봉기, 그리고 2011년 이후 이집트 카이로의 타르히르 광장, 스페인 마드리드의 솔 광장, 그리스 아테네의 신타그마 광장 등에서 일어난 반란들은 공통장의 신자유주의적 사유화에 반대하고 다양한 공통장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들이었다. 2008년 미국 볼티모어 내항의 노동자들은 내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교육, 보건, 존엄한 노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권지대(human rights zone) 선언과 행진을 했다. 이것은 이 지역을 일종의 인권 공통장으로 선포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로부터 7년 뒤에 인권투쟁을 기록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2015년에 이 지역에서 한 청년노동자가 경찰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구타당하고 경찰차에 짐짝처럼 실려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 마침내 척추와 허리 손상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을 때, 이에 항의하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투쟁이 일어났고 이 투쟁은 전례 없을 정도로 격렬해서 뉴욕, 워싱턴, 미니애폴리스, 보스턴, 휴스턴, 필라델피아 등 인근 도시들로까지 퍼져나가는 폭발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에 인권을 수출하는 나라로 자임하는 미국은 매릴랜드 주에 계엄과 통행금지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공통장을 계기로 폭발하는 이런 반란행동들 그 자체는 다시,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윤목적에 독점적으로 전유되고 있던 도로 광장 통신망 통신기구 차량 시간 신체 등을 공통장으로 만드는 직접적 계기로 된다. 반란이 동시에 탈주의 힘도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탈주의 힘이 가장 분명하게 확인된 역사적 사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동유럽 사회주의로부터의 거대한 엑소더스이다. 1989년 8월 동독에서 헝가리까지의 종단 여행인 ‘범 유럽 피크닉’ 중에 헝가리 국경이 개방되자 헝가리에서 여행하던 동독 시민 수 천 명이 오스트리아로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한 사건은 동유럽 사회주의 해체의 시발점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1월 10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탈주 흐름은 커다란 물결을 이루어 약 1년 사이에 6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이러한 탈주 흐름은 소련 사회주의를 해체시키고 더 이상 기존의 국가사회주의적 체제가 지속될 수 없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또 하나는 옛 제3세계 지역으로부터 서구로의 거대한 이주의 물결이다. 이것은 제3세계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농업환경이 척박해지고 세계적 수준에서 소득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더 나은 소득,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제3세계 다중들의 요구와, 자국에서의 임금 상승하는 조건에서 더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서구의 요구가 맞물려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본국의 차별정책과 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주민의 집단화와 세력화, 그리고 서구의 소수자 집단과 이주자 집단의 문화적 용해 및 연합은 서구사회를 두 개의 사회로 갈라놓았다. 이것이 ‘서구사회로부터의 엑소더스’라고 불러야 할 세 번째의 거대한 탈주흐름을 새로이 만들어내고 있다. 2005년 프랑스 방리의 봉기, 수많은 이주노동 인구가 하루 동안 일터로 가기를 거부했을 때 LA와 시카고가 문을 닫아야 했던 2006년 미국에서의 이주민 권리운동, 2007년 이후 장기적으로 전개된 그리스에서의 반란 등 전례 없는 반란들이 지속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것은 이런 흐름 속에서이다. 2015년 12월의 파리 테러와 2016년 3월의 브뤼셀 테러를 계기로 서구 세계가 무슬림과 이주민에 대한 대테러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세계자본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공포정치를 통해 다스리려는 기획이다.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갈라진 서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공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동유럽 사회주의를 해체시킨 것과 동일한 탈주의 힘이 서구 자본주의를 해체시킬 잠재적 폭발력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경을 벗어나는 이동만이 아니라 한 사회체제로부터의 탈주와 체제이행을 포함하는 광의의 탈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탈주는 공통장의 탈주, 다시 말해 인지자본주의에 유폐된 공통장의 아래로부터의 재전유와 다중의 자기관리로의 전환을 향하고 있다. 자급, 자치, 자기가치화, 자기조직화라는 말들은 이러한 방향을 가리키는 개념적 용어들이다. 임금을 받는 어떠한 노동도 수행하지 않기로 하고 정부의 군대에 맞서 싸우는 과테말라의 레지스탕스 공동체의 소농경제⁸⁾, 공유지를 근거로 한 멕시코 치아파스 주 사빠띠스따 원주민들의 자치경제⁹⁾ 등이 그것의 사례들일 것이다. ‘상업경제’와는

8) 미즈·벤홀트-툼젠(2013)의 7장 ‘임금노동과 자급’을 참조하라.
9) 클리버(1998)의 1부 7장 ‘자연, 신자유주의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참조하라.

달리 ‘문화에 대한 접근이 가격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의 복잡한 조합에 의해 규정되는 경제 양식’(로렌스 레식)으로서의 공유경제도 공통장을 인지자본주의로부터 탈출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상업화되어 온디맨드 경제(수요맞춤형 경제)의 요소로 되기 이전의 초기 에어비앤비나 우버 등이 가옥이나 자동차와 같은 물질의 공유재화를 추구했다면, 위키피디아의 경우는 비물질적 정보와 지식의 공유재화를 추구하고, 마이크로뱅킹이나 크라우드펀딩의 경우는 화폐의 공유재화를 추구한다. 공정무역(Fair Trade), 지역화폐(LETS), 생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자본에 따른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들의 활동을 의미하는 ‘사회적 경제’도 일정하게는 공통장을 자본관계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시도의 한 영역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7. 공통도시를 위한 구성적 제도화

하지만 국경을 넘는 탈주와 이주, 그리고 인지자본주의적 유희를 넘어 공통장을 해방시키려는 노력들이 처한 현실, 그것이 현재의 조건에서 겪고 있는 위태롭고 불안정한 경험실태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탈주와 이주의 운동은 계토화하곤 하며 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켜 노동의 전반적 불안정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네오파시즘이나 제노포비아적 반작용을 불러오기도 한다. 자급경제는 시장경제의 압박으로 위축되거나 그 하위경제체계로 배치되곤 하며,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공유경제는 끊임없이 이윤논리에 이끌려 공유의 이념을 침식당하고,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적 재배분 권력에 의존하는 사회적 경제는 공통장을 관료집단의 통제 하에 놓게 만들 위험성을 갖는다.

저항과 탈주에 기초한 대안적 시도들이 이러한 위험들에 노출되어 적절한 대항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 저항과 탈주가 공통장을 사유화하는 인지자본주의 내부의 낡은 흐름들을 대체하기 위한 갈등적 시도들을 통해 위도 수준에서 다른 흐름을 창출하지만 경도의 수준에서 자본주의 국민국가와 신자유주의 제국이라는 틀을 방임함으로써 결국 창출된 위도적 흐름이 지배체제에 재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 수동혁명적 과정이 지배체제에 가져오는 변형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곤란한 일일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의 반혁명적 형식과 그것에 수반되는 지체, 되풀이, 지배의 더 큰 확장 등이 가져오는 위험을 무시하는 것도 그만큼 곤란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위도 수준에서 전개된/되는 새로운 흐름들의 성과를 종합하고 그 위에서 다시 새로운 위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발판으로 기능할 새로운 경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데이비드 하비는 『반란의 도시』에서 “탈중심화와 자치는 신자유주의를 통해 더 큰 불평등을 생산하는 주요한 장치다”(Harvey, 2013, 83)라는 말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물론 그가 탈중심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급진 좌파들(특히 아나키스트들이나 자율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다중심주의나 어떤 탈중심화의 형식들이 어떤 강력한 위계적 구조의 작용 없이 작동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소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Harvey, 2013, 84).

그런데 하비의 생각과는 달리, 자율주의의 주요 이론가 중의 한 사람인 안토니오 네그리는 1992년에 출간된 『제헌권력』(Negri, 1992)에서부터 ‘아래’로부터의 구성 ‘권력’에 대해 주장해 왔고 2006년에 출간된 『글로벌발』(Negri and Cocco, 2006)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탈식민적 좌파적 변동을 분석하면서 운동(movement, 위도)과 통치(government, 경도)의 결합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 그러므로 문제는 탈중심주의인가 위계주의인가, 위도인가 경도인가 사이에서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 두 차원의 결합이 어떤 방식, 어떤 형태로 구성될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후 네그리는 마이클 하트와 함께 쓴 『공통체』(2009)에서 이 결합의 정치철학적 원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Negri and Hardt, 2009).

근대성에 대한 저항과 탈주를 표현하는 반근대적 운동들 속에서도 두 가지 다른 경향을, 즉 주권의 해방을 추구하는 반근대성과 저항과 구성의 확대를 추구하는 해방적 반근대성을 구별할 수 있는데, 대안근대성은 후자의 흐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이다. 둘째의 원리는 이러한 대안근대적 흐름들을 상상이나 일과적 운동을 넘어서 삶형태나 사회적 습관, 관행, 제도로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습관, 관행, 제도는 고정불변의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부단한 변이와 변신의 습관과 관행이며 영구혁신 속의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 이 제도적 안착은 정체성들 사이의 계약론적 관계로서의 제도구축과는 다른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의 원리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계약론적 제도형식은 정체성들 사이의 계약, 특정 정체성의 헤게모니 확립, 권리의 양도, 권위의 수립, 중앙집권 등의 절차를 거쳐 결국 특정한 형태의 주권의 구축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대안제도는 계약이 아닌 갈등을 사회제도의 항구적 토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그것은 정체성들을 평행정렬과 우발적 마주침에 개방하여 그것들을 특이화시키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특이성들이 자신의 특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기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공통의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항구적인 반복과 변신의 제도로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들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친숙한 근대의 장치들, 즉 가족이나 기업과 같은 사적 장치나 국민이나 국가와 같은 공적 장치들, 그리고 근대적 대의제도도 대안근대성을 위한 제도장치들로 직접 사용될 수는 없다. 이것들은 공통장에 기초하면서도 그것을 부패시키고 제한하고 고갈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공통장에서 다중을 분리시키는 관리방식들이기 때문이다. 개별상품의 가치를 재현하고 유통하는 보편적 등가물을 관리하는 화폐제도와 생산된 사회적 가치 전체를 재현하고 통제하는 금융제도는 공통장을 그 외부에서 측정하고 재현하면서 장악하는 수탈의 제도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대안근대성의 제도로 직접 사용될 수 없다. 그렇다고 물물교환으로 회귀하는 것은 공통장에 대한 사유나 관리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 공정무역이나 등가교환처럼 개별적 가치재현을 보존하되 사회적 장의 재현을 무시하는 것은 공통장과의 관계능력을 침식할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네그리는 다중이 화폐를 재전유하여 공통장에서의 개별적 재현과 사회적 재현을 관리할 새로운 제도형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 지구적 주권의 제도형식인 제국적 협치도 대안근대성의 제도형식으로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향 대신 상향, 연역 대신 귀납을 방법론적 원리로 삼고 있으면서도 공통장의 창조적 확장과 다중적 사용에 필요한 다양성과 개방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어 위(군주제)와 아래(민주제) 모두와 갈등하면서 위기를 먹고사는 귀족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통장이 모든 제도들의 근본에 놓여 있는데도, 그것을 측정하고 재현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제도형식들은 그것의 창조적 발전과 다중적 사용을 보장하기는커녕 그것을 제한, 수탈, 고갈시키고 생산자 다중으로부터 그것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제도형식들에 대항하는 분노와 저항의 자기조직화로서의 반란(자크리)이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네그리는 인지자본주의적 현대의 반란들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축을 통해 제도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시간의 축에서 볼 때, 산업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들의 반란은 필요노동 시간과 잉여노동 시간의 분할방식에 대한 저항과 필요노동 시간의 확대라는 기획 속에서 전개되었다. 하지만 필요노동 시간과 잉여노동 시간의 구분은 물론이고 노동시간과 삶시간의 구분마저 불가능해진 인지자본주의에서 반란은 어떤 기획 속에서 전개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네그리는, 모든 척도를 초과하고 자본주의적 착취메커니즘을 넘쳐흐르는 예외와 초과의 시간을 조직하는 기획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 기획은, 자본의 현재에 노동의 미래를 대치시켰던 산업노동자들의 반란과는 달리, 지금여기에서의 엑소더스의 시간을 조직하고 제도화하는 기획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간 축에서 반란과 그 요구의 제도화의 방향은 무엇일까? 주지하다시피, 산업노동자들의 반란은 잉여가치가 생산되는 장소이면서 그것의 착취공간으로 파악되었던 공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인지자본주의에서 다중의 반란은 메트로폴리스를 무대로 전개된다. 왜냐하면 메트로폴리스야말로 공통장의 생산과 재생산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지대수탈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중의 반란은 메트로폴리스의 위계,

분할, 폭력, 지대수탈에 대항하면서 메트로폴리스를 흐르는 지식, 정동, 소통, 협력을, 즉 공통의 부를 다중 자신의 것으로 전유할 수 있는 제도화를 필요로 한다. 요컨대 메트로폴리스를 공동도시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8. 맺음말 : 공동도시로의 길

반란과 탈주에 기초한 구성, 즉 운동과 통치의 결합의 논리는 결코 이론적 제안에 머물지 않는다. 카사 카스 봉기의 요구들이 차베스 정부의 정책들로 제도화되었던 베네수엘라의 경우나 원주민 운동의 요구들이 모랄레스 정부의 정책들로 제도화되었던 볼리비아의 경우에서처럼, 운동이 정부와 대립하기보다 갈등을 기반으로 결합되면서 나아가는 사례들은 21세기 초 라틴 아메리카의 좌파화 물결에서 널리 확인된다. 십 수년에 걸친 좌파집권기 동안에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생활조건은 향상되었고 문화적 삶도 향상되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중국 수입의 축소와 수출용 원자재가의 하락으로 인한 국제수지의 악화, 이를 보완할 국내산업연관의 미성숙, 그리고 재정위기 상황에서 악화하는 관료적 부패 등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대중의 요구와 상충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 좌파연대에 균열이 초래되고 있고 통치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것은 운동에 조용하여 설립된 제도들이 아래로부터의 미분적 운동의 요구들에 비추어 끊임없이 혁신되지 않으면 안되며 운동의 제도들을 특정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 수준에서 연대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생태주의 정치조직인 <오성운동>¹⁰⁾, 그리스의 <시리자>¹¹⁾, 스페인의 <포데모스> 등이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위로부터의 정책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기관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포데모스>는 북아프리카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오규파이 운동으로 이어진 2011년의 전 지구적 반란의 와중에 스페인 정부의 긴축정책과 서민경제 파괴에 반대하며 출현한 마드리드 솔 광장의 ‘분노하는 사람들’(Indignados)에 그 모태를 두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어로 ‘우리는 할 수 있더라’란 의미를 지닌 <포데모스>는 신자유주의적 부패를 대체할 실질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등장했던 인디그나도스(15M) 시위 캠프를 느슨하게 네트워크화된 300개 이상의 지역 총회 운동으로 확대시킨 후 2014년 1월 “카드를 들자: 분노를 정치적 변화로 전환시키자”는 선언을 발의하면서 새로운 정당 창당운동으로 전환한 것의 산물이다. 창당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의회진출에 성공했으며 스페인 최대도시들인 마드리드와 바로셀로나에서 시장을 배출한 포데모스는, 금융자본의 부채정치로 전 유럽적 차원의 공통장을 수탈하는 신자유주의적 유럽을 민주주의적 유럽으로 재구성하라는 인디그나도스 운동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 포데모스는 신자유주의적 부패에 맞서는 정의, 양극화와 빈곤에 맞서는 평등, 긴축에 맞서는 복지, 노동 불안정화와 비참에 맞서는 기본소득, 그리고 전 유럽적 차원의 장벽 없는 협력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것들은 공통장을 보존하고 그것의 성과를 공동인 다중에게 배분하며 그것의 확대 재생산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조건들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포데모스는 2015년 12월 총선에서 20.7%의 득표율로 69석을 얻어 스페인의 고질적인 양당체제를 깨뜨리고 제3당으로 부상했다.

한국에서도 도시 공통장을 지키고 확대하려는 투쟁은 지속되어 왔고 또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의 수입에 대한 반대에서 촉발되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유화에 대한 일반적 반

10) 오성운동이 추진한 다섯 가지 이슈는 공공 수도, 지속가능한 이동성, 개발, 접속 가능성, 그리고 생태주의이다.

11) 2015년 집권한 시리자는 급진좌파연합에서 출발했지만 2013년부터는 단일 ‘정당’으로 재구성되면서 ‘연합사회주의전선’(United Social Front)을 추가하여 (영어로)는 ‘SYRIZA-USF’로 표기된다.

대로까지 발전한 2008년의 촛불봉기, 지식과 교육을 공통장으로 사유하도록 만든 2011년의 반값등록금 운동, 마을공동체와 자연(구름비 바위와 그곳의 생물권)의 파괴에 저항한 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2011 이후)과 밀양송전탑건설반대투쟁(2012 이후), 정리해고를 모든 사람의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만든 김진숙 위원장의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점거고공농성 및 평택 쌍용자동차 해고반대투쟁과 희망버스 운동(2011), 용산 남일당 참사에 대한 항의(2009)에서 시작되어 홍대 앞 두리반(2009~2011), 명동 카페마리(2011),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2015~2016) 등으로 이어져온 젠트리피케이션 반대투쟁,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투쟁(2014 이후) 등은 공통장의 수탈에 기초한 현대의 메트로폴리스에 대한 침예한 비판을 함축하는 투쟁들이며 신자유주의적 메트로폴리스의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다양한 각도에서 공통장과 연관된 이 투쟁들의 요구가 그간 제도적으로 충분히 대의되기는커녕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온 보수정권에 의해 폭력적으로 억압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일부 도시들에서 이러한 요구들을 부분적으로 받아 안는 시장들이 당선되고 더 많은 지역들에서 혁신교육, 평등교육, 교육복지를 주장하는 교육감들이 당선된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또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녹색당과 노동당, 민중연합당, 그리고 정의당은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포데모스와 시리자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지난 수 년 간의 운동의 성과를 강령, 정책, 공약, 인물 속에 담아내고 의회권력으로 안착시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냉전의 오랜 영향 하에서 형성된 보수양당체제의 두꺼운 벽 앞에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으며 향후 어떤 돌파구가 가능한지를 새롭게 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도시의 위도와 경도를 축으로 하는 전략적 도시분석의 필요성이 다. 지금까지 말해온 바와 같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특이성의 역량을 분출하고 그 특이성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들의 삶의 공간을 공통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래로부터의 위도적 운동들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근본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그 운동들의 요구와 성과를 경도적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집약하고 안착시키며 그것들을 불가역적인 습관, 관행, 규칙으로 만드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다. 이것이 메트로폴리스의 공통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고려해야 할 두 축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분석, 즉 인자자본주의적 도시상황에서 그리고 그 도시의 창조자인 다중의 입장에서 그 두 축의 상태와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그 문제들을 극복할 대안과 진로가 무엇 인지를 살피는 것에서 출발하여 공통장의 동태, 그것의 귀속관계와 문제점, 대안적 관리방향 등을 주된 관심사로 삼는 전략적 도시분석이 공통도시 구축을 위한 운동과 통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참고문헌

- 김수행 역, 1990, 자본론 I, 비봉출판사(Marx, K., 1954, *Capital: Vol. I*, Progress Publishers).
- 김정아 역, 2007, 슬럼, 지구를 뒤덮다, 돌베게(Davis, M, 2006, *Planet of slums*, Verso).
- 김재인 역, 2001, 천개의 고원, 새물결(Deleuze, G. and Guattari, F., 1979, *Capitalisme et Schizophrenie, tome 2: Mille Plateaux*, Minuit).
- 맑스, 칼, 2013, “화폐체제 및 신용체제에서의 사적 생산과 공동체에서의 인간적 생산의 의미,” 조정환 역, *자음과 모음*, 19.
- 미즈, 마리아·벤홀트-툼젠, 2013,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꿈지모 옮김, 동연(와이미디어)*.
- 박유하 역, 2010,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b(柄谷行人, 1980, *日本近代文学の起源*)
- 심세광 역, 2010, 예술과 다중, 갈무리(Negri, A., 1989, *Arte e multitud: sette lettere del dicembre 1988*).
- 이상률 역, 2012, 여론과 군중, 지도리(Tarde, G., 1989, *L'opinion et la foule*, PUF),
- 유재홍 역, 2014, 스펙타클의 사회, 울력(Debord, G., 1992, *La Société du Spectacle*, Gallimard)
- 조정환, 2014, “네그리와 하트의 내재적 장치론과 혁명의 제도화 문제,” *공동체: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해제.
- 조정환, 2015, *예술인간의 탄생*, 갈무리.
- 정남영·윤영광 역, 2014, *공동체: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사월의 책*(Negri, A. and Hardt, M., 2009, *Commonwealth*, Harvard University Press).
- 황성원·김민철 역, *캘리번과 마녀: 여성, 신체 그리고 시초축적*, 갈무리(Silvia, F., 2004, *Caliban and the witch: women, the body, and primitive accumulation*, Autonomedia).
- 클리버, 해리, 1998, *사빠띠스파*, 이원영·서창현 역, 갈무리.
- Harvey, D., 2013, *The Rebel City*, Verso.
- Negri, A., 1992, *Il potere costituente: saggio sulle alternative del moderno*, Carnago, SugarCo.
- Negri, A. and Cocco, G., 2006, *Global*, Ediciones Paidós Iberica.

제2부

희망의 도시, 정치적 대안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헤게모니와 대안적 도시 이데올로기>

박배균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도시공동체와 공유지>

곽노완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공간 점거에서 수행성과 (비)재현 공간 행동주의>

장세용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자본주의 헤게모니와 대안적 도시 이데올로기*

박배균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 문제제기: 한국 자본주의의 헤게모니적 재생산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 자본주의와 도시는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을까?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방법론적 국가주의나 방법론적 글로벌주의의 영향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 위기, 재편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과정을 국민국가 차원이나 글로벌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와 발전주의 국가가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을 식민화하면서 그 헤게모니적 지위를 구축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로 현재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 에너지는 급격히 고갈되어 축적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고, 국가 또한 그 정치적 정당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왜 산업화 세력이라 미화되어 불리는 보수적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그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적 스케일에서 펼쳐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과정에 대한 사회-공간적 독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가 도시에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배경에서이다. Harvey(1982; 2013)는 도시를 자본의 지속적 축적과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는 도시가 과잉축적으로 인한 자본의 위기를 해결하는 핵심적 공간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즉, 수많은 잉여와 과잉을 창출함을 통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자본이 과잉축적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버려진 곳이나, 새로운 도시나 지역의 건조환경에 투자를 하는 공간적 돌파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확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Harvey의 논의는 자본주의와 도시와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과잉으로 인한 자본의 위기를 해결하는 도시의 역할보다는 도시가 행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에 초점을 두려 한다. 특히, 도시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헤게모니의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치중하려 하는데, 무엇보다 한국에서 자본과 국가의 헤게모니 형성에서 도시 중산층의 물질적 욕망과 기대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도시 중산층적 욕망의 형성에 있어 도시 이데올로기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논하려고 한다.

2. 이론적 배경: 도시와 도시 이데올로기

1) 도시-촌락 이분법 비판과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

도시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전통적 방식은 도시와 촌락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바라보는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도시와 촌락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대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20세기 초중반기 동안 토니스, 뒤르켐, 짐멜, 위스 등 도시생태학적 시카고학파 연구자들을 통해 정식화되었고, 현재까지도 도시를 설명하는 주류적 관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의 사회문화적 특성인 '도시성

* 본 논문은 미완성의 발표문이므로, 절대 인용을 금합니다.

(urbanism)'을 질적으로 규명하려 했던 위스는 공동체의 문화적 양식에 초점을 두어 도시와 촌락의 이념형적 구분을 시도하였다(Wirth, 1938). 그는 규모(size), 밀도(density), 이질성(heterogeneity)라는 3가지의 생태학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인간관계, 생활양식, 정서가 촌락에서는 1차적인 반면에, 도시에는 2차적이고 경쟁적이며 일탈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조명래, 2002, 95). 도시성에 대한 위스의 논의는 시카고학파의 도시생태학적 연구가 초창기 다소 과도하게 생물적(biotic) 결정론으로 흘렀던 한계를 벗어나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조명래, 2002, 97) 20세기 도시사회학에서 널리 수용되었다.

하지만, 도시와 촌락의 이념형적 구분에 기반하여 도시를 연구하는 전통적 방식에 대하여 많은 비판들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도시화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오히려 도시적 특성과 촌락적 특성이 뒤섞인 복합적 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이 밝혀지면서, 도시-촌락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적 시각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왔다. 오늘날 도시화는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전지구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전지구적 도시화의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도시 중심이나 대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비도시적인 곳으로 분류되던 도시의 주변부, 준도시 지역 등도 전세계적인 도시화 과정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 도시론의 바탕에 깔려 있던 도시-촌락 이분법적 인식론은 점차 그 근거를 잃어가고 있다(Brenner and Schmid, 2014, 20).

도시-촌락 이분법에 기반한 도시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프랑스의 도시이론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제안했던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 개념에 영감을 받은 것이다. 도시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 이론들이 도시와 촌락의 이분법적 구분에 기초하여 도시를 독특한 삶의 양식을 제공하는 명확히 구분가능한 '사회적 객체'(social object)이자 공간적 단위로 보았다면, 르페브르는 이와 달리 도시라는 형태보다는 도시화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 도시를 훨씬 더 개방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 하였다(Schmid, 2012, 45). 특히 그는 행성적 도시화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도시적 변화의 장기적 과정에 초점을 두어 도시화를 자본주의 산업화의 공간적 확산과 관련하여 바라보았다.

그런데, 르페브르가 도시화를 자본주의 산업화라는 비공간적 사회과정에 의해 야기된 공간적 결과이자 표현으로 보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임을 강조한다. 산업혁명은 촌락으로부터 도시로의 거대한 인구이동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이는 산업자본주의 하에서 공장과 노동자들이 공간적으로 집중된 것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산업화의 과정은 사회 전체적으로 산업의 논리가 확장되는 것인데, 이러한 산업화는 도시화와 매우 복잡하면서도 상호갈등적으로 얽혀있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산업화는 도시화의 조건과 수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도시화는 자본주의적 산업의 발달과 전지구적 산업생산의 확산을 가능케 한 물질적 토대였다”(Schmid, 2012, 46). 산업적 생산은 사회의 도시화를 야기하고, 도시가 특정한 수준의 성장을 넘어서게 되면 도시화는 산업생산을 창조하고, 산업화를 생산하며, 산업화를 위한 비옥한 조건을 배양하고, 산업적 모순을 도시의 모순으로 변화시킨다(Merrifield, 2013, 911). 이러한 도시화의 과정을 통해 촌락 지역들은 점차 도시적 직조로 재구성. 식민화되며, 전통적 도시들은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된다. 르페브르는 촌락과 구분되는 도시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도시화의 과정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난 사회적 변화를 도시연구를 통해 밝혀려 하였다.

이러한 르페브르의 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도시'로 번역되는 city와 urban의 프랑스식 의미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이다. 르페브르는 도시에 관한 명사 ville(영어로는 city)와 도시에 관한 형용사 urbain(영어로는 urban)을 구분하면서,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점차 진전, 심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행성적 도시화와 함께 특정 지역의 중심지이자 좁은 공간에 집중된 사람들

을 위한 집단거주지로 기능하면서 고정된 공간적 형태를 지녔던 전통적 도시(city)는 사라지고, 공간적으로 펼쳐지고 모양과 형태도 없으며 경계도 불확실한 새로운 ‘도시적 직조(urban fabric)’가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Lefebvre, 2003; Merrifield, 2013, 911). 즉, 전통적 의미의 도시가 한때는 단단하고 구체적인 실체로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행성적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이제는 유동적인 것이 되면서 더 이상 물질적 객체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론 속에서 르페브르는 ‘전통적 도시’의 폐허 위에 ‘도시적 사회(urban society)’가 등장하고 있고, 도시는 더 이상 사회적 대상으로 기능하지 못한 채, 역사적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적 의미로 보았을 때 도시는 일종의 허위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Lefebvre, 2003, 57).

2) 이데올로기로서의 도시

행성적 도시화의 관점에서 보면 도시는 더 이상 하나의 객체이거나 구분가능한 단위가 아니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도시는 도시화의 과정을 통해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는 역사적 범주에 불과하다(Schmid, 2012, 46). 그런데 실제로 도시라는 개념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라져야 할 개념인가? 메리필드(Merrifield, 2013)는 르페브르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도시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르페브르를 비롯한 여러 도시학자들이 도시의 형태와 특성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며, 비일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도시 개념의 유용성에 회의를 표시하였지만, 도시라는 용어는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끈질기게 사용되고 있다. 애초에 city라는 개념이 염두에 두었던 전통적 도시의 공간형태, 경관, 특성 등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도시적 공간형태 및 사회적 특성과 더 이상 부합하지 않지만, 세계도시(world city), 혁신도시(innovation city), 창조도시(creative city) 등과 같이 도시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언론매체, 정부의 보고서, 학교의 교과서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르페브르는 도시라는 범주가 사라져야 할 개념이라는 입장을 거부하면서, 도시가 더 이상 사회적 객체가 아닌 것은 맞지만,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존재물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행성적 도시화의 과정에 따라 여러 역사적 도시들이 산업화된 도시의 논리에 의해 포섭되고 식민화되면서 사라져갔지만, 동시에 수많은 작은 도시들은 우리 주변에 계속 머무르고 있고, 전통적 서구 도시에 대한 역사적 기억에 바탕을 두어 형성된 도시적 이미지와 도시에 대한 재현은 그 자체로 지속되면서, 나름의 이데올로기와 도회적 프로젝트를 유발할 것이라고 보았다(Lefebvre 2003, 57). 즉, 르페브르에 따르면, 도시는 물질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미지와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적 객체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르페브르의 입장을 받아들여, Wachsmuth는 도시를 이데올로기로 볼 것을 적극 제안한다(Wachsmuth, 2013). Wachsmuth에 따르면, 도시화는 너무나 복잡한 과정이어서, 도시 공간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은 필연적으로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도시화의 복잡한 과정을 그 자체로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Wachsmuth, 2013, 4). 그리고 이처럼 그 전체성(totality)을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과정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것의 재현(representation)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재현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복잡한 사회적 실체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Wachsmuth, 2013, 3). 이런 면에서 도시는 '실제 대상(real object)'이라기보다는 '사고 대상(thought object)'이다(Wachsmuth, 2013, 4).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그는 도시를 '분석의 범주(a category of analysis)'로 바라보지 말고, '실천의 범주(a category of practice)'로 바라보면서 접근하자고 제안한다. 도시를 분석의 범주로 분다는 것은 객관적 실체로서 도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객관적 실체인 도시의 특성을 존재론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는데, 행성적 도시화의 관점에서는 객관적 실체로서의 도시라는 아이디어가 거부되기 때

문에, 도시를 분석의 범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Wachsmuth에 따르면, 객관적 실체로서의 존재가 의심되면서도 ‘도시’ 개념이 계속 사용되는 이유는 도시 개념을 둘러싼 논의들이 특정의 이해관계와 권력구조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이데올로기적 실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즉, 도시는 중립적인 재현물이라기 보다는 특정 사회적 세력과 집단에 편파적으로 이득을 주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Wachsmuth, 2013, 13). 즉, 도시는 도시화 과정의 실재를 모두 완전히 재현하기보다는 그 경험의 일부만을 재현하고, 이러한 부분적 재현은 도시화의 실재 중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숨겨서, 특정 세력의 이익에 기여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관련하여 Wachsmuth는 도시 이데올로기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그 중 하나가 도시를 촌락과 대비하여 바라보는 방식이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다. 앞선 논의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촌락 이분법은 이제까지 도시를 설명하고 이론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전통적 개념이었다. 그런데, 이 전통적 개념은 1) 인클로저 운동 과정에서 산업과 농업에 대한 공간적 분업이 발생하고, 2) 도시는 사회를, 시골은 자연을 담는 공간적 틀이라는 가정이 생성되며, 3) 도시와 촌락이 서로 상이하고 대비되는 생활양식을 지닌다는 이미지가 생성되는 방식을 통해 구체화되었다(Wachsmuth, 2013, 7).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시카고 학파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도시를 설명하는 매우 자명한 이론이 되고, 또한 향후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 방향을 지시하는 목적론적 분석의 기반이 되었다. 그런데, 신맑스주의 도시이론가들에 의해 이러한 도시-촌락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실제로 현실의 도시화가 복잡하고 공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도시-촌락 이분법적 사고가 극복되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여전히 지속되면서 그 영향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이 이분법적 사고가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기능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중 담론에서 소규모 도시와 교외지역은 도시-촌락 이분법의 틀 속에서 촌락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교외지역의 주택단지 개발을 홍보하기 위해 “악의 구렁텅이인 도시로부터 탈출하자”, “전통적 촌락 가치로 복귀하자” 등과 같은 담론이 유포된 것과 관련된다. 이와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하는 도심지 개발사업은 최첨단의 진보적인 도시적 삶의 양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홍보된다. 이처럼 도시-촌락 이분법적 사고는 자본주의 축적을 위한 전략으로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유포되는 이데올로기이다(Wachsmuth, 2013, 7-8).

이상의 예에서 보듯, 도시는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객관적 분석과 설명의 대상이 되는 ‘분석의 범주’가 아니라, 특정한 이해관계와 권력구조를 대변하여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천의 범주’이다. 그런데, 도시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 매우 차별적이고 다양할 수 있다. ‘세계도시론’, ‘창조도시론’ 등과 같이 도시에 대한 추상적인 학술적 논의와 이론, 혹은 정책적 담론들과 같이 글로벌한 차원의 인지적 공동체를 통해 형성되고 뿌리내린 글로벌한 보편성을 지닌 도시 이데올로기도 있을 수 있지만, 개별 국가나 사회, 로컬리티 차원에서 널리 유포되어 지배적인 도시 담론으로 자리매김한 도시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도 있다. 미국 대도시 교외지역에는 정원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잔디밭을 가꾸고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삶을 도시의 이상적 생활양식으로 규범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발달했을 수 있고, 반면에 한국에서는 새로 건설된 신도시에서 잘 관리되는 고층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삶을 이상적 도시생활이라 바라보는 규범적 사고방식이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도시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확산된다. 먼저, 국가나 지역 차원의 지배 엘리트가 기득권적 이해관계와 권력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에 대한 특정의 담론과 이미지에, 도시를 특정한 방향으로 홍보하는 이미지, 도시의 과거를 특정한 방식으로 기억하는 역사적 해석, 도시의 정치-경제적 실재(reality)에 대한 특정한 방식의 해석 등을 만들고 유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도시에 대해 가지는 상식(common sense) 격의 지식, 담론, 감수성과 관련되어 도시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전자와 후자가 합쳐지면서 특정 사회에서 상식의 지위를 획득한 도시를 규정하는 특정의 사고방식, 지식, 담론, 정서 등이 생겨나는데, 이를 헤게모니적 도시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헤게모니적 도시 이데올로기는 특정 사회에서 도시 주민들의 선호, 욕망, 가치 등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쳐, 도시 공간의 소비방식과 도시화의 과정, 그리고 도시의 성격과 공간적 형태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사회의 자본주의적 정치-경제-문화적 질서와 국가 공동체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헤게모니

1) 강남과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

한국에서는 도시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담론은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는가? 한국의 현대 도시를 특징짓는 핵심적 키워드는 아마 ‘아파트’일 것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단독주택이 지배적 주거양식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건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1989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늘어났고, 현재는 아파트가 한국 도시의 지배적 주거양식이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 들어 아파트라는 주거양식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사회비평적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 칭하기도 하고(발레리 줄레조, 2007), 아파트가 우리나라 중산층 문화 형성의 근거지로 묘사되기도 하며(박해천, 2013), 아파트 거주가 우리나라 도시의 공동체성을 파괴한 주범으로 지적되기도 한다(박철수, 2013).

신도시는 아파트와 더불어 한국의 현대 도시를 특징짓는 또 다른 중요 키워드이다. 90년대 수도권에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가 건설된 것을 필두로 전국에 걸쳐 다양한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이를 뒷받침한 것이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이었다. 압축적 도시화의 결과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이 법을 통해 대규모의 신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하고자 했다. 1981년 11개 지구가 최초 지정되어 개발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에 총 723개의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고, 2014년 말 현재 총 603개 지구가 준공되었다. 2014년 말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전체 택지의 면적은 우리나라 도시지역 육지부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도시지역 인구의 약 23.5%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된 택지에 거주한다. 요약하면 70년대 이후 한국의 도시화 과정은 고층의 아파트 단지과 신도시 건설이라는 2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층 아파트와 신도시로 대변되는 한국의 현대 도시는 아파트 단지, 신도시, 택지지구 등과 같은 예외적 공간의 건설에 기반을 둔 공간선택적 압축 도시화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압축적 도시화를 단순히 물리적 도시공간의 건설과 관련된 현상과 과정으로만 환원시켜 이해하면 도시의 중요한 특징을 놓치게 된다. 도시는 고층건물, 아파트, 직선의 도로 등으로 구성된 물리적 실체로 우리 앞에 가시화되어 나타나지만, ‘도시적인 것(the urban)’을 도시의 물리적 건조환경의 개발에만 국한하여 이해할 수는 없다. ‘도시적인 것’은 물리적 건조환경을 넘어서 사람들의 생활양식, 사고방식, 사회적 관계의 특성 등과 관련된 훨씬 더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도시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중요하다. 도시의 실제 물리적 형태, 도시에 대한 가시화된 이미지, 도시의 생활환경과 삶에 대한 담론적 재현, 도시에 대한 특정한 방식의 이론화된 논의와 개념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적인 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고, 도시적 삶에 대한 특정한 규범적 이상을 가지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지닌다. 아파트 공화국과 신도시 개발로 대표되는 한국의 도시화 과정도 도시의 공간과 건조환경의 물리적 건설 및 개발 과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도시를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상상하며, 특정한 도시 공간의 모습을 욕망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특정한 (이미지, 담론, 상징, 지식체계, 권력관계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 이데올

로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현대 한국의 도시화 과정은 고층의 아파트 단지 건설과 신도시 개발로 대표되며, 이러한 도시화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는 서구의 경우와는 다른 독특한 도시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어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고층 아파트 단지과 대규모 신도시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한국의 도시 중산층은 저층의 조방적으로 건설된 교외의 주택지구에 거주하는 서구의 도시 중산층과는 차별적인 도시에 대한 상과 비전, 도시적 욕망을 가지고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강남’이란 장소의 담론적 재현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는 강남이 아파트 단지과 신도시 개발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의 현대적 도시화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남의 도시개발과정은 부동산에 기반한 자산의 축적을 가능케 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도시 중산층이 등장할 수 있게 해 준 중요한 물질적 바탕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강남의 엄청난 주택가격과 고급 소비문화는 보통의 한국 중산층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남은 도시 중산층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강남의 물리적 개발과정과 그 곳에서 도시적 삶과 자산 축적의 경험에 대한 담론적 재현이 한국 도시 중산층의 도시적 비전과 욕망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는 1970년대 강남의 성장과 이를 해석하고 재현하는 방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의 도시화 과정을 ‘강남화(Gangnam-ization)’라고 규정할 수 있다. 강남화는 1) 강남을 물리적으로 건설하고 담론적으로 재현하는 ‘강남 만들기’의 과정과 2) 강남 건설의 과정에서 형성된 신도시 건설의 제도적 장치와 강남에 대한 재현에 기반한 도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강남 이외의 공간에서 강남식 도시 공간을 복제하는 ‘강남 따라하기’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강남화의 과정 중에서 본 논문은 강남의 담론적 재현을 통한 한국 도시 이데올로기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강남의 장소성과 담론적 재현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강남은 한국 사회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상징화되는 공간으로, 이러한 강남에 대한 재현은 강남 거주자들의 내부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이영민, 2006). 하지만, 강남의 내적 정체성은 결코 동질적이지 않아서, 다양한 이질적 정체성이 접합하여 강남의 장소성을 형성한다(이동현·이향아, 2011). 외부인들에 의한 강남의 재현방식에는 질서와 부러움, 부정과 욕망의 이중적인 태도가 공존하고 있다. 외부인들이 강남에 대해 가지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강남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특정한 방식으로 신화화하도록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신화적 재현이 한국 사회의 주류적 이데올로기가 되는데 기여한다(김남일·백선기, 2008). 결국, 한국에서 도시에 대한 지배적 이데올로기도 강남의 개발과 중산층의 탄생 과정, 생활조건 등에 대한 담론적 재현이 신화화되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신화화된 도시 이데올로기는 한국 중산층의 도시적 비전과 욕망을 형성하는 데 밑바탕이 되고, 궁극적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과 신도시 개발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의 현대 도시화 과정을 추동한 중요한 힘이 되었을 것이다.

2) ‘강남화(Gangnam-ization)’ 이데올로기와 한국의 자본주의 헤게모니

한국의 도시 중산층들이 지니는 도시에 대한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강남화(Gangnam-ization)’라 할 수 있다. 이 강남화 이데올로기는 ‘강남에 대한 재현적 구성(강남 만들기)’과 이렇게 ‘재현된 강남의 공간적 복제 욕망(강남 따라하기)’으로 구성된다. 박배균·장진범(2016)은 이러한 강남화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서울 강남, 성남 분당,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도시 중산층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 중산층이 지니는 도시에 대한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그들은 강남을 ‘이상적 (신)도시’로 재현하고, 그러한 생활 공간을 선호했다. 특히, 강남을 ‘원형적 준거점’으로 삼아, ‘정돈된 공간’이나 ‘고급 대단지 아파트’ 등, 강남에서 ‘발명’된 도시경관을 이상적 (신)도시의 특징으로 재현했다. 또한, ‘고급 대단지 아파트’라는 ‘자기충족적 세계’(self-sufficient world)에 대한

선호가 강했는데, 이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편의성 뿐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바깥 세계의 사람들과 굳이 얽히고 충돌하는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자신들이 꿈꾸는 도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공간적 예외성’에 기인한다. 더불어 강남을 원형으로 하는 신도시라는 새로이 개발된 공간에 대한 강한 선호와 욕망도 한국 도시 중산층이 지니는 도시적 상의 중요한 특징이다.

둘째, 강남은 한국 도시간 중심-주변 구조에서 중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전국구’이며, 이 전국구가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은 대체불가능하다는 재현 역시 강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도시들 간의 중심-주변적 관계에 대한 이러한 재현은 다층적, 다중적 특성을 지닌다. 즉, 강남에 거주하지 않는 도시 중산층들은 도시 간 관계에 대한 중심-주변적 재현을 바탕으로 강남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을 지니지만, 이와 더불어 그들이 거주하는 신도시의 중심성을 주변의 다른 도시와의 관계에 투영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표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결국, 한국의 도시 중산층은 교육 서비스와 소비활동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강남 vs. 비강남’의 구분을 ‘중심-주변’적 위계관계로 재현하고, 이러한 위계적 서열화를 ‘신도시 vs. 비신도시’ 사이의 관계로도 일반화하여 확대 적용하면서 자신들의 장소/계급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셋째, 한국의 도시 중산층은 주택과 도시를 ‘사용가치’로서 보다는 ‘교환가치’의 측면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환가치의 측면에서 ‘대장주’의 지위를 점하는 강남을 정점으로 (신)도시들이 위계를 이루고 있다는 재현되기도 한다. 그 결과는 한편으로 강남을 정점으로 하는 (신)도시들을 향한 지속적인 욕망과 매혹,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이 살았거나 살고 있는 강남 이하 (신)도시에서 밀려나거나 소외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표출된다. 도시와 주택에 대한 이러한 재현은 특정한 물질적 이해와 권력관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지닌다. 먼저, 주택과 부동산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와 투기적 욕망을 뒷받침하고 도시에 대한 (재)개발주의를 정당화한다. 또한 이상의 재현 및 그것이 동반하는 욕망, 기쁨, 슬픔 따위 정서가 ‘자산으로서의 도시’를 추구하는 주체로 도시중산층을 ‘호명’(interpellate)하는 경향을 갖는다.

한국 도시 중산층이 가지는 이러한 도시에 대한 사고방식은 도시화의 과정을 특정한 방식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와 자본주의적 기존 질서가 유지, 재생산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60년대 이래로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는 동아시아에 형성된 냉전적 지정-지경학의 조건 속에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베트남 전쟁 참전 등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환태평양 및 동북아 냉전 네트워크와 글로벌 군산복합체에 적극 결합했다. 그 결과로 한국 자본주의는 미국과 일본 자본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동아시아 국제분업구조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깊숙이 편입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정-지경학적 조건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는 국내적으로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치와 ‘조국 근대화’를 기치로 한 경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자본과 노동을 집약적으로 동원하여 수출지향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발전주의 프로젝트의 결과로 60, 70년대 한국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내적인 모순도 심화되어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는 발전주의 레짐이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72년에는 유신개헌을 통해 권위주의 통치와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통치의 강화 만으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발전주의 레짐은 권위주의적 조절방식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무마하여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헤게모니 프로젝트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60년대 말부터 다양한 통로를 통해 표출되던 지역격차에 대한 불만을 달래기 위해 대도시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균형정책을 70년대 초반부터 시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실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강남 개발도 70년대 초반 발전주의 레짐에 의해 추진된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공간적 선택성으로 인해 대도시(특히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급증하였고, 이는 서울과 같은 도시의 혼잡화를 가중시켜, 서울의 공간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대도시 인구의 급증은 도시 지역 노동자의 주거 문제를 발생시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시켰다. 그 결과, 도시지역 재정비 및 주택공급정책이 7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인 강남의 개발도 이러한 거시적인 정치-경제적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심화된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발전주의 레짐은 서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근대화된 도시환경을 제공함을 통해 보다 체제에 순응적인 도시 중산층 집단을 만들어내고자 강남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개발, 공급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남이라는 신도시는 발전주의 레짐에 의해 60, 70년대 추진된 수출지향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이룩한 ‘조국 근대화’가 더 이상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고, 반듯하게 뻗은 직선의 대로, 최신식의 도시 인프라와 고층의 현대적 아파트 단지라는 매우 구체적인 가시성을 띤 채로 사람들의 눈앞에 등장한 것이었다. 하지만, 강남은 단순히 국가주의적 경제개발 프로젝트의 구체화된 성공사례로 표상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의 도시중산층이 상상하는 ‘이상적 (신)도시’라는 보다 보편화된 도시적 상징성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강남 스타일의 도시 공간에 이념적 선호는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의 발전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암묵적 지지로 십사리 연결된다. 그런데, 80년대 후반 이후 추진된 주택 200만호 건설과 수도권 신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강남식 도시 공간은 강남을 넘어 보다 대중화된 형태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어 복제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강남화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도시 중산층 집단도 보다 대중화되어 확대되었다. 이는 강남식 도시화가 상징하는 한국 자본주의와 발전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암묵적 지지도 보다 대중화되어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도시 중산층의 이념과 Korean Dream의 구체적 상도 완성된다. 즉, 현대적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 한국의 발전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중산층의 지위를 획득하고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는 Korean Dream을 완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믿음이 공고화되는 것이다.

강남을 이상적 도시로 재현하는 강남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는 코리언 드림에서 핵심적 요소는 부동산의 소유와 자산 가치의 상승에 대한 욕망이다. 강남에서의 아파트 단지 개발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등장하는 새로운 도시 중산층의 양산을 결과하였고, 이러한 강남의 경험은 수도권 신도시개발 과정을 통해 다시 반복되면서 한국의 도시 중산층이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과도하게 의지하게 만들었다. 사회복지의 미발달로 인해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는 통로 이외에는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도시 중산층이 자산 가치에 더욱 집착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욕망은 한국의 도시 중산층으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치-경제 시스템을 지지하는 경향을 지니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의 토건지향적 성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강남화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한국의 도시 중산층이 사회적 믹스 보다는 그들만의 리그인 폐쇄적인 자기충족적 공간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되었듯이, 한국의 도시 중산층은 대규모 고급 아파트 단지라는 자기충족적인 gated community에의 거주를 선호하는데, 이는 한국의 도시 중산층이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의 공공적 발전 보다는 개별화된 사익의 추구에 더욱 몰두하도록 만드는 이념적 배경이 된다. 한국의 도시 중산층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조건을 모두 바꾸려는 수고로움을 감수할 필요 없이, 대규모 고급 아파트 단지라는 ‘자기충족’적 세계에 거주하면서 그러한 거주에 필요한 금전적 부담만 감수한다면, 그들이 이상으로 그리는 도시적 생활을 예외적으로 누릴 수 있다. 도시 중산층을 위한 ‘자기충족’적 공간으로서의 아파트 단지에 의해 제공되는 이러한 ‘공간적 예외성’은 한국 도시 중산층의 부동산 교환가치 의존성과 결합되어 한국 도시 중산층이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발전을 지향하기 보다는 가족, 집단, 지역 등을 중심으로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지니게 하는 중요 조건이 된다.

4. 대안적 도시 이데올로기

1) '마주침(encounter)'의 장으로서의 도시

도시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반드시 국가와 자본의 이해관계와 기존 권력질서를 지키려는 의도 속에서 구성되는 것만은 아니다. 기존의 헤게모니적 질서에 저항하는 '대항 헤게모니적 실천(counter-hegemonic practices)'의 한 방편으로 도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대안적 도시 이데올로기의 한 예로 여기서는 도시를 마주침의 장으로 보자는 르페브르와 메리필드의 주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의 비판 지리학자 앤디 메리필드(Andy Merrifield)는 르페브르의 문제의식을 적극 받아들여, 전통적 의미의 도시 개념 대신에 '도시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 도시를 재이론화할 것을 제안한다(Merrifield, 2013, 912). 메리필드는 사코의 초점을 '도시'에서 '도시적인 것'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추동한 것과 같은 정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특히, 휘어진 시간과 공간을 인정하고, 자본주의적 중력이 절대적 공간 위에서 작동할 뿐만 아니라, 공간과 시간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구성물이며, 전세계를 떠다니는 상품, 자본, 화폐의 덩어리와 속도는 그들 자신의 힘으로 시간과 공간을 휘거나 뒤틀어지게 하는 자기 자신의 시공간 차원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적인 것'은 고정된 공간적 구성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도시 안에서, 그리고 도시를 통해서 지나가고 떠다니는 상품, 자본, 화폐, 사람, 정보 등의 만남과 마주침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리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유기체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르페브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시적인 것의 순수한 형태로서의 도시는 마주침, 모임, 동시성의 장소이다. 이러한 형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은 매력과 살아있음이 충만한 곳이다. 도시는 추상이지만, 실천적 행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상이다.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산업, 기술, 부의 산물이고, 문화, 삶의 양식, 상황의 작품이며, 일상의 변조이자 파열이다. 따라서, 도시는 모든 내용이 축적된 곳이다. 하지만, 도시는 여러 상이한 내용물들의 단순한 축적과는 달리 그 이상이다. 도시의 내용물들(물건, 대상, 사람, 상황 등)은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배타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포용적인데 이는 그 상이한 내용물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 그들의 상호적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Lefebvre, 2003, 118-119).

이를 바탕으로 메리필드는 도시를 특정한 밀도(density)와 중심성(centrality)을 가진 만남, 마주침, 회합의 장소로 보았다(Merrifield, 2013, 916). 메리필드는 사람들의 만남과 사회적 관계들의 마주침을 벗어난 도시 그 자체란 아무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도시가 보내는 표시는 모임의 신호”라는 르페브르(Lefebvre, 2003, 118)의 말을 인용하면서, 도시는 인간적 실재와 활동, 교환, 조합, 인간들 사이의 접근, 인간들의 집중과 마주침 등을 벗어나서 도시 자체만으로는 아무 것도 만들지 않으며, 어떤 목적에도 봉사하지 않고, 어떠한 실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도시가 단순히 인간들의 모임과 마주침을 가능케 하는 빈 그릇(container)과 같은 역할만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도시는 모든 것을 끌어 모아 이들로 하여금 동시적으로 존재하면서 만나게 하는데, 자본, 물자, 사람, 정보, 활동, 갈등, 긴장, 협력 등과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도시적' 상황은 이들 모인 주체들을 변화하도록 추동한다. 즉, 도시가 만남과 마주침의 장소이긴 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마주침이 일어나는 그 마주침의 결과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공간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근접할 수 있고, 활동, 사건, 우연적 만남들이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도시적인 것

그 자체에 대한 핵심적 정의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마주침을 통해서 도시 공간을 생산하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도시인(urban people)’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적 환경에서 주어지는 높은 밀도는 마주침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주침은 또 다시 그러한 밀도의 정도를 높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마주침은 도시를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한다(Merrifield, 2013, 916).

도시를 만남과 마주침의 장으로 보자는 메리필드의 주장은 교환가치의 추구를 위해 공간의 분절화와 사유화를 지향하는 현대 자본주의 도시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다소 엉뚱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과잉축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적 돌파로서의 도시화 과정, 공간의 사유화, 분절화를 바탕으로 부동산 이윤의 추구 등과 같은 자본주의 도시화의 논리로서만 도시를 규정하게 되면, (비록 현대 자본주의 도시의 문제와 위기의 핵심적 지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의도치 않게 도시에서 작동하는 특정한 세력의 논리가 (비록 그 결과물이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일지라도) 도시의 존재론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절대적 작동방식이라고 믿으면서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본주의 도시에 대한 자본 논리적 설명은 의도치 않게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반면에, 도시를 만남과 마주침의 장으로 보자는 메리필드의 주장은 지배적인 도시 담론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도시에 대한 대안적 이데올로기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도시를 사람과 활동들 사이의 마주침과 만남이 일어나는 장으로 봄으로써, 도시 공간을 구획하고 사유화하여 도시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잉여가치를 독점하려는 시도들을 만남과 마주침이라는 도시의 본연의 목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게 만든다. 관련해서 메리필드는 마주침을 벗어나서 도시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며, 마주침을 가로막는 분리에 대해 사람들이 저항을 지속하는 한 도시에서의 마주침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주장한다(Merrifield, 2013, 916). 르페브르도 비슷하게 만남과 마주침을 가로막는 분리에 대해 저항해야 함을 강조했다(Lefebvre, 2003, 174). 즉, 메리필드와 르페브르는 도시를 만남과 마주침이 일어나는 장으로 정의함으로써 그러한 만남과 마주침을 가로막는 채 공간을 분할하고 공유재로서의 도시공간을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도시 본연의 가치와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에서 대안적 도시 이데올로기의 가능성은?

만남과 마주침의 장으로 도시를 보자는 메리필드의 주장은 한국에서 ‘강남화’라는 주류적 도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대안적 도시의 담론을 고민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주류적인 방식의 강남에 대한 재현과 그 재현에 입각한 강남 따라하기의 이데올로기적 과정은 강남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신도시에서 벌어지는 만남과 마주침의 실제적 모습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허구적 믿음이다. 강남은 한국의 도시 중산층이 믿는 바와 같이 곧게 뻗어있는 대로, 고급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경쟁력있는 사교육과 고급의 소비문화 등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 무허가 비닐 하우스촌, 고급의 소비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급 아파트 단지의 중산층 가정에서 일하는 다양한 국적의 파출부들 등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공간을 전유하고 사용하며, 공간적 실천을 하고 있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장소이자 만남과 마주침의 장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만남과 마주침은 한국의 주류적 도시 이데올로기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도시적 모순과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주류적 도시 이데올로기와 도시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도시 공간의 사유화와 분절화로 인한 문제와 도시적 위기가 점차 본격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면, 현실로 부터의 괴리는 이데올로기를 점차 균열의 상태로 몰고갈 것이다. 최근 들어 강남역에서 일어난 여성혐오에 의한 살인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 젠트리피케이션의 심화로 인한 임대상인들의 강제 퇴거, 전세금의 폭등으로 인한 세입자 주거문제의 심화 등과 같은 도시문제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출현하고 있다. 동시에 최근 부동산 가격의 침체로 인해 도시와 주택을 교환가치로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고 있고, 신도시 아

파트의 미분양은 신도시 신화는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강남화 이데올로기의 균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도시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자극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등장하고 있다. 성미산 마을 공동체에서 촉발된 다양한 마을 만들기의 실험들은 ‘강남화’라는 주류적 도시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상상하고, 새로운 방식의 만남과 마주침이 가능한 대안적인 도시 만들기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주택협동조합의 실험 또한 새로운 만남과 마주침을 촉발할 수 있는 대안적 도시 실천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험들은 ‘강남화’라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던 만남과 마주침을 거부하고, 교환가치 보다는 공동체적 협동과 공유를 강조하는 만남과 마주침을 촉 발하려는 대안적 도시운동이라 볼 수 있다. 이 보다 더 급진적인 공간적 공유를 위한 실천은 마포 민중의 마을이 행하는 있는 실험이다. 마포 민중의 집은 비싼 임대료를 주고 빌린 사무실 공간을 마포 지역의 풀 뿌리 단체들에게 전면 개방하여, 민중의 집이 자유롭고 해방감 넘치는 만남과 마주침이 장이 되게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실험들이 현재 상황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시도들이 장기적으로 ‘강남화’라는 한국의 주류 도시화 담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적 도시 이데올 로기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실천적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5. 결론

만일 한국의 기존 도시 체제가 현재 한국의 도시 문제를 낳은 구조적 원인이고, 이 구조적 원인을 뒷받 침하는 차원 중 하나가 이상에서 살펴본 도시 이데올로기라면, 한국의 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중 하나는 다른 식의 도시 체제를 뒷받침하는 대안적 도시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강남화’, ‘신도시화’, 최근 곳곳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강남과 대비되는 ‘강북’ 지역을 ‘강남화’하 려는 기획으로 이해할 수 있는) ‘뉴타운’ 등은 기존은 헤게모니적 도시 이데올로기를 적극 반영하는 도시 담론이다. 현재의 도시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적 도시의 건설은 이러한 도시적 담론과는 다른 도시 (성)을 생각하고 말하고 실험하는 담론적,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시를 만남과 마주침의 장으로 바라보면서, 이제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그리고 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만남과 마주침이 한국의 도시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물질적이고 담론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최근의 마을만들기, 주택협동 조합, 민중의 집 등의 실험들은 이러한 실천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도시를 대안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기존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의 도시화는 자본주의적 발전과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프로젝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화 과정 그 자체가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발전주의 국가의 정 당성 확보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특히, 도시화 과정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재현과 이상적 도시에 대한 특정한 상은 한국에서 자본주의적 헤게모니가 지속되고 유지되도록 하는데 결정적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대안적 도시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것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 지 않는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를 제자리 찾게 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내희, 2004, “강남의 계급과 문화,” *황해문화*, 42, 62-84.
- 강준만, 2004, “강남은 한국 자본주의의 엔진인가?,” *인물과 사상*, 73, 116-167.
- 길혜연 역, 2007,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후마니타스*, 서울(Gelézeau, V. and Pitte, J-R. 2003, *Séoul, ville géante, cités radieuses*, OpenEdition Books).
- 김남일·백선기, 2008, “언론매체의 ‘강남권역’신화형성과 이데올로기,” *언론과사회*, 16(2), 2-36.
- 김아람, 2013, “1970년대 주택정책의 성격과 개발의 유산,” *역사문제연구*, 29, 47-84.
- 김형국, 2004, “강남의 탄생,” *황해문화*, 42, 10-24.
- 박철수, 2013, *아파트: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마티, 서울.
- 박해천, 2011,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음과 모음, 서울.
- 박해천, 2013, *아파트 게임: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휴머니스트, 서울.
- 안창모, 2010, “강남개발과 강북의 탄생과정 고찰,” *서울학연구*, 41, 63-97.
- 이동현·이향아, 2011, “강남의 심상규모와 경계짓기의 논리,” *서울학연구*, 42, 123-171.
- 이영민, 2006, “서울 강남의 사회적 구성과 정체성의 정치: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부적 범주화를 중심으로,”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9(1), 1-14.
- 전강수, 2012.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강남개발,” *역사문제연구*, 28, 9-38.
- 전상인, 2009, *아파트에 미치다: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이숲, 서울.
- 조명래, 2002, *현대 사회의 도시론*. 한울, 서울.
- 조명래, 2004, “신상류층의 방주로서의 강남,” *황해문화*, 42, 25-40.
- Brenner, N. and Schmid, C., 2014, The 'Urban Age' in Ques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8(3), 731-755.
- Douglas, M., 2008(1966),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Routledge.
- Lefebvre, H., 2003, *The urban revolution*, Minnesota University Press, Minneapolis.
- Merrifield, A., 2013, The urban question under planetary urban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3), 909-922.
- UN(United Nations),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4: Highlights*, United Nations.
- Wachsmuth, D., 2013, City as ideology: reconciling the explosion of the city form with the tenacity of the city concept,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1, 1-16.
- Wirth, L.,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1), 1-24.

도시공동체와 공유지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1. 들어가는 말: 도시공동체와 오늘날의 메트로폴리스

오늘날의 메트로폴리스는 공동체인가? 아니, 그 이전에 애초에 도시가 공동체일 수 있는가? 도시를 공동체의 파괴자로 낙인찍어 왔던 낭만적 복고주의의 입장 아니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이웃을 모르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에서 보면 서울과 같은 오늘날의 대도시 그리고 그 이전에 도시는 공동체의 파괴자일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상식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간 서울의 급속한 인구집중과 재개발, 그리고 서울시민의 잦은 이사는 적어도 서울에서 이웃과 타인을 낯선 방해자로 보는 서울시민을 조장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상실한 공동체를 ‘복원’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식에 부합한다.

도시가 태생적으로 공동체의 파괴자라면, 도시가 인류의 새로운 고향으로 자리 잡은 오늘날 인류는 공동체를 점점 잃어갈 것이라는 비관적 미래상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나 중세의 코뮌도 도시가 공유지와 공유재를 농촌보다 더 풍요롭게 갖춘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갖춘 점을 고려하면, ‘도시=공동체의 파괴자’라는 상식은 단견일 것이다. 아무리 신자유주의 사유화와 도심 젠트리피케이션을 거쳐 공간사유화가 확대된 오늘날에도 도시는 농촌의 저수지에 못지않게 다른 종류의 많은 공유지와 공유재를 갖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농촌과 다른 공동체성을 띤다. 광장과 넓은 보행로, 공원, 학교, 관청, 개발된 지하공간 등은 도시에 전형적인 공유지라 할 수 있다(곽노완, 2016, 208). 물론 오늘날의 자본주의 대도시는 그 밀도와 용적률만큼이나 높은 비율의 사유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지는 임대료 등의 지대형태로 자본과 부동산소유자가 가난한 임차인을 수탈하는 원천으로 작동하면서 자본의 착취와 더불어 자본축적의 한축을 이룬다(강내희, 2016, 311). 이런 점에서 ‘도시=공동체’라는 등식도 단견이다. 오늘날의 메트로폴리스는 자본축적과정에서 제2의 순환을 이룬다거나(Harvey, 2012), 공장의 공간적 확대라고 보는(Negri and Hardt, 2009, 350-351) 주장은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명하고 있다.

오늘날의 메트로폴리스는 노동자와 자본가로 대별되는 두 계급만의 장소가 아니다. 메트로폴리스는 여러 곳에서 몰려 온 학생,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불안정무산자), 노령자, 주부, 이주자, 전문직, 자영업자 등 다양한 부류의 특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주쳐서 함께 공유지를 만들며 또 이를 사유지로 수탈하거나 수탈당하기도 하는 장소이다(곽노완, 2016, 103-104). 도시의 거주자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원이거나 지하철역은 인근지역 부동산의 사용가치와 가치를 상승시킨다. 이러한 가치상승은 그곳 부동산 소유주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도시거주자들의 공동부담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공유지 내지 공유재이다. 그러나 그 가치상승분은 토지소유자에게 사적으로 전유된다. 이는 공유지 생산을 매개로 하여 의도와 상관 없이 해당토지소유자들이 도시거주자들을 수탈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마이너스 공유지도 생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도권 미세먼지가 그 예이다. 중국에서 넘어온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 미세먼지는 석탄을 연료로 한 화력발전소, 경유자동차 매연, 건설 현장과 장비에서 발생하는 먼지, 숯불이나 불가마 등에서 발생한다. 이 미세먼지의 발생을 통해 경제적으로 환산된 손실액은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거의 1/N로 분담된다. 미세먼지 발생과정에서 이 1/N의 손실액보다 큰 이득을 보는 공장주, 찹질방주인, 경유자동차 소유주는 크고 작게 수도권 거주자들을 수탈하는 셈이다.))

따라서 공유재의 생산과 전유가 이처럼 분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가 공동체가 되거나 도시 안에 많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도시에 긍정적인 공유지가 많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그렇게 생산된 공유지의 대다수가 사유화되지 않고 1/N의 권리로 공유된다는 것을 뜻한다.

필자가 ‘글로벌폴리스’(곽노완, 2016, 103)로 명명한 오늘날의 메트로폴리스는 공유재의 공동체적 전유와 사유화가 대결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이 글로벌폴리스가 도시공동체가 되는 것은 지구/국가/도시/지방의 겹친 여러 공간에서 공동체적 전유를 갖춘 한에서이다. 공동체적으로 전유되는 공유지를 많이 갖출수록 그 도시는 밀도 높은 도시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유지의 전유 이전에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집합행동의 논리 등으로 공유지에 기초한 자율적인 공동체의 지속불가능성을 논증하는 세 가지의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유지와 공동체의 이론적, 경험적 논증이 가능한가?

2. 공유지의 비극에서 공유지의 희극으로

생태학자인 하딘에 따르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최대이익을 추구하면서 공유지를 황폐하게 만든다. 곧 “공유지에서 자유는 모두에게 황폐함을 가져온다”(Hardin, 1968, 1244)는 것이다. 이렇게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제목이 붙은 논문에서 제시된 하딘의 테제는, 이후 공유지의 지속불가능과 사유지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무차별적인 논거로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하딘의 논점은 공유지를 사유화하자는 것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자연환경 등 공유지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각자가 따라야만 하는 외부의 강제력, 홉스(Hobbes)의 “리바이어던(Leviathan)”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Hardin, 1978, 310 이하).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인구 통제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Harvey, 2012, 68에서 재인용). 이를 감안할 때 하딘이 공유지의 사유화를 정당화했다는 찬반 양측의 해석은 하비의 지적대로 적절하지 않다(Harvey, 2012, 173).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로즈(Rose)와 오스트롬(Ostrom)은 연이어서 주목할 만한 비판을 가했다.

법학자인 로즈는 1986년에 “공유지의 희극(The Comedy of the Commons)”이라는 글에서 공유지를 옹호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유재산과 정부통제의 “공적 재산(public property)” 바깥에 다른 종류의 “본래적으로 공적인 재산(inherently public property)”이 있다.²⁾ 이 재산은 정부나 사적인 주체 누구에 의해서도 완전히 통제되지도 않는다. 이는 집단적으로 “소유”되고 사회에 의해 “관리되는” 재산이며 정부 관리자의 요청에 우선한다(Rose, 1986, 720). 로즈는 이처럼 “본래적으로 공적인 재산”의 대표적인 예로 공공 광장을 제시한다. 로즈에 따르면, 이 광장은 우리가 소통하고 사교하며 함께 흥청거리고, 공동체의 유대를 확립하며 사회적 자본과 신뢰를 창출하는 장소로 공동체를 육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런 이유로 이러한 장소에서 열리는 축제나 춤, 스포츠 행사에 참가할 권리 곧 공유지에 참여할 권리는 사유재산 내지 울타리치고 소유하며 배제할 파생적 권리에 반해 근본적인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더 많은 개인들이 여기에 참가할수록 이 축제나 공동행사의 가치는 높아진다. “이는 ‘공유지의 비

1) 네그리와 하트는 이와 비슷하게 오염, 교통문제, 사회적 갈등 등을 메트로폴리스에서 부정적 형태의 공동적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Negri and Hardt, 2009, 354-355). 최근 환경부는 나사와 더불어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밀조사하고 있다. 2017년 6월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처럼 “본래적으로 공적인 재산”은 정부 통제 아래 있지 않고 원리적으로 모두가 향유할 재산이므로 ‘공유지 내지 공유 재산(common 내지 sharing property)’이라 불러야 적절하다. 그러나 로즈는 개념상으로는 ‘공유재산’과 ‘공적 재산’을 구분하면서도, 용어상으로는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 로즈가 ‘공적 재산’으로 부르는 것은 모두 ‘공유재산’에 해당한다.

극'의 정반대이다. 그것은 '많을수록 좋다'는 격언에 적절히 표현된 대로 '공유지의 희극'이다”(Rose, 1986, 768). 물론 그가 모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유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재산이 사적인 인격체에 의해 독점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공적인 권리가 사적인 소유자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재산 자체는 무한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적으로 사용될 때 최대의 가치를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ose, 1986, 774). 그리하여 그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공성(publicness)”이 재산의 ‘지대’를 창출하며 이러한 공적 재산의 원칙이 공적으로 창출된 지대를 사적으로 차지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고 본다(앞의 곳). 이러한 로즈의 테제는 사유재산의 소유자가 사회적으로 창출된 지대를 일단 전유하게 되는데 이를 세금 등의 형태로 사회에 반납해야 정당하다는 걸 뜻한다.

로즈의 테제를 이어받아 오스트롬은 공유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공유지가 자율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왈자스퍼(Walljasper)가 정리했듯이,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그는

스위스 마을의 농부들이 지역공동체의 목초지를 소들을 방목하는 용도로 1517년 이래 지금까지 잘 공유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여기서는 ‘공유지의 비극’론이 주장한 과다방목으로 인한 공유지 훼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마을주민들이 과다방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어떤 룰에 합의했고 이를 잘 준수했기 때문이다. 그 룰은, 누구도 겨울동안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소들보다 더 많은 소들을 공유목초지에 방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와 유사한 경우가 케냐, 과테말라, 네팔, 터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에서, 오스트롬은 공동체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공유지를 지속적으로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Walljasper, 2010, 22-23에서 재인용; 광노완, 2013, 157에서 재인용).³⁾

하비의 말대로 이러한 오스트롬의 결론은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공유지 문제에 대해서 외부권력기관을 통한 완전한 중앙집권적인 규제 아니면 완전한 사유재산권 보장의 이분법 또는 국가 아니면 시장이라는 이분법의 교리를 부술 만큼 위력적인 것이었다(Harvey, 2012, 69).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비의 지적대로 오스트롬의 연구는 대체로 수백명에서 최대 15,000명 이내의 공동체의 공유지에 대해서만 진행되었기에 직접적인 협상과 직접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실현하기 어려운 보다 큰 공동체에 대해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Harvey, 2012, 69). 곧 작은 규모의 공동체가 공유지를 사용하는 데서는 신뢰와 유대가 쉽게 달성될 수 있지만, 기후온난화에 대응하여 지구적 규모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고 좋은 기후라는 공유지를 보존하는 문제에서는 신뢰와 유대에 기초한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힘들며 수평적인 조직원칙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봉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Harvey, 2012, 70). 심지어 범위를 좁혀 대한민국 수도권의 심각한 미세먼지 현황을 보아도 맑은 공기라는 공유지를 보존하는 문제가 수도권 거주자들의 자율적인 조정이나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에는 난망하다는 걸 알 수 있다.⁵⁾ 대한민국 수도권 미세먼지를 도쿄, 파리, 런던 등의 수준으

3) 오스트롬은 공유지와 자율적인 공동체에 반하는 이론모델로 공유지의 비극뿐만 아니라 게임이론에서 죄수의 딜레마, 울손의 집합 행동의 논리를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집합 행동의 논리에 따르면, 구성원의 수가 아주 적거나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강제할 장치가 없는 한 합리적인 개인이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Olson, 1965, 2; Ostrom, 1990, 29에서 재인용). 왜냐하면 어떤 구성원을 강제적으로 편익의 향유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면 무임승차자가 증가하여 집합적 편익은 최적수준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Ostrom, 1990, 30). 그러나 오스트롬에 따르면, 각 구성원이 서로 감시하는 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면 자율적으로 계약을 맺어 협동하는 것이 감시와 처벌을 위한 외부의 강제력을 도입하는 것에 비해 감시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자율적인 공동체의 지속성이 커진다(Ostrom, 1990, 48-49).

4) 리프킨도 오스트롬의 공유지 연구가 극단적인 관료주의와 신자유주의적인 시장만능주의의 양자에 대해 새로운 공유지 경제모델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Rifkin, 2014, 162-164).

5) 수도권 미세먼지의 30-50%는 중국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50-70%는 수도권 내부에서 발생하는데, 강제성 없는 자율에 맡길 경우 자동차(특히 경유자동차), 건설장비의 매연, 난로 및 농업잔재물소각, 연료연소 사업장 등에서 발

로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거주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수도권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의 심급에서 주도하여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방안을 공론화하고 최종적으로 강제성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⁶⁾

더구나 대한민국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사용할수록 공유지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로즈의 ‘공유지의 희극’ 테제가 적용될 수 없고 오히려 ‘공유지의 비극’이 타당한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곧 로즈의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공유지도 있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공유지도 있다. 이는 공유지가 무조건적으로 금기시되는 것도 또 거꾸로 무조건적으로 신봉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특히 많은 공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가치도 떨어지는 공유지의 경우 공동체 성원들의 자율적인 대책을 기다리기보다는 정부가 주도하여 공동체 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독려하며 때로는 강제성을 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곧 공유지의 공간적 규모나 성격에 따라 공동체 성원들의 미시적인 자율성만이 아니라 정부라는 대표성 있는 기구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공유지와 공동체의 원리인 1/N의 원리는 자율만이 아니라 내부에 자율을 조정하는 심급으로서 정부와 같은 기구를 필요로 한다. 곧 공유지의 원리는 정부의 불필요성과 자율의 만능을 신봉하는 원리라기보다는 1) 1/N의 원리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며, 2) 공유지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높이는 한에서 자율의 영역을 확대하는 원리로 재정식화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역, 광역과 기초단위 지역 간에도 수평적인 원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작은 단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중심의 질서(polycentric order)”를 제시하는 오스트롬의 답변은 하비의 말대로 티뷰가설(Tiebout hypothesis)의 함정에 빠질 위험에 있다. 티뷰는 많은 구역들이 서로 다르게 특정한 방식으로 지역세를 걷고 각각의 거주자들에게 특정한 공공재 묶음을 제공하는 파편화된 메트로폴리스를 제안했다. 이는 거주자들이 “발로 투표할 것(vote with their feet)”이라는 가설에 기초한 것이다. 곧 거주자들은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각자 거주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 기초한 셈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자들은 부촌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우수한 공공교육을 제공받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열악한 공공교육이 제공되는 가난한 구역에 살 수밖에 없었다. 곧 다중심의 거버넌스를 통해 민주주의와 평등이 확대되기보다는 계급 특권과 권력이 재생산되었던 것이다(Harvey, 2012, 82). 이런 점에서 탈중심화와 자치는 불평등을 확대하는 주요 장치일 수도 있다. 이는 다중심의 뉴욕 주 안에서 구역별로 차별적인 공교육의 실패와 유로존의 재앙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곧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서는 공유지의 문제를 자율로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Harvey, 2012, 82-84). 물론 그렇다고 국가차원에서 각 지역공동체의 자율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공유지 원칙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스트롬의 견해를 수용하는 리프킨의 말대로 관료화로 인해 공동체의 성원의 필요에 어긋나거나 공유지에 대한 해당 공동체 성원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Rifkin, 2014, 161 참조). 이처럼 분산적이고 자율적인 공유지 개념과 중앙집중적인 공유지 개념이라는 양극단의 편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유지를 지역/도시/국가/지구 등 여러 차원의 공간들에 겹쳐있는 것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편 공유지의 생산과 전유 차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롬은 초기에는 공유지의 예로 주로 자연자원을 들고 있지만, 이후에는 이외에도 유전자, 지식, 문화유산 등 다른 형태의 공유지도 연구하였다(Harvey, 2012, 72에서 재인용). 그에 따르면, 자연자원과 달리 지식과 문화유산 등은 헤아릴 수 없이

생하는 미세먼지를 선진국 수준인 절반으로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미세먼지 원인에는 짙질방의 불가마, 숯불구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2012년 기준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41 $\mu\text{g}/\text{m}^3$, 인천 47 $\mu\text{g}/\text{m}^3$, 경기도 49 $\mu\text{g}/\text{m}^3$ 으로 동경 21 $\mu\text{g}/\text{m}^3$, 파리 27 $\mu\text{g}/\text{m}^3$, 런던 31 $\mu\text{g}/\text{m}^3$ 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김동영, 2013, 5).

많은 사람들의 공동협력에 의해 생산된 공유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스트롬은 지식공유지는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Harvey, 2012, 72에서 재인용).

이에 더해 하비는 특히 도시화를 통해 갈수록 도시공유지가 생산되고 있다고 본다(Harvey, 2012, 80). 그런데 도시공유지는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만이 아니라 사실상 도시전역에 걸쳐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롭게 지하철역이 들어선 인근지역 장소의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가격은 유동인구의 증가와 교통편의성의 증대로 크게 향상된다. 이 장소의 향상된 사용가치는 새롭게 생산된 공유지라고 할 수 있다.

오스트롬과 하비의 말대로 이처럼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유지는 생산력의 증대에 따라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지식과 토지가 상품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생산된 지식이나 장소의 새로운 사용가치와 가격을 특허권자나 토지소유주가 독점적으로 전유하게 된다. 이렇듯 새로이 생산되는 공유지의 생산자와 전유자는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와 재산소유자에게 유리하게끔 분열된다. 이는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공유지 생산의 확대가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공유지의 생산 그 자체가 아니라 상품화되지 않는 공유지의 생산이 중요하다. 또는 생산된 공유지가 상품화되거나 독점적으로 소유될 수밖에 없다면 그 공유지로 인한 수익이 과세 등을 통해 사회성원 모두에게 전유되는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유지가 폐쇄적인 자율 공동체의 특권이 되거나 자본가나 재산가에게 독점적으로 전유되지 않을 장치가 확보된다면, 공유지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향유할 재산이며 각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인 평등한 기회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생산된 공유지의 경우 이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공유지의 가치가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자본주의의 시대에 가입자와 접속자가 늘어날수록 페이스북과 같은 Social Media의 가치는 폭등하게 된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공유지의 확산은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로즈가 제기한 ‘공유지의 희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공유지의 수익이 이른바 ‘콘텐츠 벡터 계급’에게 독점적으로 전유되는 현상은 ‘마이크로페이먼트’ 내지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 생산자나 사회성원 모두에게 재전유되어야 한다는 정의론적 요청을 남기기도 한다(이항우, 2014, 246-249).

3. 도시공유지와 도시공동체

공유시대의 도래라고 할 정도로 공유기업과 공유지의 생산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공유지의 전유자 내지 향유자 문제로 넘어가 보자. 이 향유자는 원리적으로 바로 ‘공동체’ 또는 공동체의 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대부터 아고라(광장)라는 공유지의 산실이었던 도시, 그리고 새롭게 공유지의 주요 생산지로 부상한 오늘날의 메트로폴리스를 배경으로 공유도시 내지 도시공유지에 모아진 우리의 논점에 따라 도시공동체 문제로 넘어가보자. 공동체는 낭시(Nancy)가 말한 대로 ‘공동-내-존재’(Blancot and Nancy, 1984/2001, 122)로서 인간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고 “공산주의가 그동안 강압적으로 은폐해왔었지만 또한 나타나도록 만들었던 것”(Blancot and Nancy, 1984/2001, 121)으로서 정치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시 내지 도시화는 흔히 전통적인 (농촌)공동체의 파괴자이자 자신 안의 거주자를 낫설고 소외되게 만든다고 비난받아 왔다. 또 동시에 도시는 사람들을 소외시킴으로써 오히려 비평과 예술의 주체를 만들어낸다는 칭송도 받아 왔다(보들레르, 벤야민). 그러나 후자의 견해에도 도시가 공동체를 파괴하여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암묵적인 동의가 깔려 있다. 특히 해방 이후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했던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도시를 공동체의 태생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팽배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래 서울에서 ‘성미산마을’ 및 ‘장수마을’과 같은 자율적인 도시마을공동체가 서울이라는 삭막한 도시에서 희망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각광받는 것도, 어찌 보면 ‘도시=반공동체인 소외의 공간’이라는 우울한 경험과 공감대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피폐해진 시민의 삶을 치유하고 잊혀져간 **사람 간의 관계망을 복원해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사람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을 만들어 가려는 서울시의 노력”이라고 천명되고 있다(서울시, 2011). 곧 서울이라는 도시는 사람 간의 관계망 내지 ‘공동체’를 피폐시켰는데, 이제 이 피폐한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공동체를 복원해야 할 그 무엇으로 보는 것은 서울이 그동안 공동체에 파괴적이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그 복원해야 할 공동체의 원형은 농촌, 특히 농촌 공동체일 것이다.⁷⁾

그런데 도시 내지 도시화가 공동체의 파괴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공동체의 발생자인지는 사회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차별적이다. 고대 그리스의 플리사나 중세의 코뮌도시는 그 자체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농촌보다 더 공유공간 및 공유재가 발달해 있었고 따라서 더 확고한 공동체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산업화와 더불어 급속히 (농촌)공동체가 해체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의 도시는 상대적으로 도시거주자가 누릴 공유자원과 공동체적 정체성보다 소외와 분열의 병리현상을 더 많이 담고 있다. 그리고 도시가 팽창기를 지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그곳에서 수십 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 질수록 이질감과 소외감이 감소하고 공동체의 문화적인 정체성이 확대된다. 나아가 도시거주자가 자유롭게 향유할 공유공간과 공유재의 풍부함과 결여에 따라 같은 시대의 도시들조차 도시의 공동체적 정체성은 차별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유공간 및 공유재가 상대적으로 많은 브라질의 꾸리찌바는 상파울로와 대조적으로 거주자들의 행복지수 및 공동체적 정체성이 강한 편이다.

국내에서 도시전문가 내지 도시연구자조차 도시를 공동체의 적으로 여기는 풍조는, 최근 반세기 동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시에서 공유공간 및 공유재의 확대 및 공동체적 문화형성보다는 이질성과 빈부격차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불안감과 소외의 증가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동체의 파괴자’, ‘농촌=공동체’라는 단순도식은 윌리엄스가 지적하듯이 농촌낭만주의의 복고적인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Williams, 1975, 214, 328). ‘도시공동체 만들기’는 복고의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국가/지구의 공간차원이 겹치는(overlapping) 도시에서 공유지와 도시공동체의 주체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도시는 공동체의 파괴자인가?’라는 질문은 공동체 개념에 대한 해명을 필요로 한다. 무엇을 공동체로 보는가에 따라 이 질문은 정반대의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동체 개념은 쓰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일 만큼 다의적이다. 따라서 그 자체가 전장이기도 한 공동체 개념의 용례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서 이 글에서 사용할 공동체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영어로는 community, 독일어로는 Gemeinwesen 내지 Gemeinschaft, 불어로는 commune 내지 communauté)는 넓게는 다양한 인구집단에 두루 적용되는 의미로 쓰인다. 지구공동체, 인류공동체, 민족공동체, 지역공동체, 혈연공동체, 친족공동체, 가족공동체, 직업공동체 등등. 그래서 공동체의 내포와 외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외연을 제한하는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대체로 영어권의 일상용어에서처럼 공동체의 범위를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영어권에서는 공동체(communitiy)가 보통 지역공동체 내지 지역사회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

7) “나는 지역과 농촌이야말로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 ‘블루 오션’임을 발견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하려는 집요하고도 다양하며 눈물겨울 만치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박원순, 2009, 7. 강조는 인용자).

때 community는 우리나라의 구나 면 정도의 행정구역을 뜻한다.⁸⁾ 독일어에서도 Gemeinwesen 내지 Gemeinschaft를 유래시킨 공간적 용어로 Gemeinde를 들 수 있는데, Gemeinde도 영어의 community와 유사하게 구나 면 정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으로서 지역공동체 내지 지역사회를 뜻한다. 불어의 commune도 이와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Gottdiener and Budd, 2005, 30 참조). 곧 일상적인 서양어에서 공동체는 대체로 장소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이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다.

이보다 더 나아가 앤더슨(Anderson)은 현실적 공동체의 외연을 이러한 일상용어에서보다 공간적으로 더 제한한다. 그는 ‘현실적 공동체를 상상적 공동체와 대비하여 서로 알고 있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로 좁힌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면관계를 넘어서는 큰 마을조차도 현실적 공동체라기보다는 상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정성훈, 2013, 29에서 재인용). 정성훈은 이러한 현실적 공동체의 외연을 더욱 좁혀 “서로 잘 알고 있으며” “자주 만나는 공동체”로 제한하는 한편 개인에게 미리 주어진 공동체들 곧 왈쩌(Walzer)가 “비자발적 공동체”라고 부른 친족관계, 이웃관계, 같은 반 등과 같은 집단을 공동체보다는 ‘조직’에 가깝다고 규정하면서 본래적인 공동체와는 거리가 있다고 한다(정성훈, 2013, 29-30). 그리고 현실적이고 자발적이며 나아가 친밀관계를 포괄한 친밀공동체가 공동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에 가까운 단위라고 주장한다(정성훈, 2013, 28-30).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에서의 마을공동체는 바로 앤더슨과 정성훈이 공간적인 인접성과 대면관계, 자발성 등을 통해 제한하려고 한 공동체에 해당한다.⁹⁾

그러나 이처럼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규정하는 공동체의 외연을 근린지역 내지 대면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힌다.

첫째로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이동성이 확대된 오늘날에 나의 근린 거주 지역은 나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서울시민의 경우 평균 4년에 한 번 이사를 할 정도도 정주성이 약하다. 이는 서울에서 장기임대제가 일반화되지 못하고 자가점유 비율도 낮기 때문이다.¹⁰⁾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마을공동체는 중장기적으로 정주성이 강하고 안정적인 중산층에 해당하는 40% 수준의 자가정주자 중심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연령대별로 젊은 세대일수록 자가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서울의 마을공동체 운동은 40-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운동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¹¹⁾ 그리고 도시거주자는 지구/국가/지역의 겹친 공간들에서 다중적으로 활동하거나 복수의 공동체들에 동시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가정주비율이 낮고 장시간 노동이나 학습에 시달리는 서울의 거주자들은 마을공동체 밖의 직업 활동이나 다른 공동체 활동에 우선권을 두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따라서 서울에서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강한 공동체로서 정체성의 원천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로 인터넷과 통신의 발전으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상당부분 뛰어넘어 자주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서로 알고 소통하며 강한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다(Gottdiener and Budd, 2005, 30-33 참조). 이러한 관계는 밴드를 통해 활성화된 동창회처럼 과거의 비자발적인 공동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나 ATTAC(시민을 위한 금융거래과세연합) shareable.net처럼 인접성의 제약을 벗어나 지구적 차원에서 온전히 자발성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현재 공간적 인접성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온전히 벗어나서 강한 친밀감과 소속감을 갖는 모임을 공동체의 외연에서 배제

8) 이러한 공간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community는 구성원들에게 미리 주어져 있는 이웃들의 원초적 공동체에 그치지 않고 전통적 공동체와 달리 지속적이고 참여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샌델(Sandel)은 미국의 community를 구성원들의 정열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협동적 공동체로 본다(Gorz, 1997, 171에서 재인용).

9) 마을공동체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마을’을 걸어서 10-15분 거리의 생활단위로 규정하고 있다(강상구, 2014, 55-56).

10) 서울시에서 주택 자가점유비율은 2000년에 40.9%, 2005년에 44.6%, 2010년에 41.1%로 큰 변동이 없다(강상구, 2014, 57에서 재인용). 그리고 2014년에도 서울시에서 자가비율은 41.2%로 큰 변동이 없다(정보기획관·통계데이터담당관, 2015, 22).

11) 2014년도에 서울에서 30대의 자가비율은 15.5%, 40대의 자가비율은 42.7%, 50대의 자가비율은 60.9%에 달한다. 그리고 60세이상의 자가비율은 다시 57.2%로 떨어진다(정보기획관·통계데이터담당관, 2015, 22).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중에서 특히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는 공유하는 ‘가치’ 내지 ‘목표’가 친밀성과 소속감의 원천이 되는 경향이 있다.

공간적 인접성을 공동체의 필수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교통의 발전으로 이동성과 삶의 반경이 커지고 인터넷을 통해 소통과 교류의 범위가 확대된 오늘날의 변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지역공동체 내지 지역사회의 뜻을 갖는 community의 이러한 인접성의 한계로 인해, 이웃들의 친밀한 유대가 있는 지역공동체 내지 지역사회에 대한 향수를 갖고 이를 복원함으로써 도시 차원에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토니 블레어와 퍼트남의 시도는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져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면에 지역사회의 범위를 넘어서 보다 넓은 범위의 국가 및 지구의 공간과 겹치는 도시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환경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운동은 포르투알레그레나 인도 케랄라 주,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에서처럼 몇몇 도시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보화시대에 도시거주자들의 정치참여를 지역공동체의 복원이라는 협소한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서울시민의 공동체적인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할 수는 있지만 충분하진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공간적인 인접성을 공동체의 필수요건으로 보는 견해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sm)자들의 용어법을 수용하는 고르츠(Gorz)에게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¹²⁾

고르츠는 권리와 의무가 국가에 의해 정해지거나 법률적으로 정해지는 사회(Gesellschaft)의 추상적인 시민과 달리, 공동체의 구성원을 구체적인 인격체로 규정하고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연대를 강조한다.¹³⁾ 그에 따르면 공동체는 구체적인 인격체로서의 구성원들이 **생생하고 구체적인 연대로 결합한 집단 내지 집합체**이다(Gorz, 1997, 169). 그리고 공동체는 구성원들 누구나 인정하는 **공동의 것에 기초한다**. 고르츠는 이러한 공동체가 지속하기 위한 원리로 **생생한 연대, 정열적인 참여, 소통적인 공동체의 삶과 실천** 등을 든다. 이러한 공동체(Gemeinschaft)의 구성원리는 사회(Gesellschaft)의 구성원리인 법과 제도를 통해 공식화된 권리와 의무의 체계와는 다른 것이다(Gorz, 1997, 169). 그는 신뢰에 기초한 공동체가 해체된 자리에 국민국가가 탄생하면서 사회가 성립한 걸로 본다(Gorz, 1997, 170). **“공동체 성원들의 관계가 소통적이고 자발적으로 조직되는데 반해, 사회는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광범하고 차별적이며 복합적인 전체이다”**(Gorz, 1997, 169). 곧 사회는 공동체의 생생한 연대와 소통적인 공동체의 삶과 실천의 장이 되기에는 너무 광범하고 차별적이라 법과 제도를 통해 공식적인 권리와 의무의 체계로 구성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고르츠는 공동체주의자 샌델(Sandel)의 용어법에 따라, 이러한 공동체를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로 자발적으로 연합한 **협동적 공동체(kooperative Gemeinschaft)**와 구성원들이 원초적으로 또는 태어날 때부터 귀속되는 **구성적 공동체(konstitutive Gemeinschaft)**로 구분한다. 협동적 공동체로는 미국에 고유한 지역사회(community)를 들 수 있고(Gorz, 1997, 170-171), 구성적 공동체로는 가족공동체부터 거주지/구역/마을공동체를 거쳐 민족공동체에 이르는 다양한 차원이 있다(Gorz, 1997, 172). 그런데 구성적 공동체도 협동적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공간적 인접성과 연동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고르츠와 샌델 등이 협동적 공동체의 사례로 주목하는 미국의 지역사회 내지 지역공동체(communitarism)는 공간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자발적이며 참여적인 민주주의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성미산마을 등 서울시가 장려하는 도시의 마을공동체와 거의 유사하다. 이 지역공동체는 “작은 단위의 집단적인 삶의 공동체”로서 근린거주지역이라는 장소에 착근한다(Gorz, 1997, 171). 드 베노아스(de Benoist)는

12) 고르츠는 공동체주의자들의 공동체 개념 정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공동체들 사이의 관계, 공동체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샌델 등 공동체주의자들을 상대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대안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Gorz, 1997, 117이하).
13) 국가 내지 사회를 일종의 공동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원리와는 다른 비공동체로 볼 것인가는 공동체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샌델(Sandel)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 따라 국가 내지 사회도 공동선에 기초한 공동체로 보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해(Sandel, 2009, 321, 334-336, 368-369), 왈쩌(Walzer)는 국가 내지 사회를 공동체로 혼동하면 민족공동체적인 전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Gorz, 1997, 175에서 재인용). 고르츠는 국가 내지 사회와 공동체를 구분하는 왈쩌의 용어법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가 지역 공공 공간(öffentliche Räume)의 복원에 기초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자연적인 틀이자 고대의 공동체와는 달리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구성원들의 통합과 정체성을 확보해주며, 따라서 근대성을 극복할 대안이라고 본다(Gorz, 1997, 171에서 재인용).

그러나 비록 지역적 인접성에 기초한 이 협동적 공동체가 자발적이며 참여적인 민주주의 특성을 갖는다 해도 이를 대안공동체의 최종심급으로 보는 것은 편향적이다. 비록 고르츠는 지역공동체 간의 네트워크와 국가 및 세계와 지역공동체의 연계성에 대해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처럼 소규모 지역공동체에서 출발하여 보다 큰 범위의 집단과 연계될 가능성은 하비의 비판대로 막연하고 순진한 기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Harvey, 2012, 84)

앞서 지적했듯이 인터넷과 Social Media의 발전으로 오늘날의 공동체는 지역적 인접성의 울타리를 훌쩍 넘어 넓은 공간 차원에서 뜻을 함께하는 데 기초하여 회비와 기부를 통해 마련한 공유지를 함께 전유하고 함께 행동하면서 훨씬 멀리 퍼져나가고 있다. 스페인의 15-M운동과 같은 Occupy 운동이 이처럼 지역적 인접성에 기초한 협동적 공동체에서 발원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지역공동체가 있었다고 해도 인터넷을 매개로 곧바로 지역적 인접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최소한 대도시 공간차원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활발한 소통과 활동을 통해 처음부터 큰 단위의 공동체적 흐름을 만들었고 지역공동체의 일부가 여기에 합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곧 도시공동체는 작은 규모의 지역공동체나 친밀공동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동체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도시공동체 중에는 도시전체의 공간을 아우르거나 심지어 국가범위의 공간 차원에 해당하는 공동체도 있다. 그리고 이처럼 광역범위의 도시공동체의 역할과 비중은 그 자체로 공유지이기도 한 Social Media의 발전을 통해 점점 증폭되고 있다.

4. 도시의 공유지와 기본소득

공유지에 대한 1/N 권리의 구체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본소득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마을/도시/국가/지구의 상이한 차원에서 차별적으로 그리고 여러 차원에 동시에 겹친 형태로 존재한다. 기본소득의 외연을 현금으로 제한하지 않고 현물로도 확대한다면 기본소득은 공유재와 겹치는 개념이다. 일찍이 판 바레이스(Van Parijs)는 1) 안전과 자기소유권 등 형식적 자유(formal freedom)를 위한 경찰/법정/국방, 2) 각자의 기회를 증진하는 긍정적 외부성을 낳는 인프라스트럭처/교육보조, 3) 각자가 지불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제공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오염규제/도로 건설 및 유지/보행자전용길/의료보장 등은 현금보다 현물로 공급하는 것이 적합한 현물기본소득(basic income in kind)이라 정의한 바 있다(Van Parijs, 1995, 42-45). 이렇게 볼 경우 부분적인 기본소득은 범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무상급식은 도시 내지 지자체 차원에서의 부분적인 현물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부분 현금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수도권외의 미세먼지는 도시나 지자체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차원 및 국가를 넘어선 차원에도 걸치는 겹친 마이너스 현물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공유지 확대¹⁴⁾와 이에 대한 권리 내지 공유지 수익의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의 확대는 현금/현물 형태로

14)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공유지에 대한 1/N의 권리에서 비롯되는 만큼, 공유재산이 확충되거나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전환할수록 현금/현물 기본소득의 재원은 보다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증세만이 기본소득의 유일한 경로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불로투기소득에 대한 증세는 사유재산제가 주축을 이루는 동안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일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증세는 공유지와 공유자원의 발굴 및 확대와 병행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전파대역의 임대수익을 확대한다든가 공중을 공유지화하여 고층건물 신축이나 도시계획 용도변경 때 기존의 공공기여금을 확대하며, 기존의 사유지를 점차 공유지로 전환하고 기존의 도시 지상철로를 지하화하면서 새롭게 가용할 수 있는 지상공유공간 중 일부를 상

다양한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다채롭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공공의료/공교육/공공보육 등 보편적인 사회복지 이후의 과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¹⁵⁾,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시장을 확대한다는 비난은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공유지 내지 공유지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1/N의 지분권이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도시 내지 지자체의 차원에서도 공유지와 공유지 수익의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도시 내지 지자체 기본소득의 주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공유지 내지 공유지 수익이 미미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조세수입이 기본소득 재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조세권마저 제한된 한국의 도시나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한적인 예산이라면 적은 규모의 부분적인 현금/현물 기본소득에서 시작하면 될 것이기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본소득 도입을 유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실제로 한국 지자체의 예산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현물기본소득의 한 형태인 무상급식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에서 빠른 편으로¹⁶⁾ 그리고 만족스럽게 출범했고 또 진행 중이다. 이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절대적인 예산규모보다는 정치적인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예증하는 사례이다.

제한된 규모의 공유지 수익과 적은 세입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이거나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다양한 형태를 확대하는 것은 정치공동체의 예산지출에서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정부예산수입은 크게 공유지수익과 조세수입으로 구성된다. 곧 예산수입은 다소 누진적인 형식을 취하더라도 사회구성원 모두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지출은 이에 비해 거대자본이나 부동산부호, 그리고 고액연봉자의 자산과 소득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정부가 발행한 외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결국 예산수입에서 지출되며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가치를 인상하고 원화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데 사용되어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자본에게 막대한 환차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수입재의 원화 가격을 앙등시켜 국내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 곧 정부는 외평채를 통해 국민의 돈을 수탈해 거대자본에게 몰아주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공항 건설, 지하철 건설 등은 토지가 사유화된 상황에서는 개발지역 대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다준다. 이 또한 국민 모두가 기여하여 조성한 예산을 부동산소유자들에게 몰아주는 통로인 셈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적립액이나 공무원/군인/사학연금도 적어도 상한액까지는 고소득자일수록 고용주와 정부예산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역복지의 체계로 짜여 있다. 이처럼 일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을 제외한 주요한 예산/연금 지출이 경제적인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걸 감안할 때,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거대자본과 부자를 위한 예산지출을 직접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전유된 공유지의 환수를 통해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가난한 다수를 위한 예산지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런 점에서 중앙정부의 지배적인 예산입출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때 도시 내지 제한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지자체의 현금/현물 기본소득 확대는 다수를 위한 새로운 예산입출 패러다임을 선도적으로 시현하는 돌파구이다. 나아가 1/N의 지분권이라는 공유지와 기본소득의 원리는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공익(public interest)이 사실상 예산을 주관하는 국회의원, 정부관료 및 거대자본의 사익(private interest)을 치장하는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기존의 '국가 vs. 시장'이라는 경제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민주적 대안 경제시스템이기도 하다. 비록 도시나 지자체가 국가차원에 비해 관료화와 부정부패가 더 심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국가권력과 기존 경제시스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몇몇 지자체에서 발효될 공

업공간으로 개발하여 임대함으로써 생겨난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5) 오건호를 비롯하여 스웨덴식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유보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오건호, 2013).

유지와 기본소득 원리의 실현은 시스템의 전환을 촉발할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무상급식에 이어 최근 성남시에서 도입한 청년배당은 이런 점에서 기존의 ‘국가 아니면 시장’이라는 근대적 경제시스템을 넘어서서 민주적인 공유와 기본소득의 원리가 대안 경제시스템의 축이 될 것을 가시화시켜 줄 수 있다.

공유와 기본소득은 아직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도시에 집중된 가난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미래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자신의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것도 없는 상황에서 알바생으로 시간을 뺏기느라 학업과 취업준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시간을 덜 빼고 학업과 취업준비를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와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특정 개인의 성과라 할 수 없는 공유지에 대한 지분권에서 유래하지만, 그 지향점은 금수저, 흑수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삶의 기회를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기에(Van Parijs, 1995, 25-29) 청년세대의 다수는 기본소득으로 절망을 넘어서고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산제약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도시에 집중된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위한 새로운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몇몇 도시에서 공유지와 기본소득의 확장이 청년들을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접촉시키고 연결시켜 포괄적인 공유와 기본소득의 경제시스템과 민주적인 정치사회시스템을 맞아 들일 주체로 진화시키는 마중물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한 서울시와 수도권의 경우 용적률 상향 조정 내지 토지용도변경 등 사회적으로 공유지의 생산에 해당하는 토지가치의 막대한 상승이 사적인 토지소유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고 있다. 이러한 공유지의 사적인 전유를 일정부분 환수하여 도시구성원들의 공유지와 기본소득을 올린다면 서울과 수도권은 우리에게 미래의 공동체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내희, 2016, *길의 역사*, 문화과학사.
- 강상구,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평가,” *진보평론*, 60, 49-70.
- 곽노완, 2008, “글로벌폴리스와 희망의 시공간,” *사회이론*, 33, 61-88.
- 곽노완, 2016, *도시정의론과 공유도시*, 라움.
- 김진공 역, 2014,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선언*, 돌베개(추이즈위안, 2014,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선언*. 돌베개).
- 김동영, 2013,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이슈 & 진단*, 121, 1-25.
- 남영호·채운하 역, 2013, *도시연구의 주요개념*, 라움(Gottdiener, M. & Budd, L., 2005, *Keyconcepts in Urban Studies*, Sage).
- 류보선 외, 2016, *서울의 인문학*, 창비.
- 박원순, 2009,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 검동소.
-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43, 5-43.
- 박준상 역, 2005,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 문학과 지성사(Blancot, M. and Nancy, J.-L., 1984/2001, *La Commuauté inavouable/La Commuauté affrontée*, Les Éditions de Minit/Éditions Galilée).
- 서울시, 2011,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로 ‘사람가치’ 회복”, 서울시 보도자료.
- 오건호, 2013, “보편복지가 ‘기본소득’에게”, *시사IN Live* 2013년 12월 18일.
- 윤홍근·안도경 역,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RHK(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이창신 역, 2010,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Sandel, M. J., 2009,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Farrar, Straus and Giroux; Reprint edition).
- 이향우, 2014, “인지 자본주의와 ‘자유노동’의 보상: 디지털 저작권 관리, 마이크로페이먼트, 기본소득,” *사회적인 것*과 한국사회(2014년 비판사회학대회 자료집),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2014년 10월 25일.
- 이현석 역, 2013, *시골과 도시*, 나남(Williams R., 1975, *The Country And The City*, Oxford University Press).
- 정남영 역, 2014, *공동체, 사월의 책*(Negri, A. and Hardt, M., 2009, *Commonwealth*, Belknap Press).
- 정보기획관·통계데이터담당관, 2015, 2014년 「서울서베이」조사 결과, 서울연구원.
- 정성훈, 2013, *도시 인간 인권*, 라움.
- 최병두, 2009, “도시발전 전략으로서 정체성 형성과 공적 공간의 구축에 관한 비판적 성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 인문학연구소* 엮음, *도시공간의 인문학적 모색*, 메이데이.
- Gorz, A., 1997, *Arbeit zwischen Miesere und Utopie*, Suhrkamp, Frankfurt/M. 2000.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1243-1248.
- Hardin, G., 1978, Political Requirements for Preserving Our Common Heritage, in Brokaw, H. P.(ed.), *Wildlife and America*,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 Harris, M. and Gorenflo, N.(eds.), 2012. *Share or Die*. new society publishers.
- Harvey, D., 2000, *Spaces of Hop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rvey, D., 2012, *Rebel Cities*. Verso.
- Rose, C., 1986, The Comedy of the Commons,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53(3),

711-781.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Bloomsbury.

Van Parijs, Ph., 1995, *Real Freedom for All*, Oxford University Press.

Walljasper, J., 2010, *All that we share*, The New Press.

Widerquist, K., 2015, Lesson from the Alaska Model, 『지역정치와 기본소득』 2015년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2015년 6월 19~20일,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공간 점거에서 수행성과 (비)재현 공간 행동주의

장세용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1. 공간 점거는 여전히 유효한 방식인가?

오늘 우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비극적 사건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공간점거를 목격하고 있다. 서울을 서울답게 하는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는 온갖 사연을 가진 민중들이 장소를 점거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광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광장이란 무엇인가? 첫째 비어있는 공간, 둘째 도시 내에 여백을 가진 공간으로서 자연과 인공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세번째는 제사와 축제 같은 의미와 상징이 작동하는 공간이며 정치적 토론과 변론을 전개하는 공간으로서 인간 삶의 필수적 구비조건으로 작용하는 공간이다. 이 세번째 요소가 작동하는 공간의 양상에서 대표적인 것이 장소점거이다. 장소점거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평화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의 한 종류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머물러 강제 퇴거되거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행동이지만 점거의 양상과 내용은 시공간과 정치문화 및 점거주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에이프릴 카터는 장소와 공간의 점거를 직접 행동의 한 방법으로 진단한다.

공간의 점거는 직접행동의 한 방법이며, 직접행동은 통상적으로 민주주의의 결손(democratic defect) 그리고 시민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난다(April, 2005, 32).

잘 알려진 인도 서부 마디아 프라데시 주 나르마다(Narmada) 강 댐 건설예정지 시골아낙들의 점거행동, 브라질 무토지 농민들의 휴경지 경작, 중국의 노동자 파업과 공장 점거,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거주지역(township) 도시빈민들의 민영화된 식수와 전기의 무단사용 등을 들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전 세계적으로 2008년 한국의 촛불 시위, 2010년 아랍의 봄을 가져온 수많은 공간 점거, 2011년 자본주의 본산 뉴욕과 런던 등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오쿠파이(Occupy) 운동, 2013년 터키 이스탄불 게지(Gezi)공원과 탁심(Taksim) 광장 점거, 2014년 9월-10월 홍콩 우산혁명에서 코즈웨이베이(Causewaybay), 몽톡(Mong Tok), 센트럴(Central), 에드미럴리티(Admiralty) 구역에서 대규모 거리 점거 등을 잘 알려진 사례로 들 수 있다. 한편 이들의 공간점거 행동이 변화를 일구어내는데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여부에 회의적인 시선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라디오 알리체(Radio Alice)-이탈리아 최초의 자유 해적 라디오 방송국-를 세운(1976년)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Franco (Bifo) Berardi)는 물리적 공간의 점거 방식에 강력한 회의를 표시했다. 그는 비록 2000년 이후 세계 각지에서 금융자본의 횡포에 저항하는 거리 점거 운동이 벌어졌지만 권력에 큰 타격을 가하지는 못했다고 본다. 그 이유는 거리나 광장 및 공장 점거가 부르주아가 영토화한 사회에서는 유효하지만 지금 신자유주의를 특징짓는 금융자본과 금융권력은 탈영토화되어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곧 신자유주의 권력이 영토를 벗어나 기호와 언어 및 숫자로서 우리 삶을 착취하고 있는 판국에 기호자본에 대항하는 운동이 부르주아 시대 권력의 장소인 광장이나 거리 점거, 뉴욕 월가 오쿠파이에서 보드주코티 파크(Zuccotti Park) 점거로 나타난 것은 모순이라는 평가이다. 그는 이렇게 권고 한다.

금융권력은 물리적 건물에 있지 않으며 숫자들, 알고리즘들, 그리고 정보 간의 추상적 연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권력 형식에 맞설 수 있는 행동 형식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먼저 인지노동이 금융투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언어적 자동기제를 창출하는 주요한 생산력임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위키리크스의 사례들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모두를 노예화하는 기술-언어적 자동기제를 해체하고 재기술하는 장기-지속의 과정을 조직해야 한다(Berardi, 2012, 63).

프랑코 베라르디는 도리어 기호의 알고리즘 점거 곧 위키리크스나 아노니무스(anonymous) 그리고 전 미중앙정보부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의 정보공개 활동 곧 비장소적 공간점거가 더 유효할 가능성을 제안한다. 그러나 필자는 신자유주의의 특징인 금융화가 세계이해에 중요하지만 금융화의 토대로서 공간의 생산 곧 지리적 축적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자본화의 핵심요소라는 데이비드 하비의 관점을 긍정한다(Harvey, 2005; 2012). 또한 공간 점거는 공권력의 행사에 맞서 시민의 지위를 인정받고 길거리나 광장 같이 공적가시성을 가장 풍부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자 사회를 환유적으로 표현하는 장소들을 점거하여 사회적 권리를 가진 시민이며 정치적 인민인 주체로서 존재감을 인정받는 ‘인정투쟁’(Honneth, 1996)의 장으로 중요성을 긍정한다.

본고는 공간 점거 구체적 사례로서 2008년 서울 광장 촛불, 2011년 뉴욕 월가 주코티 파크 점거, 현재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개되는 세월호 유가족 공간 점거 행위를 중심에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주코티 파크 점거를 두고 앤디 메리필드는 ‘마주침으로서의 점령하기’로 규정했다(Merrifield, 2013, 159). 공간 점거를 ‘마주침’의 생산물로 강조한 것은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가 메트로폴리스에서의 정치를 특이한(singularité) 주체성들이 마주침을 조직하여 소통과 협력으로서 공통적인 것(communs)을 생산하는 공간이라고 말한 것과 연결된다(Negri and Hardt, 2009, 357, 418). 필자는 이와 같은 관점들을 앙리 르페브르(1901-1991)의 ‘공간 생산론’과 연관시켜 점거공간의 성격을 탐색한다. 이어서 점거 행위자의 ‘행위수행성’에 주목하고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1956-현재)의 견해를 빌려 ‘퀴어(queer) 공간’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시론 한다. 마지막으로 점거공간이 내포하는 가능성과 한계를 급진민주주의 실현 공간이란 주제로 접근한다.

2. 공간점거와 공간의 생산

공간점거는 이론적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앙리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생산론의 관점에서 그것은 사회적 생산물인 공간에서 도시공간 계획자와 도시공간 이용자 사이에서 각자가 공간에 관한 특수한 기호를 추구한데서 유발된 갈등의 산물이다. 다른 아닌 공간의 생산에서 말한 세가지 공간: 일정 수준의 결속과 연속성을 제공하는 생산과 재생산을 수반하는 지각 공간(l'espace perçu), 도시계획가와 기술관료들이 지식·기호·부호를 부과하는 ‘공간의 표상들’(representations de l'espace)에 맞서는 것이다. 은밀한 꿈과 상상력을 포함한 ‘생명을 지닌 공간’인 ‘표상 공간들’(espaces de représentation)에서 ‘공간적 실천’(pratique spatiale)을 전개하는 것, 곧 전복적 활동의 감행을 말한다(Lefebvre, 1975, 42-43). ‘공간의 표상들’은 공간적 세계의 지각과 실천에서 놀이하는 다수의 사회적 실천보다는 더 균일한 방식으로 관철된다. 한편 사회적 재생산은 맑스주의적 의미에서는 노동력의 재생산이지만, 동시에 ‘일상생활의 살내음, 지저분하고, 애매한 것들’의 총합이다. 그리고 ‘공간적 실천’은 자본주의의 가치가 궁극적으로 생산되는 대다수의 노동을 표상하는 동시에 자본에 맞서거나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공간 점거에서 점거캠프는 파열의 순간 새로운 가치의 정치경제학을

생성할 가능성을 열고자 준비하는 반(counter)-시/공간 장소이자, 일상의 사회적 재생산을 실천하는 사회적 배려(care)의 장소로서 틈새공간(in-between spaces)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때 파열의 순간은 가능성 주의자(possibiliste) 르페브르가 『일상생활 비판』에서 말한 ‘가능성-불가능성’의 변증법에서 ‘불가능한 가능성’의 순간과 같다(Lefebvre, 1980, 347-348; Hess, 2009, 193; Guelf, 2010).

‘불가능한 가능성’의 생생한 사례로서 우리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 865호 크레인에서 2011년 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309일 간 계속했던 고공 점거농성을 기억한다. 그리고 지극히 협소한 장소에서 점거가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자본의 논리에 얼마나 큰 파열을 일으켰고 자본과 권력이 얼마나 과민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잘 안다. 염두에 둘 것은 점거의 순간이 혁명적 변화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일상생활보다 앞서거나 일상생활의 지리학의 바깥에 놓이거나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송경동 시인이 제안한 희망버스는 우리의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서 만난 사람들과 정리하고 철화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요구한 것이 큰 울림이 되었기에 그렇다. 르페브르는 이미 일상생활의 명백한 진부함에 숨겨진 힘, 그것의 시시함 아래 놓인 심연, 그것의 지극한 일상성 안에 숨겨진 어떤 특별한 것들을 강조했다. 공간점거 역시 일상성과 불가분리이다. 하지만 그것은 르페브르가 리듬분석(rhythmanalyse)에서 말한 일선적 시간의 ‘축적적 과정’에 도전하고 심지어 역습을 가한다. 그 결과 순환적 리듬을 반복하며 작동하는 사회적 재생산이 ‘비축적적 과정’이라고 부른 것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각성시킨다(Lefebvre, 1980, 340). 그 공간이 유지되는 것은 생활공간을 우위에 두는 계기가 아니라 점거에 어떤 결속과 연속성을 제공하는 공간적 실천을 통해서이다. “전유된 사회적 공간을 발생(생산)시키는 것은 한 사회에서 한 순간적 작업이 아니다(Lefebvre, 1975, 43).” 점거자들은 일상생활의 사회적 재생산 공간에서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는 ‘공간의 표상들’을 비판했다. 그 결과 희망버스의 상상력을 고취시키고, 편지를 접어 날리고, 손구호를 펼치며 ‘공간의 표상들’에 반대하고 생활공간에서 새로운 욕망과 희망의 ‘표상 공간’, ‘불가능한 가능성’ 공간을 강력히 요청하도록 이끌었다. 그것은 새로운 공간정치를 전개하는 강력한 행위로 부상할 계기와 접촉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간정치가 구현된 대표적 사례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 필자는 실천과 이론적 모색에서 치열한 쟁점을 제공했던 2008년 촛불공간에 주목한다. 물론 역사에는 수많은 점거공간이 존재했고, 가까이서 1987년 6월 항쟁기에 명동성당 점거는 한국현대의 물줄기를 바꾸는 큰 계기로 작용했다. 그 외에도 몇 개의 점거사건들이 있었지만 공간점거의 파급력이나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 이제는 진부한 행위로까지 보이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은 끊임없이 공간 점거가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건은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과 경찰과 용역 직원 들 사이에 충돌과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보듯 공간점거는 서울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모순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서울은 모든 모순의 발생자이면서 해결자로 소환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던 촛불공간에 주목하는 이유는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개입하며 양극을 오가는 평가대상이며, 감히 지금까지의 공간 점거와 시위는 촛불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대체로 참가 주체들의 다양성, 합리성, 주체성을 실현하는 다중지성의 투명한 자율공간이며 공론장이라고 규정하는 아우토포노미아(autonomia) 계열의 견해가 큰 설명력을 인정받았고 점거공간의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것은 촛불공간의 무수한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지성적 판단을 하는 존재로서, 누구의 명령이나 의도를 따라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비집단적이며 자유롭게 상호소통하며 공간과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집단지성을 형성했다고 보는 것이다(고길섭, 2008). 필자는 촛불공간 집단지성론이 사건의 의미 부여에 참신하고도 능동적인 관점을 제공한 측면을 인정하지만 점거공간은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한다. 시민파수꾼 역할을 한 예비군, 유모차를 끌고나온 여성들, 20대 직장여성들, 6-70대 노년층에서 권력관계 특히 국가와 젠더의 권력관계가 작용하였다는 평가는 광장점거의 양상과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참여자들의 70%가 여성들로 추산되는 촛불 공간의 참여자들은 디지털 의사소통을 통해서 교류하고 일상의 사회문화적 의례를 퍼포먼스로 수행하면서 권력에의 저항과 수용을 경합시켰다(한우리·허철). 이것은 촛불 집회공간을 다중의 집단지성이 생산한 투명한 합리적 유토피아 공간으로 보는 관점에 일단 제동을 걸면서, 억압과 배제의 반(反)공간을 생성하는 측면도 내포하는 공간으로 설명할 가능성도 제공한다. 곧 일상의 모순과 갈등하는 사회적 의미의 수탁소(depository)로서 점거 공간의 성격을 드러내면서 점거공간의 의미를 더욱 확장시킬 계기를 제공한다.

촛불공간을 정치적 상징공간에 관한 ‘공간적 은유’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어떨까? 곧 비록 공간적 경험을 물질성에 근거하여 접근하더라도 어떤 공간도 투명하게 지도그릴 수는 없다는 것, 점거공간의 모호함과 익명적인 모호한 대상에 관한 복잡하고 관계적인 성질을 늘 염두에 두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논의의 출발 지점이다.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의 방법론과 관계를 맺는 계기도 여기에 있다(Miller, 2006). 언어와 공간의 관계를 사유하는 새로운 모색은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 같은 인지언어학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개념적 은유와 환유에 초점을 맞추어 높은 수준의 일반성과 관습성의 차원에서 근원(source)영역과 목표(target)영역이란 두 영역의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했다(Lakoff and Johnson, 1980). 그러나 질 포코니에와 마크 터너는 정신공간이론(mental space theory)에서 이를 비판하며 언어행위를 ‘정신 지도 만들기’(mental mapping) 곧 인간존재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주변세계에 공간기획을 투사하여 준거로 삼고 행동을 구상하는 과정으로 본다. 그리고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이 일반적인 개념적 투사 모델인 포괄 공간(generic space)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혼합공간이라는 중간계 공간을 설정한다(Fauconnier and Turner, 2002, 400-429). 이 관점에서 보면 2008년 촛불공간에서 사용된 언어의 구조는 고도로 추상적 진리 조건을 나타내는 인지구조와 동일하지는 않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외쳤을 때 그것은 다만 인지구조를 이루는 인지적(cognitive) 구성체들의 표면적인 명시체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곧 국민이 주권자이고 국민의 생명권은 주권자 스스로 결정한다는 정도였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의 언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는 높은 수준의 일반적 개념 영역이 아니라 구성체들 사이의 상호관계의 작용으로 수정되고 발전하는 가변적인 실제 언어의 사용 공간이 작동한 것이다. 인지적 구성의 특징은 언어 표현이 인지적 충위를 통하여 실제 세계와 연결된 혼합공간이란 사실이다(Fauconnier, 1984, 32; Fauconnier and Sweetser, 1996; cf. Whitehouse, 2009). 언어적 혼합공간을 역사적 공간과 연관시키면 바로 일상생활 공간이다. 혼합공간은 가변적인 실제 언어가 사용되며 의미가 형성되는 일상생활공간이다. 그 공간은 물질성과 직결되고 일상의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적공간의 역할을 한다.

이와 연관시켜 필자는 촛불공간 이해에 유용한 공간개념으로서 미셸 푸코와 앙리 르페브르가 미묘한 차이를 담고서 제안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개념에서 중심의 창조와 파괴가 연속되는 잠재력을 가진 일상공간과 연관시킬 가능성을 모색한다. 헤테로토피아? 미셸 푸코가 헤테로토피아를 일종의 현실화된 유토피아이며 모든 장소의 바깥에 자리를 마련한 장소인 반-공간(contre-espaces)으로 설명했다면 르페브르가 헤테로토피아를 어디에도 없는 비-장소(non-lieu) 유토피아로 설정하는 측면이 있다. 푸코에게 헤테로토피아는

자기 이외의 모든 장소들에 맞서서, 어떤 의미로는 그것들을 지우고 중화시키고 혹은 정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장소들, 그것은 일종의 반-공간이다. 이 반-공간, 위치를 가지는 유토피아들...(Foucault, 1986, 16, 22-27; 2009, 13).

그러나 푸코에게 그 유토피아는 과학으로서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간의 기능과는 다른 절대적 타자 공간의 과학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 사회생활 공간인 '외부공간'에서 현장의 공간들 사이에 펼쳐지는 이종적인 위상학((heteropologie)과 시간적 측면에서 이질적 연대기인 헤테로크로니(heterochroni)를 구성하는 공간이다(Foucault, 1986, 22; 2009, 16). 또한 서로 환원불가능하고 절대로 포괄 수 없는 장소화('emplacement')¹⁾를 묘사하는 일련의 관계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공간성 위에서 전개되는 시간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공간이다.

또한 모든 문화, 모든 문명에는, 모든 사회의 토대에 존재하면서 형성되는 장소인 실재 장소가 있다. 그것은 문화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실재 장소화가 동시적으로 표현되고, 경쟁되며, 반대되는 일종의 효과적으로 법규화 된 유토피아로서 반(反)장소화와 같은 실재 장소화이다(Foucault, 1986, 24; 1994, 1574).

한편 르페브르의 헤테로토피아는 엄격한 계획, '상징, 정보 및 놀이'의 억압 과정을 통해서 동종성을 부과하는 기술관료적 공간의 정치 곧 '도시주의'(urbanisme)에 저항하고자 호출한 개념이다. 그것을 실현하는 방도는 무엇인가? 바로 휴일, 축제와 기념일 같이 '행복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유토피아적 희망의 변혁 공간 헤테로토피아를 생성하는 것이다. 르페브르는 그런 사례로서 정치적 도시의 바깥에서 발견되는 공간, 곧 도시에서 배제된 동시에 도시와 연관된 외곽에 신원이 의심스런 이방인들이 뒤섞인 교환과 교역의 장소이며 기능적으로 통합되는 모호한 이종적 공간을 헤테로토피아의 강력한 표시로 본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처럼 시작부터 정치적 도시로부터 배제된 이들 장소는 너른 마당이 있는 대상 속소와 장터인 교외이다. 도시에서 시장과 상품들(사람과 사물)을 통합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수세기 간 계속되었다(Lefebvre, 1970, 9, 37-38; 1975, 387).²⁾

미셸 푸코와 앙리 르페브르의 헤테로토피아는 '비-장소(non-lieu)와 실재 장소' '반(半)-허구이며 반-실재', 폐쇄적이면서도 개방되고, 집중되면서도 분산되며, 가깝고도 멀고, 현존하면서도 부재하는, 일상과 정반대되는 역설적이고도 모순되는 반(反)-공간인데서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이들의 헤테로토피아가 같은 함의와 방향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푸코의 헤테로토피아가 끊임없는 분산과 부재의 '반-공간'에 머물며 머문다면, 르페브르의 헤테로토피아는 동종화와 합리성에 저항하며 자본주의적 공간화를 관통하는 핵심적 도시공간이며, 발생적으로 차이를 '통합'하는 공간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촛불공간이 사회에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유토피아적 변혁공간이라거나,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투명한 자율공간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그 대신 국가와 젠더 관계, 공간을 채우는 삶의 미학화와 문화적 제례로서 행위수행성이 만들어내는 반(反)-공간의 측면에 주목하면서 미셸 푸코의 회의주의적 헤테로토피아 개념과 연결될 가능성을 일단은 긍정한다.

그렇다고 르페브르의 헤테로토피아-수레꾼, 무역업자, 용병 같이 신원이 의심스러운 온갖 하층민과 반(半)-유랑민이 넘쳐나지만 또한 새로운 세상의 꿈을 꾸고 그것의 실현을 지향하는 장소로 설정한-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이 공간은 동종화와 합리성에 저항하며 자본주의적 공간화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도시공간으로 성장하며, 발생적으로 차이를 '통합'하는 공간이 되었다. 르페브르가 헤테로토피아를 "대비, 대

1) 푸코는 추상적인 'espace'(space)와 좀 더 가깝고 주관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lieu'(place)를 함께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특정장소를 말하는 'emplacement'을 더 선호했다. 그러나 영어판이 'site'로 번역하면서 본래 의미를 크게 상실했으나 최근 영어판에서는 'emplacement'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Foucault, 1998).

2) 헤테로토피아를 '상호 혐오를 주는 공간들'로 규정한 경우도 있다(Lefebvre, 1973, 207-208).

립, 겹쳐놓음, 병렬이 분리와 시공간적 거리를 대체 하는”(Lefebvre, 1970, 125) 도시의 장소를 중심의 창조와 파괴가 연속되는 잠재력의 공간으로 설정한 것은 공간점거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한다. 필자는 수많은 촛불‘들’이 광장을 장악한 기술관료정적 ‘도시주의’의 전횡과 억압에 맞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한 파격적 연대와 희망의 축제를 지향한 점에서는 촛불공간이 앙리 르페브르의 헤테로피아, 다시 말하면 회의주의에 맴도는 푸코를 넘어서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지향하는 헤테로피아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다.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공간이 현실에 회의주의적 비관을 ‘표상’하는 탈근대적 공간이라면, 르페브르의 헤테로토피아는 여전히 도시 내부에 숨겨진 빛나는 혁명적 ‘잠세태’에 깊이 낙관하기를 요청하며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점에서 근대성의 심화 공간을 지향한다. 문제는 혁명적 낙관주의에 입각한 그 공간이 유토피아의 이름으로 억압과 배제를 전개할 가능성도 역시 내포한 것으로 진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경우에는 촛불공간의 파격적 요소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필자는 도시 공간점거에서 개별 점거행위자들의 수행성(performativity)에 주목하면서 그런 우려를 넘어서고자 한다.

3. 점거 행위의 수행성과 쿼어 공간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기억, 약속, 행동 문화제’가 4.16연대와 4.16 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렸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행사에는 가수 권나무, 문화평론가 이도흠 등이 ‘세월호 버스킹’을 시작으로 막을 열렸다. 이어서 세월호 다큐영화 ‘4.16프로젝트-망각과 기억’이 상영되었고 오후 7시에는 이소선 합창단,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 등이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그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세월호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위로했고 광장은 추모행렬로 가득 찼다.³⁾

공간점거는 시위와 직접행동, 토론과 의사결정 등 다양한 행위를 수반한다. 이 행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필자는 언어적 의미 생성의 틀에서 출발하여 장소를 장악하여 공간을 만들고 정치적 의미를 가진 사회적 장소성과 공간성(spatiality)을 생산하는(Glass and Rose-Redwood, 2014, 2) 정치적 수행성의 지리학을 성찰한다. 성찰의 출발점은 담화행위이론(speech act theory) 특히 일상언어학파의 존 오스틴(J. L. Austin, 1911-1960)이 언어행위를 진술적(constative) 행위로부터 수행적 행위를 구분한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 개념에서 도출한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한 발화를 특정의 경우에 연표될 수 있었던 ‘힘’으로 파악한 개념-이다(Austin, 1962).⁴⁾ 공적공간은 언어규칙이 지배하는 언어행위의 상호교환으로 형성되고, 언어행위는 또한 권력행위이다. 권력행위=언어행위 안에서 각자는 서로의 행위를 수정하고, 담화를 사용하면서 타인 지배와 헤게모니를 추구하며, 여기서 초래되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 또는 그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 자체가 ‘정치적 언어’의 본질이다. 정치적 언어는 주로 남성과 자본, 중심과 국가의 언어였으며 지배집단의 헤게모니 유지에 유리한 편향성을 가지고 여성과 노동자, 주변부와 로컬의 언어에는 역할을 별로 부여하지 않는다. 점거공간의 언어는 바로 후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3) 보수언론은 이 광장은 세월호 유가족들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것이기에 천막을 걷어내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라는 명분으로 점거를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선일보, 2016년 4월 16일).

4) (1) 발화적 행위(locutionary act)-무엇에 대해 말하며(of saying) 의미와 지시대로만 이해하는 행위 (2) 발화효과적 행위(perlocutionary act)-무엇을 말함으로써(by saying) 결과적 효과를 획득하고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 (3) 발화수반적 행위(illocutionary act)-무엇을 말하고 있는 중(in saying)의 언어행위로 구성된 발화행위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오스틴이 발화수반적 행위를 발화효과적 행위로부터 구분하고 그것의 특징을 관례어(convention)에 의존하는데 둔 점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한 발화를 특정의 경우에 연표될 수 있었던 ‘힘’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발화수반적 행위는 단일 언어행위에 단일 의도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uptake)의 확보에서 모호한 이해의 대상에 의미의 복합성을 제시한다. 의도성(intentionality) 또는 지향성 개념은 존 서얼에서 더욱 발전한다(Searle, 1983).

수행성 개념은 서사적 담화의 재현과 기호학적 해석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가진 점에서 언어적 전환이 공간의 생성과 현존을 중심에 두는 세계해석 곧 공간적 전환(cf. Clark, 2004; Spiegel, 2005; Warf and Arias, 2009)과 연관성을 탐색하며 전유가능한 주제이다. 곧 일정 장소에서 장기지속적으로 수행된 우연적 행위 또는 권력의 수행적 표명이 반복적인 재현(representation) 과정을 거치면서 장소성(placeness)을 형성하고 그것이 공간의 의미화 곧 공간성(spatiality)을 산출하는 점에 착안한다. 최근 수행성 개념을 오스틴의 수행적 발화 개념이 아니라 질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개념, 담론적 재현이 아닌 비재현에서 찾는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Thrift, 2007). 이것은, 개인주의화하는 동시에 보편화하는 주권 주체에 유리한 몸의 정치 개념으로 퇴각하여 행위에 부과되는 사회적 억압이나 모순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Nayak and Jeffrey, 2011; Mitchell and Elwood, 2012).

담화행위이론에서 모든 언어체계는 본래 자신의 자율성과 인간성과 관련되는 다양한 특수 언어, 관용어, 수사 및 담화 형식의 혼합이고 그것이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지적능력을 가진 발화자는 항상 구조적 체계를 벗어나고자 시도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고 재결합시키는 다중가치(polivalent)적 패턴을 모색하며 주체화를 시도한다.⁵⁾ 점거공간을 생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행위 수행성이다. 수행성은 공간의 생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관례어와 수사적 담론의 작동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행위가 구성되는 방식의 탐색에 매우 중요하다. 인간 행위의 정체성 구성에는 반복과 행위성의 문제가 작용한다. 여기서 의문이 제기된다. 장기지속으로 반복되는 의미화 개념은 우리가 구조주의적 의미 생성의 틀 안에서 계속 맴돌게 만들지나 않는가? 수행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서사적 담화의 총위이다. 담화는 기본적으로 잠재된 상태의 표명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준비과정에 주체가 획득해야하는 잠재능력(competence) 또는 조종(manupulation) 능력에 이해가 필요하다.

2011년 뉴욕 월 가를 비롯한 국제적 금융 중심지에서 벌어진, 조직도 없고 극단적인 개별 행위만 존재하는 항의 행위 곧 ‘오쿠파이’ 운동에서 공간점거자들은 공간을 일시적으로 장악하고 집단적 의견을 표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오쿠파이 운동에는 집단적 연대 못지않게 점거자의 개별 행위에서 재현(representation)의 반복을 넘어서 재현불가능 또는 비-재현적(non-representational) 수행성까지도 목격할 수 있다. 주디스 버틀러는 관례어와 수사적 담화의 언어수행적 작동에 관한 연구를 전유하여 젠더정치 개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행위와 일상에서 거의 의례적인 실천 규범의 반복이 주권과 정치적 주체성 그리고 사회적 공간을 생성하는(constituted) 방식을 탐색했다(Butler, 1993, x; 1997, 16-17; cf. Gregson and Rose, 2000). 우리는 패러디가 ‘반복되는 재현의 실천’ 안에서 오직 ‘재현의 무질서한 복수성’만이 작용하는 행위수행성을 요구하며(Butler, 1993, 95; 1997, 16-17; Butler and Athanasiou, 2013, 99-103). ‘연쇄관계이며 문화적 충돌하는 비-공간’을 상정한 버틀러가 오쿠파이 운동이 신체의 요구에 따른 ‘공적 신체의 정치’(2011년 10월 23일 페이스북)(Butler, 2015)라고 지지한 사실과 상호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주코티 파크 점거자들은 거의 매일 시위를 조직했다. 2011년 9월 24일 경찰은 시위에 개입하여 80명을 체포하고 연좌하던 여성시위자에게 최루가스 스프레이를 사용했다. 10월 1일 경찰은 시위대를 브루클린 다리로 토끼몰이 하여 7백여 명을 체포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은 비디오와 인터넷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었고 시위대가 겪는 고통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99%를 대변한다는 점거자들의 구호는 오랫동안 사회경제적으로 억압받은 계급들의 의견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물론 그 슬로건이 전일적이라는 비판도 가능하지만, 99%라는 선언은 상식(common sense)을 표현하는 구호일 뿐 이었고 내부에 수많은 인종, 종족, 성별 및 성적 지향성을 포함한 것이었고 집단적 정체성을 표방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도리어 변화하는 기표를 따라서 경계를 횡단하며 생산하는 수많은 파편화된 개인들의 행위가 수행되었다(Writers for the 99%, 2012; Michell et al., 2013). 무엇보다 이들의 점거와 시위 자체는 ‘공동 목

5) 그러나 다중가치적 패턴은 결코 개별 고립분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한다.

표가 없는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점거자들은 주코티 파크라는 ‘사적’ 소유의 공적공간에 공동체(common)를 생성시켰다. 여기서 공동체는 네그리와 하트가 말한 공동체, 능동적인 정의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에서 사적인 것도 아니고 공적인 것도 아니며, ‘개방적 접근과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결정 및 자주관리’(Negri and Hardt, 2009, 10)와 근접한다.

점거자들은 시민들에게 심정적 지지를 넘어서 적극 가담하기를 촉구했다. “쳐다보지 말고 가담하라”(Don't look at us, join us!)는 널리 사용된 구호였다. 가담자들의 행위와 의견들은 분리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시위와 항의 구호의 선언에만 머물지는 않았다. 점거공간은 독서, 명상, 블로그 업데이트, 렌탈콩 요리. 쓰레기 줍고 치우기, 부상자 상처 치료, 복치기, 관련 말기, 체스두기, 토론, 예술품 만들기, 접시 닦기, 성생활 등의 일상적 커뮤니티로 변화해 갔다. 그것은 점차 체험공간(l'espace vécu)에서 재현된 수행성으로 작용했다(Rehmann, 2013, 9).⁶⁾ ‘자유로운 공간’이 된 점거공간은 지배 권력의 직접적 통제를 벗어나 하나의 독자적 커뮤니티로서 정치적 동원을 수행하는 문화적 도전의 장을 생성시켰다(Poletta and Kretschmer, 2013).

점거자들은 직접 민주주의 실천과 다수의 시민 불복종 행위를 전개했다. 점거공간에서 발행한 소식지(OWAS journal)에서 보듯 그들은 기존 정치의 통제가 아니라 대체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며 총회 절차와 참여 및 직접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주체적 측면에서 오쿠파이 참가자들은 기존에 알려진 정치의 수용을 거부했다. 기존 정치질서에 부정적인 태도는 국가기관 특히 경찰에게 확장되었다. 공권력의 개입을 거부하는 자율적 자치의 욕망은 국가의 권력 메커니즘과 뒤엎힌 항의 형식과는 과격한 단절을 지향했다. 정치적 당파나 노동조합과 행동의 공동조직 및 협력을 거부한 것은 그와 연관 있다. 인류학자로서 참여관찰자였던 데이비드 그래버(David Graeber)는 자신들을 맑스주의 좌파 수직론자(verticalist)가 아닌 아나키스트 수평론자(horizontalist)라고 자평했다(Graeber, 2012; 2013). 물론 그 가운데는 좌파 그룹이나 노동조합과는 다른 입장을 설정한 자들도 있었고, 이들 조직과의 관계 맺기를 둘러싼 예민한 갈등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참여자들이 노동조합이나 정당의 ‘관념’ 그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가를 비롯한 기존의 정치적 실체들과는 거리를 두고 사회현실에 상징적 무관심을 표현하고, 그것이 부과하는 규칙에 따른 역할을 거부했을 뿐이다. 사실 그것 자체는 이미 충분히 경계화단적이었다. 이런 거부 행위는 자신의 행동을 가져온 신념을 급진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선행조건으로 도약시킨다.

오쿠파이 참여자에게 가장 공통적인 궁금증이 있다. 왜 그들은 국가에게 과거와는 광폭으로 다른 무엇을 기대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다름 아닌 점거공간에서 일상의 삶을 영위하며 미래에 출현할 사회를 행동으로 예시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명백한 방향을 설정하지는 않고 발언과 투표로 의사결정을 전개했고, ‘한걸음 전진-한 걸음 후퇴’라는 참여의 평등화 원리를 지지했다. 총회에서 의사소통은 ‘open mic’(확성기 열기)와 ‘mic check’(확성기 끄기) 구호에 따라 발언을 반복 합창하는 ‘민중 확성기’(people's mic)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처음에는 뉴욕시가 공원에서 확성기 사용을 금지한 탓에 비롯된 것이었지만, 정치적 의사결정에 보완적인 분할을 통해서 ‘타자를 타자로’ 인정하는 다원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적 카리스마 형식의 담화를 제공했다(Garces, 2013; Jones, 2014, 159). 그러나 오쿠파이 캠프에서 표방한 ‘99%’는 삶의 현실태와 직접민주정적 절차에서 전혀 동종적이지 않았다. 인종과 종족, 계급과 성별에 따라 견해는 충돌했고, 가장 큰 약점은 만장일치(95% 이상) 합의를 목표로 삼았기에 누구든 투표에 영향을 끼치고 의사진행 과정을 뒤흔들 수 있었기에 소집단 회의와 달리 전체총회는 의사결정에 난관을 거듭했다.

점거공간에는 윤리적 담화와 투쟁의 삶이 공존했다. 참여자들은 상호교육을 제공하며 새로운 능력 발휘

6) 런던 오쿠파이의 경우에는 핀즈베리(Finsbury) 공원광장 잔디밭에서 삼바밴드가 카니발적 리듬으로 즐거움을 선사했고 점거자들도 노래하고 춤추며, 사회생활의 은밀하고 숨겨진 측면과 연결된 즐거움과 욕망을 표출하는 파열의 순간을 제공했다.

를 자극했다.7) 수십개의 작업단이 숙식용 도구를 마련하고 시위활동에 사용할 구호판을 손수 만들고, 먹고 난 피자 박스는 예술가의 캔버스로 사용하는 등 모든 것을 말하고 듣는 권리(parrhēsia)가 행사되는 열린 공간이 창조되었다(Eagan, 2014; Happe, 2015, 219). 일상생활 자체가 숙련기술, 경험 및 항의와 논쟁하는 행동으로 움직이고 개인의 창의성을 실현하는 모습을 갖추는 궤적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후기 자본주의에서 포스트 정치의 양상을 드러낸다.

일상적인 것에서 특별한 것으로 그리고 다시 일상적인 것으로 되돌아가는 가교에 관해서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Auvero, 2004),

오큐파이에서 일상은 사람들의 행동 동기로 중요할 뿐 아니라 행동주의 실천 자체의 통합적 부분이다. 사회운동의 추동에서 일상적 행동주의는 중심 요소이며 또한 행동주의자 공간의 지속적인 생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Chatterton and Pickerill, 2010). 파열의 순간과 일상생활을 같은 과정의 내부적 요소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후기 자본주의 시대 커뮤니티를 자크 랑시에르는 다음과 같이 설명 했다.

해방의 미래는 평등주의 원리를 실행하는 남녀의 자유로운 결합으로 만들어진 공통 공간의 자율적 성장을 의미 한다(Rancière, 2010, 176).

요점은 ‘자유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는 공간’에 있다. 버틀러가 재현 공간에서 수행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을 성적 정체성 논의와 수행성의 정치이론에서 사회적 재현 문제로 재전유한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젠더 정치에서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은 고정되지 않은 우연적인 것, 곧 자유로운 결합이고 오직 수행적 관계성의 산물인 ‘퀴어’(queer)에 불과할 뿐이다(Bulter, 1990, 315). 이 개념은 다양하게 전유되어 정체성의 정치로서 퀴어 정치, 퀴어 정치가 수행되는 퀴어 수행성 공간 곧 퀴어 공간(queer space)을 상징할 계기를 제공한다(Bourcier, 2006, 131; Halley, 2011). 필자는 점거 집회 공간을 퀴어 이론을 전유하여 퀴어 공간으로 이해를 모색한다. 많은 논쟁의 대상인 퀴어 이론을 공간이론으로 전유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종, 이민, 국가가 뒤엎힌 공간에서 끊임없이 가변적인 공간규모와 정체성 담론이 교차하고 분절되는 방식을 드러낸 결과 실제로는 고정된 정체성이란 없고 오직 자기비판하며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과정만 존재할 뿐이라는 공간에 관한 이해와 연관이 있다(Romanow, 2008).

4. 공간 행동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퀴어 공간은 온갖 정체성 담론이 교차하고 분절되는 공간이다. 퀴어 이론에서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이란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오직 관계성의 산물이듯 퀴어 공간으로서 점거공간도 그렇게 전유가능하다. 점거공간에서는 참여자의 기존의 사회적 형식과 관계가 전복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가져올 파열의 규모도 커진다. 그러나 의문도 생긴다. 고정된 정체성이란 없고 오로지 자기비판하며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과정만 있을 뿐이라면, 그것이 남성(자본, 중심)이 여성(노동, 로컬)의 구분을 문화구성물로만 받아들여 사회모순의 존재를 모호하거나 부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지 않은가? 탈근대 페미니즘이 비록 소수자에 관심을 기울이며 젠더 개념의 확장에 공헌했지만, 젠더 내부에 인종, 계급, 언어, 민족의 다양

7) 심지어 런던 오큐파이는 텐트시티(Tent City) 대학을 운영했다.

한 입장과 모순을 드러내는데 실패한 것이 점거공간에서도 발생하지나 않을까? 이런 불확정성은 ‘공통체’ 개념에도 적용가능하다. 그것 역시 장소나 공간 내부에서 작동하는 차별과 갈등과 모순의 기제들을 모호하게 만들 가능성은 없는가? 곧 자본과 노동의 이분법을 해체시켜 계급문제를 증발시키고 종족이나 민족 갈등을 소거시키지는 않을까?(Adair, 2005, 600; Penny, 2014; Rohy, 2015) 특히 한 손에는 합리주의 다른 손에는 신비적 기호로 모호하게 치장한 문화공간에서 우애(fraternity)와 자율적 공생(conviviality) 및 교양(civility)의 이름으로 모여들어 유쾌하게 교류한 걸모습만 강조할 우려가 있지는 않을까? 다시 말하면 바로 그런 걸모습만 보고 자유와 평등에 관한 사회적 미래전망에 공통성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내포하지는 않을까?

무한경쟁으로 치달리는 시대 사회운동이 위축되었다는 지표는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주의에서 전자우편과 페이스북을 읽고 온라인 청원에 서명하는 행위로 한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다. 인터넷은 사람 관계의 본질에서 의사소통을 개인주의화로 추상화시키거나 제거시켜 시민참여를 비롯한 민주정치의 잠재력을 위축시켰다(Mascheroni, 2012). 주코티 파크 점거공간에서 활동가들의 일상적 상호접촉은, 총회에서 거의 제례의식적(ritual) 재현을 거듭한 민중확성기로 의견을 전달하고 찬성과 반대 등의 수신호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강화되면서 집단정체성을 강화시켰다. 흔히 오큐파이 운동이 전자정보소통을 확산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오큐파이 참여자들은 인터넷의 전자 의사소통이 직접 참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 물론 공간점거 운동이 조율자 역할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관련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블로그에 견해를 올린 이들의 후기 산업주의 전자사회 연결망에 크게 의존한 것은 사실이다(Wand et al., 2013). 그러나 점거 참여자들은 인터넷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청원서에 서명으로 참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느슨한 행동주의’(slacktivism)라고 비판했다. 점거자들은 전자매체를 비계서제적이고 평등주의적 참여 특히 활동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경우에만 사용했다. 공간 점거와 시위 경험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로 돌아가 점거를 조직하거나 참여했고, 주코티 파크 총회 조직자들은 다른 도시의 점거공간에 자문단을 파견하여 공간 형성에 관한 지식을 제공했다(Hammond, 2013, 507-508).

이런 측면에서 99%를 대표(representative)하려던 오큐파이는 실제로는 점거 공간 행위자들의 수행성을 재현(representation)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들도 차이를 내포한 99%를 표방한 소수의 대표에 불과하기에 반-대의제도 또는 포스트 대의제도적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생겨난다. 그러나 대의제도란 것도 끊임없이 가변적이고 다원적이라는 전제에서 오큐파이가 기존의 재현 곧 정당과 선거제도에 바탕을 둔 대의제도의 실패에 따라 새로운 재현 곧 새로운 형식의 급진적 대표제도(Dean, 2014, 387)를 모색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지금 대의민주주의는 정치적 당파 형식의 전문가의 경영에 맡겨진 채로 사회적 상호적대감을 강화시키는데 몰두하는 형편이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자크 데리다는 이미 그것의 극단성을 평가한 바 있다.

무엇으로 중립화와 탈정치화의 징후를 드러낼 것인가? 진실에서 그것은 하나의 과잉 정치화 또는 극도의 정치화이다(Derrida, 1994, 129).

이 말은 행동이 비-의도적(non-intentional)일 때 그것이 다름 아닌 정치적 행동이라는 말이다. 오큐파이 참여자들이 자본주의와 대의제도라는 대타자(大他者)로부터 급진적 분리를 시도한 배경은, 그것의 중심에서 환상을 확인하고, 급진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현상유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때문이다(Szolucha, 2015, 69). 그러나 이들은 사회구조를 정확히 묘사하여 설명하기 보다는 반-헤게모니적 잠재력과 능력들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면 일상에서 포섭과 저항, 차이와 차별 등 국가 규

범 비판은 그것의 전면 폐기가 목표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비판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기반을 문제 삼는 것이기에 자신의 존립을 설명하는 능력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국가 규범에 대항하는 그 순간 역시 하나의 권력 가운데 존재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그 한계는 결코 해소할 수 없다. 이 때 한 한 장소나 공간에 주어진 것, 곧 점거공간에 주어진 것은 국가규범을 비틀고 왜곡시키는 행위로서 수행적 모순(performative contradiction)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국가규범이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가로막는다면 모순을 수행하며 횡단해야 한다(Butler and Spivak, 2008). 그것은 국가규범이 미리 설정하여 요구하는 ‘진리의 정치’(the politics of truth)에 불복종을 감행하는 것이다(Butler, 2004, 72-74). 그러나 그것이 국가규범에 완전종속이나 완전해방을 묘사하는 재현의 이론틀로서 제시되지는 않는다.

이것을 버틀러가 한 정체성으로서의 젠더를 신체의 표면에 보여지는 기호나 담론 도구로서 꾸며낸 수행적 행위들의 반복으로서 파악한 것과 연관시켜 이해가능하다.

행위, 몸짓, 욕망은 내적인 핵심이나 실체의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그 효과는 원인으로서 구성 원리를 암시하되 결코 폭로하지는 않는, 부재를 의미화 하는 놀이를 통해서 신체의 표면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 제스처, 행동들은 수행적이다. “본질이나 정체성 등이란 단지 육체적 기호들이나 여러 담론 도구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된, 꾸며낸 구조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젠더화된 육체가 수행적이라는 사실은 그 육체가 자신의 실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로부터 분리된 어떤 존재론적 지위도 갖지 못함을 시사한다(Butler, 1990, 341).

이와 같은 논의는 재현과 표현 공간, 재현되는 것과 재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끈다. 현재 국가와 시민사회가 사회구성원의 욕망과 의지를 대표(representation)하는데 실패하면서 ‘재현’ 문제가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의 재현이 대표되는 양상에만 주목하여 문화나 (영상)언어를 정치나 경제의 파생물 혹은 심미적 탁월함을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삶의 특별한 방식 안에서 물질적 생산, 상징 생산, 텍스트 생산에 주목하고 대표되지 않는 것을 ‘표현’(expression)하는 방식에 관심이 커졌다. 이것은 점거 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 거기서 우리는 유동하는 주체, 내면과 외면에서 복수의 표현을 제기하는 주체가 사회적 규범의 주체로서는 합리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집단의 주체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자들이 상충하면서 표현하는 욕망과 쾌락, 이미지와 소비(물질, 기억, 상상)의 ‘차이’ 곧 그것이 발생하는 다수의 길들에 관심을 가져 볼 수 있다. 우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카페 교회라는 얼핏보면 균일성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공간에서조차도 수많은 차이를 가진 비-재현적 행위들이 수행되는 것을 목격한다(양민철·김성률, 2016). 공간에 쫓겨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작업은 그 과정에서 발현되는 행위들의 비-재현적 수행성을 이해하기를 요청한다.

비-재현되는 수행성에 관심은 삶의 특별한 방식 안에서 물질적 생산, 상징 생산, 텍스트 생산에 주목하고 그 과정에서 대표되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관심이 증가한 것과 연관있다(Thrift, 2008). 만일 점거공간 생성과 연관시켜 볼 때 오직 수많은 재현만 있다면 조직적 획일성이 활력과 상상력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들의 조직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와 달리 차이만 있고 재현불가능한 비-재현적 행위수행성만 있다면 수없이 파편화된 개별 ‘행위’와 ‘장소’만 있게 되고 공간의 생성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이었다. 만일 비-재현만 강조되었다면 목표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극단적인 개별 행위만 존재하는 ‘비-공간’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우리는 점거공간에서 행위는 가능하면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일 길을 요청받게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른다. 주코티 파크 점거 공간에서 시위대가 기존 질서를 거부하며 현실을 고발하고 99%를 대변한다는 무수한 구호와 슬로건을 제시하였지만 의사결정 과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기는 견제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도적인 견해가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주도

권을 장악했다.

이것은 점거자들이 공적 공간에서 ‘공적’인 것의 의미를 확장시키기를 모색했고 시당국은 이를 제약하고 점거를 봉기시키고자 노력했던 상황의 산물이다. 그 결과 점거자와 지지자들이 사실상 소유한 공간의 방어에 더욱 적극 발 벗고 나서는 대결 양상이 전개되었다.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또한 천막촌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오큐파이 공간을 위협했다. 그러나 법규를 위반한 집단적 점거에 참여는 일종의 주체적 권력감을 제공했고 마음이 바뀌는 경험을 겪었다. 행동에 참여는 위험했지만 평등주의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금지와 억압의 대상이 되면서 신념을 위한 행위가 정상 규칙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자각을 제공했다(Hammond, 2013, 512). 공간 장악이나 점거는 점거자들의 활동계획과 연관되어 있다. 어느 경우든 점거 행위는 경찰이나 공권력의 작용과 행동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경찰은 2011년 11월 15일 뉴욕 월가 오큐파이의 중심 점거공간이던 주코티 파크를 한 밤중에 기습하여 리포터를 비롯한 합법적 관찰자들을 내몰고 약 200명의 점거자를 체포하여 수천권의 책과 컴퓨터를 비롯한 개인장비와 공동장비를 파괴했다. 11월 17일 뉴욕 유니온 광장에 모인 4천여명의 학생들은 5가 중간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의 봉쇄에 직면하여 스크럼을 짜고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들은 ‘우리는 99%’라는 구호를 외치며 도로변을 걷고, 달리며, 하이파이브 하고 자동차 이용객들과 서로 지지표시를 나누며 함께 함성을 올리는 위법과 준법 사이에서 카니발적 시위 놀이를 전개했다(Schrader and Wachmuth, 2012, 245).

시위자들은 재현과 비재현이 교차하는 행위수행성을 끊임없이 표현했다. 그런 수행적 행위와 작업들은 억압받은 몸의 (해방)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물론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시위놀이에 놀라서 겁먹고 불편해하며, 일상의 사회적 재생산의 순환 리듬이 관성적으로 전개되는 더 온건한 시간을 원한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파열의 순간을 원하는 점거자와 일상의 공간적 실천을 모색한 점거자들 사이의 긴장 관계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공간점거가 가지는 일상성에서 비롯된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큐파이 공간과 민주주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의 이름을 표방하는 상징화의 내적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비록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재현 가능성에 열린 자세로 도전을 요구한다. 그것이 새로운 재현 가능성을 열은 것은 과격한 놀이를 넘어 체류권이 도전받는 대결의 공간(space of confrontation) 이던 데 있다. 자크 랑시에르가 말한 ‘감각의 분할’이 공간 분할을 초래하고 공안(police)의 논리와 평등주의 논리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Rancière, 2000, 12).

오큐파이가 직면했던 긴장과 난관은 그것이 막다른 궁지에 도달했다는 말은 아니다. 도리어 거기서 지배적인 상징적 구성이 정치영역의 현실 곧 정치적 현실의 긍정적인 행동양식에서 배제된 한계를 드러낸다. 점거운동은 결핍 곧 지배적인 사회정치적 구조들의 혼란이 초래한 결핍과, 배제의 상기자로서 결핍된 주체로 재출현한다. 그 주체는 항상 지배적 담론, 권력균형 그리고 언어 그 자체의 구조와 자격에서 소외된다. 결핍은 모든 시기 사회구조에 불안전하고 탈구(dislocation)될 때에 재출현하고 그것은 사회변화를 추동 한다. 만일 그것의 재출현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민중들의 미래에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오큐파이 점거에서 비-의도적 정치행동이 가져온 수행적 행동주의는 민주적이며 급진적인 공간을 생성하면서 파열을 준비하는데 결핍된 요소를 상기시키고 차이를 넘어서는 연대의 가능성을 내보였다. 그 결과 수행적 공간점거를 넘어 추상적 의미를 확보했기에 언제든지 새로운 전술 형식으로 재출현이 가능하다.

5. 점거 공간의 유동적 재구성

이 연구는 공간점거를 이론적으로 해명할 방안을 모색했다. 그 출발점은 2008년 서울 광장에서 열린 촛불공간과 현재의 서울 광화문 광장 공간 점거를 이해하고 성찰을 공유할 필요성의 자각과 연관성 있

다. 이것을 더욱 자극한 것은 2011년 뉴욕월가 오큐파이 공간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성찰들이다. 먼저 촛불공간은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에서 실마리를 찾으려 하면서 점거 공간에서 활동한 구성원의 다양한 속성을 중심에 두고 그 공간에 미셸 푸코와 르페브라의 관점이 경합하는 헤테로피아 공간으로 잠정적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행위자들의 재현 및 비재현적 행위들에 주목하고 이를 주디스 버틀러가 전유한 수행성 개념으로 포섭하여 점거공간의 퀴어정치 공간화에 주목했다. 그러나 퀴어공간 논의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먼저 남성(자본, 중심)과 여성(노동, 주변)의 구분을 문화적 구성물로만 받아들 이면서 사회모순의 존재를 모호하게 받아들거나 심지어 부정하게 만든다. 나아가 이런 불확정성이 공간 내부에서 작동하는 차별과 모순의 기제 곧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해체시키고 계급문제나 민족 문제의 갈등을 증발시키거나 소거시켜 버릴 우려가 있다.

공간 점거에 참여는 일종의 도전하는 주체로서 권력감을 제공하고 마음이 바뀌는 경험을 겪고, 신념을 위한 행위가 정상 규칙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자각을 제공한다. 점거공간에서 직면하는 중요한 과제는 참여자의 평등주의적 커뮤니티 형성과 민주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문제이다. 오큐파이는 정치적 행동은 현재의 지배체제를 넘어서는 입장, 다른 체제가 낡은 체제의 장소에 도입될 수 있다고 알거나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비-의도적이었다. 그러나 비록 비-의도적 행동이었지만 결정적이고 단호한 행동으로 사회적 적대감을 깊이 정치화 했다. 곧 비-의도적 행동과 가장 광범한 정치적 주장 사이의 설명 불가능한 연계로서 사회정치적 체제 그 자체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동시에 지배적인 사회정치적 구조의 혼란이 가져온 결핍과 배제의 상기자로서 결핍된 주체로 재출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점거행위자는 항상 지배적 담론, 권력균형 그리고 언어 그 자체의 구조와 자격에서 소외될 계기와 부딪치고 가능성과 한계의 검토를 요청 받는다.

참고문헌

- 고길섭, 2008, “공포정치, 촛불항쟁,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는?,” 문화/과학, 55, 130-149.
- 김동환·최영호 역, 2009,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호(Fauconnier, G. and Turner, M., 2002, *The Way We Think: Conceptual Blending and the Mind's Hidden Complexities*, Basic Books).
- 김병화 역, 2015, 마주침의 정치, 이후(Merrifield, A., 2013, *The Politics of the Encounter: Urban Theory and Protest under Planetary Urbanization*,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김영진 역, 1992, 말과 행위, 서광사(Austin, J. L., 1962(1976), *How to do things with words: The William James lectures delivered at Harvard University in 1955*, Oxford University Press).
- 심철호 역, 2009, 지향성: 심리철학 소론, 나남(Searle, J. R., 1983, *Intentionality: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오윤성 역, 2008, 감성의 분할: 미학과 정치, 도서출판 b(Rancière, J., 2000, *Le partage du sensible: esthétique et politique*, la Fabrique).
- 이상길 역, 2014,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Foucault, M., 2009, *Le corps utopiques/Les hétérotopies*, Nouvelles éditions).
- 이현재·문성훈 역, 2011,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 책(Honneth, A., 1996, *The Struggle of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 The MIT Press).
- 임동근·박훈태·박준 역, 2010,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문화과학사(Harvey, D., 2005, *Spaces of Neoliberalism*, Franz Steiner Verlag).
- 임영주 역, 2012, 점령하라, 오토부스(Writers for the 99%, 2012, *Occupying Wall Street: The inside story of an action that changed America*, Chicago, IL: Haymarket).
- 양민철·김성률, 2016, 광장의 교회: 광화문 세월호 광장 천막 카페이야기, 새물결 플러스.
- 양영란 역, 2011, 공간의 생산, 에코 리브르(Lefebvre, H., 1975(2000), *La production de l'espace*, Anthropos).
- 유충현 역, 2012, 봉기: 시와 금융에 관하여, 갈무리(Berardi, F., 2012, *The Uprising: on poetry and finance*, Semiotext).
- 정남영·윤영광 역, 2014, 공통체: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사월의 책(Negri, A. and Hardt, M., 2009, *Commonwealth*, Harvard University Press).
- 정호영 역, 2015, 우리만 모르는 민주주의, 이책(Graeber, D., 2013, *The Democracy Project: a history, a crisis, a movement*, N.Y., Spiegel & Grau).
- 조선일보, 2016년 4월 16일.
- 조현준 역, 2008,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문학동네(Butler, J.,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 조현준 역, 2015, 젠더 허물기, 문학과 지성사(Butler, J., 2004, *Undoing Gender*, Routledge).
- 조효제 역, 2005, 직접행동, 교양인(Carter, A., 2005, *Direct Action and Democracy Today*, Polity Press).
- 주혜연 역, 2008,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Butler, J. and Spivak, G. C., *Who sings the nation-state? language, politics, belonging*)
- 한우리·허철, 2010, “보여주기의 문화정치학: 촛불집회, 퍼포먼스, 수행적 정체성,” 평화연구, 18(2), 41-82.
- 한상연 역, 2014, 반란의 도시, 에이도스(Harvey, D., 2012, *Rebel Cities*, Verso).
- Adair, V. C., 2005, Class Absences: Cutting Class in Feminist Studies, *Feminist Studies*, 31(3),

- 575-603.
- Auyero, J., 2004, When everyday life, routine politics, and protest meet, *Theory and Society*, 33, 417-441.
- Bonono, R., Trans., 2003, *The Urban Revolutio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Lefebvre, H., 1970, *La révolution urbaine*, Gallimard.
- Bourcier, M-H, 2006, *Queer Zones: Politiques des identités sexuelles et des savoirs*, Éd. Amsterdam.
- Butler, J., 1993,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Routledge.
- Butler, J., 1997, *Ex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Routledge.
- Butler, J., 2015, Bodies in alliance and the politics of the street, <http://eipcp.net/transversal/1011/butler/en/print> 접속일자 2015년 10월 26일.
- Butler, J. and Athenaousiou, A., 2013, *Dispossession: the performative in the political*, Routledge.
- Chatterton, P. and Pickerill, J., Everyday activism and transitions towards post-capitalist world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for British Geographers*, 35, 475-490.
- Clark, E., 2004, *History, Theory, Text: historians and the linguistic turn*, Harvard University Press.
- Dean, J., 2014, Occupy Wall Street: forcing division, *Constellations*, 21(3), 382-389.
- Derrida, J., 1994, *Politiques de l'amitié*, Galilée.
- Eagan, J. L., Withholding the red ink: Occupy, Foucault, and the administration of bodies, *Administrative Theory and Praxis*, 36(2), 240-258.
- Fauconnier, G., 1984, *Espaces mentaux: Aspects de la construction du sens dans les langues naturelles*, Paris: Minuit.
- Fauconnier, G. and Sweetser, E.(eds.), 1996, *Spaces, Worlds, and Gramma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oucault, M., 1986, Of Other Spaces, *Diacritics* 6.
- Foucault, M., 1994, *Dits et écrits 1954- 1988 II, 1976-1988*, Gallimard.
- Foucault, M., 1998, Different Spaces, in Faubion, J.(ed.), *Aesthetics: the Essential Works 2*, London: Allen Lane, 175-85.
- Garces, C., 2013, People's mic and the democratic charisma: Occupy Wall Street's frontier assemblies, *Focaal-Journal of Global and Historical Anthropology*, 66, 88-102.
- Glass, M. R. and Rose-Redwood, R.(eds.), 2014, *Performativity, Politics, and the Production of Public Space*, Routledge.
- Graeber, D., 2012, *Inside Occupy*, Frankfurt/M: Campus Verlag.
- Gregson, N. and Rose, G., 2000, Taking Butler elsewhere: performativities, spatialities and subjectiviti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8(4), 433-452.
- Guelf, F. M., 2010, *Die Urbane Revolution: Henri Lefebres philosophie der globaler verstädterung*, transcript,
- Halley, J. E., 2011, *After Sex?: on writing since queer theory*, Duke University Press.
- Happe, K. E., 2015, Parrhēsia, biopolitics, and Occupy, *Philosophy and Rhetoric*, 48(2), 211-223.

- Hammond, J., 2013, The significance of space in Occupy Wall Street, *Interspace: a journal for and about social movements*, 5(2), 499-524.
- Hess, R., 2009, *Henri Lefebvre et la pensée du possible: théorie des moments et construction de la personne*, préface de Gabriel Weigand, Economica.
- Jones, J., 2014, Compensatory division in the Occupy movement, *Rhetoric Review*, 33(2), 148-164.
- Lakoff, G. and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febvre, H., 1980,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II: Fondements d'une sociologie de la quotidienne*, L'Arche.
- Lefebvre, H., 1973(2000), *Espace et politique: Le droit à la ville II*, Anthropos.
- Mascheroni, G., 2012, Online participation: new forms of civic and political engagement or just new opportunities for networked individualism, in Loader B. D. and Mercea, D.(eds.), *Social Media and Democracy: Innovations in participatory politics*, Routledge, 207-223.
- Miller, V., 2006, The unmappable: Vagueness and Spatial Experience, *Space and Culture*, 9(4), 453-67.
- Mitchell, K. and Elwood, S., 2012, Mapping children's politics: The promise of articulation and the limits of nonrepresentational theor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0(5), 788-804.
- Mitchell, W. J. T., Harcourt, B. E. and Taussig, M., 2013, *Occupy: three inquiries in disobedie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ayak, A. and Jeffrey, A., 2011, *Geographycal thought: An introduction to ideas in human geography*, Harlow: Pearson.
- Penny, J., 2014, *After Queer Theory: the limits of sexual politics*, Pluto Press.
- Poletta, F. and Kretschmer, K., 2013, Free spaces, in Snow, D. A., Porta, D. D., Klandermans, B. and McAda,m, D.(eds.), *The Wiley-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Wiley-Blackwell.
- Rancière, J., 2010, Communists without communism in C. Douzinas, C. and S. Žizek, S.(eds.), *The idea of Communism*, Verso.
- Rehmann, J., 2013, Occupy Wall Street and the question of hegemony: a Gramscian analysis, *Socialism and Democracy*, 27(1), 1-18.
- Rohy, V., 2015, *Lost causes: narrative, etiology, and queer theory*, Oxford U. P.
- Romanow, R. F., 2008, *Postcolonial Body in Queer Space and Time*, Cambridge Scholar Publishing.
- Schrader, S. and Wachmuth, D., 2012, Reflections on Occupy Wall Street: the state and space, *City*, 16(1-2), 243-248.
- Spiegel, G. M., 2005, *Practicing History: new directions in historical writing after the linguistic turn*, Routledge.
- Szolucha, A., 2015, Real politics in occupy: Transcending the rules of the day, *Globalizations*, 12(1), 66-82.
- Thrift, N., 2007, *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olitics, Affect*, Routledge.

- Wang, C-J, Wang, P-P and Jonathan, J. H., 2013, Discussing Occupy Wall Street on twitter: longitudinal network analysis of equality, emotion, and stability of public discuss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6(9), 679-685.
- Warf, B. and Arias, S., 2009, *The Spatial Tur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Routledge.
- Whitehouse, B., 2009, *Mapping Mental Spaces*, 2 vols, Createspace.

제3부

희망의 도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도시 인클로저와 거주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

김용창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투기적 도시화,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권>

신현방 |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지리환경학과 교수

<젠더 차별을 넘어 희망의 도시 상상하기>

정현주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도시 인클로저와 거주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1. 인클로저와 공유화의 이중운동으로서 도시 이해

자본주의 시스템은 모든 재산소유(property)으로부터 노동자의 완전한 분리를 전제한다. 일단 자본주의 생산이 발을 내딛자마자 이러한 분리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된 규모로 이 분리를 재생산한다(Marx, 1954(1989), 668(899)).

The Mores

Each little tyrant with his little sign
Shows where man claims earth glows no more divine
On paths to freedom and to childhood dear
A board sticks up its notice "no road here"
By John Clare (1793-1864)

황무지

작은 폭군들 각자가 그의 작은 표지로 인간이 토지를
점유하는 곳은 더 이상 성스럽게 빛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유와 소중한 유년시절로 가는 길 위에
판자 위로 "여긴 길 없음"이란 통지가 붙어있다.
(Johanne Clare; 1793~1864, 번역: 장성현, 2013)

땅에 경계를 표시하고 울타리를 치면서 관습적으로 그 땅을 사용하던 사람들을 몰아내는 인클로저(enclosure) 과정은 얼핏 시골마을에서 이루어진 작은 과정처럼 보였지만 자본주의의와 거대 산업도시의 탄생을 이끈 동력이었다. 마르크스는 땅으로부터 이러한 분리와 지속적인 확대 재생산을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지속에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영국 시인 존 클레어(Johanne Clare; 1793~1864)는 나폴레옹 군대와 힘든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이루어진 토지로부터 축출과정 때문에 고향마을 헬프스톤(Helpston)이 해체되는 것을 우울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가축에게 풀을 뜯게 할 공유지와 삶의 거처를 빼앗아 고향을 뿔뿔이 떠나게 만든 인클로저 운동에 대해 독설에 가까운 항변과 강력한 저항시를 남긴다. 그에게 인클로저는 넉넉하지는 않아도 하루 세끼 먹으면서 나름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던 삶의 터전을 강탈하고 노예와 속박의 삶을 강요한 찬탈자이자 인간에 대한 배신자였다(오호진, 2015).

첨단 정보통신과 글로벌 공간통합의 시대인 오늘날, 흘러간 시대의 유물인 것 같은 인클로저라는 관점으로 현대의 도시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인클로저는 과거처럼 농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도시를 비롯한 생활공간 전역에서 존 클레어가 읊었던 것처럼 생존과 거주 위기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1970년대 중반의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가 출현하였다. 포디즘 시대의 번영기를 지나면서 수평적 도시팽창의 한계와 산업도시로서 위상을 상실한 도시공간은 그 활력을 다시 찾기 위한 동력이 필요했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글로벌 자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끊임없이 집약적 도시공간으로 재조직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적 전략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현대적 재생산을 위한 대상 영역이자 공략대상으로서 도시 공간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Brenner and Theodore, 2002).

자본은 이윤창출과 축적을 멈추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이해관계 안으로 포섭해야 할 대상과 영역을 끊임없이 바꾸고 있으며, 이것을 일컬어 자본의 혁신성이자 창조적 파괴라고 한다. 물론 그 과정은 IMF 금융위기나 일반적인 불황국면이 보여주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대가와 고통을 치러야 한다. 자본의 이

러한 포섭과정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작동하지 않던 영역과 대상으로 그 이해관계를 새로이 펼치고, 이미 자리 잡은 이해관계는 더욱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미 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가장 많이 작동하고 있는 도시공간이 다시금 자본의 중심적인 활동무대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이 활력을 찾으려는 쇠퇴한 산업도시는 물론, 글로벌 공간통합 시대에서 도시공간 자체가 자본일반에게 중요한 사업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종래의 공간은 사회경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틀이나 하부구조라는 인식, 일종의 ‘담는 그릇’이라는 사고 강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품으로서 공간의 생산, 특히 거대공간개발사업(mega project)은 이윤창출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대상이 되었고, 새로운 글로벌 공간네트워크라는 틀의 구축에서 도시시스템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본에게 도시 공간의 생산은 일거양득을 안기는 영역인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거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종래의 기업대출과 같은 조달방식으로는 어렵게 되었으며, 이른바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 방식을 활용하면서 도시공간의 생산은 금융자본주의 발달의 산물이자 금융상품의 혁신을 이끄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정책들이 계속해서 도시개발 지형을 전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도시공간의 생산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재생산하는 인큐베이터이자 생성적 거점(generative nodes)으로 기능하고 있다(Peck et al., 2013).

이제 도시공간은 21세기 들어서 더욱 더 중요한 자본의 포섭대상으로서 떠올랐으며, 신자유주의 도시화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도시 인클로저를 활용하고 있다. 과거 농촌지역의 인클로저를 통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탄생과 산업도시의 발전을 이끈 것처럼 오늘날 자본주의는 도시 인클로저를 통해 과거 시초(원시적)축적기(primitive accumulation)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탈취를 통한 자본 축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국가는 그 명칭과는 달리 자유방임적 탈규제가 아니라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시장규범을 다시 만들고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개별 자본 스스로 발굴하지 못하거나 정당화 명분을 쌓지 못하는 영역과 대상에 상품논리와 시장논리, 국가를 등에 업은 시장화라는 모순 논리가 관철하도록 만든다(Birch and Siemiatycki, 2016). 국가와 시장의 얽히고설킨 거미줄이 도시공간은 물론, 삶의 모든 영역에 드리워지고, 인클로저가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도시공간의 생산에서 인클로저가 만연한다는 것은 국가와 시장 모두로부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삶의 영역도 배제당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인클로저는 기존의 공유자원(communs)을 배타적인 사적소유대상으로 전환시키면서 그 자원에 대한 공유권(입회권, common right)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인클로저는 이러한 전통적 의미에 더해 주거의 상실처럼 기존에 향유하던 이해관계나 자원들을 탈취(dispossession)하여 재배치하는 것, 자본주의적 합리성으로 길들여진 행위주체를 만듦으로써 사람관계, 장소, 일상생활영역에서 자본주의적 상품화와 경쟁의 논리를 당연하게 여기게 하여 칸막이로 가두는 것 등을 포괄한다(Jeffrey et al., 2012; Hodkinson, 2012).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 도시화를 인클로저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나오는 것은 인클로저와 자본 축적 사이 관계를 다시 주목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현대 자본주의 발전경로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에 상응하여 공간구성방식(spatial formations)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이러한 이론적 규명을 토대로 대안적 공간실천 전략 또는 플랫폼을 구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적 평창은 새로운 형태의 인클로저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은 공유화(communing)로 모색하는 인클로저와 공유화 이중운동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이해하는 것이다(Sevilla-Buitrago, 2015; Vasudevan, 2015; De Angelis 2007).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와 새로운 의미의 인클로저가 잘 드러나는 두 대상을 사례로 신자유주의 도시화를 인클로저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하나는 도시공간을 새로운 공간상품 영역으로 포섭하는 도시재생으로서 토지재산권의 재편성과 국가권력을 동원한 법적 폭력, 시장효율성 기반으로 공익담론의 변경을 통해

거처와 생활터전의 상실을 수반한다. 다른 하나는 공간개발 및 주택의 생산에서 지배적인 수단으로 떠오른 금융의 증권화가 가져온 주택압류와 주거위기이다. 이는 과거의 저축과 미래의 노동성과를 모두 빼앗는 부채를 평생 짊어지는 삶과 이른바 탈취기반의 자원 재배분을 동반하며, 도시에서 기본 거주 자체를 상실케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삶의 터전과 주거위기의 대안으로는 거주자원의 공유화를 위한 정책적 장치로서 토지주택은행 시스템을 제안한다.

2. 신자유주의 도시 인클로저

1) 현대 인클로저의 의미

전통적인 의미의 인클로저는 영국에서 15세기 이후 19세기에 걸쳐 공유지, 미개간지, 황무지, 개방경지, 교회 토지 등에 울타리를 치고 경계표시를 하여 사유지로 전환시킴으로써 경작농민들을 내쫓은 과정을 말한다. 인클로저에서 일차적으로 이득을 본 집단은 젠트리(향신; 郷紳, gentry)라 불리는 지주계층이었으며, 이들은 후에 의회 등으로 진출하고 상업·금융업과 관계를 강화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성장하였다.

인클로저는 크게 두 번에 걸쳐 일어났는데,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은 15세기 말에서 17세기 중반까지의 시기로서 곡물가격 보다 양모가격이 급등하자 봉건영주들이 경작지를 목장지로 전환시키면서 일어났고, 비합법적 과정을 통해 사유화되었다. 두 번째는 인구증가에 따라 식량수요가 급증하자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8세기~19세기에 걸쳐 입법과정(parliamentary enclosure)을 통해 이루어졌다. 1차를 민간 주도적 인클로저라고 한다면 2차는 국가의 정책개입을 통한 인클로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클로저, 특히 2차 인클로저를 통해 개방지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과 토지의 사유재산 제도 확립, 토지병합과 대토지소유, 자본가적 농업경영,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근대적 임금노동자 창출, 산업도시 형성을 촉진하였다. 이른바 자본주의 시초 축적의 기초를 이루었다(김용창, 2015; Wordie, 1983; 田代正一, 2007).

자본주의 발전에서 인클로저가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 탄생과 발전,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형성과 지속에서 비경제적 관계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즉 임노동관계의 형성과 지속에 기초한 자본주의 가치 및 잉여가치법칙 전개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Marx, 1954). 주지하다시피 생산수단으로부터 사람의 분리, 즉 노동력 이외에는 달리 생존수단이 없는 인구를 만드는 야수적 과정으로서 시초축적이 자본주의 발전의 전제조건이자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다. 사회나 개인에게 가장 냉혹한 변혁으로 표현하는 이 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대상은 무엇보다도 토지 인클로저였다. 토지 인클로저는 다양한 시초축적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였지만 사유재산권의 법적 정착과 공간편성에서 핵심이었다. 특히 2차 인클로저 전개 과정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탈취 형식을 취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공유지에 대해 전통적인 권리를 갖고 있던 농민들이 접근권을 상실함으로써 임노동 관계의 발전과 산업도시 형성을 가져온 것이다(Hodkinson, 2012; Harvey 2003; Perelman, 2000).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인클로저를 자연을 비롯한 새로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적 상품화와 도시 공간의 재편성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용어사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의미를 다시 정립할 수 있다. 과거와 가장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 전 영역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 발달하고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된 이후에 합법적 장치를 가장하여 새로운 사유화와 상품화, 재산권의 재편성을 꾀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정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사적편익이나 사적자본을 위해 국가기구를 이용하여 기존의 공간이용 이해

관계를 새롭게 사유화하거나 재편성 하는 과정, 공유재산이나 사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에서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도를 도입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확립하는 과정, 공간이용의 공공성이나 공공영역을 사적 이해관계로 전환하는 과정 등이 그것이다(김용창, 2015).

하비(Harvey)가 탈취를 통한 축적체제라고 부르면서 구체적인 작동방식으로 제시한 네 가지 방식은 현대 인클로저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① 새로운 이윤창출영역을 만들기 위한 민영화와 상품화, ② 인수합병, 파생금융상품, 주식상장 등 자산가치의 재배분과 잠식을 위한 금융화, ③ 경제적 부를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전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위기관리와 조작, ④ 복지국가 시스템을 개혁하고 상위계급에서 하위계급으로의 부의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분배 등이 그것이다(Harvey, 2003).

이러한 인클로저 메커니즘은 대자본의 저개발국 토지수탈이나 낙후 도시지역의 강제수용과 같은 고전적인 토지영역은 물론, 물, 자연경관, 에너지, 공적연금, 교육, 의료, 주택, 가사영역, 교통, 공개광장, 공원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작동하고 있으며, 이들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율도시운동이나 협동조합 운동처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공유화 운동도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도시화가 블록, 거리, 골목, 마을, 도심부, 도시, 국가, 세계 등 공간규모와 단위를 유연하게 재구성하거나 다시 짜기(re-scaling)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인클로저 역시 다양한 공간단위와 규모에서 울타리치기(new urban enclosures)로 나타나고 있다(Brenner, 2004; Hodkinson and Essen, 2015).

2) 도시 인클로저

신자유주의는 상투적인 자유경쟁시장 논리라는 만병통치 주문 말고도 국가의 적절한 후퇴와 개입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과 담론을 만들면서 일상영역과 도시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소자(Soja)는 공적·사적 공간에서 인클로저 현상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거대 쇼핑공간의 생산에서 레이저와이어 쓰레기통에 이르기까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통제와 공간적 통제를 위한 세세한 기법들(microtechnologies)이 일상생활에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인클로저의 기법들이 더욱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oja, 2010). 신자유주의의 위대한 점은 탈취와 인클로저를 합법적이며, 자연스런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결과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다.

도시공간이 이렇게 자본의 공략대상이자 인클로저의 주 무대가 된 것은 도시공간 자체가 자본집약적이고 활동밀도가 높은 관계로 어느 누구의 개별적인 노력이나 투자가 아니라 집단적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재화, 즉 공유자원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일컬어 도시재화(urban goods)라고 부르기도 하며, 도시는 공유자원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도시화는 공유자원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특정 이해집단이나 자본분파들이 이들 공유자원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는 갈등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Sheila and laione, 2016; Borch and Kornberger, 2015; Harvey, 2012).

앞서 말한 것처럼 도시 인클로저는 산업자본주의의 토대를 제공한 공유지의 역사적 인클로저 모델에 기초하여 현대의 도시 공간재구조화에 확대 적용한 개념이다. 마르크스와 전통적 해석에서 인클로저는 자본주의적 포섭(subsumption)의 구체적 형태이자 작동기제로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영역들을 자본주의적 이해관계 영역으로 흡수·통합하고, 지속적 자본축적을 위한 사회적 제도들을 형성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클로저의 현대적 쟁점은 도시 인클로저가 자본주의의 어떠한 영역을 새로이 포섭하여 축적양식을 어떻게 재구조화 또는 지속시키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인클로저와 저항전략으로서 공유화는 배제와 소외, 폭력, 타자 만들기의 현대적 과정을 공간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개념이며, 동시에 대안적 실천전략을 구상·실행하기 위한 정책도구이기도 하다

(Sevilla-Buitrago, 2015; Jeffrey et al., 2012).

이러한 시초축적과 자본축적, 인클로저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전통적인 해석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전제조건을 탄생시킨 한번뿐인 빅뱅이라는 역사적 과정으로 해석하며, 레닌이 대표적이다. 다른 해석은 로자 룩셈부르크 관점의 해석으로서 과거에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성숙자본주의에서도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즉 마르크스의 시초축적 개념은 자본주의에서 일종의 선형성을 갖는 것이며, 시공간상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부를 축적하는 지속적 과정으로 본다. 이처럼 시초축적과 인클로저에 대한 전통적 해석과 단절하고 새로운 해석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아나키스트 집단인 「한밤의 쪽지연대」(Midnight Notes Collective)이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인클로저를 촉발하고 있으며, 단지 새로운 자본축적 출구를 찾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축적과정 자체의 광범위한 재조직화를 이루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인클로저는 고전적인 토지수탈에서부터 인간정서, 비물질적 속성의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러한 관점들은 인클로저의 재출현을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려는 관점과 자본주의에 본래적인 항구적 특징으로 해석하려는 관점으로 다시 나뉘고 있다(Jeffrey et al., 2012; Vasudevan et al., 2008; De Angelis, 2007; Harvey, 2003; Midnight Notes Collective, 1990).

전통적 해석을 벗어나면 인클로저의 구체적 대상 영역은 지역의 비경제적 기구와 제도들이 시장의 작동과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작동의 공간단위도 식민지 토지강탈(usurpation)과 글로벌 공유자원 잠식, 자본주의 변경지역에서 나타나는 탈취에서부터 도시계획과 건축과정의 인클로저, 신체적 공간소의 활동까지 다양한 스케일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개과정 상의 특징을 인클로저의 다양한 역사적 체제(historical regimes of enclosure)로도 일컫는다(Sevilla-Buitrago, 2015; Vasudevan et al., 2008).

오늘날에도 인클로저는 자본주의 팽창 과정으로서 공간 및 비공간 영역 모두에서 늘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 인클로저는 민간주도의 도시 공간 배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발금융의 증권화 및 초국적화, 민간부동산주도 도시재생 전략처럼 자본축적을 위한 장소, 공간기반 가치증식의 걸림돌들을 제거하려는 일련의 정부정책과 개입방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시장효율성 촉진,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장소전쟁'이라는 미명아래 민주적 의사결정을 우회하는 지배엘리트 중심의 도시 거버넌스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Dawson, 2010; Swyngedouw et al., 2002).

이처럼 도시 인클로저는 과거 공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면서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하던 공간과 서비스를 사유화하고, 특정 공간의 기존 사용가치와 공공성을 제거하며, 도시하층계급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축출·배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공간을 생산하려는 다양한 스케일과 방식의 도시 공간 내 유타리치기로 규정할 수 있다. 공간적 차원에서 인클로저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위협당하고 있거나 완전한 자본주의적 관계가 구현되지 않는 공간을 자본축적에 적합하게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신자유주의 도시성(neoliberal urbanism)의 창출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 재산과 자원에 대한 권리관계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사유화(privatisation), 접근성과 자원배분변동을 의미하는 탈취(dispossession) 및 영토탈환식의 장악과 개발(revancheist), 신자유주의적 합리성과 자본주의적으로 길들여진 주체를 형성하는 자본주의적 주체화과정(capitalist subjectification)이라는 구체적 활동을 통해서 실행된다(김용창, 2015; Mele, 2013; Hodkinson, 2012; Dawson, 2010).

현대 도시에서 탈취에 의한 축적과 인클로저의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발전된 자본주의 단계에 걸맞게 전통적인 토지인클로저를 넘어 다양한 공간 스케일과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중상층으로의 거주민 교체(gentrification)와 공공임대주택의 사유화, 민간투자금융(PFI)을 통한 공공시설 및 서비스 공급, 주거단지의 브랜드재구성(rebranding)을 통한 기존 장소정체성의 제거, 금융위기를 통한 주택압류와 같은

광범위한 탈취와 축출, 과거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한 민간개발자본의 재인식과 새로운 공간의 생산, 인종적·성적 분화 및 배제주의에 토대를 두는 탈취기반 축적, 다양하고 이질적 도심부 공간을 동질적인 사적소유 상업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도시재개발, 저개발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점차 선진국으로도 확산되는 수탈적 토지투자(land grab) 등이 그간의 연구 사례들이다.

그리고 지리학적 관점에서 넓게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강화에 따라 사유재산권 이데올로기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과 사회 사이 관계 설정 변화, 자연의 사유재산화, 자연의 탈자연화에 대한 논의도 인클로저와 탈취기반 축적으로 연결된다. 이때의 인클로저는 과거 시장교환에서 방패가 쳐져 있거나 다양한 이유로 가격을 매기지 않던 대상이 시장의 계산대상이 되고, 양도성과 교환성을 부여받는 과정으로 정의된다(Castree, 2010; Blomley, 2004).

3. 도시재생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인클로저

1) 도시재생과 인클로저

다양한 영역과 공간 스케일에서 기존 자원의 이해관계 및 공유자원(common wealth)을 재구성하는 인클로저는 시초축적기와 현대 도시 인클로저 모두 합법성을 가장한 법제 기반의 토지재산의 재편성과 행위 통제 규범 확립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취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경로를 따른다. 마르크스는 공유지를 몰수하여 사유화하는 토지 인클로저법(Land Enclosure Acts)과 같은 입법과정, 거지와 방랑자를 통제하고 임노동자의 행동문화를 강화하는 규범 확립과정으로 시초축적을 분석하였다. 현대 도시 인클로저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 관련법들의 제·개정이나 해석변경,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이나 담론형성, 경제적 공익개념의 확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Marx, 1954; Amaral, 2015).

시초축적이던 18세기 영국에서 인클로저에 반대하고 공유경제(common-right economy)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광범위한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있었다. 자본-임노동관계의 지속적 재생산을 위해 노동자들이 노동력 이외에 생활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에서 인클로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국익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대로 공유경제 옹호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저술가들이 극단적인 혐오와 본능적 불신을 전파하였으며, 국가경제성장과 진보를 가로막는다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였다. 그리고 공유지 점유자들(commoners)에 대해서는 후진성의 본보기, 추악한 집단, 게으르고 야만적이며 위험한 존재, 미개인, 사악하고 비열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었다(Fairlie, 2009; Neeson, 1993, 25-33). 이러한 인클로저 이데올로기는 사적공용수용에 기초한 현대의 도시 재생정책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본래 인클로저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화 기능을 수행하였다. 토지에서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sanctity and inviolability)과 자본주의 사회의 궁극적인 문화 가치라는 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구현했던 것이다. 탈취와 축출(displacement)은 단지 인클로저의 결과가 아니라 인클로저의 본질이었고, 노동력의 상품화와 사적이윤을 위해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고도의 가치 있는 자산으로 공간의 상품화를 이끌었다. 이 때문에 인클로저는 생산양식에서 ‘중대한 변화’였고, 반면에 기계일반의 채택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내에서 이루어진 혁신일 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Hodkinson, 2012; Perelman, 2000).

현대 도시 인클로저의 결과는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공간의 생산, 도시재생, 불거리를 강조하는 상징 공간의 생산, 고급폐쇄주거지의 생산 등 현상적으로는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지만 구체적 메커니즘은 공용수용법, 토지구획정리법, 주택법 등 법에 근거한 합법적 탈취와 그에 따른 부동산행위 주체

들과 그 이해관계자들에게로 재산의 재집중에 기초한 자본축적 과정이자 공간생산과정이다(Jeffrey et al., 2012; Amaral, 2015).

새로운 형태의 도시 인클로저 역시 원리상 시초축적 과정과 유사한 탈취 효과를 지닌다.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효과의 하나가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물상화(reification) 효과이다. 인클로저의 결과, 일반시민들은 생산수단과 생존조건으로부터 소외를 겪으면서 의지를 갖는 자유주체가 시장의 객체로 바뀌는 것이고, 자유로운 장소향유(place appropriation)를 제지당한다. 이는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기존에 지역주민이 누리고 있던 일상생활 공간의 자원들을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제로부터 기존 또는 전통적 지역사회와 도시장소가 해체된다. 푸코가 말하는 신자유주의 주체화 과정이 도시 인클로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 물상화의 심화는 장소의 상품화를 숨기고, 인위적 질서개편을 티가 나지 않도록 세련된 의미로 확산시키면서 도시 인클로저의 일상화를 무감각하게 만든다. 이를 일컬어 은연중에 행위를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스프레차투라(sprezzatura)에 의한 탈취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사적이익으로 뒤얽힌(private tangled)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 자원의 공유성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Amaral, 2015).

이처럼 현대의 탈취기반 축적과 인클로저 역시 주로 토지를 비롯한 공유재산 또는 공공재산의 사유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클로저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도시 인클로저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토지재산권 체계의 변동이다. 그러나 현대 도시 인클로저 연구들은 재산권 체계 변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인클로저의 본래적 의미를 실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익개념의 해석변경과 사적공용수용에 근거하는 도시개발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시 인클로저 과정에서 두드러진 이데올로기적 측면의 하나는 사익(또는 사적자본의 이익)을 공익으로 둔갑시키는 담론의 형성과 전파이다. 최근의 사적공용수용 연구에 따르면 도시재생지역에서 사적자본이나 사적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적공용수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적소유 공익개념을 버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확충과 같은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공익개념 해석변경과 그 담론의 확산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동시에 도시재생 지역의 강제수용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논리나 행정부의 논리 역시 시초축적시기의 인클로저 옹호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옹호 이데올로기의 전파자와 인클로저 대상이 현대 자본주의에 맞게 재구성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도시 개발사업에서 공익개념에 대한 해석 변경과 확장을 통해서 사적자본의 이익이 공익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사유재산권의 차별, 사익을 위한 공용수용 남용, 공적 사인수용(public-private taking), 사칭수용(pretextual taking), '뒤집어진 로빈훅'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김용창, 2012a; 2012b).

신자유주의 도시재생에서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로 자본주의가 가장 고도로 발달되었다고 하는 미국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오늘날 미국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첨단연구개발시설을 짓기 위해 일반 가족의 집을 허물고, 카지노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미망인의 재산을 몰수하며, 프로스포츠 팀의 경기장, 거대유통자본의 쇼핑몰, 대자본의 오피스빌딩을 위해 작은 가게와 주택을 철거하는 일들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아래 강제매수(공용수용)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경제개발 목적의 사익을 위한 수용은 건국전후 제분소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본격적인 판결은 20세기 이후에 나타난다. 소유주체를 준별하여 협의의 관점을 두개로 나누면 미국 판례 역사에서 연방대법원과 주법원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서로 다른 사법적 공익개념에 대한 정의, 즉 공익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는 세 가지 공익개념 범주를 가지고 있다(김용창, 2012b). 첫 번째는 공익이란 '공공소유'(public ownership)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으로서 늘 가장 좁은 의미의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사유재산을 공공소유로 이전할 수 있다(도로, 병원, 군사기지 등)는 관점이다. 그러나 19세기 초 이래

민영철도회사 등과 같은 사기업에게 공용수용권을 부여하면서 완전한 공익의 정의로써 공적소유 기준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는 공익을 문자 그대로 ‘공중에 의한 사용’(use by the public), 일반공중의 ‘공적 접근’(public access)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서는 수용이후 재산의 소유권은 의미가 없고, 중요한 판단기준은 해당 재산이 관리의 차원에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가 여부가 된다. 정부가 사유재산을 수용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만드는 사적주체에게 이전할 수 있다(철도, 공공시설, 경기장 등)는 관점이다. 이러한 기준 역시 좁은 의미의 공익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경우 연방헌법의 기준으로서 1920년대에 이미 사용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가장 넓은 의미의 공익개념으로서 공익을 ‘공적목적’ 또는 ‘공적편익’(public purpose or benefit)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앞의 두 관점이 공익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공공선 또는 일반복지를 촉진하거나 일반적인 공적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유재산의 수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¹⁾ 20세기 이래 미연방대법원은 통상 이 관점을 지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가장 지배적인 관점이다. 공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당성이 있으면 어떤 목적으로라도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공용수용권력에 제한이 없게 된다.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재산권의 강제적 이전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사고이다.

20세기 들어 1954년 *Berman v. Parker*(이하 ‘Berman’) 사건, 1984년 *Hawaii Housing Authority v. Midkiff*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독창적인 판례는 도시재개발과 사회적 해악의 제거를 위해서는 사익을 위한 공용수용도 합헌이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연방대법원 판결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공익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 의미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공공복리차원에서 수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검토(판단)에 대하여 아주 제한적인 역할만을 주장하였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공용수용 요건으로서의 공익의 의미가 공적소유나 공중에 의한 사용으로부터 공공목적 또는 공공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와 적용범위가 완전하게 이동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고려되는 모든 사업을 위해 공용수용권을 자주 사용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공익개념이 좀 더 모호한 의미의 공적편익을 뜻하는 것으로 변했다. 2005년 *Kelo v. City of New London* 사건에서 판결문을 작성한 주심인 스티븐스(Stevens) 대법관은 연방대법원에서 일반 공중을 위해 수용재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 그대로의 공익개념’은 오래전에 버렸으며, 공적목적 또는 공적편익이면 충분하다고 기술하였다.



출처: Dwight Merriam, *Kelo v. New London*(2005)

<그림 1> New London의 사적자본 Pfizer를 위한 공용수용

1)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필요성을 충족시킨다면 비록 수용을 통해 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공공목적에 기여하는 수용이기 때문에 합헌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3대 판결이 1954년 *Berman* 사건, 1984년 *Hawaii Housing Authority* 사건, 2005년 *Kelo* 사건 판결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에서 공익개념 해석의 가장 큰 특징은 좁은 의미 공익개념에서 사적이익을 위한 개발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익개념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국가로서 국가성격에서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통상주의 국가, 기업가주의 국가로의 국가성격 변화를 법원 판결에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정헌법 5조 수용조항의 목적은 공익 없는 수용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공익개념의 확장적 해석은 사실상 모든 것을 공익으로 인정하면서 사문화된 논거나 허구적 원칙으로 전략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공용수용을 규정한 100개의 개별 법률 중 민간에게 수용권을 허용한 법률은 49개에 달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13). 한국의 사적자본을 위한 수용판례로는 아산시 탕정면 삼성전자 산업단지 판례(2009. 9. 24. 2007헌바114 전원재판부)를 들 수 있다.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다. “산업입지가 원활히 공급된다면 산업단지의 건설이 용이해 질 수 있고, 따라서 산업단지의 건설을 통하여 효과적인 경제적 발전 내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한 경제적 발전은, 그간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발전에서도 큰 초석이 되어왔다. 그와 같은 경제의 발전이 해당 국가공동체에서 영위되는 삶의 문명사적 수준을 신장시킨 주요한 동력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산업단지 개발의 사회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입지법상 규정들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민간기업이 자신의 이윤추구에 치우친 나머지 애초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달성, 견지하고자 한 공익목적에 해태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면, 이 사건 수용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2) 글로벌 금융위기와 인클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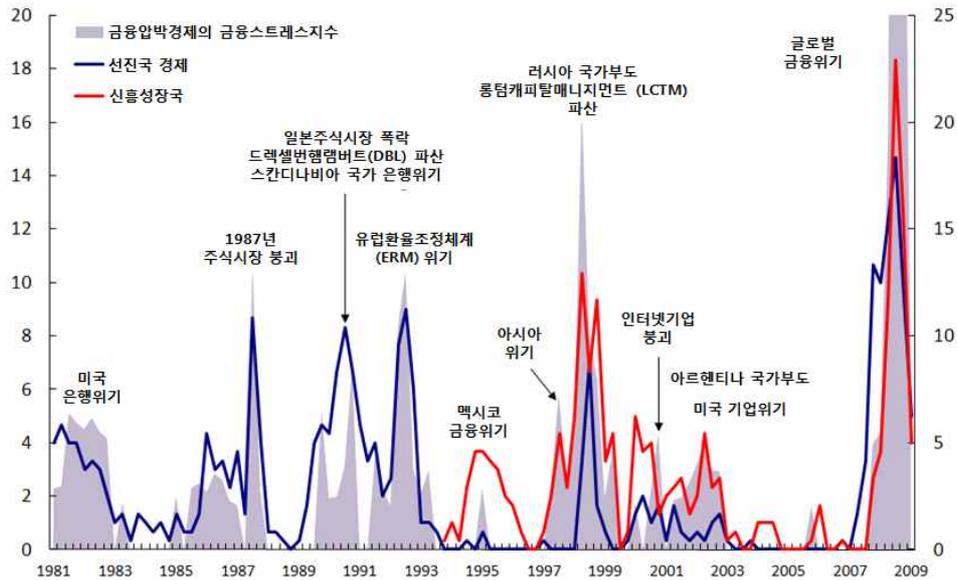
도시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을 금융의 증권화 방식에 더욱 더 의존하면서 도시공간과 생활은 글로벌 금융자본의 논리에 그만큼 포섭되고, 특히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만들었던 파생금융 상품이 역설적이게도 위험과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금융자본에 도시공간이 얽히면서 자국 또는 도시자체의 경제논리가 아닌 외부의 충격에 취약해졌고, 위기의 글로벌 동조현상, 즉 위기의 전염효과 또한 심화되었다. 그 결과 금융위기를 매개로 하여 도시에서 생활터전과 주거의 상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1가까운 예로 2007년 미국 주택금융 부문에서 초래된 금융위기가 보여주듯이 21세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결부된 주택시장 변동이 글로벌 경제와 국가경제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세계화와 금융화의 심화가 낳은 지구경제의 체계적 위기(systemic crises)와 장기적 침체에 개별 국가경제와 가계가 연루되는 현상이 커지는 것이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은행 위기, 신용경색, 주택시장 및 주식시장 붕괴가 동반된 대형 위기였다. 이런 금융위기와 결부된 침체는 여타의 경제위기보다 길고 심각하기 때문에 민간수요, 신용, 자산가격, 가계생활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심각하다(IMF, 2009).

IMF가 최근 21개 선진국 경제를 대상으로 지난 50년간의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122개 경기침체를 분석한 것을 보면, 글로벌 경기침체는 선진국, 신흥성장국, 개발도상국 등을 가리지 않고 서로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들 사이 동조현상도 커지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최근으로 올수록 금융위기 영향이 커지고 있고, 지난 30여 년 간의 위기를 금융스트레스(financial stress)의 급증 측면에서 보면, 십년 단위로 평균 세 번의 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금융스트레스는 지구화된 금융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일 사태로 번지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경제의 금융화와 금융자본의 지배력 강화는 국가 부도(1998년 러시아, 통화 페그제 공격(1992년 유럽환율조정체계(ERM) 위기), 자산버블의 붕괴(1987년 주식시장 붕괴, 2008년 주택금융위기), 경제대국의 금리인상과 통화가치 하락, 채권단의 자금회수, 금융연계 기구의 붕괴(러시아 국가부도 이후 롱텀캐피탈, 2008년 금융위기에서 Bear Stearns, Lehman, AIG 등의

사례) 등 다양한 원인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IMF, 2009; Hagan et al., 2010; 김용창 외, 2014).

그만큼 거주지의 실존을 위협하는 금융위기가 지구환경 전체 차원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공간의 이름도 모르는 어느 한 동네의 개별 거주 장소와 가족의 삶이 자신들이 제공하지 않은 원인으로 위협받고 있는 시대이다.



출처: Hagan et al.(2010)

<그림 2> 주요 금융위기 연쇄효과와 영향 국가수



<그림 3> 실존으로서 거주지의 위기

금융위기는 주택의 존재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평생 부채를 짊어지는 삶의 방식을 토대로 주택금융의 증권화가 발달하였지만 이러한 주택금융 방식을 더욱 확장한 파생금융상품의 발달과 약탈적 대출방식은 주택금융위기를 통해 거꾸로 주택 거주자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붕괴와 주거의 상실을 유발하면서 인간의 실존성과 생활세계를 일거에 무너뜨린다. 자기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불어 닥친 인위적 또는 경제적 재난이 만드는 생활공간의 박탈과 봉쇄이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대규모 주택압류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준 것은 물론, 깡통주택(negative equity)의 양산, 대규모 주택압류 위기를 낳았고, 수많은 주택들이 미점유 방기(vacancy and abandonment) 상태로 버려졌다. 거처를 상실한 가구들이 심각한 생활불안정 상태에 빠졌고, 대규모 아동빈곤 상황을 낳았다(Parr, 2015). 이러한 주택의 만연은 경기 침체, 인접 부동산가치 하락, 지방세수 감소 문제와 더불어 ‘깨진 창(Broken Windows)’ 이론이 말하듯이 범죄, 방화, 빈곤 등의 증가로 지역사회의 공공안전성과 사회적 유대감을 해치고, 지역사회의 퇴락을 가져온다. 한마디로 생활세계의 불안정과 삶의 질 하락, 하이데거의 말대로 거주자의 본성을 급격하게 해체시킨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글로벌 전염성이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미국의 주택금융위기 때 2008년 한 해 동안 120만 호의 주택압류가 발생했고, 2009년 초에는 이미 방기 주택의 수가 1,400만 호에 이르렀다. 특히나 이러한 거처상실의 문제는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면 못지않게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Silva, 2011; Parr, 2015).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겨우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2007년 금융위기 때 미국은 연방주택저당공사(Fannie Mae)와 연방주택금융저당공사(Freddie Mac)의 긴급구제를 위해 총 1,875억 달러(약 210조원)를 투입하였고, 이어서 7,000억 달러(약 780조 5천억 원) 규모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을 마련해야 했다. 아울러 깡통주택(underwater)과 주택압류 문제 완화를 위해 500억 달러(약 55조 7500억 원)를 지원하여 모기지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려고 하였다. 또한 주택방기와 근린지역 안정화를 위해 「근린지역안정화 프로그램(NSP)」으로만 2008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70억 달러(약 7조 3천억 원)의 연방 자금을 투입하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2008년 「주택경기 및 경제회복법」(the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 HERA), 2009년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Dodd-Frank Act)을 잇달아 제정하는 강수를 두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미국과 같은 대규모 주택압류와 거처의 상실을 동반하지는 않고 있지만 주택과 얽힌 과도한 가계부채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하우스푸어(house poor) 논란이 이를 잘 보여준다. 2016년 1분기 말 현재 총 가계부채 규모는 1,223조 7천억 원이며, 하우스푸어 규모는 대부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 따라 정의와 분류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최소 3만에서 최대 157만 가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잠재적 위험집단은 40대~50대, 대졸자,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 비교적 높은 고소득·고자산 비중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중산층이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한국의 하우스푸어 관련 추계연구

연구기관	추계방법	추계규모(가구)	주요 특징
새누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군: 순부채 상태, 거주주택처분으로 부채완제 어려움 중위험군: 순자산 상태, 소득기준 현상유지불가, 거주주택처분으로 부채상환가능 잠재위험군: 순자산상태, 소득으로 원리금상환가능, 거주주택처분으로 부채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군: 3.2만 중위험군: 7.0만 잠재위험군: 18.2만 상기합계(하우스푸어): 28.4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의 분석자료 이용 잠재적 위험군중 거주주택 처분해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구, 중위험군 중 거주주택 처분해야 하는 가구, 고위험군의 자가가구(20%)를 하우스푸어 대상으로 간주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김동빈,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의: 부채로 산 주택보유자, 원리금상환부담과 가계지출 축소가구 협의: 부채를 진 1주택가구, 상환부담과 가계지출축소, DSR≥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의: 156.9만(549.1만 명), 상환불능 12.7만 협의: 108.4만(374.4만 명), 상환불능 9.1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가진 30-40대의 중산층 자산 대부분을 거주주택에 투자, 대출이상이 높음
KB금융경영연구소 (김진성,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위험군: 총자산>총부채, 상환여력 충분 중위험(하우스푸어): 광의는 부채상환가능, 협의는 주택처분을 통한 부채상환 고위험: 총자산<총부채, 상환여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위험군: 30.7만 중위험(하우스푸어): 광의 7.9만, 협의 7.1만 고위험: 15.9만 부실군: 3.4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주택가격이 증가할수록 부채보유가구 비율이 상승 잠재위험군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채보유(주택구입레버리지 활용) 고위험군은 대부분 무주택자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외,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위험가구: DSR>60% 고위험가구1: 금융대출>부동산평가액×0.6+금융자산 고위험가구2: 금융대출>부동산평가액+금융자산 고위험가구3: 순자산<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위험가구: 56.9만 고위험가구1: 10.1만 고위험가구2: 2.4만 고위험가구3: 3.0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위험가구 40대~50대, 자영업자, 수도권에 집중 주택가격과 소득이 동시에 20% 하락 시 고위험가구는 유형별로 6.0~19.7만 가구까지 증가
임진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위험가구: 74만 고위험가구1: 9.1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가격 및 소득이 동시에 20% 하락 시 고위험 가구1유형은 17.2만으로 증가
김준형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환부담가구: DTI 30%이상 60%미만 상환위험가구(하우스푸어): DTI≥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환부담가구: 25.7만 하우스푸어: 7.2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우스푸어는 저량(자산)이 아닌 유량(소득)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50대, 아파트, 수도권, 고소득층 비중이 높음
이창무 임미화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의 부채위험가구: DSR 30%, LTI 200%, LTV 70% 협의 부채위험가구: DSR 50%, LTI 300%, LTV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의와 협의의 부채위험가구: 16.4만, 5.5만 광의와 협의의 재무위험가구: 114만, 66만 자산위험가구: 14.5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위험가구 비율이 높으나 시장을 통한 자발적 부채조정과정으로 해소가능 투매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8.3만 가구에 불과
서울연구원 (박은철·홍인옥,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우스푸어: DTI>30%, 1주택가구 렌트푸어1: 소득 대비 주택임차료+보증금미련대출 원리금상환액 30% 초과 렌트푸어2: 잔여소득≤최저생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우스푸어: 서울 1.8만, 수도권 6.3만 렌트푸어1: 서울 26.7만, 수도권 46.3만 렌트푸어2: 서울 31.1만, 수도권 67.0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우스푸어는 대졸이상, 아파트거주, 주거상행이동 대출, 소득대비 비싼 주거 특성 렌트푸어는 40대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학력 특성
토지주택연구원 (이중권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우스푸어1: DSR≥40%, LTA > 100%, 주택평가액 60%, 1주택보유 하우스푸어2: DSR≥40%, LTA > 100%, 주택평가액 100%, 1주택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우스푸어1: 9.8만 하우스푸어2: 1.6만 1주택보유, DSR≥40%: 73.7만 위험가구(DSR≥40%, LTA > 100%): 29.5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5분위이면서 자산5분위 가구, 고등학교 졸업, 아파트거주가구의 비중이 높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가구가 60% 내외로 가장 높은 비중
한국은행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계가구: DSR>40%, 순금융자산<0 고위험가구: HDRI>100, DSR>40%, DTA>100% 고DSR가구: HDRI>100, DSR>40%, DTA≤100% 고DTA가구: HDRI>100, DSR≤40%, DTA>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계가구: 150.0만 고위험가구: 28.9만 고DSR가구: 32.3만 고DTA가구: 51.0만 HDRI 기준 위험가구합계: 112.2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판정지표 개발적용 위험부채 중 고소득·고자산계층 비중이 높음 고자산보유 가구가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함

4. 자율도시와 도시공유화 운동

신자유주의 도시 인클로저에 대한 대안전략 연구나 실천운동 차원의 논의들은 도시공유자원(urban commons)과 협동조합주의, 도시에 대한 권리와 공유성의 회복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도시공간을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삼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도시자원의 공유재산으로 전환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인클로저와 사유화 또는 독점화는 전체 지역사회의 이해에 반하는 일종의 폭력(violence)행위로 간주한다(이계수, 2014; 강현수, 2010; Webb, 2014; de Peuter and Dyer-Witford, 2010; Blomley, 2008).

도시 인클로저 현상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 연구들은 주로 토지자원의 공동체적·사회적 통제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의 지배적인 담론인 토지와 자연의 사유화와 인클로저라는 신자유주의적 규범에 대처할 수 있는 대항담론 구성을 통해 재산권과 자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재의미작용(resignification)을 개척해야한다는 것이다. 반인클로저 투쟁은 방어적이고 대응적인 측면을 주로 갖기 때문에 현상유지적 방어라는 한계가 있지만 대안적 사회관계로서 공유화(commoning)를 설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접근과 권리를 갖는 공유자원 집합체로서 도시, 상호의존 및 협동에 기초하는 비배제적 생활양식, 장소와 지역에 기초한 집합적 관리, 도시공간을 점유하고 전유할 권리 확립 등을 구체적인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Mackenzie, 2013; Hodkinson, 2012; Mansfield, 2008).

구체적인 실천운동 전략으로서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에 기초한 자율도시(autonomous city) 전략은 거주문제를 점거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있다. 점거운동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서구정부가 전개한 긴축정책에 대한 다양한 대응 가운데 하나이며, 사회변혁의 수단으로서 공간을 점거하고 수복하려는(reclaim) 충동이 새로운 '대안적 도시화'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판단한다. 공간의 점령(seizure)에서부터 즉흥적인 시위대의 집결과 시위캠프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전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거기반실천(occupation-based practices) 운동을 자율도시 전략의 중요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도시거주의 자율적(자주적) 형태, 하부구조의 급진정치화, 정치적 행동을 위한 공유공간을 생산하는 관계들의 집합으로서 점거의 구성적 역할(공간의 적극적 성과 대안적 도시화로서 자율도시)을 중시한다(Vasudevan, 2015).

점거의 공간적 구성능력과 지리적 생성(generative)역량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움직임이 도시활동의 비공식성을 강조하는 무단점유운동이다. Neuwirth(2006)는 무허가정착지 또는 비공식 주거지와 관련하여 소유보다는 점유에 기초한 무허가정착지 권리에 대한 주장 근거로 로마의 우수카피오(사용취득, usucapio)의 개념을 불러내며, 1988년 브라질 헌법 규정처럼 느릴지라도 일정한 성공을 거둔 구체적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최근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무단점유도 주거자율성의 확산하려는 일련의 시도로 간주한다. 무단점유 공간은 급진적 도시공유지의 생성적 잠재력 구축과 주체성 형성에서 핵심지점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Vasudevan, 2015). 이러한 관점에서 Florida가 그리는 창조계층은 자본주의적 상상력에서 그려지는 세계관으로만 작동하는 것, 즉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이끄는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일 뿐 정치사회적 전환에 대한 주체성은 없다고 본다. “플로리다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점거라고 말한다.”라는 Rosler의 말

2)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7. 29. 92헌바20 : 로마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계속된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시민법상의 사용취득(usucapio)제도가 있었고, 시민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속주(屬州)에서는 장기점유의 항변(prescriptio longi temporis)이라는 제도가 있어 사용취득제도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불가능한 증명의 부담을 면하게 하거나 현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로마법에 있어서의 취득시효는 증명방법을 용이하게 하거나 거래의 안정을 위한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을 제외하고,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로마법상의 취득시효제도를 계수하여 취득기간의 장단에 차이는 있으나,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정한 취득시효제도와 같은 형태의 취득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은 점거운동을 대안적 도시화의 주체성 형성으로 의미부여하는 것을 잘 대변한다(Rosler, 2012).

그러나 이러한 점거운동은 규모와 지속적 가능성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공유했던 운동은 기존 공유자원의 소극적 방어보다는 팽창하는 자본주의에서 공유자원의 확대 재생산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관점을 고려할 때 거주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도시공간과 하부구조를 재전유하는 DIY 실천처럼 자조 또는 소규모 도시개입이라는 반란(insurgent) 형태는 대부분의 경우, 비공식적 도시생활의 전술들이 전유되고 신자유주의적 도시재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공간의 상품화에서 주요 메커니즘이 된다는 비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Balaban, 2011).

도시공유자원의 생산과 유지 또는 탈상품화를 위한 또 다른 실천전략으로서 주택협동조합을 포함하여 협동조합운동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신자유주의 논리가 지배적이라는 미국에서도 위스콘신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약 3만여 개의 주요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공공서비스 부문 협동조합으로 분류되는 주택협동조합도 약 9천 5백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를 비롯한 서구의 선진국에서 주택은 일종의 도시공유자원으로 인식되면서 협동조합원리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강세진외, 2014; Borch and Kornberger, 2015; Deller et al., 2009).

5. 실존으로서 거주성의 실현과 토지주택은행

신자유주의 도시재생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인클로저는 현대 도시에 대한 어떤 성장전략이나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거주 문제가 일상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스에게 협력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마틴 하이데거(Heidegger)에게 거주(Wohnen, Dwelling)는 인간 실존의 근본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철학 대상이었다. 이 세계 속의 인간은 사물이나 존재자에 대한 의미부여 작용을 통해 그 쓰임새와 쓰일 자리를 만든다. 이러한 '세계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거주 또는 머무름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세계, 장소와 공간의 형성은 삶의 과정으로서 거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 그의 사상이다. 특히 후기 하이데거 사상에서 거주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51년 다름슈타트(Darmstadt)에서 '인간과 공간'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했던 강연인 「건축, 거주, 사유(Bauen Wohnen Denken)」는 인간실존에서 거주와 본질과 의미를 잘 드러낸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하늘, 대지, 신, 그리고 유한한 삶의 인간이라는 네 가지 요소(사방; Geviert, Fourfold)가 하나로 포개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세계이며, 장소는 그 조화를 가능케 하는 터전이라고 말한다. 거주는 네 가지 요소를 소중히 보살피고, 연결(관계)하면서 그 조화의 터전을 만드는 인간 실천과정으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존재 양식으로서 거주가 없다면 세계도 장소도 없다는 것이다(Heidegger, 2001; Harman, 2009; 서도식, 2010).

우리는 이러한 거주를 위해 행위로서 건축(building)을 하며, 물리적 산물로서 주택을 생산한다. 거주성의 실존적 의미로 보자면 건축이란 앞의 네 가지 요소를 한데 모아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터전을 만드는 과정이지 단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 산물로서 주택은 거주라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인간적 의미부여를 통해 그 쓰임새와 쓰일 자리를 비로소 찾으며, 세계와 장소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즉 물리적 산물로서 주택과 주택건축 자체가 세계를 만드는 거주(삶의 과정)가 일어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의 주택은 때로는 상충하기도 하는 다양한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다. 우선 물리적 거주와 안식처로서 주택은 기본적으로 삶을 제공하는 공간과 가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공적인 것

과 사적인 것, 내부와 외부의 구별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택은 사회관계의 기본구성 단위로서 가정(home), 경제 단위로서 가구(household), 물리적 단위로서 거처가 융합된 사회공간체계로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양식과 생활경험의 토대로서 주택은 가정생활과 가족관계를 통해 언어습득, 양성관계(gender), 감성과 정체성 형성, 도덕적 사고, 질서와 규율개념, 관습전수 등 사회적 관계와 사회제도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는 곳이다. 그리고 인권으로서 주택은 주로 마셜(Marshall)의 시민권(citizenship) 개념에 기초하여 주거권이나 주거복지를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지배적인 관념은 자산 및 투자대상으로서 주택일 것이다. 자본이나 개인 모두에게 부(wealth)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가장 두드러진다. 자본시장과 공간시장의 통합추세는 주택의 이러한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며, 주택을 경제위기의 소용돌이로 쉽게 빨려들도록 만들고 있다(Blunt and Dowling, 2006; Mallett, 2004).

주택을 둘러싼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는 결국에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주성으로서 주택과 비인간적 물질성이자 자본성으로서 주택의 충돌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세계 속의 존재로서 인간실존을 위위에 두는 것이고, 후자는 도구성(수단성)이 실존을 압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공익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도시재생과 사적이익을 위한 강제수용, 경제의 세계화와 금융화, 부동산금융의 발달은 실존으로서 거주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거주 위기를 만성화하고 있다. 거주 의미의 부차적이 되고, 거주자가 의미를 갖지 못하는 주택건축행위와 주택, 자본성으로서 주택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 구성요소의 조화가 불안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지주택은행체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의 토지은행 제도는 통상 미래 토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적으로 토지를 비축하였다가 공익사업, 특정목적사업, 도시성장관리, 시장조절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토지은행제도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네 가지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경제성장 국면, 즉 토지가격 상승기에 대비하기 위한 모델이다.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전통적인 토지은행 모델로 저가의 공공사업용 토지공급, 토지가격 상승 억제 및 저렴한 주택공급, 무질서한 도시팽창 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한국을 비롯하여 스웨덴, 프랑스,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시행중이다. 다음으로 경제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형으로서 미국이 대표적이다. 앞의 유형과는 반대로 부동산가격 하락이나 장기적 침체에 부동산 가격폭락과 부동산 방기를 억제하기 위해 비축·보유하고, 생산적 용도로 해당 부동산을 전환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세 번째는 중국 모델로서 경제성장 국면에서 도시팽창을 조절하는 전통적 모델의 성격도 가지면서 경제체제 전환기에 새로이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토지자원을 용도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번째 유형은 동·중부 유럽모델로서 경제체제 전환기에 소유권 회복 중심의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나 토지파편화가 대두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델이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토지은행 모델 가운데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델로는 미국 토지은행 제도를 준거모델로 삼을 수 있다. 위기관리형으로서 미국의 토지은행제도는 이름과는 달리 토지주택은행이며,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바뀔 때 따라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한 舊산업도시에서 발생한 조세체납, 압류, 미점유, 방기 부동산을 재활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1971년 세인트루이스를 시작으로 클리블랜드, 루이빌, 애틀랜타에서 20세기 후반 지방정부 조직으로 등장하였고, 이러한 모델을 1세대 토지은행이라고 한다. 그리고 1999년과 2003년의 미시간 주 입법 개혁, 2008년과 2010년의 오하이오 주 입법 개혁 이후 등장한 2세대 토지은행을 거쳐, 2011년 조지아, 2012년 미주리, 뉴욕 및 펜실베이니아, 2013년 네브래스카에서 주 전체에 적용하면서 토지은행 작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의 토지은행 전문 시스템을 갖춘 3세대 토지은행이 등장하였다. 이처럼 경제금융위기 국면에서 문제부동산의 선제적 비축과 관리를 통해 근린지역의 안정화와 시장정상화(회복)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은행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다른 주택 압류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김용창 외 2014).

미국 토지은행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주 정부의 수권 법률, 지역 사회 주도적 운영 등의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 조세체납, 압류 등 문제부동산이 야기하는 각종 해악을 제거하여 정상적인 시장성을 회복시키고, 조세기반을 다시 안정화시킴으로서 생산적 용도로 전환과 근린지역 안정, 지역사회 활력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토지은행의 기능이다. 토지은행은 증여, 이전, 교환, 구매, 기부 등을 통해서 미점유, 방기 및 조세체납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특히 재산세 징수체계 개혁입법과 토지은행 수권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당국과 협약을 통해 민간부문에 앞서 우선적으로 문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비축·보유 부동산에 대해 면세하며, 개발·재개발, 신축, 철거, 복구, 수선, 보존, 녹지공간으로 전환 등의 활동들을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처분방법으로는 양도, 판매, 교환, 임대, 무상양도, 저당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지방정부와 조세 환수 협정(tax recapture agreement)³⁾을 통해서 토지은행이 정상 시장으로 복구시킨 부동산들에 대해서 최대 5년 동안 50%의 재산세를 공유하여 토지은행 운용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Silva, 2011; 김용창 외, 2014).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토지은행은 경제금융위기 대응에는 부적합한 모델이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 토지비축계획 수립지원, 토지수급조사 등 토지은행사업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 계정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전제로 한 모델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은행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모델처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주택은행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로는 토지은행 목적을 다시 설정하여 기존의 공익사업용지 사전 비축 중심의 목적을 벗어나 이른바 하우스푸어 문제를 포괄하고, 미국처럼 문제지역이나 침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금융자본 논리 중심의 일반적인 부실채권처리방식이나 기구를 벗어나야 하고, 거주성 회복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둘째로 경제금융위기의 상존시대, 장기적 저성장시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전제로 한 현재의 토지은행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주택을 포함하는 토지주택은행 개념으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 리츠 개념도 포괄할 수 있도록 취득, 보유, 부동산운용, 처분, 조세 등 제도운용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직면하는 토지주택 문제가 다르고, 도시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토지주택은행제도를 운용하게 하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다 개방적인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철학은 거주자원의 공유성을 확보하고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토지주택은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6. 맺음말 : 거주실존성 회복

영국에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주이자 권리청원을 기초한 법관 에드워드 쿡(Edward Coke)은 1604년 한 재판(Semayne 사건)에서 주택을 실존의 강력한 토대로 천명한다. 이 판결에서 모든 사람의 주택은 자신의 요새이며, 침입과 폭력에 대한 방어와 휴식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판결하였다(Coke, 1604). 이처럼 주택은

3) 조세 환수 협정의 핵심전제는 토지은행이 재산세 수입이 발생하지 않던 조세체납부동산을 정상화시켜 사적 주체에게 이전하면 그 부동산은 과세대장(tax rolls)에 다시 등재되고, 일정기간 동안 토지은행과 지방정부가 재산세 수입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미시간 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거주성을 그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가정과 가족생활의 토대, 감성의 형성, 생활의 안식처, 자아 및 정체성 형성, 사생활과 친밀성 및 소속감 생성, 지역사회와 사회관계 형성 등의 터전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유재산권의 대상 이나 재산 투자, 수익추구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다시 하이데거의 실존으로서 거주라는 철학적 사유로 돌아가자면, 실존으로서 거주성의 회복을 위해 상품과 물리적 건축물이라는 물신성으로서 주택이라는 단순 관념은 반드시 우리가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거주 의미의 부차적이 되고, 거주자가 의미를 갖지 못하는 주택건축행위와 주택, 자본성으로서 주택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 구성요소의 조화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토지주택은행 체제는 무엇보다도 거주성으로서 주택의 본성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발전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 내 존재로서 인간의 실천과 조화로운 세계형성이 이루어진다. 거주성이 뒷전으로 밀리는 주택 의미와 주택정책은 인간의 세계 내 존재로서 실존성을 망각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주택과 주택건설자본, 금융자본 스스로의 존립근거도 소멸시킬 것이다.

하이데거의 다음 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도처에서 주택부족을 말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고,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그 욕구를 채우려고 행동한다.....그러나 주택의 부족을 위협하는 것은 그대로 쓰러리게 남는다. 거주의 진짜 역경은 단지 주택의 부족에 있지 않다.....진짜 역경은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들이 거주의 본성을 도대체 새로이 찾으려 들지 않는다는데 있으며, 거주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데 있다.....인간이 거주의 진짜 역경을 역경으로서 여전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데 인간의 고향상실(Heimatlosigkeit, 존재의 진리 망각)이 있다(Heidegger, 2001, 158-159).

Hardt and Negri(2009)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형태를 생성시키는 이상적인 것으로서 공유적인 것을 위치시키고 있다. 그것도 같음의 범주가 아니라 특이성들의 긍정(affirmation of singularities), 즉 다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위정치로부터 더 전진하기 위해 특이성에 기초한 공유적인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 인클로저와 공유화의 변증법적 관계는 오늘날 실존으로서 거주의 문제를 사유하고 해결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접근법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 김수행, 역, 1989, 자본론 1(하), 비봉출판사(Marx, K., 1954, *Capital: Vol. 1*, Progress Publishers).
- 김용창 외, 2014, 토지은행의 역할 재조명과 기능개선 방안 연구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 김용창, 2012a, “미국 도시재생사업과 사유재산권 보호의 차별: 법제지리학의 관점,” *대한지리학회지*, 47(2), 245-267.
- 김용창, 2012b, “미국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적이익을 위한 공용수용: 연방 및 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74, 127-148.
- 서도식, 2010, “존재의 토폴로지: M. 하이데거의 공간 이론,” *시대와 철학*, 21(4), 221-249.
- 오호진, 2015, “존 클레어의 엘레지(Elegy) 연구 : 인클로저와 헬프스톤,” *영어영문학*, 20(3), 139-163.
- 이계수, 2014,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 *민주법학*, 56, 137-178.
- 장성현, 2013, “존 클레어의 ‘푸른 언어’와 그 한계: 클레어의 인클로저 저항시 읽기,” *문학과 환경*, 12(2), 195-217.
- 최병두 역, 2005, 신제국주의, 한울(Harvey, D., 2003, *The New Imperi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최병두, 2011,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 전략,” *공간과 사회*, 21(3), 5-38.
- 田代正一, 2007, イギリスにおける土地所有の近代化と地主制の形成, 鹿児島大學農學部學術報告, 57, 37-47.
- Amaral, C., 2015, Urban enclosure: Contemporary strategies of dispossession and reification in London's spatial production, <http://www.enhr.net/pastwinners.php>.
- Balaban, U., 2011, The enclosure of urban space and consolidation of the capitalist land regime, *Urban Studies*, 48(10), 2162-2179.
- Birch, K. and Siemiatycki, M., 2016, Neoliberalism and the geographies of marketization: The entangling of state and market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0(2), 177-198.
- Blomley, N., 2004, *Unsettling the city: Urban Land and the Politics of Property*, Routledge, London.
- Blomley, N., 2008, Enclosure, common right and the property of the poor, *Social and Legal Studies*, 17(3), 311-331.
- Blunt, A. and Dowling, R., 2006, *Home*, Routledge.
- Borch, C. and Kornberger, M., 2015, *Urban Commons: Rethinking the City*, Routledge.
- Brenner, N. and Theodore, N., 2002, Cities and the geographies of 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Antipode*, 34(3), 349-379.
- Brenner, N., 2004, *New State Spaces: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of Statehoo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Castree, N., 2010, Neoliberalism and the biophysical environment 1: What ‘neoliberalism’ is, and what difference nature makes to it, *Geography Compass*, 4(12): 1725-1733.
- Coke, E., 1604, Semayne’s Case, in Sheppard. S.(ed.), 2003, *The Selected Writings and Speeches of Sir Edward Coke: Vol. I*, Liberty Fund, 135-141.
- Dawson, A., 2010, Introduction: new enclosures, *New Formations*, 69, 8-22.
- De Angelis, M., 2007, *The Beginning of History: Value Struggles and Global Capital*, Pluto

- Press, London.
- De Peuter, G. and Dyer-Witheford, N., 2010, Commons and cooperatives, *Affinities: A Journal of Radical Theory, Culture, and Action*, 4(1), 30-56.
- Deller, S., Hoyt, A. and Sundaram-Stukel, B., 2009, Research on the Economic Impact of Cooperatives,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Cooperatives.
- Fairlie, S., 2009, A short history of enclosure in Britain, *The Land*, 7, <http://www.thelandmagazine.org.uk/issue/land-issue-7-summer-2009>
- Hagan, S., Moghadam, R. and Tweedie, A., 2010. The Fund's Mandate—The Future Financing Role: Reform Proposals, *Public Information Notice(PIN)*, No. 10/12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Harman, G., 2009, Dwelling With the Fourfold, *Space and Culture*, 12(3), 292-302.
- Harvey, D.,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
- Heidegger, M.(trans. Hofstadter, A), 2001, Building Dwelling Thinking, in *Poetry, Language, Thought*,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141-159.
- Hodkinson, S. 2012, The new urban enclosures, *City*, 16(5), 500-518.
- IMF, 2009, From Recession to Recovery: How Soon and How Strong?, *World Economic Outlook: Crisis and Recovery*.
- Jeffrey, A., McFarlane, C. and Vasudevan, A., 2012, Rethinking enclosure: Space, subjectivity and the commons, *Antipode*, 44(4), 1247-1267.
- Mackenzie, A. F. D., 2013, *Places of Possibility: Property, Nature and Community Land Ownership*, Wiley-Blackwell, Oxford.
- Mallett, S., 2004, Understanding Home: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Sociological Review*, 52, 62-89.
- Mansfield, B.(ed.), 2008, *Privatization: Property and the Remaking of Nature-Society Relations*, Blackwell Publishing, New York.
- Midnight Notes Collective, 1990, Introduction to the new enclosures, *Midnight Notes*, 10, 1-9, <http://www.midnightnotes.org/mnpublic.html>
- Neeson, J. M., 1993, *Commoners: Common Right, Enclosure and Social Change in England, 1700-1820*,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Parr, A., 2015, Urban debt, neo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Theory, Culture & Society*, 32(3): 69-91.
- Peck, J., Theodore, N. and Brenner, N., 2013, Neoliberal urbanism redux?,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3), 1091-1099.
- Perelman, M., 2000, *The Invention of Capitalism: Classical Political Economy and the Secret History of Primitive Accumulation*,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 Sevilla-Buitrago, A., 2015, Capitalist formations of enclosure: Space and the extinction of the commons, *Antipode*, doi: 10.1111/anti.12143, 1-22.
- Sheila, F. and Iaione, C., 2016, The City as a Commons, *Yale Law and Policy Review*, 34(2), 1-64.
- Silva, D. A. 2011, Land Banking as a Tool for the Economic Redevelopment of Older Industrial

- Cities, *Drexel Law Review*, 3(2), 607-641.
- Soja, E., 2010, *Seeking Spatial Justi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Swyngedouw, E., F Moulaert, A Rodriguez. 2002, Neoliberal urbanisation in Europe: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new urban policy, *Antipode*, 34(3), 380-404.
- Vasudevan, A., 2015, The autonomous city: Towards a critical geography of occup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9(3), 316-337.
- Vasudevan, A., McFarlane, C. and Jeffrey, A., 2008, Spaces of enclosure, *Geoforum*, 39(5), 1641-1646.
- Webb, D., 2014, Urban common property: Notes toward a political theory of the city, *Radical Philosophy Review*, 17(2), 371-394.
- Wordie, J. R., 1983, The chronology of English enclosure, 1500-1914, *Economic History Review*, 36(4), 483-505.

투기적 도시화,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권

신현방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지리환경학과 교수)

1. 서론

최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은 신문이나 온라인매체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 되었다. 서울의 경우, 북촌, 서촌, 상수동, 삼청동 등 소위 말하는 뜨는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요 현장으로 지적된다. 2015년 10월의 경우, '힐링캠프'라는 TV프로그램에는 유명가수가 등장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언급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종종 소상공인 등 상가세입자, 문화예술인 등의 불만을 담고 있다. 이들의 불만은 도시재생이 부동산 중심의 도시 개발과 등치되면서 겪게 되는 소외, 불평등한 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젠트리피케이션이 한국에서 더 이상 학술논문에 국한하여 다루어지던 것을 벗어나 이젠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학문적 논의와 도시운동의 만남을 시사한다.

하지만, 압축적, 투기적 도시화 과정에서 부동산이 자산축적의 주요 수단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능해 온 한국에서 도시민의 삶은 오랜 기간 본질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지배되었다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도시공간의 재편은 지대 변화를 촉진하고, 더 높은 지대에 기반한 지대 차익의 획득을 위한 개발 행위는 기존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즉 강제추출을 초래하여 사회적, 공간적 양극화와 같은 도시문제를 유발하였고, 이러한 도시문제는 하루 이들의 문제는 아니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한국 도시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예술 주도형 젠트리피케이션, 신규건축 젠트리피케이션, 국가 주도형 젠트리피케이션이 모두 한국의 도시 발전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회자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축적구조의 위기를 반영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도드라짐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즉, 2000년대 초반까지의 대규모 기획에 의한 도시개발이 더 이상 힘들어짐에 따라 부동산 자산축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고,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에 따른 신규 건축 젠트리피케이션 보다는 국부적, 선택적 투자를 선호하는 상업 부동산이 좀 더 관심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논의가 한국 도시화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며, 특히 도시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의 도시권 주장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논쟁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루려 한다. 마지막으로, 대안적 도시정책 관점에서 반(反)젠트리피케이션을 위한 연대에서 연대의 중요 당사자는 누구일지를 살펴보고 글을 맺는다.

2.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한국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의 핵심 정의로서 네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Lees, Shin and López-Morales, 2016 참조). 첫째, 지대 차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자본의 투자 또는 재투자. 여기서 지대 차이란, 지금 현재의 토지 사용에 기반한 지대를 '실현된 지대'라 하고, 그 토지가 좀 더 높은 효율과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쓰일 때 얻을 수 있는 지대를 '잠재적 지대'라 한다면, 이 두 지대 사이의 차이를 지칭한다(Smith, 1978, 1996).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질 때, 어떤 한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위한 물리적 환

경이 조성된다. 단, 이러한 물리적 조건이 충족된 모든 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결국엔 사회정치적 관계, 투쟁 그리고 여러 권력관계의 비대칭에 의거해서 물리적 조건의 전환, 즉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보다 높은 소득층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계급구조의 변화. 이는 앞서 밝힌 대로 원주민의 축출에 따른 지역사회 인구의 계급구성 자체가 바뀜을 지칭한다. 셋째, 공간의 상품화. 특히 시장경제에 편입되지 않았던 공공임대 주택단지 등이 해체되면서 시장주택으로 대체되어 지는, 그 과정에서 정부소유의 토지가 시장경제에 편입되어지는 과정들을 포함한다. 넷째, 원주민의 (여기서 원주민은 토지 및 가옥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 등 점유자도 포함) 축출(displacement)이다.¹⁾ 축출의 문제는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축출은 어느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물리적 이동이 수반되는 물리적 축출도 포함하고, 나아가 현상학적 축출도 포함한다(Marcuse, 1985). 현상학적(phenomenological) 축출이란, 개발 이후 지역 자체가 너무나 많이 변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공간에 대한 공감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소외되고 고립되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Davidson and Lees, 2010). 이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이 재수용되어도 그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어지는 것 역시 축출로 봐야 한다. 축출(displacement)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가 원주민 이주/재수용 정책의 수립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고민할 때에도 물리적, 현상학적 축출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초창기 젠트리피케이션 개념 정립은 주거지역을 근거로 이루어졌지만, 여러 지역의 도시변화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젠트리피케이션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대 차이에 근거한 개발이익의 추구는 단지 주거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상업지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농촌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처음 제기될 때만 해도 점진적인 개량 보수 위주로 다루어졌는데, 이제는 이뿐만 아니라 전면 철거 재개발을 통해 대단위 단지가 들어서는 것 (즉, new-build gentrification) 역시 포함한다(Davidson and Lees, 2005). 전면 철거재개발은 서구사회에서도 최근 더욱 도드라지는 현상인데, 특히 1980년대 이후 부동산 정책이 경제정책의 기본이 되고 금융화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대규모 철거 재개발이 서구 도시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Hackworth and Smith, 2001). 이를 통해 서유럽, 북미 도시에서 개인과 법인의 자산축적이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너무나도 익숙한 형태의 발전 방식이었기에 낯설지 않다(Shin, 2009; Shin and Kim, 2016).

레이와 테오가 2014년 논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젠트리피케이션은 “퇴거, 주민의 축출, 철거 및 재개발을 아우르는 물리적, 사회적 변화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일관성 및 비판적 시각을 제공한다”(Ley and Teo, 2014). 앞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였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의 동인과 정의는 여전히 학술논쟁에서 끊이지 않고 거론되어지고 있다. 특히 닐 스미스가 제시한 ‘지대 차이’ Rent Gap 이론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지대 차이’ 이론은 1970년대 닐 스미스가 ‘자본의 회귀’라는 명제로 자본축적 관점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설명하고, 이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종종 경제결정론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즉, 어느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변하고, 이에 따라 지대 차이가 발생하며, 이 지대 차이가 극대화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원주민의 축출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고 도식화 되어 설명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물질적 환경의 성숙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으로 자동결정된다는 비판은 닐 스미스 주장의 오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닐 스미스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항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물질적 환경이 아무리 성숙하였다고 하더라도, 즉 지대 차이가 극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저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 원주민의 타지역 이동을 종종 이주라고 지칭하지만, 이주가 가치중립적이라면, 축출은 외부적 강압, 압력에 의한 축출을 지칭하기에 좀 더 현실에 적합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여, 영어 표현인 displacement를 축출로 번역하였다.

닐 스미스의 경우, 서구 후기산업도시가 건조환경의 쇠퇴, 낙후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저하를 겪고,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균등 발전에 따른 지대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닐 스미스의 지대 차이 이론은 부동산이 경제정책의 주요 축으로 자리잡은 1970-80년대 이후 서구 후기산업도시에서 특히 유의미한 이론틀로 여겨질 수 있지만, 차별화된 도시화의 과정을 밟는 비서구 도시에서는 지대 차이의 발현의 방식이 다소 변형되어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앞서 잠시 얘기한대로 1980년대 초반부터 경험했던 도시 재개발, 재건축의 과정이 젠트리피케이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하였던 한국에서 부동산은 경제정책, 국토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정책을 짜고 도시정책을 펴고 그 과정에서 자본과 정치권력이 연합하여 발전을 추구하고 개발 수익을 극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소위 '생산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인구증가와 중산층 증대에 따른 주택 수요의 증대 등은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지대차이 발생 보다는 잠재적 지대의 급증에 따른 지대차이의 확대가 더 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산업화가 도시화에 종속되는 1980년대 이후 부동산 축적 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다.

3. 투기적 도시화: 사람보다 부동산

1970년대를 거치며 자본축적의 내재적 모순이 극대화, 이에 따른 축적 위기를 겪은 서구 도시에서는 위기 타개의 일환으로 부동산 개발이 도시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대두하기 시작한다. 수잔 파인스타인은 1980년부터 2000년 사이 뉴욕과 런던의 도시 개발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경제 성장 전략으로서 부동산 개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이들 대도시에서 도드라진 현상으로 나타남을 지적한다(Fainstein, 2001, 218). 1970년대 이전까지의 전후 부동산 개발, 특히 주택의 경우 국가부문에 의한 공공주택이 대규모 투자의 주요 현상이었다면, 국가의 자본재 투자 및 복지 지출 역량이 현저히 줄어든 1970년대 이후 부동산 투자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며,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도시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앨런 코크레인은 2007년 글에서 도시정책의 세계화를 다루면서 현대 도시정책의 초점이 “건조환경을 통한 축적”에 맞추어져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Cochrane, 2007). 특히 지대 이익 추구에 따른 다양한 도시 제세력의 연합을 지적한 Logan & Molotch(1987)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단지 정치 및 경제 부문 엘리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성장 및 지대 이익 추구를 위해 전통적인 노동-자본의 대립마저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데이비드 하비의 도시 축적 위기론에 비추어 설명하자면, 서구 자본주의의 위기는 우선 자본축적의 1차 순환 구조의 위기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윤을 저하에 따른 과잉생산과 잉여노동력 팽창으로 표현된다(Harvey, 1978).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잉여자본의 건조환경에 대한 생산적 투자를 통해(spatial fix) 사회간접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미래 축적 역량의 강화를 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투기적 이윤을 획득하려 노력한다. 이는 축적 위기의 타개책으로 자본축적의 2차 순환 구조(secondary circuit of capital accumulation)가 부상함을 의미하는데, 앙리 르페브르(Lefebvre, 2003)와 데이비드 하비(Harvey, 1978)는 모두 이러한 2차 순환 구조의 부상을 현대 자본주의의 주요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앙리 르페브르(Lefebvre, 2003)는 ‘도시혁명’이라는 글에서 산업생산으로 대변되는 1차 순환이 쇠퇴하면서 부동산이라는 2차 부문이 잉여가치 생산의 주요 원천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의 확대는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이 더 이상 주택 개량을 통한 점진적 과정으로서 제기되기보다는 다양한 규모의 자본 투자를 통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CBD 등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잔

파인스타인의 지적처럼 경제 성장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용된다면, 젠트리피케이션 역시 성장 중심주의 도시 정책의 주요 수단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현상이 주로 산업의 쇠퇴를 겪은 서구 도시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라면, 발전국가의 경우 서구에 비해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도시화 및 산업화의 관계 맺음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부동산은 특수한 역할을 담당한다. 발전국가에서의 도시화 및 산업화 관계 맺음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도시화는 급속히 진행되지만 산업화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도시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의 급속한 인구 유입이 산업화의 진전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이며, 이는 종종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주거부문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도시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는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전을 동반하고, 국가주도형 산업단지의 건설 등을 통한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의 유입을 위한 주거시설의 확충으로 야기되는 도시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여기서 방점은 산업화에 찍을 수 있으며, 발전국가가 주도하는 산업화에 도시화 과정이 종속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반까지의 도시화가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업생산에서의 이윤을 저하를 경험한 한국은 도시화와 산업화의 관계맺음에서 질적인 변화를 겪는다 할 수 있다(Shin, 2014; Shin, in press 참조). 더 이상 도시화가 산업화에 종속되기 보다는 산업화가 도시화에 종속되는 관계의 역전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의 극대화가 이뤄지고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윤 극대화 추구가 본격적으로 대두된다. 달리 표현하면, 자본축적 구조에서 투기가 내재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본격 대두된 대규모 신도시 개발,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확산은 모두 부동산 투자를 통한 건조환경 투자의 확대, 그리고 이로 대변되는 도시화의 확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투기적 도시화의 근거에는 부동산 가격의 일관된 폭등이 버티고 있다. 최근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²⁾ 1964년 이후 50년간 한국의 부동산 평균지가는 2,976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명목 GDP가 동 기간 1933배 증가한 것에 비교해서도 큰 폭의 증가이며, 같은 기간 쌀이나 연탄 같은 생필품은 단지 50-60배 정도 증가한 것을 고려한다면 천문학적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큰 폭의 부동산 부의 증가로 인해 2013년 현재 국내 자산의 89%가 부동산 자산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투기로서 정의될 수 있는 공격적 부동산 투자가 일상화 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는 큰 위험을 동반하며, 이러한 위험은 국가뿐만 아니라 자본도 직면하는 문제이고, 나아가 투기적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가정 역시 직면하는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에 보유자산의 상당부분을 쏟아 붓는 중산계급의 경우 국가 및 자본의 이해관계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합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중산계급이 진보적 사회변혁의 주체로 상정하는 기존 인식이 한계를 가짐을 나타낸다.

4. 도시권: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

투기적 도시화, 젠트리피케이션의 확산하에서 이에 대한 저항의 도구는 무엇일까를 고민해본다. 유용한 이론들과 실천수단으로서 도시권을 생각해본다. 데이비드 하비는 도시권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도시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하며(Harvey, 1976/2009, 314), 이러한 착취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선 도시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권리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앙리 르페브르 및 데이비드 하비 모두에게 도시권의 쟁취는 단지 개별적 권리의 쟁취만이 아닌 공간 생산 과정을 전반적으로 통

2) 다음 URL 참조: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1117010312650>.

제할 수 있는 힘이 국가나 자본이 아닌 도시민에게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Harvey, 2012; Lefebvre, 1996).

도시권은 종종 공허한 구호로 치부되기도 한다. 거시적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또한 도시권 쟁취를 위한 전략적 지침이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고자 피터 마르쿠제는 도시권을 “물질적 결핍을 경험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의 당면한 요구이자, 자신들을 둘러싼 삶이 본인들의 성장 및 창조적 역량에 개발에 저해하여 불만족인 이들의 미래에 대한 욕망”이라 정의한다(Marcuse, 2009, 190). 마르쿠제는 나아가 도시권에 대한 사회제세력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를 위해 물질적 이해관계와 문화적 이해관계 두 가지를 구분한다.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른 분류는 대략 계급적 구분을 따른다 할 수 있는데, 고위직에 선출되었거나 이를 열망하는 정치인, 체제 수호에 복무하는 지식인 그룹 (미디어 종사자, 학자 및 예술가 등 포함), 자본가 (대기업 소유주나 경영진), 젠트리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성공적인 중소기업 경영진이나 전문가 그룹 등을 포함), 개인사업자 등은 결핍층에 비해 이미 도시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결핍층에는 착취를 겪는 기존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기존 노동계급운동의 성과로 획득한 다양한 장치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이야말로 도시에 대한 권리가 시급하다고 마르쿠제는 주장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예를 들어 남성 중심의 노동운동에서 소외되고 권리의 침해를 받기도 했던 여성노동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노조 결성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는 파견직 노동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기준에 따른 분류의 경우, 체제 수호에 복무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 및 신념체계의 생산에 복무하는 이들이나 권력 비호에 힘쓰는 지식인 그룹 등은 이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도시권 보장이 가장 시급한 그룹은 경제적 계급이나 청소년, 예술가, 체제에 저항하는 다양한 지식인 그룹 등의 소외계층과, 인종/민족/성/생활양식 등에 의거하여 억압받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쿠제는 궁극적으로 체제 저항과 대안적 운동을 위해서는 어떤 세력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조직된 노동운동에 의거한 체제저항운동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계가 있으며, 현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억압을 겪는 다양한 그룹이 자본주의 극복을 꾀하고 이를 위해 도시권을 공통의 목적으로 상정하여 거대한 사회적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고민한다(Marcuse, 2009, 192).

마르쿠제의 이와 같은 시도를 한국적 상황에 맞춘 반(反)젠트리피케이션 운동에 적용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표 1 참조). 물질적 분류는 부동산 축적 체제하에서 부동산 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의 향유 정도에 따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는 대기업, 지주, 대량 주택소유주,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면서 불로소득의 임대수익을 올리는 지주 그룹,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증식에 매진하고 결과적으로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에 복무하는 부동산중개업자, 연예인 그룹, 현 부동산 축적체제의 재생산에 매진하는 정치세력, 각종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문가그룹 및 고위 행정직 등은 이미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의 이익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자가소유주 (특히 복수의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추가 임대수익을 올리는 주택소유주가 아닌), 상가세입자, 민간주택 세입자, 공공임대 세입자, 쪽방 거주자/노숙인/청년 등의 주거빈곤층은 모두 젠트리피케이션과 부동산 축적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이며 도시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면, 부동산 축적 구조를 재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한 각종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전문가 그룹, 지식인,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저항을 (예를 들어 명도소송에 저항하는 상가세입자 등)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심의 발현으로 표현하는 각종 미디어 등은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도시권을 향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 예술활동공간에서 쫓겨나는 예술가, 문화운동가, 노동을 제공하고 공간 생산에 기여하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 대안적 도시공간 창출을 고민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는 도시운동가 등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이며,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그룹이라 할 수 있다.

물질적 분류 Material Interests	부동산 소유에 따른 불로소득 향유의 정도 Extent of benefiting from property investment including landlord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벌 기업 Large conglomerates - 대규모 부동산 자산 운용하는 지주 그룹 Large landlords - 각종 부동산 중개업자 Property agents - 젠트리피케이션 선도하는 연예인 등 개별 투자자 Individual investors, raising above reasonable rental income - 부동산 축적체제 재생산에 기여하는 정치 세력, 전문가 그룹, 고위 행정직 등 Expert groups, high public figures, etc helping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자가거주자 Owner-occupiers - 상가세입자 Shop tenants - 민간주택 세입자 Private residential tenants - 공공임대 세입자 Public rental tenants - 쪽방거주자, 노숙인, 청년 등 주거빈곤층 Housing poor including youth and homeless
문화적 분류 Cultural interests	현 체제의 재생산을 위한 각종 이데올로기 및 담론을 제공하는 세력 Contribution to the sustenance of the current property regime and accumulation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데올로기 재생산에 복무하는 전문가 그룹, 지식인 Expert groups and intellectuals reproducing ideology - 도시운동이나 세입자 저항을 격화하는 미디어 등 Media denigrating activism and tenant protes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공간에서 쫓겨나는 예술가, 문화운동가 Artists and culture activists - 이주노동자 및 가족 Migrant workers/families - 대안적 활동의 도시운동가

〈표 1〉 반(反)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권: 누구와 연대 가능한가?

이러한 분류는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고민하고 현재의 부동산 축적체제의 극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저항운동의 연대 대상이 누구일지를 알려준다. 반(反)젠트리피케이션 운동이 단지 상가세입자나 주거세입자의 운동으로 그치기보다는 보다 폭넓은 연대의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1980년대, 90년대 철거재개발의 피해를 살폈던 연구는 종종 재개발 철거 이주 대상이었던 영세가옥주, 자가세입자만이 이윤추구를 위한 공간 재생산의 주요 피해자로 인식하였으며, 상가세입자 등과 같은 토지이용자는 주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곤 하였다. 한국에선 1980년대 재개발 임대아파트 쟁취 투쟁 등을 통해 일부 세입자의 재정착 가능성이 증대하고 주택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였지만, 기존 부동산 축적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지주의 이해가 지속적으로 관철되어왔다는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공간과 삶의 다양성

얼마 전 타계한 지리학자 도린 매시는 공간적 “다양성이 시간적 차이로 곧잘 여겨진다”고 비판한다(Massey 1999, 280). 즉, “일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뒤쳐졌거나’ ‘낙후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발전’의...정도가 낮은 나라들이 저개발국가, 발전도상국가 또는 신흥공업국가 등으로 인식되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Massey 1999, 280). 나아가 “...(시간적 보다는) 공간적 차이의 인식은... 다양한 서술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Massey, 1999, 281). 도린 매시의 이러한 비판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전해준다. 정책입안자나 정치인, 기업인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도 도시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공간을 바라보면서 우열을 매기고 낙인찍기를 한다. 과거 달동네, 판자촌은 단독주택단지나 아파트 지구에 비해서 낙후된 곳으로 인식하여 철거 개발의 대상으로 여겨졌는데, 주거지역의 다양성이 다양성 그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간의 서열 매기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닐 스미스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지대 차이가 곧 공간의 우열로 간주되어, 낮은 지대의 공간은 높은 지대의 공간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하였으며 곧 개발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공간, 즉 중산층과 부유층의 공간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이는 곧 낮은 지대의 공간을 점유한 사용자가 끊임없이 높은 지대의 공간 사용자와 비교되고 축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공간 이용의 다양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모습인 것이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투기적 도시화 과정을 극복하고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도시권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 공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소득층이 축출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공존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 상가세입자가 건물주의 횡포로 쫓겨나기 보다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공간 사용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주체로 인정받는 것은 모두 이러한 다양성의 인정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러한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좀 더 소극적 의미의 반(反)젠트리피케이션 운동이라 한다면, 투기적 도시화의 근간을 이루는 부동산 소유를 통한 불로소득이 창출되는 자본주의적 축적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고민의 보다 적극적 의미의 반(反)젠트리피케이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참조문헌

- Cochrane, A., 2007, *Understanding urban policy*, Blackwell, Oxford.
- Davidson, M. and Lees, L., 2005, New-build 'gentrification' and London's riverside renaissance, *Environment and Planning A*, 37, 1165-1190.
- Davidson, M. and Lees, L., 2010, New-build gentrification: Its histories, trajectories, and critical geographie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6, 395-411.
- Fainstein, S. S., 2001, *The city builders: Property development in New York and London, 1980-2000*, 2nd edition, Lawrence, Great Britain: University Press of Kansas.
- Hackworth, J. and Smith, N., 2001, The changing state of gentrification,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92(4), 464-477.
- Harvey, D., 1976/2009, *Social justice and the city*, Revised edition,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Harvey, D., 1978, The urban process under capitalism: A framework for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1-4), 101-131.
- Harvey, D.,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London: Verso Books
- Lees, L., Shin, H. B. and López-Morales, E., 2016, *Planetary gentrification*, Cambridge: Polity Press.
- Lefebvre, H., 1996, *Writings on cities*, Oxford: Blackwell.
- Lefebvre, H., 2003, *The urban revolution* (translated by Robert Bononno),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ey, D. and Teo, S. Y., 2014, Gentrification in Hong Kong? Epistemology vs. ont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8(4), 1286-1303.
- Logan, J. R. and Molotch, H. L., 1987,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ssey, D., 1999, Spaces of politics, In Massey, D., Allen, J. and Sarre, P.(eds.), *Human Geography Today*, Cambridge: Polity Press, 279-294.
- Marcuse, P., 1985, Gentrification, abandonment and displacement: Connections, causes and policy responses in New York City, *Journal of Urban and Contemporary Law*, 28, 195-240.
- Marcuse, P., 2009, From critical urban theory to the right to the city, *City*, 13, 185-197.
- Shin, H. B., 2009, Property-based redevelopment and gentrification: The case of Seoul, South Korea, *Geoforum*, 40(5), 906-917.
- Shin, H. B., 2014, Contesting speculative urbanisation and strategising discontents, *City*, 18(4-5), 509-516.
- Shin, H. B., in press, The political economy of speculative urbanisation in East Asia, In Alvarez, L., Delgado, G. and Leal, A.(eds.), *Los desafíos de la ciudad en el siglo XXI* (The challenges of twenty first century cities), Senado de la republica / Ceijch-Puc-Pues, UNAM, Mexico.

- Shin, H. B. and Kim, S. H., 2015, The developmental state, speculative urbanisation and the politics of displacement in gentrifying Seoul, *Urban Studies*, 53(3), 540-559.
- Smith, N., 1996, *The new urban frontier: Gentrification and the revanchist c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mith, N., 1979, Toward a theory of gentrification: A back to the city movement by capital not peopl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45, 538-48.

젠더 차별을 넘어 희망의 도시 상상하기

정현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1. 젠더 차별을 넘어 희망의 도시를 상상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

지난 100여년간 페미니즘 운동과 연구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닌 착취와 억압이 젠더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와 주류사회의 담론 역시 여성을 비가시화함으로써 남성중심적인 담론과 물질세계를 구성해 왔다고 비판해 왔다. 즉 이들은 ‘근대문명의 남성중심성’을 폭로하고 해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나름의 혁혁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류 지구화 담론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과거의 전철을 밟아 젠더중립적인 이론과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한 페미니즘 진영의 대응과 해법은 분산되어 있거나 주류논쟁에서 다소 거리를 두고 스스로 타자화하거나 적극적인 이론화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이에 대해 피커와 리커는 페미니즘 진영의 분열을 뼈아프게 자성하면서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차별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남성중심적인 이분법체계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페미니즘이 스스로 거대한 이분화의 장벽을 만들어내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Peake and Rieker, 2013, 1). 서구백인페미니즘이라고 대변되는 북반구 페미니즘의 이론과 쟁점 및 실천은 개발도상국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남반구 페미니즘의 관심사와 괴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북반구는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담론적 구성에, 남반구는 발전의 문제에 천착해 온 감이 있다고 피커와 리커는 지적한다.

북반구와 남반구로 분열된 페미니즘 진영은 주류이론과 정책으로부터 소외 내지는 스스로 거리두기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가령 ‘중요’하다고 항상 우선시되는 정치경제담론은 여전히 젠더블라인드 관점에서 논의되고 확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론화와 담론에서도 젠더와는 상관없는 신자유주의라는 유령이 마치 지구를 잠식하고 생활세계를 파괴하며 유례없는 양극화를 양산하는 듯한 상상이 만연해 있다.

그렇다면 세계금융과 글로벌 도시는 과연 젠더중립적으로 작동하는가? 젠더는 마치 ‘중요’한 모든 논의들이 끝나고 난 뒤 그 밖에 ‘소소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에 상투적으로 동원되는 관념어인가? ‘여성친화적’이라는 최근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여러 정책의제 중 마지막 부분에 살짝 추가하면 되는 관행에 불과한 것인가? 또는 많은 사회에서 제도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졌으므로 페미니즘은 동력을 상실한 관점이며 따라서 젠더문제도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주제인가?

우선 여성주의 의제가 자본주의와 정치경제 등 거시담론과는 거리가 먼 재생산과 일부 ‘소소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부차적이라는 관념은 남성주의적 문명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이다. 여성주의 의제는 ‘일부’ 여성들을 위한 지엽적이고 수혜적인 복지정책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류 정치경제 및 모든 학문분야 담론에서 폄하되는 재생산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재생산이 생산과 분리된 부차적 영역인지부터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지구적인 자본주의 생산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성을 지닌 탐구 대상이라면, 가령 집 안에서 먹고 자는 문제나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문제는 지구적 자본주의와는 무관한 덜 중요한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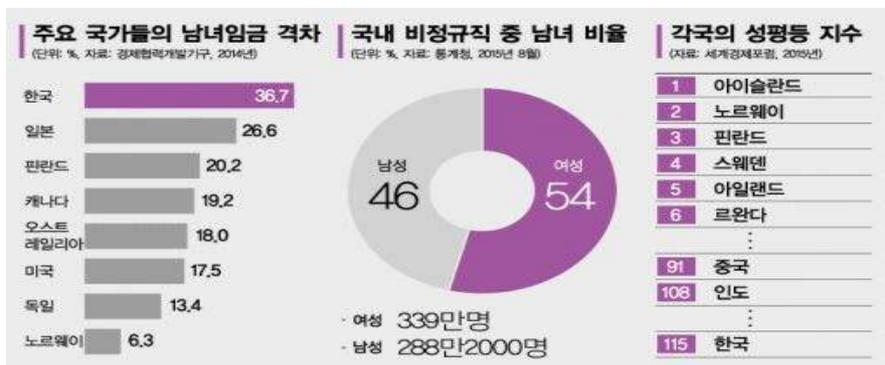
금융자본주의의 중심지인 런던의 금융 엘리트의 일상을 한 번 상상해보자. 그는 아마도 전형적인 백인 남성일 가능성이 높고 중심가의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날마다 잘 다려진 와이셔츠를 입고 건강하게 관리된 몸을 유지하며 증권가로 출퇴근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러한 지구적 상위 엘리트 계층인 데니즌들이 높은 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날마다 와이셔츠를 다리고 영양식을 제공하며 쾌적하게 집을 관리해

야 한다. 전통적으로는 전업주부가 이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최근에는 제3세계에서 이주해 온 이주노동자들이 제1세계의 재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다.

남편들과 비슷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21세기 제1세계 일부 여성들이 ‘해방’되었다고 해서 페미니즘의 종말을 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부 여성들은 해방되었을지 몰라도 지구상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빈곤의 사다리에서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적 자본주의는 이러한 권력관계를 충분히 활용하며 작동하고 있다. 노동의 젠더분업은 여전히 자본주의 작동의 핵심기제이다.

이 글에서 필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첫째, 자본주의 생산과 재생산은 이분화되기 보다는 상호연동되어 작동해 왔으며, 최근에는 특히 재생산이 급속히 유급노동화되면서 생산의 영역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여성들에게 국한된 이슈로 폄하되거나 주요 정치경제담론에서 주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여성들을 (주로 단순 사무직 내지는 비정규직으로) 대거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노동의 유연화를 증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생산의 공백은 또 다른 여성들의 유입으로 메우는 이른바 지구적 돌봄연쇄(global care chain)(Sassen, 2002)의 형성과 노동의 젠더분업(Massey, 1995)을 근간으로 하여 유지되고 있다. 정치경제학 이론에서부터 도시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공담론에서 젠더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뜻이다.

둘째, 젠더관점은 남/녀를 이분화해서 여성들에게 수혜를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남/녀를 이분화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무엇이 남성적이고 무엇이 여성적인지를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젠더관점을 주창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주로 여성의 억압과 해방을 주창하는 이유는 젠더중립이라고 주장해 온 관점이 사실은 남성중심적이며, 따라서 젠더중립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여성억압적인 권력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므로 젠더화된 관점은 주로 억압당했던 여성적 주체를 해방하는 데에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멀리 제3세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제도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21세기 대한민국도 여전히 여성에게 억압적인 남성중심적 사회이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련의 성범죄도 전부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권력의 약자인 여성들이었다. 피해자였던 그녀들은 강남의 한 복판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거나 시골 지역에서 소위 선망의 직업이라고 하는 교사였던 여성들로서, 언뜻 보기에는 피해를 당할만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폭력범죄에 노출되었다. 문제는 강남이든 섬지역이든, 여대생이든 여교사든 이 사회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점이다.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1위(36.7%)이며 성평등 지수가 르완다나 인도보다 낮은 115위(2015 세계경제포럼)라는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성적 의제와 성인지적 정책이 젠더평등을 위해 여전히 이 사회에서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넘어 근본적으로 젠더차별을 극복하는 대안적 인식론과 정책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이론적 자원을 탐색하는 것이 이 글의 또 다른 목표이다.



셋째,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페미니즘이 비판적 사회운동과 이론으로서 그 동력을 상실한 듯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페미니즘 내부의 분열이다. 필자는 분열된 페미니즘을 하나로 다시 통합할 것을 주창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다원화된 페미니즘 이론‘들’이 여러 층위에서 비판이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론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를 비롯한 최근 페미니즘 연구자들의 문제인식이다. 페미니즘의 문제는 서로 소통하지 않고 연대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은 ‘정치적’ 문제이지 분열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여성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만큼 ‘여성’은 다양한 정체성들이 교차하고 경합되는 장이다. 전술한 사례처럼 제1세계 여성과 제3세계 여성은 삶의 장이나 당면과제 등에 있어서 동질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별화된 삶의 경로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같은 사회에서도 백인여성이나, 흑인여성이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억압을 경험하기도 한다. 젠더뿐만 아니라 인종, 계급, 학력, 국적 등에 따라서 여성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위치들로 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젠더 하나로 일원화하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동시에 폭력이 될 수 있다. 페미니즘이 비판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이론적 대안은 다양한 여성들의 입장을 성찰하고 (남성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여성들 간의 차이와 억압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 있는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여성학계에서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론을 통해 이러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교차성 이론이란 젠더와 인종, 계급 등 다양한 권력의 기제들이 상호교차하며 억압의 지점과 층위들이 만들어 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성들 간의 다원화된 정체성에 따른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본문에서는 교차성에 입각한 접근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아직 이론화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접근을 희망의 도시를 위한 대안적인 젠더정책 입안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페미니스트 도시연구의 흐름: 성과와 한계

1)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젠더화된 도시 연구

도시와 젠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제2물결 페미니즘(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라고도 불리는) 부터이다. 1970년대 이후 근대도시가 당면한 문제와 자유주의 이론의 한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페미니즘은 자본주의+가부장제가 도시공간을 통해 어떻게 젠더 억압 기제를 재생산하는지 비판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들은 근대도시의 구조와 형태 자체가 남성중심적이며 여성억압적인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비판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도시계획가이자 건축이론가인 돌로레스 하이든(Dolores Hayden, 1984)은 *Redesigning the American Dream*을 통해 미국의 교외핵가족 모델을 구현해 준 건축 및 도시계획에 내포된 폭력성과 여성억압을 고발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대안적인 페미니스트 주거모델을 제시하면서 건축 및 도시연구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페미니스트 건축이론가인 레즐리 케인즈 와이즈만(Leslie Kanés Weisman, 1992)은 현대 도시의 건축과 계획이 여성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남성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디자인되었음을 고발하면서 이러한 도시의 물질문명은 남성중심적 상징체계를 통해서 상호 구현되면서 인류의 대표적인 불평등을 역사적으로 구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시의 물리적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젠더불평등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젠더불평등이 도시의 작동 방식을 구조화한다는 연구도 등장했다. 대표적인 연구는 수잔 헨슨과 제럴딘 프랫(Susan Hanson and Geraldine Pratt, 1991; 1994)의 서구 도시의 젠더화된 고용/통근 패턴 분석이다. 이들은 젠더관계와 젠더화된 노동분업으로 인해 서구 교외지역의 중산층 여성이 교외화로 인해 더욱 공간에 갇히게 된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성역할로 인한 여성의 이동성 제약은 결과적으로 교외에 거대한 핑크칼라게토(유순하고 유연한 파트타임 노동자 풀)를 양산했으며 이는

결국 교외 백오피스화의 배경이 되었다. 도린 매시(Massey, 1995) 역시 영국의 제조업이 대도시에서 중소 도시로 분산 이전한 산업의 탈중심화 및 공간적 재구조화 이면에는 노동조합 경험이 없는 유순하고 값싼 여성노동력을 제조업의 말단부에 포진시키려는 자본의 전략이 있었으며 이를 정치/사회적으로 용인하고 부추긴 것은 노동의 젠더분업 및 불평등한 젠더관계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20세기 중반 이후 도시화 과정의 핵심 기제 중 하나가 바로 젠더관계이며 따라서 도시의 물질적, 상징적 구조화는 젠더화된 과정임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젠더화된 과정은 젠더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도시 및 자본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제2물결 페미니즘 이래로 페미니스트 공간 연구가들은 근대도시가 젠더이분법의 물질적 구현임을 정교하게 드러내고 이를 이론화하는데 기여했다. 젠더이분법이란 남성과 여성의 대립항으로서 여성을 이분화하고 이 둘의 차이를 다른 이분법들과 결합시키는 일종의 이분법적 세계관이다. 남성과 여성의 대립은 공적/사적, 생산/재생산, 문명/자연, 이성/감성 등의 끝없는 이분법의 결합으로 공고히 구축되었다. 이러한 이분법의 문제점은 제1항인 남성적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 대립항을 설정함으로써 결국 제2항은 연구히 제1항의 반테제, 즉 타자가 된다는 점이며, 이 세계는 오로지 제1항과 나머지로 양분되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히게 된다는 점이다. 즉 남성이 아닌 것은 다 여성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제1항인 남성은 공적-문명-이성-생산과 동일시되어 지식의 주체이자 세계의 주인이 된다. 반면 이와 반대되는 특징(사적-자연-감정-재생산)은 여성적인 특징으로 간주되면서 여성은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이성적 학문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문명의 반대항인 자연(야생)과 동일시되어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했다(Rose, 1994).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도시는 남성적 생산을 위한 공간으로 규정되었으며 여성은 도시의 타자로서 도시로부터 분리되어 '가정의 천사'가 되도록 강요받았다. 직장과 주거를 아예 공간적으로 분리한 용도지구제(zoning system)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실제 도시계획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물로서 젠더이분법의 20세기적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재생산의 영역인 교외에 갇혀 있게 된 반면 도시라는 공적공간은 여성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이 공공연히 합리화되기도 했다. 최근에서야 도시의 밤거리 안전 문제라든지 도시 공공시설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역으로 최근까지 여성은 도시에서 안전하지 않았으며 공공시설 접근성에 제약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현실이 용인되어 왔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1)

이상의 연구들은 남녀의 차이가 물질적 공간과 그에 대한 담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왔음을 밝힘과 동시에 그동안 타자였던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도시경험을 재해석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연구는 실제로 도시정책과 디자인에 젠더관점을 반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가령 제2물결 페미니즘 이래로 미국에서는 여성건강센터, 여성쉼터, 여성북카페 등 여성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안전공간이 급격히 증가했다(Spain, 2016). 또한 여성의 밤길 안전을 촉구하는 사회운동을 촉발하기도 했으며2) 1995년 베이징

1)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에 대한 남성의 문자마 살해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과 보도 행태는 이전의 유사한 범죄들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비교해서 차이를 드러낸다. 5월 17일 사건 직후 (경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성혐오' 범죄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열풍이 불어 큰 사회적 공감대를 일으켰다. 반면 약 10년 전인 2007년 8월 택시기사로 위장한 3인조 강도가 강남역과 홍대앞 인근에서 여성을 납치하여 살해한 사건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반응은 이와는 사뭇 달랐다. 피해자에 대한 추모보다는 여성이 그 시각에 그런 장소에 있는 것이 합당하기라는 처신 논란이 더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성숙해진 인식과 대처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해결책은 여전히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2007년 당시에도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핑크택시의 확대였고 2016년에도 여성전용 화장실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문제의 본질은 안전한 택시나 화장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도시와 안전, 나아가 여성인권의 문제이다. 여성전용공간의 확대는 도시정책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채택해 온 여성정책이며 Spain(2016)의 미국 사례연구처럼 여성 힘 기르기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핑크택시나 여성전용 화장실을 비롯해서 여성전용 주차구역, 지하철 여성전용칸 등이 비슷한 맥락의 공간정책이다. 이에 대한 성과와 한계는 또 다른 정교한 분석을 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2) 여성의 도시 밤거리 안전을 촉구한 사회운동은 서구의 Take Back the Night 운동이 대표적이다. 도시의 밤길에서 희생된 여성을 추모하면서 유럽에서 시작되어 북미와 전 세계로 퍼져간 이 운동은 해마다 주요 도시와 각 대학 캠퍼스에서 열

세계여성대회에서는 모든 공공정책의 입안과 결정에서 젠더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는 성주류화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의 페미니스트 도시연구의 흐름은 큰 성과와 더불어 어느 정도 한계를 노정하기도 했다. 제일 많이 거론되는 문제점은 이러한 연구와 정책이 서구중산층백인 여성을 보편적 여성으로 상정함으로써 특정 계급의 여성들의 권익과 시선을 대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흑인페미니즘을 비롯한 제3세계 페미니즘 진영에서 제기되었다. 서구중산층백인여성들의 현안인 보육과 모성, 가정폭력 문제가 마치 여성문제를 대변하는 것인 양 성주류화 담론의 주요 의제가 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제3세계 및 유색인종 여성들은 빈곤과 노동의 문제, 인종차별이 결합된 젠더차별 문제, 성폭행과 인신매매 문제 등 여성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주장했다.

여성들 간의 차별성 문제와 더불어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성을 위한 담론과 정책들이 남성/여성이라는 양성간의 젠더이분법이라는 근본적인 틀을 깨지 못한 채 여성을 수혜대상으로 상정함으로써 오히려 이분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대부분의 젠더 의제가 ‘여성적’ 문제에 국한되어 마치 남성들의 이해관계와 대립적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아니면 남성들과는 상관없는 지엽적인 문제로 폄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대한 시정은 남성들의 권익을 제약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일부 남성들의 격앙된 반응은 이러한 오해를 대변한다. 남성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약자들에게도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이며 이는 사회정의와 복지, 인권의 문제이므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이다. ‘여성적’ 문제에 대한 이처럼 지엽적인 접근은 여성-재생산을 남성-생산과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뿌리 깊은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기원한다. 생산과 재생산의 상호구성성에 대한 연구나 이분법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 동안 핍박받던 여성의 권익을 증진한다고 근본적인 젠더 차별은 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남성과 여성을 대칭적인 집단으로 규정하는 한 상대적으로 어느 한 쪽은 계속 억압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이 남성성이고 무엇이 여성성이라고 규정되는지, 누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는지 등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대안적 인식론과 실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시대의 페미니즘은 이러한 권력관계를 성찰하는 비판이론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2) 제3물결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의 다원화

제2물결 페미니즘이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하여 분배의 젠더부정의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고 이에 대한 일부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면 제3물결 페미니즘이라고 통칭되는 다양한 흐름들은 여성 내부의 차이와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단일한 ‘여성’ 범주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거시적인 사회구조 변화를 통해 여성해방을 주창한 제2물결 페미니스트들과 달리 이들은 모든 여성을 동시에 해방시킬 단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억압 기제가 있다는 가정부터 부정한다. 복잡한 권력의 지형 속에서 모든 여성은 상이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또는 허용된) 저항 전략은 자신과 동떨어진 거시적인 사회변화 보다는 일상의 공간에서 펼치는 미시정치이다. 따라서 이들은 일상에서 담론화된 권력을 해체하고 중심뿐만 아니라 주변의 목소리들을 복원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정현주, 2013).³⁾ 제3물결 페미니즘은 흑인 페미니즘과 제3

리고 있다(www.takebackthenight.org). 한국에서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달빛시위’(www.dalbeat.net)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바 있으며 최근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으로 전국 각지에서 달빛시위가 다시 열리기도 했다.

3) 제3물결 페미니즘은 흑인 페미니즘과 제3세계 페미니즘을 아우르는 포스트식민주의 계열과 라캉과 푸코 등 프랑스 정신분석학과 철학 전통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추구한 포스트구조주의 계열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정현주, 2013).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뿐만 아니라 섹스와 젠더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본질적인 여성 주체를 부정하는 포스트구조주의 학자들은 성차의 사회적 구성 및 무수히 다양한 젠더가 구성되는 방식을 탐구한다. 반면 포스트식민주의 학자들은 인종과 젠더 문제

세계 페미니즘을 아우르는 포스트식민주의 계열과 라캉과 푸코 등 프랑스 정신분석학과 철학 전통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추구한 포스트구조주의 계열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정현주, 2013).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뿐만 아니라 섹스와 젠더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본질적인 여성 주체를 부정하는 포스트구조주의 학자들은 성차의 사회적 구성 및 무수히 다양한 젠더가 구성되는 방식을 탐구한다. 반면 포스트식민주의 학자들은 인종과 젠더 문제를 결합하여 제3세계, 흑인, 제1세계의 빈민층 등 다양한 위치의 주변부 여성주체들의 해방과 연대를 모색하며 따라서 해체적 입장보다는 연대의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둔다.

최근 페미니즘은 인종, 국적, 계급, 학력, 종교 등에 따라 여성은 무수히 다양한 위치성을 지니며 교차하고 협상되는 정체성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성 간의 차이는 남/녀의 차이 못지않게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젠더역압은 단순히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가 무수히 다양한 차이들과 결합되어 조성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된다. 따라서 도시연구에서도 도시를 단지 여성차별적인 추상적 실체로 단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의 파편화되고 다원화된 경험들에 주목하는 접근이 등장하게 되었다. 가령 젠더,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 등이 결합하는 양상에 따라 도시경험과 역압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흑인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벨 훅스(bell hooks)는 미국사회에서 흑인여성으로서 겪는 도시경험의 차별성을 한 편의 에세이에서 설득력있게 제시한 바 있다. *Yearning: Race, Gender, and Cultural Politics*(1990)의 한 장을 구성하는 'homeplace'를 통해 훅스는 집과 가정은 백인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것처럼(젠더) 폭력의 온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잔인한 인종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그나마 흑인여성들을 보호해 주고 흑인 저항운동을 배양한 산실로 볼 수도 있음을 역설했다. 즉 도시 슬럼가에 형성된 흑인공동체의 역할을 흑인 남성의 폭력 문제 때문에 폄하하고 부정해선 안 된다는 의미이다(박용진·정현주 외, 2014). 유색인종 페미니즘의 대표 주자인 글로리아 안잘두아(Gloria Anzaldúa)는 서구에 의해 유린되어 온 '접경지대'라는 혼종적 공간을 통해 서구백인자본주의와 전통적 가부장제 양자에 저항하는 탈식민적 여성주체(이를 mestiza 주체라고 호명)의 형성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메스티자 주체는 식민주의적 착취의 경험과 가부장제에 의한 성적 억압 등 이중삼중의 억압을 체현한 여성적 주체로서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하위주체이자 강력한 저항의 상징이다(Gloria Anzaldúa, 1999; 노승희, 2005).

한편 포스트구조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연구가들은 도시공간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구성을 탐색해 왔다. 가령 퀴어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등은 섹스/젠더의 이분법적 구성 그 자체를 문제시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주어진 섹스란 없으며 젠더와 섹스 모두 강제적 이성애를 제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구라고 보았다(배은경, 2004). 따라서 페미니즘의 주체로서 '여성'이라는 범주에 도전하면서 기존의 전형적인 여성/남성에서 벗어난 다양한 젠더들의 도시적 수행과 이들을 타자화하는 근대도시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Butler, 1990; Bell et al., 1994; Bell and Valentine, 1995; Duncan, 1996).

이러한 접근들은 젠더이분법을 흔드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다양한 억압의 지점들을 규명함으로써 페미니즘 실천과 연대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기도 했다. 페미니즘 내부의 분열은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라 다원화된 입장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귀결이며 오히려 차별화된 쟁점들을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론적 다원화와 정치적 연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원화에 따른 중심의 해체와 실천적 동원의 약화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여성적 중심이 해체된 마당에 무엇으로 연대를 제안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신자유주의적 침탈을 막아내고 대안적인 공동체를 상상하는 이론과 실천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를 결합하여 제3세계, 흑인, 제1세계의 빈민층 등 다양한 위치의 주변부 여성주체들의 해방과 연대를 모색하며 따라서 해체적 입장보다는 연대의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둔다.

3) 교차성 분석: 페미니스트 도시연구의 한 가지 대안

페미니즘 중심의 해체에 대한 우려는 다시 일원화된 중심을 설정하기 보다는 다원화된 목소리들이 발원하는 맥락에 대한 분석으로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즉 단일한 목소리는 없지만 다양한 여러 목소리들을 아우르며 그 목소리들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연대의 틈새를 파악하고 간격을 좁히는 노력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이론적/방법론적 대안은 최근 국내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되기 시작한 교차성 분석이다.

교차성은 계급, 젠더, 인종, 섹슈얼리티, 연령, 시민권, 장애, 종교 등이 각각 특정한 억압구조를 만들어 내며, 이처럼 여러 억압구조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서 특정한 사회구조와 권력관계를 규정한다고 보는 접근방식이다(박미선, 2014; 정현주, 2015). 각 억압구조들은 1+1 식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규정하며 결합을 통해 강화되기도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억압구조는 개인들의 삶의 맥락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교차하게 된다. 가령 어떤 이에게는 젠더문제가, 다른 이에게는 인종 문제가 더 절박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주체들의 다양한 위치성(계급, 젠더, 인종, 섹슈얼리티 등등에 따라 위치지워지는)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접근은 입장이론(standpoint theory)에서 출발하여 흑인페미니즘 이론가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다듬어졌다. 주류 페미니스트들과도 또 다른 입장에 처한 이들이 보기에 젠더 억압은 단순히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차별 및 계급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였다. 그들이 경험하는 젠더억압(가령 흑인 가정부가 겪는 차별)은 백인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젠더억압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복잡한 문제였다. 흑인 여성들은 인권운동에 참여하면서도 끊임없이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 사이를 방황하며 한 가지 방향에 헌신할 것을 강요받았다(박미선, 2014). 극심한 노동착취 체제인 노예제에서 시작되어 인종차별과 성차별로 공고해진 다중적 억압을 받았던 흑인 여성들에게는 인종철폐와 성차별 철폐, 계급해방투쟁이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다중적 억압에 대한 인식은 페트리샤 힐 콜린스와 킴벌리 크렌쇼 등에 의해 교차성 분석으로 발전되었다. 페미니스트 법학자인 크렌쇼는 교차성을 최초로 분석의 개념어로 제시한 학자이다. 그녀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은 항상 맞물려 작동하지만 사회운동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각각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인식함을 비판하면서 교차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Crenshaw, 1991).

억압을 교차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다양한 여성들이 겪는 젠더억압은 매우 다른 것이 된다. 가령 21세기 서울에서 사는 중산층 주부가 겪는 가부장제의 문제점은 경상북도의 한 시골마을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가부장제의 문제점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뜻이다. 이것이 도시연구 및 정책에 함의하는 바는 여성적 의제가 모든 여성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정책의 대상에 대한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가령 ‘여성이 행복한 도시’의 수많은 정책들은 어떤 여성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누가 수혜를 입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현재, 2010).

이러한 접근의 문제점과 한계는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현실적 문제에 적용시키기 매우 모호하고 복잡하다는 점이다(Choo and Ferree, 2010). 너무 많은 복잡성들을 고려해야 하다 보니 변수를 통제해야 하는 구체적인 분석에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론적 소개나 당위적 선언으로 추창될 뿐 실제 경험연구에서 교차성 분석을 적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⁴⁾ 현재까지 교차성 개념을 가지고 경험연구에 적용시킨 사례로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는 질 발렌타인(Gill Valentine, 2007)의 레즈비언 장애여성 연구와 주와 페레(Choo and Ferree, 2010)의 3가지 유형의 교차

4) 한국 여성학계 역시 교차성을 유용한 이론적 자원으로 보면서도 이를 구체적인 정책연구에 적용시키기에는 난관이 있음을 토론했다(배은경, 2016).

성 분석 제시가 대표적이다. 주와 페레는 교차성을 집단 지향적, 과정 지향적, 시스템 지향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입장이론에서 발전한 특수한 위치에서의 목소리 전달, 억압의 상호작용 양상에 대한 다중적 분석, 제도적 분석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제시했다(Choo and Ferree, 2010). 이러한 접근은 분석의 대상에 따라 포커스를 두어야 할 교차성의 양상을 범주화해 주며 따라서 현실 분석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류이다.

한편 도시 연구와 교차성의 이론적 접점은 발렌타인의 연구에서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발렌타인은 교차성 개념을 연구에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장소’를 기술의 맥락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발렌타인은 시간의 흐름대로 개인의 일대기를 구성할 경우 다양한 교차성을 유기적으로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이 아닌 장소의 맥락에 따라 교차성의 양상을 서술하는 사례를 한 장애여성의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러한 접근의 이면에는 공간이 억압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특정한 억압의 결합은 공간을 통해 배열되고 구조화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즉 공간은 억압이 작동하는 장인 동시에 그 결합 양상을 세팅하는 구체적 맥락이다. 공간이 억압을 생산하고 그 결합방식을 구조화하기 때문에 억압의 교차성을 포착하고 그것을 동시에 드러내는 유용한 방법론적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시의 여러 공간을 대상으로 특정 개인 내지는 집단에게 교차하는 억압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교차성 이론을 성급히 정책연구에 적용하려고 하다보면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론연구를 정책연구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평가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3. 남은 과제들

제3물결 페미니즘이 서구의 도시경험을 위주로 하거나(특히 포스트구조주의) 아니면 서구의 식민주의적 침탈을 직접적으로 받은 제3세계 위주로 구성됨에 따라(포스트식민주의) 아시아적 모델에 대한 연구가 결핍되어 있다. 한국의 페미니스트 공간연구자들은 주변과 중심의 틈새공간으로서 아시아 또는 아시아 발전주의 패러다임, 유교적 가부장제 등 서구편향적인 이론이 간과하고 있는 지점을 찾아서 이를 이론화에 개입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서두에서 제기한 문제로 되돌아가서, 신자유주의 도시화가 던지는 도전과 과제들에 대해서 페미니즘 진영은 여전히 충분한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소위 말하는 ‘재생산’의 영역을 착취적으로 유급노동화함으로써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가령 대한민국의 청소노동은 전체 업종 중 고용인원 11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비정규직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외주화된 재생산 영역이다. 최소 시급과 기본적인 노동조건도 갖추지 않은 열악한 조건으로 고용된 이 청소노동자들의 80%는 여성이다(안숙영, 2011). 생산과 재생산의 이분법과 재생산의 비공식화는 여성억압을 은폐할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오늘날의 도시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전통적인 노동의 분업을 넘어 ‘젠더화된 노동분업의 지구화’를 통해 새로운 권력관계와 지리적 불균등이 지구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등 체인의 말단에는 제3세계 출신 이주노동자, 제1세계 내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비체화된 주체(가령 성매매여성, 장애인, 난민, 노숙자 등 공식담론에서도 소외된 존재들) 등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의 다수는 여전히 여성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젠더화된 관점과 의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여성들 내에서도 다양한 차이를 민감하게 고려하는 접근이 더욱 요구된다.

도시는 다양한 권력관계와 억압이 생성되고 매개되는 대표적 공간이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21세기 문명의 화려한 쇼케이스장인 동시에 그 이면의 어두움이 공존하는 야누스적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통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도시야말로 창발적 에너지가 결집된 공간이며 다양한 삶의 궤적들이 우연적으로 배열되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변종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에너지와 변종이 포착되는 도시 공간을 찾아내고 생성해내는 것이 바로 희망의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그러나 희망을 노래하기 전에 먼저 신자유주의적 ‘강탈에 의한 축적’(Harvey, 2005)의 현장이자 매개체인 일상의 장소들을 드러내고 재의미화함으로써 모순에 균열을 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젠더 이론과 관점은 우리 안의 권력을 성찰함으로써 그러한 강탈이 가해지는 양상을 드러내는 지적 도구이다.

5) 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일하는 여성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70%에 달하고, 정규직 남성의 임금이 100이라면 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66.1,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36.3에 불과하다(김현미, 2015).

참고문헌

- 강미선, 2010, “젠더 관점에서의 도시계획과 건축,” 국토, 372, 21-28.
- 김현미, 2015, “청년 여성의 일과 좌충우돌 이동의 생애사: 해법의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 청년노동, 말하는대로- 20~30대 여성들의 일 경험을 중심으로, 4-19.
- 노승희, 2005, “전지구화 시대의 대항 페미니스트 주체: 글로리아 안잘두아의 유색여성 페미니즘과 메스티자 주체론,” 영어영문학21, 18(1), 27-52.
- 문현아 옮김, 2009,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Parreñas, R. S.,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 문현준 옮김, 2008,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파주: 문학동네(Butler, J., 1990, *Gender Trouble*, New York: Routledge).
- 박미선 옮김, 2004, 유목적 주체: 우리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차의 문제,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Braidotti, R., 1994, *Nomadic Subjects: Embodiment and Sexual Difference in Contemporary Feminist The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 박미선·이현재·김은주 옮김, 2011, 트랜스포지션: 유목적 윤리학, 서울: 문화과학사(Braidotti, R., 2006, *Transpositions: On Nomadic Ethics*, Polity Press, Cambridge).
- 박미선, 2014, “여성주의 좌파이론을 향해서: 흑인 페미니즘 사상과 교차성 이론,” 진보평론, 59, 105-125.
- 박미선·주해연 옮김, 2009, 흑인페미니즘 사상,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Collins, P. H., 2000, *Black Feminist Thought*, Routledge & part of Talyor & Francis Group LLC).
- 박용진·정현주 외, 2014, 사상가들 도시와 문명을 말하다, 파주: 한길사.
- 배은경, 2004, “사회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 연구: 개념사적 접근, 페미니즘 연구,” 4(1), 55-100.
- 배은경, 2016,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 32(1), 1-46.
- 안숙영, 2011, “젠더와 공간의 만남을 위한 시론: 젠더평등의 관점에서,” 여성학연구, 21(2), 7-37.
- 안숙영, 2012, “젠더와 공간의 생산: 여성청소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2(3), 89-112.
- 이현재, 2010, “여성주의적 도시권을 위한 시론: 차이의 권리에서 연대의 권리로,” 공간과 사회, 34, 5-32.
- 임동근·박훈태·박준 옮김, 2010,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서울: 문화과학사 (Harvey, D. 2005, *Spaces of Neoliberalization: Towards a Theory of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 정현주, 2015,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대한지리학회지, 50(3), 289-303.
- 정현주 옮김,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파주: 한길사(Rose, G., 1994, *Feminism and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정현주 옮김, 2015, 공간, 장소, 젠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조영미, 2009, “여성 친화 도시 만들기 정책의 실제와 과제: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제 25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발전의 시대 공간의 젠더정치, 51-69.
- Anzaldúa, G., 1999,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2nd edition), Aunt Lute Books,

San Francisco.

- Bell, D. and Valentine, G., 1995, *Mapping Desire: Geographies of Sexualities*, London: Routledge.
- Bell, D., Binnie, J., Cream, J., and Valentine, G., 1994, All hyped up and no place to go, *Gender, Place and Culture*, 1(1), 31-47.
- Choo, H. Y. and Ferree, M. M., 2010, Practicing intersectionality in sociological research: a critical analysis of inclusions, interactions, and institutions in the study of inequalities, *Sociological Theory*, 28(2), 129-149.
- Crenshaw, K.,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1242-1243.
- Deutsch, S., *Women and the City: Gender, Space, and Power in Boston, 1870-1940*, Oxford University Press.
- Duncan, N.(ed.), 1996, *BodySpace: Destabilizing Geographies of Gender and Sexuality*, London: Routledge.
- Freeman, C., 2001, Is local: global as feminine: masculine? Rethinking the gender of globalization,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6(4), 1007-1037.
- Glass, M. and Rose-Redwood, R., 2014, *Performativity, Politics, and the Production of Social Space*, New York: Routledge.
- Hanson, S. and Pratt, G., 1991, Job search and the occupational segregation of wome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1(2), 229-253.
- Hanson, S. and Pratt, G., 1994, On suburban pink collar ghettos: the spatial entrapment of wome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4(3), 500-504.
- Hayden, D., 2002, *Redesigning the American Dream* (2nd edition),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Jarvis, H., Kantor, P., and Cloke, J., 2009, *Cities and Gender*, New York: Routledge.
- Martin, Z., 2014, Sex in the city: gender mainstreaming urban governance in Europe. The case of Sweden and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y*, 192 (1), 54-64.
- Massey, D., 1995, *Spatial Divisions of Labour* (2nd edition), Macmillan.
- Massey, D., 2006, *For Space*, Saga, London.
- Miranne, K. and Young, A., 2000, *Gendering the City*,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Peake L. and Rieker, M., 2013, *Rethinking Feminist Interventions into the Urban*, New York: Routledge.
- Sassen, S., 2002, Global cities and survival circuits, in Ehrenreich, B. and Hochschild, A. R.(eds.),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Metropolitan Books, New York, 254-274.
- Spain, D., 2016, *Constructive Feminism: Women's Spaces and Women's Rights in the American City*, Cornell University Press.
- Thomas, M. and Ehrkamp, P., 2013, Feminist theory, in Johnson, N. C, Schein, R. and Winders, R.(eds.), *The Wiley-Blackwell Companion to Cultural Geography*, pp. 29-31.
- Weisman, L., 1994, *Discrimination by Design: A Feminist Critique of the Man-Made Environment*,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제4부

희망의 도시, 대안적 정책은 무엇인가?

<도시의 진보와 진보도시의 조건>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발전도시 위기와 포용도시로의 도시정체성의 재정립>

정병순 |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사회적 경제와 대안적 도시만들기>

박세훈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의 진보와 진보도시의 조건1)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1. 진보도시론의 문제설정

아시아 도시들에서는 최근들어 사람중심 도시만들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진보도시(progressive city)’론이 빠르게 대두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Douglass, 2015와 Cho, 2015 참조). 이는 그간 경제가치 중심의 외형적 도시 성장에 대한 반성으로 사람중심의 도시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된다. 길게는 지난 40~50년간, 짧게는 10~20년간, 아시아 도시들은 급격한 근대화를 겪으면서 화려한 물질적 성장과 장소적 번영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적 삶의 온전함, 사람중심의 도시가치,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 도시 민주주의나 지속가능성 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이 목격되고 있다.

‘진보도시 만들기’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마이클 더글러스(Mike Douglass) 교수에 따르면 ‘외형적 화려함이나 경쟁력보다는 토속성과 일상 행복이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만드는 데 더 중요하다’고 한다. ‘장소의 번영’보다 ‘사람의 번영’이 곧 진보를 지향하는 도시의 진정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도시의 진보는 현재의 지배적인 도시 시스템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사람중심의 가치를 도시주체들이 자의식적으로 복원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커뮤니티, 공공공간, 사회경제, 토속문화, 인권과 정의, 참여 거버넌스, 도시권리 등이 곧 진보도시론을 구성하는 키워드이다. 담론과 실천으로서 진보도시(론)는 사실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니다. 파리의 코뮌도시, 영국의 전원도시론, 미국의 진보도시, 영국의 자치사회주의, 일본의 혁신자치 등은 진보도시 만들기의 역사적 경험들이다. 중남미권에선 브라질 상파울루시가 2012년 ‘도시포럼’을 개최하면서 진보도시 만들기에 관한 담론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 선 바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진보적 성향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중심 도시 만들기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구분 없이 많은 후보자들이²⁾ ‘사람중심 도시만들기’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된 뒤엔 다양한 시책으로 이를 실행으로 옮겼다. 시정운영을 토건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옮긴 모범적인 사례로서 2011년 중간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원순 시장 하의 서울시를 꼽을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종전의 시장과 달리 박원순 시장은 처음부터 사람,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문화유산, 소통, 참여, 복원 등을 중심 가치로 하는 시정을 펼쳤다(조명래, 2015). 1960년대와 1970년대 일본의 혁신자치 붐에 비견될 수 있는, 한국의 이러한 사람중심 도시 만들기 실천을 진보도시란 개념으로 특성화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이념형으로 더욱 발전시켜갈 수 있다. 실제 2013년 10월 아시아권 도시학자들은 서울시장을 방문해 진보도시론을 확산시키는 데 서울시가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엔 서울연구원 주최로 ‘진보도시 국제 심포지움’이 국내에서 최초로 열렸다.³⁾ ‘민주화 이후 민주화’의 한 현상(공간적 민주

1) 정리가 덜 된 초고입니다.

2)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한명숙 전총리는 서울을 ‘사람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타 후보와 차별을 기했다. 당시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후보도 ‘사람이 반가운 수원’이란 가치를 내걸고 선거에서 선전을 했다. 충남의 안희정 지사 후보도 ‘사람중심 충남’을 으뜸 공약으로 내세웠고 재임동안 이를 이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구치원에서 서울의 중구, 금천구, 성북구, 강동구, 광주의 광산구 등이 ‘사람중심 도시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지자체장들이 다양한 이름의 ‘사람중심 도시만들기’를 내걸고 사람우선 혹은 사람중심의 자치행정과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람, 공동체, 참여, 복지, 등을 강조하는 사람중심 도시 만들기 정책은 이렇게 하여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게 되었다(조명래, 2015).

화)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한국 도시들의 진보도시 만들기 실천들은 비슷한 성장경로를 밟고 있는 아시아권 도시들에겐 중요한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Cho, 2015).⁴⁾

그러나 진보도시가 무엇이고, 진보도시가 대안도시가 될 수 있는가, 진보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제한된 논의에서는 여전히 명쾌한 답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진보도시 논의와 관련해서는 논쟁 지점이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진보도시론의 문제설정이기도 하다.

첫째, 진보도시에서 진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시의 진보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는 진보 혹은 도시를 통한 진보에 관한 역사적 시각의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말하자면 크게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작게는 도시란 공간을 통해 진보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추구된 도시적 차원의 진보는 어떤 것인가? 그러한 진보란 가치가 보편적인(통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상황적(시대특수한)인가? 이 모두는 진보 혹은 도시적 진보에 대한 역사주의(historicism) 해석을 필요로 한다.

둘째, 진보도시론에 함축된 진보주의(progressivism)는 급진 좌파적 문제설정(예, 자본주의 모순과 대안의 모색, 계급중심적 해석과 실천, 지방유토피아주의의 극복(전체사회/구조 차원의 변혁) 등)에 어떻게 연루되는가? 이러한 문제 설정에 구속되는가 아니면 자유로운가? 이는 진보도시가 표방하는 진보이념과 그 실천의 수준에 관한 질문으로서, 그 답은 도시공간 차원의 진보의 가치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실재론적 해석(realist interpretation)'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셋째, 진보도시는 과연 도시가 지향해야 할 목표상태의 도시(진보가 이룩된 도시)인가 아니면 그 목표를 향해가는 도시(진보하는 도시)인가? 전자는 진보의 도시에서 진보를 '결과(outcome)'로 간주한다면, 후자는 '과정(process)'로 간주된다. 분명한 것은 진보도시는 '동사형 명사'로서 진보, 즉 '나아짐'이란 변화의 과정(변혁, 개선, 혁신)이 이룩되는 도시가 가장 일차적인 특징이다. 그렇다면, 그 나아짐은 어떤 목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하고, 달성된 목표상태의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이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지만, 실천의 과정으로진보도시 만들기는 도시의 진보란 도시적 가치 구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존 시스템 하에서 향유되지 못하고 억압되고 배제되는 도시적 가치일 것이라면, 그것은 도시의 발전상태나 상황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넷째, 실천으로서 진보도시를 말한다면, 진보도시는 어떠한 조건(배경) 혹은 맥락에서 등장하고 또한 그 실천이 가능할까? 역사적으로 보면 진보도시론이 등장하고 관심을 끌면서 실천으로 이어질 때는 대개 성장이나 발전 이후인 경우가 많다. 기존 발전 혹은 성장시스템 하에서 배제되고 억압된 결과로, 불평등, 차별화, 배제, 빈곤, 박탈, 황폐화 등이 만연할 때 도시의 진보세력은 '진보도시'란 언어와 실천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순들이 출현하고 극복되는 도시적 틀과 조건은 도시가 전체 사회 시스템에 처한 위치나 상황, 도시의 발달단계와 방식, 도시 내부구조 및 역학관계 등에 따라 다르다. 가령, 강한 국가주의나 시장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시스템 하의 도시에서는 국가나 시장의 대척에 있는 시민사회가 도시적 모순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중요한 배경과 방식이 된다. 이러한 것들이 곧 진보도시 만들기의 중요한 조건이다.

다섯째, 실천(정책)과 관련하여 볼 때 진보도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또한 진보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며, 진보도시의 상태를 어떻게 지속시켜 갈 수 있을까? 진보도시의 여부는 이론적, 가치적 해석의 문제이면서 경험적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진보도시만들기는 제도 틀 내의 정책선택의 문제이면서 제도 밖

3) 같은 해(2015년) 1월, '아시아와 서구에서 진보도시의 등장(Rise of Progressive Cities in East and West)'을 주제로 한 1차 국제워크숍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5월엔 2차 국제워크숍이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열렸다. 한편 국내에선 서울연구원 주최 '진보도시 국제심포지움'이 개최 이틀 전에서 수월시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아시아 진보도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도시포럼'의 결성 준비 일환으로 '사람중심도시 만들기 관한 국제워크숍'을 열었다.

4) 각주 2)에서 소개한 진보도시 관련 국제워크숍이나 심포지움에서 박원순시장의 사람중심 서울시정은 진보도시 만들기의 한 전형으로 논의되었다.

의 운동의 몫이기도 하다. 진보도시의 지속성 여부는 진보도시의 현상태 유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보도시를 어떻게 더욱 진보시켜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책과 실천의 문제로 돌아오더라도, 진보 도시 만들기는 여전히 실천주체들의 해석 문제로 남으면서, 그것은 앞의 문제로 돌아간다.

2. 진보의 의미와 도시를 통한 진보

1) 개념으로서 진보: '진보' 개념의 두 가지 층위

'진보'는 좌파 정치의 아이콘적 낱말이다. 현실정치에서 진보주의자들(Progressives)은 기존의 지배적인 시스템에서 배제되거나 억압받는 집단, 사람, 지역, 부문 등의 이익이나 가치를 옹호하고 대변하며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입장을 취한다. 진보는 그래서 권력화 된 지배질서나 가치를 지키려는 입장, 즉 '보수주의자(Conservatives)'와 경쟁 혹은 대립 관계에 있게 된다. 실천 방법에서 기존의 권력과 가치체계를 비판하거나 뛰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진보정치는 '급진적(radical)'인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 대안의 모색이나 계급 중심적 접근을 취하는 등은 진보파(진보주의자)들이 취하는 이러한 정치적 입장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일상 삶터에서 추상성이 높고 구조주의적인 가치 개념인 진보를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가와 같은, 진보에 관한 구체적인 물음을 제기하면, 진보란 의미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진보의 사전적 뜻은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혹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이다(네이버 국어사전). 진보의 영어 말 'progress'는 '점차 나아지거나 성취 혹은 완성하고자 하는 것에 가까워지는 과정(the process of gradually improving or getting nearer to achieving or completing something)'으로 정의되고 있다(네이버 영영 사전). 하지만 이러한 사전의 뜻만으로는 진보의 복잡한 의미구조가 다 드러나지 않는다. 가령, 진보는 어떤 목표 혹은 가치를 지향해야 하나? 진보는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주체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가? 진보는 어떤 시대적 맥락(혹은 사회적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 혹은 과정(절차)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가? 추상 개념인 진보를 현실(사회)의 구체 개념으로 규정하려고 하면, 이렇듯 그 의미해석에 많은 층위들이 있다.

'현재보다 나아짐' 혹은 '역사발전'을 지향하는 진보의 개념은 확대해 일반화하면 특정 역사 단계나 사회(영역)에 국한해 적용되지 않는 '초절적 개념(transcendental concept)'이 된다. 인간해방, 자아실현, 평등과 정의의 구현, 민주주의의 구현, 행복의 구현 등으로 지칭되는 진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진보의 초절적 가치 개념에 해당한다. 하지만, 초절적 개념의 진보(예, 계급해방)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진보의 가치가 현실의 권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억압되어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복구될 수 있을지에 대한(시스템에 대비되는) 주체적 관점의 치열한 해석과 다툼 과정이 있어야 한다. 가령, '인간해방'이란 초절적 진보가 현실에서 저절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인간해방을 가로막는 억압과 통제 기제는 어떤 것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체감되는 것으로 구현해 낼지는 모두 치열한 '해석 투쟁'의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해방과 자아실현은 '시민참여'로, 평등은 약자(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 배려로, 정의는 정책자원의 공평한 배분으로, 행복의 구현은 소득향상 및 시민 행복감 고취 등과 같은 구체 수준의 진보개념으로 재정의 된다. 초절적 개념과 견주면, 이는 진보의 '상황적 개념(contingent concept)'에 해당한다. 물론, 상황적 개념이 모두 해석적 투쟁의 결과로 도출된 것은 아닐 터이다. 역사 속의 진보는 진보의 초절적 가치를 특정 시대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삶 속으로 구현하는 투쟁의 결과일 뿐이다. 초절적 개념과 상황적 개념의 맞물림은 추상과 구체, 구조와 행위, 체제와 주체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함축한다. 그렇다면 진보란 개념은 역사 속에서 실제 어떻게 등장 전개되어 왔나?

2) 역사로서 진보

지식사에서 보면, 진보란 말은 18세기 계몽주의적 가치개념으로 등장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신의 관점에서 아니라 인간의 눈높이에서 인간을 포함한 사물과 현상(자연과 사회)을 인식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삶의 구현을 추구하는 것이 곧 계몽주의적 개념의 진보다. 18세기 초반 프랑스 귀족 지식인 중심으로 등장한 계몽주의(the Enlightenment)는 무지, 미신, 신학 등의 ‘동굴에 갇힌’ 사람들에게 ‘이성의 빛’을 쬐여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해방적 삶을 살도록 돕는 신지식운동이자 그 이념이다(Hamilton, 1992). 역사적 실천과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계몽주의의 핵심 요소로는 ‘이성’, ‘합리성’, ‘시민성’, ‘진보’가 꼽힌다(조명래, 2002; Hamilton, 1992 등). 이 중 진보는 ‘과학’(경험)적 지식을 이용해 신체적, 물질적 질곡으로부터 ‘인간 상태’(the human condition)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칭됐다. 근대 의학과 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으로부터 해방’은 진보 개념의 일차적 피지시체(彼指示體)였다. 이렇듯 ‘인간상태의 개선’은 계몽주의적 진보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고, 그 가능성은 계몽주의적 성찰과 자각을 통해 획득된 ‘인간 이성과 합리성’에 있었다.

18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초기 계몽주의적 지식은 대중적 지식(예, 루소의 사회계약론)으로 바뀌면서 사람 중심의 삶 전반을 성찰하고 개혁하는 다양한 실천(시민혁명, 산업혁명)으로 옮겨졌다. 근대사회는 이로써 등장했다(조명래, 2002). 기술, 경제, 사회조직 등의 진보로 출현한 근대사회는 ‘개선된 인간상태’ 자체고, 그 모습은 시장경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민성 등이 ‘사회적으로 제도’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기 들어 진보의 개념은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 생산양식의 발전, 사회형태의 선진화 등과 같이 ‘사회적 진화(social evolution)’에 관한 것으로 확장되었다. 자유시장경제의 확립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총량 부의 증진, 사회적 후생의 향상 등으로 그려지는 (신)고전경제학류 ‘진보’는 19세기형 사회적 진보의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19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자유시장 제도에 바탕을 둔 근대사회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체제로 공고화되었다. 자본주의에 고유한 노동착취, 곤궁화, 불평등, 지배와 배제 등과 같은 사회적 모순들이 속출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세력 간 대립과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이로써 자유주의적 전망의 진보 개념은 급진주의자들(예, 사회주의자)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고, 이들이 내세운 ‘비판적 진보’가 진보의 새로운 개념이 되었다. ‘진보’가 급진적 정파의 정치적 아이콘과 같은 것은 이 때부터다. 사회 약자들이 겪는 차별, 불평등, 소외 등의 탈인간적인 문제를 자본주의의 고유 모순으로 독해하고 계급적 실천을 통한 이의 급진적 극복을 비판적 진보로 간주한 것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실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실업, 빈곤, 차별 등의 사회문제 해소를 주창하는 다양한 진보적 정치운동이 활성화됐다. 덕분에 이때를 ‘진보의 시대(Progressive Era)’라 부른다(Douglass, 2015). 20세기 동안 복지, 성장, 개발, 경쟁 등이 진보란 말을 대신하면서 ‘진보주의(progressivism)’는 퇴행적 좌파이념으로만 치부되었다.

3) 도시와 진보의 관계

진보란 말은 18세기 계몽주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도시의 진보는 사실 이 보다 훨씬 오래된 계보를 가지고 있다. 인간역사를 통해 확인되는 진보의 본질은 ‘인간상태의 개선’과 관련된다. 야만적 인간상태에서 문명적 인간상태로의 이행을 진보의 궁극적 내용이자 형식이라 본다면, 이는 ‘문명(화)(civilization)’와 같은 것이다. Civilization이란 말은 라틴어 civilis(키빌리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civis(키비스)의 형용사 형태다. civis는 시민(citizen)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문명은 ‘시민화(화)’란 것

5) Civilization는 정확히는 ‘도시 사는 시민처럼(civilis) 되도록 만들기’란 의미지만 라틴어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 이

로 해석되어야 할 터이다. 이 때 시민은 그리스 시대 도시 밖의 야만적 삶을 사는 사람들과 비교되는, 세련된 말투와 행동, 예의범절을 갖추고 살아가는 도성(도시) 안 사람⁶⁾을 지칭하지만 시민화로서 문명은 도시적 세련됨이 깊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김현, 2011, 26-27).

Civilization이란 말을 ‘문명’이라는 근대적인 의미로 영어권에서 가장 먼저 쓴 사람은 퍼거슨(Adam Fuguson, 1723-1816)이다. 1767년 그는 ‘개인만이 유아기에서 성년기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인종도 거친상태에서 문명상태(civilization)로 발전하는 법이다’라고 했다. 그 후 civilization이란 말은 미개한 상태(barbarism), 비이성적 삶과 반대되는 ‘도시적 문명상태, 이성적 삶이 더욱 깊어지고 일반화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본격 사용되었다(김현, 2011, 27-28). 도시 사람의 ‘세련됨’을 뜻하는 키빌리타스(civilitas)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화)의 핵심 징표로 간주된 것이다.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은 교양, 덕성, 자의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 도시의 진정한 주체가 되고 이들 중심의 삶의 방식이 보편화되는 현상인 셈이다. 도시는 사람중심의 삶을 규율하는 법률, 제도, 산업, 기술, 문자, 교육체계와 이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조직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이른 공간으로 생산된 것이다(김현, 2011, 30).⁷⁾

도시의 진보는 문명으로서 진보이고, 그 본질은 계몽적이고 자의식적인 인간상태, 즉 인간성의 실현에 있다. 키빌리타스(교양, 세련됨 등)의 특질을 지닌 도시적 인간으로는 그리스 시대 폴리스의 자율적 시민주체를 전형으로 한다. 중세의 신성 본위에서는 사람의 가치나 인간성의 문제는 철저하게 왜곡·억압되었다가 16-18세기 르네상스의 등장과 함께 휴머니즘⁸⁾에 대한 재주목과 이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르네상스인에게 ‘키빌리타스’의 의미가 각별했던 것은 인간성(humanitas)과 품위 있는 교양인의 태도(civilitas)를 갖춘 인간이 르네상스 시대에 새로운 이상적 인간상으로 주목되었기 때문이다(안성찬, 2011, 44). 하지만 본연의 인간에 대한 이러한 자각은 삶터인 도시를 사람답게 바꾸고 사람가치 중심으로 일상을 꾸리는 (공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르네상스가 바탕이 되어, 18세기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도시는 비로소 이성과 합리성을 갖춘 사람다운 삶이 조직되고 자유로운 인간성이 구현되는 장으로 다루어졌다. 근대도시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람다움을 자유롭게 구가하는 합리적 도시 주체들의 일상관계가 조직되고 지탱되는 사회적 공간으로 생산된 것이다. 하지만, 모든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공간 속에서 자유 개인으로서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건 아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사회적 시스템에 편입된 결과, 도시의 일상세계는 ‘체제와 그 권력에 의해 식민화’되고 도시인들은 스스로의 일상과정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삶의 편리를 위해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었지만, 만들어진 도시는 도시의 주체인 사람들을 거꾸로 규율하고 훈육해 객체로 전락시키고 있다. 도시를 통한 주체의 억압과 소외는 도시 진보의 최대 역설이다. 이 역설로 인해, 도시는 권력화 된 체제의 지배와 자유로운 인간본성을 추구하는 주체의 반지배가 변증법적으로 충돌하는 ‘해석적 투쟁의 장’으로 남게 되었다.

말은 상업과 권력의 중심지로 ‘도시’가 부각되는 근대에 생겨났다.

6) 그리스 시대, 그리스적 교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헬레니즘(Hellenismos)라 불렀다면, 이와 대조되는 야만인을 바르바리스모스 또는 바르바리아(barbaria)로 불렀다(김현, 2011: 27).

7) 문명이란 개념은 도시가 갖는 힘의 확장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것이다(김현, 2011: 30).

8) 서양철학사에서 휴머니즘은 그리스 시대 도시사람들이 누렸던 사람중심의 사유와 실천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르네상스 문화의 바탕은 고대 휴머니즘의 복원이고, 이는 교회적 권위 아래 질식되어 가는 자연스러운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르네상스는 고대의 문예를 부흥시켜 신학중심의 학문체계를 보다 인간다운 학예로 바꾸는 변화를 불러왔지만, 도시와 일상 삶터를 사람다운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변화까지는 불러오지 못했다. 휴머니즘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사상형태로 변하면서, 지향하는 바가 서로 상충하기도 했다. 사람을 마치 신과 같이 절대주체로 간주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사람 이하도 이상도 아닌 사람의 자연적 소질 자체를 추구하는 입장도 있다. 과학기술의 합리성 구현을 통해 인간성의 확충을 도모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과학기술의 노예화와 비인간화의 저항과 극복을 통해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입장도 있다.

4) 역사 속의 도시의 진보

역사상의 많은 (신)도시들은 나뭇대로의 유토피아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로 건조되었다. 이러한 이상이 가장 실현된 역사 속의 최초 진보도시로는 그리스 시대의 폴리스를 꼽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정치학(Politika)에서 사람은 폴리스의 정치적 삶을 통해 인간 본성(innate)을 발현하면서 최종적으로 '행복(eudaimonia)'의 상태에 이르게(일종의 자아실현) 된다고 했다(Douglass, 2015). 폴리스(polis)의 삶(특히 정치적 삶)을 통해 도시인들은 계몽적인 문명인이 되고, 또한 도시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인간다움의 자기실현을 이루게 된다. 폴리스의 사람은 그래서 도시 밖 자연에서 거친 삶을 영위하는 야만인과 구분된다. 도시의 진보는 바로 폴리스의 정치적 삶을 통한 '행복의 구현' 혹은 '자아실현'으로 나타난다.⁹⁾ 폴리스의 삶이 자아실현의 문명적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고라와 같은 소통의 장을 통해 삶의 공통문제를 시민들이 자발적 논쟁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시민권에 기초해 그 해결의 편익을 향유하는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기실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모든 도시적 실천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란 말로 지칭했다. 사람을 위해 고안된 도시가 자기실현으로 나타나는 사람다운 삶을 온전히 담아내는 용기될 수 있는 것은 토론, 합의, 권리화 등과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도시 속의 사람들의 일상관계로 규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로마시대가 되면서 도시는 키비타스(civitas)란 자치단위로 제국의 통치체제에 들어오게 된다. 키비타스의 구성원은 그리스 폴리스의 구성원과 그 성격이 다르다. 폴리스의 구성원이 시민적 공동체의 구성원, 즉 자율적인 시민이라면, 키비타스의 구성원은 공화적 정치체제의 구성원, 즉 통치에 참여하는 공민 혹은 인민(국민)에 해당한다(김창성, 2008). 그리스의 폴리스(특히, 폴리티에아)가 동등한 시민권의 보유자인 자율적인 시민의 결합체, 즉 '시민적 공동체'라면, 로마의 키비타스는 제국의 통치 시스템 속에 편입된 구성원(인민 등)이 법률로서 주어진 자치권과 의무를 행하는 '법률적 자치결사체'와 같은 것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창성, 2008 참조). 따라서 이러한 통치와 자치의 원리로 구성되고 작동하는 키비타스는 그 자체로서 공화정적 정치체에서 '공화도시(the publican city)'라 부를 수 있다. 공화정이 운영되는 원리는 국가와 같아서, 키비타스를 확장하 하면서 마치 국가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키비타스의 구성원(인민 혹은 국민)이 그들이 속한 키비타스를 국가로 부르고 스스로를 국민이라 칭하기도 했다. 법률적 권리주체로서의 위상은 그리스 폴리스의 시민에 비해 강화되었지만, 폴리스 시민이 그들의 시민권적 삶 전체를 공동체 틀 내에서 보호받으면서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의 구현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키비타스 시민(인민)은 공화정에 참여하면서 권리주체로서 제한된 삶의 보호와 실현을 이룰 수 있었다. 폴리스의 자아실현이란 추상적, 초절적 개념의 진보가 키비타스의 참정권 실현이란 구체적, 상황적 개념의 진보로 진보의 의미가 축소된 것이다.

중세 봉건도시(feudal city)는 토지를 바탕으로 신분질서가 구축되어 있는 봉건제를 지탱시키는 거점과 같은 곳으로 기능했다. 봉건제는 왕이 봉토를 제후에게 나눠주면, 제후는 봉토를 중심으로 구축된 영지를 다스리면서 왕에게 충성을 하는 지배-종속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보통사람은 영지 내에서 봉건지주와 소작농노간 엄격한 신분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간다. 토지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신분질서는 지배와 착취의 관계로 작동하면서 피지배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물질적, 정신적 삶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억압된다. 하지만 중세는 동시에 기독교 권력이 지배하는 시대이기도 했다. 신성본위의 봉건적 질서 하에서는 사람 대신 신이 모든 문명의 중심이었고, 사람의 존재가치는 신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억압되었다. 중세의 (보통)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신에 의해 인간성의 발현을 억압당하는 것과 함께 봉건

9) 이러한 정치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층 시민 다수에 의해 통치되는 체제'로서 폴리티에아(politica)라 불렀다. 이는 도덕적 책임감이나 사려판단력을 결여한 빈곤대중에 의해 통치되는 민주정과 구분했다. 폴리티에아가 시민결사체적 정치체라면, 폴리스(polis)는 일종의 지리적 공동체와 같은 것이다. 물론 폴리스의 의미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폴리스 국가, 시민결사체, 시장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김창성(2008)를 참조하여야.

지배자에 의해 인간으로 삶이 철저하게 통제받고 착취를 당하는 이중적 탈인간화를 겪었다. 봉건제적 지배의 거점으로 봉건도시의 사람과 삶은 이러한 이중적 탈인간화를 깊숙이 내면화하고 있었던 셈이고, 도시의 각종 시설물들(예, 성, 교회, 시장, 주택, 광장, 공연장 등)은 바로 이를 돕는 공간적 장치들이었던 것이다. 일부 자치도시(예, 베니스)가 출현하지만, 그것은 왕과 지역 통치자(영주) 간의 권력관계가 좀 더 자유로울 뿐, 도시의 보통사람들은 봉건제적 질서에 갇혀 살았던 것은 다른 봉건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세도시의 거주자들은 관리인, 지주, 장인, 상인들이 대부분이지만, 봉건제 하에서 피지배층에 속하는 도시거주자들이 겪는 탈인간화는 도시 밖 농업생산자(농노)들이 겪는 것과 또한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자유 상공인들이 출현하는 중세후기까지 계속되며, 중세 도시 사람들이 겪는 종교적 지배와 신분적 지배에 의한 이중적 탈인간화, 탈주체화는 변화없는 중세 봉건도시의 특징이었다. 중세 봉건도시에서 진보는 신학적 의미의 진보(예, 신학적 세계로의 귀의, 세속으로부터 해방, 신적 존재와 일체화 등) 이외의 것은 찾을 수 없었다.

사람중심의 진보의 가치나 의미를 중세 봉건도시에선 찾을 수 없었다면, 이후의 변증법적 역사는 도시를 사람중심의 가치를 복원하고 실현하는 진보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16세기 르네상스(고대 인본주의의 부활), 이를 바탕으로 하는 18세기 계몽주의(사람중심, 이성중심의 삶의 추구)가 도시를 무대로 하여 꽃피우는 까닭이 되기도 했다. 또한 18세기 이후 도시가 산업혁명의 요람이 되었던 것도 중세 봉건도시 하에서 억압된 인간성과 자유의지가 분출한 것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근대의 도시는 이렇게 해서 이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하는, 철저한 사람중심의 일상(거래) 관계를 조직하고 구현하는 장으로 생산되었다. 자유시장 거래의 중심지로 조직되고, 근대 시민권을 조직하고 구현하는 시민사회가 등장하고, 근대 민주주의적 통치와 권력질서가 제도화되고 작동하는 곳이 곧 근대도시다. 이성과 합리성이란 사람의 능력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계몽주의적 진보는 사회적 삶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이룩된 사회적 진보가 도시에서 꽃을 피우는 듯 했다. 하지만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합리적 삶의 조직화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자본주의란 시스템을 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 냈다. 그 결과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의 일상성은 자본주의 상품소비관계, 화폐관계, 계급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구축되는 도시의 일상관계에 포함되면서, 사람(몸과 정신) 자체가 자본화와 상품화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계몽주의적 진보로 시작한 근대 도시의 진보는 결국 자본주의란 생산력과 생산양식의 발달이란 것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인간성의 해방과 체제의 억압성 간의 길항은 근대 도시공간에 갇힌 '진보의 오랜 딜레마'로 재현되고 있다.

3. 진보도시를 위한 실천

1) 진보도시 만들기의 역사

도시는 인간의 삶의 편리를 돕기 위한 공간적 장치이며, 문명은 바로 도시의 진보가 이룩한 내용물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인간은 보나 나은 삶을 담아내기 위한 도시, 즉 진보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줄곧 해왔다. 고대사회에서는 그러한 노력은 신의 힘을 빌려 이뤄졌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고대사회에서 도시는 신을 대신해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의 거점이었다. 가령, 고대 중국에서 왕은 하늘의 아들이란 뜻의 천자로 불렸고, 그의 책무는 하늘(신)로부터 위탁받은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인(賢人)의 도움을 빌려 민중에게 질서와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 천자의 도시는 신정(神政)을 펴기 위한 시설과 기능들로 건조된 신의 도시였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든 후 신의 계시에 따라 시민들은 도시적(정치적) 삶을 자율적으로 꾸려갔다. 신이 보낸 자(者)가 사람으로 환생하여 신시

(神市)를 만들어 인간세상을 다스렸다는 한국의 건국신화¹⁰⁾는 신시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고대 도시는 이렇듯 신정의 방식을 빌어 자연의 질서(신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자아실현적인 풍요한 삶의 구현을 위해 건조된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진보도시의 한 역사적 형태였다 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리스의 폴리스는 덕성과 교양을 갖춘 시민들의 자율적인 정치적 실천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시민적 결사체였다. 반면 로마시대의 키비타스는 시민권적 합의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을 실현하는 공화적 통치체였다. 폴리스에서 진보는 인간의 자아실현과 행복의 구현이었다면, 키비타스에서는 합의된 공동선의 실현으로 가늠된다. 물론 폴리스나 키비타스 거주자(구성원) 모두가 평등하면서 대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또 그 결과를 공평하게 향유했느냐는 측면에선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폴리스와 키비타스를 진보도시 만들기의 역사적 경험태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자아실현’과 ‘공동선의 구현’을 각 역사적 도시의 존재이유이자 도시통치의 원리로 삼았던 것은 도시를 통한 인간중심의 초절적 진보를 꿈꾸어왔음을 의미한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이러한 진보도시의 이상은 중세시대 다양한 ‘자치도시’에 이어졌다. 로마제국의 해체 이후 중세도시는 왕이 선임한 집정관이나 제후에 의해 다스려졌지만 교역의 발달로 자유 상공인들의 힘이 커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가 부분적으로 강화되기도 했다. 덕분에 일부의 도시(예, 베니스)는 자치도시로서 독립을 유지했지만 봉건제 하의 자치도시 대부분은 왕을 대신한 영주를 정점으로 위계적인 신분질서에 바탕을 둔 권력적 시스템을 내부화 했다. 경쟁과 통합을 통해 결국 군주제에 예속됨으로써 자치도시는 역사적인 유형으로만 남게 되었다. 자아실현이란 초절적 진보를 추구하던 폴리스의 이상은 중세의 봉건(자치)도시에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에서 도시의 발달은 퇴보를 동반했다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도시의 이러한 퇴보, 즉 도시에 대한 권력적 지배와 통치의 강화는 도시인들의 빼앗긴 자유와 자율권의 회복, 인간성의 자유로운 발현에 대한 강한 욕망을 자극하였다. 16세기 르네상스(고전적 휴머니즘의 복원)가 여유 있는 도시인들의 문예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토마스무어류의 유토피아 운동이 도시 지식인을 중심으로 일었던 것은 도시의 역사적 퇴보에 대한 도시인들의 저항과 무관치 않았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을 가져온 여러 역사적 사건, 가령, 시민혁명이나 산업혁명이 도시를 무대로 전개되었던 것도 이러한 도시적 저항의 확장이었다. 19세기 들어 도시 공간 자체를 물리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권력의 개입(예,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은 중세적 유제가 남아 도시공간 질서를 지우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공간의 개조는 중세적 유제를 지우는 것을 넘어서 막 등장한 근대의 새로운 질서(예 자본주의적 질서)를 새겨 넣기 위한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도시들은 새로운 공간질서의 창출을 둘러싼 ‘해석적 투쟁’의 장이 되었다. 1871년 3월 28일 ~ 5월 28일 간 파리 민중들에 의해 건설된 코뮌도시는 핏박받는 도시 약자들이 고대 폴리스의 이상인 자율공동체로 건설된 것이지만, 이는 기실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에서의 차별과 배제에 대한 저항으로 나왔던 것이다. 비록 단명으로 끝났지만, 공동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된 파리 코뮌운동은 근대적 진보도시 만들기운동이라 할 수 있는 ‘자치 사회주의(municipal socialism)’의 실천적 기원이 되었다. 비록 역사적 흐름을 약간 달리할지 모르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들어 영국을 중심으로 신도시 운동이나 전원도시운동도 ‘도시의 자본주의화’에 의한 공동체적 삶의 해체에 대한 진보적 도시지식인들의 해석적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상적으로는 토마스 무어(1477-1535)의 유토피아론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들 대안도시운동은 막 시작된 ‘도시적 자본주의’가 가져온 탈인간화 문제(인간성 발현의 억압, 사회적 정의의 상실, 일상 소외 등)를 대안공동체

10) 신인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천부인(天符印) 세 개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太白山) 꼭대기 신단수(神壇樹)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곳을 ‘신시’라고 했다. 신시는 그 뒤 환웅이 웅녀(熊女)와 혼인하여 단군(檀君)을 낳고, 단군이 평양을 도읍지로 하여 고조선을 건국할 때까지 고조선 종족의 중심지였던 것이었다. 하지만 신시에 대해서는 신정시대에 도읍 주위에 있던 별읍(別邑)으로서 삼한의 소도와 성격이 같은 신읍이었다는 해석과 신시는 지명이 아니라 인명으로서 환웅을 가리키며 왕을 뜻하는 ‘신지(臣智)’가 존칭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건설을 통해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이 중에서 전원도시론(1898년)을 제시하고 근교에 실제 건설해 영국 신도시의 기원을 만든 에버너저 하워드(Ebenezer Howard)는 페비안 협회(페비안 사회주의자들의 클럽)의 열성 멤버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가 건조했던 신도시(예, 웰빈, 리치워스)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해석,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담으려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적 투쟁’에 의해 생산된 진보도시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제도화된 도시계획이 19, 20세기 영국의 신도시 계획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한다면, 그 바탕엔 곧 하워드의 전원도시란 진보도시의 이상이 깔려있는 셈이다. 실제 근대 도시계획에서 도시의 공간구성(특히 주거지)이 페리(C. A., Parry)의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란 근린 공동체 공간을 기본 하는 것도 폴리스적 공동체 삶의 방식에 대한 희구를 투영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다양한 도시운동(시민사회적 운동)도 알게 모르게 공동체성을 복원하고 지키며 구현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르페브르의 ‘도시권(Right to the City)’ 개념에 터한 도시운동들은 역사 상 계속 이어온 진보도시의 이상을 현대적으로 복원하는 현대 도시인들의 대표적인 실천운동이다(Harvey, 2012).

2) 도시자치로서 진보도시 만들기

근대에 이르러 진보도시의 이상은 다양한 도시자치제도로 담아내려는 구체적인 시도들이 있는 데, 영국의 자치사회주의, 미국의 진보도시, 일본의 혁신자치제 등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중 영국의 자치사회주의(municipal socialism)는 19세기 말 자본주의 황금기(예, 프랑스의 벨렐포크(belle époque) 시대, 미국의 도금의 시대(Gilded Age))를 배경으로 하여 점증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공핍화(자본주의의 모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된 사회주의적 도시개혁을 말한다. 1873-1875년 간 버밍엄 시장 조세프 챔버레인(Joseph Chamberlain)이 추진한 자치사회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다. 도시에서의 토지와 산업을 공유화(시유화)하고 종래 개인소유자가 차지하고 있던 과잉이윤을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의 영리주의 대신 소비자 본위의 실질주의 경제질서의 확립 등을 자치사회주의의 이상(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이상 하에서 도시정부를 장악한 페이비언파(페비안 사회주의자)들은 가스·수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기업화(시의 소유 하에서 직영) 했다. 덕분에 자치사회주의를 ‘수도과 가스의 사회주의’라 부리기도 했다. 이후 전통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자본주의의 혁파를 위한 계급혁명과 같은 본질적 문제를 비켜간 것으로 간주되어 자치사회주의는 비판과 배척의 대상이 되어 지속적인 진보도시 만들기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신좌파 리더로 부상한 리빙스턴 시장이 마가렛 대처 수상인 런던광역의회(1918-1986) 해체에 맞서 런던을 ‘노동자 주도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의 도시로 재구조화(개혁)를 추진했다. 이를 두고 자치사회주의의 현대적 부활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처정부가 노동당 좌파를 무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런던광역의회가 폐지함으로써 자치사회주의의 실험도 끝났다 (자세한 논의는 서영표, 2011 참조).

한편, 도금의 시대(Gilded Age)라 불리는 1890년말과 1900년대 초 미국에서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주의자들의 정치적 실천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Douglass, 2015). 이 시대를 그래서 ‘진보의 시대’라 부르기도 했다. 이런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자치사회주의 대신 ‘진보도시(progressive city)’라 말로 정의, 분배, 형평성 등의 진보적 가치를 도시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자치운동이 등장했다. 미국의 진보도시 전통은 연방정부의 보수정책 운영에 맞서 지방정부를 장악한 진보주의자(progressives)들이 지역주민의 실질적 편익을 위한 다양한 개혁적 정책을 펴는 데서 생겨났다. 양차대전을 거치는 동안 진보도시 약화되었다가 탈산업화로 인해 급격한 도시쇠퇴를 겪는 가운데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일부 동부 도시들(예, 보스턴, 시카고, 클리브랜드 등) 중심으로 1980년대 진보도시 운동 다시 부활했다(Clavel, 2010). 시민참여를 통한 복지나 분배 중심의 혁신시정이 진보도시만들기 주된 방식이었다.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1990년대 미국의 주요도시들은 첨예해지는 도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성장 드라

이브를 추진하는 데 올인 했다. 그에 따른 폐해가 2000년대 들어 속출했다. 소득계층간 불평등, 공공서비스의 위축, 공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계층격차의 심화, 사회적 약자의 배제, 부동산 개발의 붐과 주거불안정, 빈곤의 심화, 성장연합 주도의 정책 편향화 등이 그러하다. 이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은 다시 진보도시론을 들고 나왔다. 이로 인해 ‘대도시 진보주의 시대(the era of big-city liberalism)가 시작되었다’(Goldberg, 2014). 뉴욕시가 대표적인 예다. 2015년 취임한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은 복지, 의료, 주택, 일자리, 환경관리 등 모든 면에서 정치적, 제도적 경직성 때문에 연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정책을 뉴욕에서는 보란 듯이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그러한 뉴욕을 진보적 도시라 스스로 불렀다. 전임 블롬버그 시장 하에서 뉴욕은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획득했지만, 전체인구 20%가 빈곤선 이하에 떨어질 정도로 도시빈곤 및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뉴욕을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그는 당선됐다. 워킹 맘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 사회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인권 침해 소지가 큰 검문검색 중단 등 사람중심(특히 약자우선) 도시정책을 내놓았지만, 임대료 인상 동결 정책은 대표적인 진보도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300여개의 진보적 지자체의 연합체인 Local Progressive가 결성되어 활동 중이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1970년 동안, 고도성장에 따른 도시화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차원에서 참여자치를 통한 시빌미니멈(civil minium) 실현을 주창하는 진보적 도시개혁(혁신자치)운동이 전국적인 선풍을 일으켰다. 공산당과 사회당이 이데올로기 대신 ‘가치 동맹’을 내걸고 선거를 통한 자치혁신을 주창했고, 이에 많은 지역정치세력들이 동조하고 동참함으로써 전국적 자치혁신운동으로 확산됐다. 혁신자치의 핵심은 일본의 오랜 관료적 위임자치를 풀뿌리 민초에 의한 참여자치로 바꾸고,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성장 중심의 정책의제들을 사람중심의 환경복지의제로 바꾸는 것을 통해 도시를 다시 사람중심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었다. 복지기준선의 제정, 환경오염 척결을 위한 환경기준의 강화, 토목개발사업의 중단과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시빌미니멈 제정과 시민권의 제도화, 주민대표의 지방의회 진출, 지역정당의 출현 등은 혁신자치체의 성과들이었다(박경, 2011). 197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전체 도시인구 절반이 혁신자치도시에 속할 정도로 혁신시정은 큰 유행을 이루었다. 1967-1979년간 재임한 동경 미노베 시장 하의 혁신시정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보수당과 중앙정부가 혁신자치의 의제와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진보세력들에 의한 혁신자치의 차별성이 사라지면서, 이 운동은 약화했다. 하지만 이 운동의 유산은 1990년대 일본 전역에 일어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마치츠클리 운동(마을만들기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 점에서 진보도시 만들기 실천은 계속되고 있다 할 수 있다.

3) 진보도시 만들기의 조건과 함의

진보도시 만들기의 실천 경험을 통해 진보도시는 어떻게 등장하고, 어떠한 조건과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도시유형으로 일반화하는 어느 정도 가능할까? 진보도시(progressive city)란 말을 정의한 피에르 클레빌(Pieree Clavel) 교수는 시차를 두고 쓴 두 권의 책에서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이 중 최근에 출판한 두 번째 책, ‘시청에 들어간 활동가(Activists in City Hall, 2010)에서 그는 버링톤(Burlington), 오클랜드(Oakland), 보스턴(Boston), 시카고(Chicago)를 사례로 하여 분석하면서 진보도시 만들기의 필요조건(혹은 전제)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시장(후보)을 지지하는 사회운동 기반(social movement base supporting a mayoral candidate)이다. 정부정책의 한계(성장우선, 개발중심, 친기업주의, 하향적 의사결정 등)를 시민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정부)의 리더십이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는 것은 진보적 도시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실제 진보도시로 일컬어지는 도시를 보면, 시민활동가 출신들이

자치정부 구성에 참여하고, 시정의 주요과제들을 시민사회의 참여 및 협치를 통해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개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거나 지지를 받고 있는 리더십에 뒷받침되고 있다.

둘째, 도시정부의 분배적 역할 비전 및 혁신정책의 추진(distributive vision of government's rol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novative policies). 성장과 개발, 기업부문, 부동산 개발 등의 부분으로 정책자원의 우선 배분은 일상적 삶에서 지역주민들의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배분을 그 만큼 줄이고 왜곡시키게 된다. 이는 경제중심의 외형적 물리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들이 특정 세력(산업계, 기업, 중산층 등)에 의해 포획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진보주의자들이 시정의 주체가 될 때는, 기존 정책의제를 사람중심 의제(예, 복지, 환경, 문화, 공동체 등과 관련된 의제)로 바꾸고 정책자원을 우선 배분하는 하는 것과 관련된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또한 이를 실현하는 혁신정책을 실제 강도높게 추진해야, 진보도시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

셋째, 도시사회의 다양한 계층(특히 빈곤층과 유색인)을 광범위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시정부의 개방을 위한 개혁 (reforms that often up government to broader representation, especially by the poor and people of color). 진보도시를 사람을 도시진보에 중심에 두는 다양한 실천이 실제 이루어지는 도시인 바, 그 출발점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포용이다. 이는 시민참여와 대표성의 문제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진보도시의 (계급적) 주체의 설정에 관한 문제와 결부된다. 따라서 혁신시정에 대한 참여의 제도화는 진보도시의 한 조건인 '포용성(inclusivity)'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자 수단이다. 특히 기존 정책 시스템에서 배제된 약자(저소득층, 빈곤층, 유색인 등)들이 혁신시정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업무수행적 거버넌스(performative governance)'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직책과 조직의 개방은 물론, 정책작성과정 전반을 열어 시민유권자들이 정책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도 참여할 수 있는 절차, 기구, 프로그램 등이 실질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시장의 임기를 넘어서는 자치개혁의 지속(long term impact that often extends beyond the mayor's tenure). 지방자치란 제도 틀 내에서 추진되는 진보도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들은 단체장(시장)의 임기 종료와 함께 멈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책단절의 문제는 혁신과제일수록 더 두드러져, 임기를 넘어 지속될 수 있는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새정책의 제도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혁신의 성과에 대한 사회의 지지와 수용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도화와 사회적 수용을 처음부터 고민하고 해결해가는 것도 진보도시를 지향하는 혁신의 장기적 지속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다섯째, 이니셔티브에 서로 반응하고 수용하는 정부와 근린사회간의 상호작용 체계의 구축(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ty and local communities is such that each is responsive to initiatives from the others). 진보도시 만들기가 가능하고 또한 지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의 이니셔티브에 반응하고 수용하는 작용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파트너십이나 협치의 다양한 제도화로 풀 수 있지만, 이 보다 중요한 것 양 주체(영역)간 신뢰의 구축이다.

미국의 진보도시를 사례로 한 것이긴 하지만, 그간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진보도시만들기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진보도시 만들기를 위해 추진세력은 시민사회 혹은 근린사회에 지지 기반을 두어야 하고, 풀뿌리 주민(시민) 주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적 관점이나 가치의 투영). 혁신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도시권리(right to the city)'의 실현을 돕고 구현한 것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기존 정책의 생산구조나 의제들을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성장제일주의, 부동산개발주의, 친기업주의 등을 지지하는 지역의 기득권세력들이 민주시민 세력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풀뿌리 주민들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성장과 개발중심의 의제가 분배와 복지중심의 의제로 바뀔 수 있다. 약자 등의 이익을 우선 배려하면서 풀뿌리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생산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참여적 거버넌스의 다양한 제도화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방법

이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지배적 시스템에 의해 배제되거나 억압된 사람, 가치, 부문, 세력을 위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진보도시를 위한 실천은 진보를 가로막는 구조나 시스템의 모순과 그 원인의 해결보다(이는 국가나 사회전체 차원에서 해결) 보다 시스템 작용의 (모순적) 결과를 생겨난 구체적인 문제들을 주민주도로,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데 더 역점을 둔다. 지방자치란 틀 내에서 이데올로기 혹은 문화전쟁(전체 사회 차원의 이념논쟁과 충돌)이나 시장주의의 대안 혹은 자본주의의 대안의 모색에 매몰되기보다 ‘구조의 모순’에 대한 주체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된 상황적 이슈를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진보도시 만들기의 진정한 실천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 진보도시 만들기는 자유주의(liberalism, 미국식 진보주의) 혹은 실용주의(pragmatism)로 평가받고 있다. 초월적 보편적 진보가치를 현실의 상황적 가치로 어떻게 해석해 도출해 실천하느냐가 진보도시만들기(과정)의 핵심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4. 진보도시의 조건과 구성요소

1) 진보도시의 구성 조건

진보도시에서 진보란 말은 ‘나아짐’이란 ‘동사형 명사’다. 따라서 진보도시에서 진보는 현재상태를 벗어나 나은 상태로 나가는 과정(process)의 의미와 함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룩된 결과상태(outcome)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과정이란 측면에서 보면, 진보도시는 기존 도시 지배 시스템 하에서 배제되거나 억압된 부문(사람, 가치, 영역 등)을 옹호하고 구현하기 위한 개혁(reform)이 이뤄지는 도시라면, 결과란 측면에선 개혁을 통해 진보적 가치의 목표가 구현된 도시다. 진보의 과정과 결과는 서로 연동되어 있다. 양자를 묶는 것은 진보의 가치를 읽으면서 구현하는 해석투쟁이다. 진보의 초절적 개념(예, 주체화)을 도시의 맥락에서 어떻게 읽고, 이를 진보의 상황적 개념(예, 참여)으로 도출해 어떻게 현실의 실천을 통해 구현하느냐는 모두 ‘해석적 투쟁’ 하나로 연결된다.

‘어떻게 진보의 가치를 읽고 현실로 구현하느냐’의 해석적 투쟁은 진보도시 만들기의 전체과정(목표설정과 실행) 뿐만 아니라 개별과제의 추진에 함께 적용된다. 진보를 가로막는 현상태, 진보(가치)를 옹기는 실천 방법, 진보의 지속을 위한기반, 진보의 궁극적 지향성 혹은 결과 등이 모두 해석투쟁의 대상이자 영역이다. 첫째, 현재 상태(시스템)에서 무엇이 진보적 가치의 발현을 가로막고 있는 지에 대한 해석이다. 국가나 시장의 힘이 우월하여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가 배제된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억압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실한 방법에 대한 해석이다. 가령, 시민사회 주체가 개혁주체로 나서려면, 공공적 삶(public life)에 대한 시민 참여와 개입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진보도시를 향한 혁신들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다. 가령, 시민권력의 강화, 거버넌스의 제도화, 시민의 실질적 주체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낼 지를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보의 최종성과에 관한 해석이다. 가령, 포용과 참여를 통한 시민의 주체화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것(예, 도시권)으로 구현해야 할지를 철저히 고민해야 한다.

해석적 투쟁을 통해 성취될 도시의 ‘진정한 진보(real progress)’는 ‘사람의 번영(human flourishing)’이다. 이는 경제가치 중심의 외형적 도시성장에 대한 반추이면서,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온 도시의 초절적 진보(예, ‘자아실현’, ‘인간성의 실현’, ‘인간다움의 발현’등)로의 회귀다. 도시의 진정한 진보는 사람(people)이 ‘도시진보의 초점(focus of urban progress)’에 놓일 때 가능하고, 도시의 진보성(progressiveness)은 (초계급적 의미의) ‘사람의 번영(human flourishing)’이란 잣대로만 측정되어야 한다.

2) 진보도시의 구성 요소(pillars)

사람중심의 도시적 진보는 시민의 주체화를 통해 도시자치를 시민중심(주도)적인 것으로 바꾸고, 나아가 경제중심의 성장의제들을 사람중심의 진보의제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 전자는 도시의 포용성을 위한 '기존 거버넌스의 혁신'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도시의 분배정의를 향한 '(정책과 실천)의제의 혁신'을 의미한다 (그림 참조). 혁신(진보)의 이 두 영역은 진보도시를 향해 가는 과정(process)의 두 축이다. 이 두 축의 혁신(진보)을 통해 '생태적 지속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문화적 풍부화'에 의한 사람중심의 삶, 즉 '사람의 번영'이 구현된다. '생태적 지속성을 통한 생태정의의 실현'과 '문화적 풍부화를 통한 자율적 삶의 구현'은 진보도시의 이상인 '사람의 번영'(결과상태)의 기반(전자)이면서 표출의 방식(후자)이다. 이 모두를 합쳐보면, 통합적인 개념으로서 진보도시는 '과정'으로서 '포용성(inclusion)'과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 '결과상태'로서 '문화적 풍부화(conviviality)'와 '환경적 지속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네 꼭지(요소)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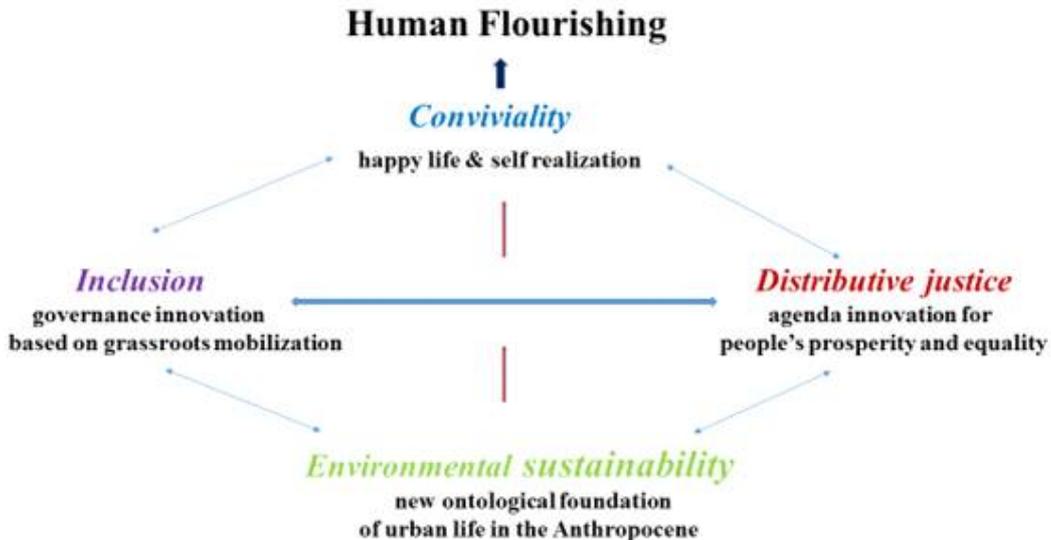


Fig.1. Four constitutive pillars of the holistic concept of progressive city

(1) 포용성: 시민 주체화를 통한 도시권의 실현

포용성은 시민들이 공적 삶(public life) 전반에 대한 그간의 배제와 소외에서 주체적 능동적 참여와 개입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사람(과 그 가치)을 진보 도시 만들기의 중심으로 끌어드리고 위치시키며, 또한 사람을 중심으로 진보의 가치 실현(사람의 번영)을 이끌어내는 방식과 제도의 규칙화가 포용성의 실제적 내용이다. 포용성의 제도화는 도시의 통치체제(지방정부)를 열어 시민 참여를 다양하게 허용해야 하고, 또한 시민 주도와 시민(사람) 필요(needs)의 충족을 우선하는 것으로 정책의제와 추진방식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시민사회의 요소(사람, 자원, 가치, 방식 등)가 국가 혹은 정부영역으로 투입되고 GO-NGO간 협치의 다양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의 주체화 혹은 권능화(empowerment)가 실효적으로 돼야 한다. 포용성은 시민을 시정의 주체로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그렇게 해서 시민주도로 진보도시

만들기가 다양한 참여와 협력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포용성은 시민주체화를 통해 시민을 시정의 주체로 만드는 것을 넘어, 누구나 도시에서 행복한 자아 실현적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도시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2) 분배정의 : 사회경제화를 통한 분배정의의 구현

공적 삶에 대한 참여(포용성)는 정책결정에 대한 주체적 개입을 통해 도시자원들을 거주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해 공동의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번영(성장)에 맞춘 기존의 지배적인 정책결정 구조에서는 정책자들이 시장경쟁논리에 따라 배분됨에 따라 사람의 번영을 우선해야 하는 부분(예, 복지부문, 사회적 약자 부문 등)은 배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차별을 겪는다. 따라서 참여를 통한 주체화는 이러한 자원의 왜곡된 배분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시민참여를 통해 기존의 (토건적) 성장과 개발중심의 정책의제들을 분배와 사람중심의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책 자원의 배분도 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과 성장중심 의제의 비중을 줄이고 포괄적인 복지 관련 의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한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인위적 개입을 통해 자원을 소극적으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지속가능한 분배가 되기 위해서는 분배의 왜곡을 동반하는 도시인들의 ‘경제하는 방식’ 혹은 ‘경제적 삶’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가령, 약육강식 경쟁을 강제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삶과 경제가 함께하는 ‘사회경제’(호혜의 경제, 삶의 경제, 협동경제 등)의 확충을 통해 공동성의 원리 혹은 협동과 호혜의 원리에 따라 도시자원이 배분될 때 분배는 더욱 지속가능해진다. 자동차, 집, 기구 등의 생활자원을 함께 나누어 쓰는 경제활동으로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는 공동성의 원리에 따른 지속가능한 분배를 이끌어내는 한 방법이다. 오늘날은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얼마나 생산하느냐 보다 생산된 자원을 어떻게 재활용하면서 공평하게 나누어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시장경제를 넘어서거나 보완하는 사회경제(삶의 경제)의 확장과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하면서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도시의 진보를 의미한다.

(3) 상열(conviviality, 相悅): 문화적 풍부화를 통한 시민 자율적 삶의 구현

상열(相悅)은 기쁨을 서로 나누는 한자말이지만 행복을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한다. 상열의 도시(city of conviviality)는 도시의 구성원들이 물질적 번영을 넘어서 행복과 같은 비물질적 번영을 함께 누리는 도시다. 이는 ‘자아실현을 통해 행복’의 상태에 이르는 자율적(주체적) 삶이 이루어는 폴리스를 이념형으로 하는 진보도시의 한 유형이다. 기쁨으로 은유되는 ‘행복’이란 정신문화적 삶을 진보도시의 중요한 상태 지표로 삼는 것은 그간의 도시적 삶이 개발주의 혹은 시장주의 문화에 젖어 있는 것에 대한 반성과 극복을 전제로 한다. 속물적 이익 추구에 경도된 개발주의의 극복은 탈개발주의 정책으로만 가능하지 못하고 생활방식이나 문화 자체가 탈물질적 가치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바뀔 때 가능하다. 상열의 도시는 ‘포용’과 ‘분배정의’의 구현을 통해 이룩되는 진보도시의 결과상태지만, 진보도시 만들기 관점에서 보면, 시민들이 행복하면서도 자아실현적인 자율적 삶을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정책의 대상이기도 하다. 문화정책이 하나의 수단이 되지만, 진보도시를 지향하는 문화정책은 시민과 행복과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예, 수원시의 인문학도시 정책). 문화를 수단으로 하여 시민의 행복한 자아 실현적 삶이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문화 대신 토속문화, 상업문화 대신 생활문화, 제도문화 대신 일상문화, 외래문화 대신 전통문화, 개발문화 대신 보존문화, 시장경제 대신 문화경제, 문화생산 대신 문화향수가 정책으로 육성해야 할 대상이자 영역이다. 상열은 삶의 문화적 풍부화로 나타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자아실현적, 자율적 삶이 가능해진다.

(4) 환경적 지속성: 환경순환의 복원을 통한 생태정의의 실현

문명으로서 도시의 진보는 자연에 대한 지배와 그 파괴를 비용으로 하여 성취된 것이다. 생태적 성찰성을 결여한 문명적 진보는 자연이 갖는 생명 순환적 기능을 약화시켰고, 환경위기 시대인 오늘날에 와서는 인간의 생명적 기반 자체를 지탱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사람중심의 도시의 진보와 번영은 자연의 수용력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사람의 번영은 자연의 번영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은 도시적 삶의 존재적 토대가 되고 있으며, 그 토대가 견딜 수 없는 인간중심의 삶은 결코 더 이상 지탱 가능할 수 없게 되었다. 도시의 진보는 이전 생태적 진보와 함께 가야하고, 도시의 정의는 생태적 정의와 함께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환경체제로서 도시의 환경순환 시스템이 복원되어야 한다. 에너지 순환 시스템의 개혁, 훼손된 도시자연의 복원, 도시차원에서 지구적 환경 책임의 수행, 녹색소비로의 전환, 생태윤리의 실천 등은 환경공생적 도시진보를 위한 수단들이다. 이러한 생태적 전환을 도시차원에서 어떻게 이끌어낼 지는 도시정치를 얼마만큼 녹색정치로 바꾸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도시의 녹색정치는 도시권의 하나로 생태권이 인정되고, 또한 도시인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실천을 통해 구체권리로서 생태권이 행사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권리로서 생태권은 환경약자 혹은 생태약자의 권리를 인간종(사람)이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행사된다. 따라서 도시권으로 생태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진보도시에서는 인간종과 생물종 간의 정의, 즉 생태정의를 실현된다. 도시도시 만들기의 일환인 도시의 환경순환 복원은 궁극적으로 도시차원에서 생태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5. 맺음말: 진보도시론의 한계와 과제

추후 작성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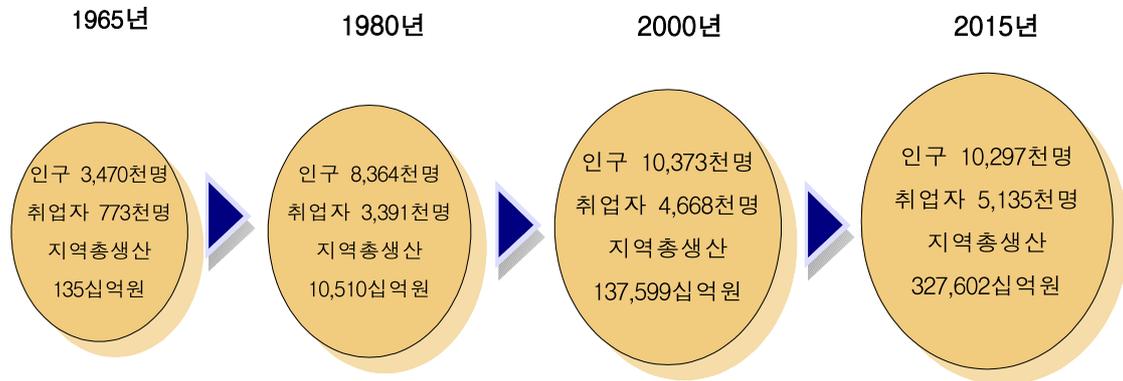
- 김창성, 2008, “폴리테이아와 키비타스: 정치체제와 공간구조의 비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주최 인문 한국 사업 제 1회 학술대회: 도시공간 및 도시사의 인문학적 패러다임 발표논문.
- 김헌, 2011, “역사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문명의 기원,” 김민정 외 편, *문명안으로*, 서울: 한길사.
- 안성찬, 2011, “문명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나?,” 김민정 외 편, *문명안으로*, 서울: 한길사.
- 박경, 2011, “혁신 자치체는 가능한가?: 일본의 경험과 교훈,” 조명래, 김수현 외 지음,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서울: 한울.
- 서영표, 2011, “풀뿌리 진보정치의 가능성: 광역런던시의회의 사례,” 조명래, 김수현 외 지음,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서울: 한울.
- 조명래, 2002, “사회과학의 등장배경으로서 계몽주의의 재조명,” *공간과 사회*, 18, 161-179.
- 조명래, 2013, *공간으로 사회읽기*, 서울: 한울.
- 조명래, 2015, “박원순 시정의 거버넌스: 진보도시를 위한 업무수행적 거버넌스,” *대구경북연구*, 13(2), 1-19.
- 조명래, 2016, “도시의 앞날, ‘진보도시’의 조건은 무엇인가?,” *한겨레*, 2016년 5월 19일.
- 최병두, 2016, 데이비드 하비, 서울: 커뮤니케이션이론 총서.
- 한상연 역, 2014, *빈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에이도스(Harvey, D.,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s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 London).
- Cho, M. R., 2015, Progressive city in the making,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rogressive city, hosted by The Seoul Instituted, held in Seoul, 15th-16th October 2016.
- Clavel, R., 2010, *Activists in City Hall*,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Douglass, M., 2015, The rise of progressive cities for human and planetary flourishing - a global perspective on Asia’s urban trans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rogressive city, hosted by The Seoul Instituted, held in Seoul, 15th-16th October 2016.
- Hamilton, Peter, 1992, The Enlightenment and the birth of social science, in Hall, S. and Gieben, B.(eds.), *Formations of Modernity*, Oxford: Polity.

발전도시 위기와 포용도시로의 도시정체성의 재정립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1. 들어가며 : 대도시 서울, 위기의 기원에 관해

- 서울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성장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대도시로 성장
 - 65년 인구 3,470천명, 취업자수 773천명, 지역총생산 135십억원에 불과하던 도시는 80년에 8,364천명, 2,391천명, 지역총생산 10,510십억원에 도달
 - 2015년 현재 서울은 인구 10,297천명, 취업자수는 5,135천명, 지역총생산은 327,602십억원에 이르는 글로벌 대도시로 성장



<그림 1> 대도시 서울의 성장과정

- 이 같은 성장은 다른 선진대도시가 약 100여년 넘는 역사를 거쳐 도달한 수준을 불과 한 세대에 실현한 괄목한 수준의 것임
- 그러나 이렇듯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압축 성장을 거쳐 오늘날 글로벌 대도시로 성장해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서울은 오늘날 과연 도시다움을 갖추고 있는가? 나아가 우리는 이 도시 안에서 과연 행복한가?
- 우리 대도시가 대면하고 있는 다양한 거시 구조적 현안은 이러한 질문에 선뜻 긍정적 대답을 내리기 어렵게 하고 있음
 - 우선, 인구의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 십 년에 걸친 고성장이 막을 내리고 이제 저성장이 새로운 정상이 된 뉴노멀 시대의 도래
 - 경제적 불평등과 공간적 격차도 심화되고 있으며, 주거·복지·건강·교육 등으로의 형평한 접근이 어려워 시민 다수는 여전히 사회적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도 과거 고성장 시대의 심각한 후유증
 - 사회구성원간의 소통과 배려의 정신은 희석되고, 지역사회 결속의 근간이었던 공동체 유대감(연대감) 또한 계속 약화되고 있음

- 이러한 다면화된 도시 현안들은 복잡하게 뒤얽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진정 “대도시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도시위기의 실체를 진단하고,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 즉 대안적 도시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중차대한 숙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이 글에서는 우리 시대 대도시 서울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적 도시발전 경로, 즉 새로운 도시정체성을 정립해 보고자 함
 - 이 경우에 우리 시대 대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기원은 사회발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의 관점에서 볼 때, 60년대 이래 서울이 거쳐 온 “특수한 역사적 경로”를 통해 축적된 구조적 모순들의 결과로 이해함
 - 그 특수한 경로는 ‘발전도시’(developmental city)라 부르는 모델로, 발전도시 서울은 다양한 정치경제적 여건에 의해 이중의 경로를 나타냄
 - 이러한 발전도시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 대도시가 직면하는 위기의 본질(실체)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도시 서울의 도전과제로 설정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도전과제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포용도시’(inclusive city), 즉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에 기반한 도시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안적 도시발전 경로가 될 것으로 제안함

2. 발전도시 서울에 관한 예비적 논의

1) 대도시에 관한 다양한 시선, 그리고 한국의 도시

- 20세기 초반 이후 최근까지 자본주의 도시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존재
- 고전적 시선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자본주의 여명기에 도시가 가지는 사회경제적 기능으로 도시를 바라봄
 - 도시는 생산양식에 따른 분업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바라본 마르크스의 시선, 5가지 조건이 충족된 이념형의 도시로 바라본 베버의 시선에 더해,
 - 사회적 유대(기계적 유대/유기적 유대)의 변화 속에 근대도시가 가지는 기능과 효과에 주목한 뒤르켐의 시선 등이 그것임
- 이러한 시선은 20세기 초에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변화·발전에 초점을 두는 더욱 세련된 시선으로 발전
 - 경쟁-지배-계승-침입의 생태적 과정으로 도시의 공간과정 및 공간구조를 바라보았던 생태적 공동체로서의 도시가 그러한 세련된 시선을 대표하며,
 - 이는 규모/밀도/이질성에 의해 구성된 독특한 도시적 생활양식, 즉 익명성, 아노미, 비인간성 및 피상성 등에 착목한 ‘생활양식으로 도시성’이라는 더욱 세련된 시선으로도 발전함

- 이외, 베버의 시선에 기초하되 도시내 희소한 자원과 시설을 통제·배분하는 ‘도시관리자’에 초점을 둔 도시관리주의(urban managerialism) 시선도 존재

○ 여기에 더해 자본주의 도시체계와 도시 내부의 사회관계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신마르크스주의적 구조주의 시선도 존재**

- 자본축적의 공간으로서 도시, 그리고 자본의 순환과정에서 도시의 건조환경이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준 D. Harvey의 시선이나,
- ‘집합적 소비의 단위’로서 도시를 바라본 M. 카스텔이 그러한 시선을 대표 이러한 경험적 현상을 목도해 많은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발전국가라는 새로운 이론에 기초해 많은 논의와 실증연구를 수행

○ 21세기 들어 우리는 근대도시를 넘어 새로운 도시(post-modern city)의 출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을 목도하고 있음

- 포스트모던 도시(post-modern city), 창조도시, 혁신도시, 진보도시, 일상도시 등 도시 내부의 새로운 현상들을 다채로운 시선으로 살펴봄

○ 중요한 점은 이들 도시에 관한 다양한 시선은 궁극적으로 각 시대, 각 국가의 도시들이 가지는 **고유성과 차별성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해석하고자 한 시도들이라는 점**

- 즉, 자본주의 “도시”의 성격이나 구조 등은 ‘자본주의 경제의 변화·발전,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 등을 통해 접근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역사적 구성체로서 도시는 시대별·국가별로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점

○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경험한 한국의 도시, 특히 공공주도의 단기간 압축성장을 보인 글로벌 대도시 서울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 식민지 경험과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산, 전쟁(한국동란)의 경험과 이에 따른 폐허의 역사 위에,
-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거의 부재하고 시민사회는 미발달한 사회적 상황의 존재

○ 앞서 소개한 다양한 시선과는 다른 한국적 특수성, 한국 대도시의 차별성을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시선이 필요

- 즉,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시민사회가 출현하여 자립적 기반과 성장을 경험한 서구사회와 상당히 다른 역사적 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상이한 이론적 시선이 요구됨
- 이 연구에서는 그것이 최근 국가이론으로 출현한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이론적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봄

2) 발전국가, 그리고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한국

○ 전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사회과학에서 새로운 성찰이 생겨났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패러다임으로 알려진 노력임

- 여기에는 전후 빠른 경제성장을 구가한 일본을 필두로 대만, 싱가포르, 한국, 그리고 최근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음
- 이들 국가에서 새로운 경험적 현상을 목도한 많은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발전국가라는 이론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많은 논의와 실증연구를 수행

○ 여기서 발전국가 패러다임은 ‘국가중심의 제도편제와 경제성과와 연관시키는 이론, 기술, 주장의 집합’을 의미

- 이 패러다임에서 국가가 핵심적 설명변수로, 경제발전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여 민간부문(시장경제)을 지도·규율·조정하는 주체로 설정되며,
- 이를 위해 자원의 전략적 할당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이 실현되는 다양한 구조와 과정, 관계를 심층 해부함
- 계획합리적인 발전국가(plan-rational developmental state), 배태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 지도되는 자본주의(guided capitalism) 등이 발전국가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들 (Johnson, Evans, Wade, Weiss&Hobson 등)

○ 물론, 이 경우에도 같은 동아시아 내에서도 각 국가가 가지는 역사적 조건이나 현재적 여건에 따라 발전국가를 규정하는 조건들은 차별적임

- 한국의 경우,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 군부 쿠데타에 의한 정권, 이념경쟁 등은 후술한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라는 독특한 한국적 모델을 형성
- 이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모델이 (대)도시의 성격과 변화를 근본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60년대 이래 이중의 경로를 통해 성장한 발전도시 서울을 해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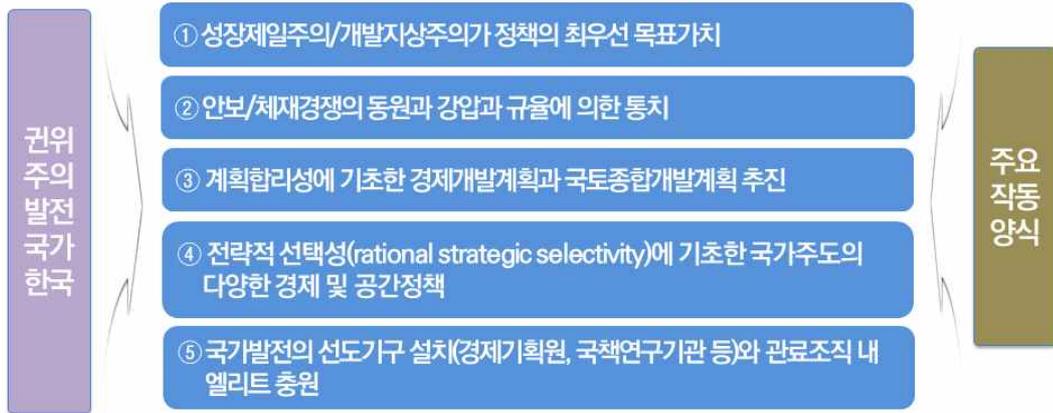
○ 한국의 경우 한국동란 이후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다른 발전국가와는 상이한 경로가 형성되도록 하는 배경으로 작용

- 식민지 상태에서부터 해방이 되자마자 겪은 한국동란은 사회를 극한의 저개발 상태로 몰아넣는 한편, 체제경쟁이라는 정치적 조건을 형성하였으며,
- 해방 후 농지개혁에 따른 지주계급의 해체 또한 신흥자본가 계급의 형성과 대비되는 노동 및 시민 사회 영역의 미발달을 초래

○ 이러한 정치경제적 조건 하에 한국은 60년대~80년대에 이르는 소위 ‘개발연대’로 명명되는 시대에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모델(경로)을 확립

-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창출한 국가는 절차적 민주화보다는 경제적 성과(성장)을 통해 자신의 허약한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던 바,
- 정부는 그 기반조차 부재한 시장경제 창출하고 빠른 경제성과를 내기 위해 자본과는 성장동맹을 형성하는 한편, 노동과 시민사회는 억압하거나 통제
-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이념과 체제경쟁을 적극 활용하고, 각종 통제와 억압 수단을 동원해 사회를 통치하는 전략을 추진

- 이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에 경제성장을 향한 국가운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요약될 수 있음



<그림 2> 권위주의 발전국가 한국

- ①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는 무엇보다도 성장주의/개발주의 가치가 정책의 최우선의 목표가치를 형성
 - 한국동란 이후, 체제경쟁, 쿠데타를 통해 창출된 정권은 ‘조국근대화 기치’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정당화의 소재(locus)를 경제성장에서 찾았으며,
 - 이에 따라 경제성장, 경제개발이 다른 모든 사회·정치적 가치를 압도하였으며, 이러한 가치위계에 따라 국가의 자원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배열됨
- ② 발전국가는 계획합리성(plan-rational)을 추구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합리성, 효율주의가 행동 원리로 확립됨
 - 계획합리성의 현실화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을 총괄하는 중기계획인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경제개발계획을 공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2가지 축으로 전개됨
 -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62년 발표된 ‘제1차 계획’과 수정계획을 필두로 개발연대 내내 정부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한 반면, 국토종합계획은 경제계획보다는 뒤늦은 70년대부터 시작해 2000년대까지 이어짐
 - 특히,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2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추진되던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총괄하는 수단 동시에 향후에도 지속하겠다는 종합구상을 담고 있음(심용택, 2015)
 - 이들 전략계획이 발전국가를 작동시키는 핵심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 계획의 종언은 사실상 발전국가의 종언을 시사하는 것임
- ③ 제한된 물적 자원, 시장경제의 미형성 등은 정부정책에 있어서 자연히 ‘전략적 선택성’(strategic selectivity)의 원리가 작용하도록 함
 - 발전국가의 전략적 선택성은 산업과 공간의 두 가지 차원을 통해 전개되었으며, 전략의 실효성을 위해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활용됨
 - 실제, 발전국가의 정책운용은 자의적이고 때로는 강압을 동반해, 당시 국가의 각종 특혜를 통해 성장하던 대기업(재벌)에 조차 강한 규율기제와 실적주의가 작용

○ 산업적 측면에서 전략적 선택성은 '전략산업 육성'으로 구현되었고, 공간적 측면에서는 경제개발계획에 기초한 '성장거점 조성'으로 구체화됨

-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¹⁾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에 기초한 수입대체전략과 수출주도전략이 추진되었는데, 60년대 1,2차 계획에서 6대 기간산업 육성에 더해 70년대~80년대 중화학공업정책 등이 그것임
- 자연히, 이러한 전략은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통해 실현되었던 바, 개발연대 내내 정보-대자본(재벌)-금융으로 이어지는 삼각동맹체제를 형성(Amsden, 1990; Wade, 1990, 이병천, 1999; 전창완)
- 성장거점 조성과 관련해서도, 60년대 1,2차 5개년계획에 담겨있는 특정지역개발전략은 국가의 경제 성장에 공간(지역)을 선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7,80년에도 면면히 이어짐
 - 60년대에 서울-인천(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한 1극 성장거점 전략은 70년대 중화학공업육성 전략을 계기로 2극(수도권-영남권)으로, 다시 80년대 이후 다극화 전략으로 확대

④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다른 핵심요소는 관료제적 선도기구(pilot agency)와 엘리트의 충원을 지킬 수 있음(Johnson, 1982; Onis, 1991)

- 경제기획원이 이러한 선도기구는 매우 강력한 위상과 권한을 가졌는데,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에 수반되는 각종 자원의 동원과 운용에 더해, 제반 경제 및 산업정책을 총괄 조정·지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김병국, 1996).²⁾
- 발전국가 전략의 다른 한 축인 국토공간개발과 관련해서는, 내부무 안에 통합되어 있다가 70년대에 조직이 분화된 건설부가 국가개발전략의 선도기구로 부상함

○ 중요한 점은 이들 선도기구를 중심으로 독특한 정책 자율성 체계가 확립되는 한편, 엘리트 관료의 충원구조도 확립됨

- 선도기구의 성공은 유능한 엘리트의 충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민간영역(고시출신, 유학파, 교수 등)으로부터 충원되는 것 외에도 경제개발 전략의 초기에 군부 출신자들도 다수가 전문 관료로 충원됨
- 특히 경제기획원 출신의 관료는 타 부처 장차관, 청와대비서관으로 진출해 정부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군부 출신 관료는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수장으로 활동

○ 발전국가는 그 성공의 증거였던 경제발전, 즉 국가 주도로 시장을 창출하고, 그 결과로 재벌·대기업이 성공한 것이 오히려 발전국가를 약화·해체시키는 근본 요인이라는 점에서 "발전국가의 역설"(paradox)이 존재

- 80년대 들어 정부의 중화학공업 위주 수출주도전략이 과잉중복투자, 외채부적과 급격한 인플레이, 금융기관 부실화 등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자,
- 정부가 주도해 다시 과잉중복투자 조정, 경제안정화 대책, 경제의 자유화와 민영화 등 일련의 구조개혁을 모색했으나, 이미 재벌·대기업은 정부 통제의 손을 벗어난 상황이었음
- 여기에 더해 외부에서 부과된 경제의 세계화와 자유화,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87년) 등 거시구조적 요인까지 결합해 90년대 이후에는 발전국가가 급속히 약화·퇴조

1) 당초 1차 5개년계획에서 수입대체전략이 모색되었으나, 미국의 반발로 재작성된 수정계획에서는 "수출주도공업화전략"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수출주도전략에서 돌파구로 작용한 것은 한-일국교정상화였다(박태균, 2013)

2) 경제기획원은 경제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주관하였고, 63년 이후에는 부총리를 겸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경제동향보고회의를 주재함. 나아가 부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각종 협의·조정기구를 다수 관장하기도 함(경제기획원, 1982). 아울러, 당시 관료조직의 취약한 기획 및 정책개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국가 특유의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국책연구기관도 설치·운영함

-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새로운 경로로의 이행을 자극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새로운 경로(모델)가 어떤 성격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함
 - ① 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가 초래하는 역설, ② 정치적 자유화와 시민사회의 부상, ③ 정치·행정적 분권화와 지방자치제의 본격화
 - 특히, 지역으로의 권역이양을 의미하는 ③은 90년대 중반 이후 서울의 경로의 형성과 성격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3) 발전도시(developmental state)에 관하여

- (권위주의적)발전국가를 작동시키는 핵심 요소가 전략적 선택성에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전략 실행의 공간인 도시는 늘 발전국가에 체계적으로 통합됨
 -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발전국가가 독점하던 권력과 자원의 소재지(locus), 경제활동의 집결지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의가 지대함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발전국가는 시종일관 도시를 전략적 활용, 이를 위한 통제와 지배의 대상으로 인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자립적 기반 확보 등의 내생적 요인과 발전국가의 약화와 같은 외생적 요인에 의해 특수한 역할과 제한된 자율성도 향유
 - 경제적 자유화나 재벌의 성장, 정치적 자유화 증대, 그리고 이에 더해 행정분권화(지방자치제 등)는 발전국가의 약화를 통해 새로운 틈새를 창출함
 - 이러한 기본조건 위에 경제적 중심성이나 재정적 자립성 등을 확립한 대도시 서울(수도서울)은 스스로가 확립한 특수한 위상이나 자립성에 기초해 발전국가로부터 분리되어 자기주도성을 확보함
- 발전도시(developmental city)는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국가-도시간 이중적 관계와 힘에 의해 규정되어 형성됨
 - 여기서 발전도시는 앞서 논의된 “발전국가의 발전주의 패러다임(발전국가의 작동양식)을 전부 또는 일부 공유하는 도시”로 개념화될 수 있음
 - 발전도시는 강한 발전국가 시기에 국가에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발전도시 경로를 경험한 이후, 점진적으로 독자적인 발전도시 경로를 이행하는 도시임
- 물론, 도시는 발전국가와 같이 발전주의 양식을 독자적으로 이행하기에 현실적·제도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발전도시는 “의제적” 수준의 발전도시(pseudo developmental city)일 수밖에 없음
 - 발전도시는 (발전)국가와 정치행정적 관계 속에 배태되어 있으며, 국가처럼 독자적인 정책결정 권한 및 역량을 가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발전도시는 완전히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을 뒷받침하는 공간개발·물적개발 정책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렇게 보면, 발전도시에서 “발전”(development)은 순수한 의미의 경제발전전략이나 산업발전 전략을 내포한다기보다는 지역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된 물리적·공간적 “개발”을 지향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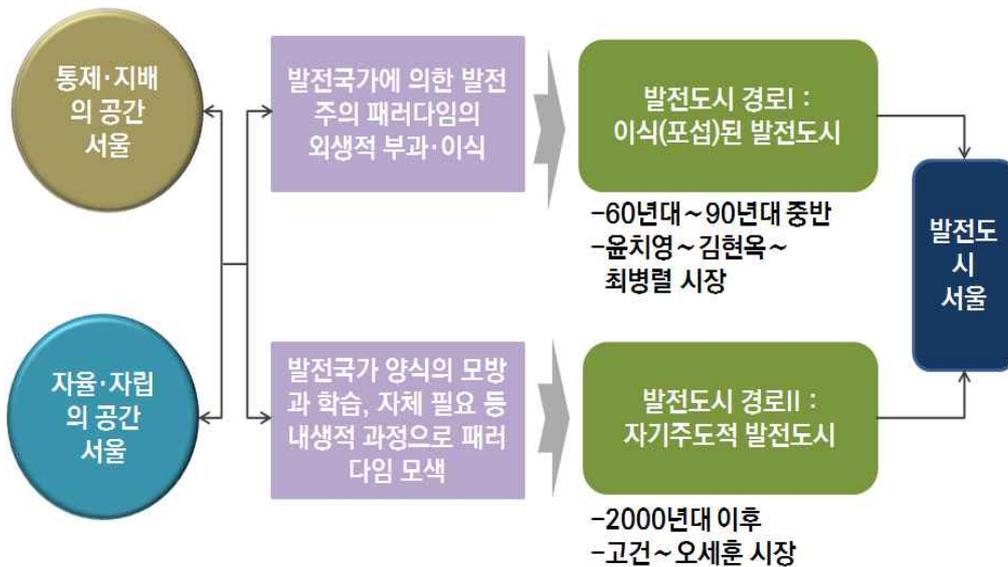
○ 이와 같은 발전국가도시 간 관계에 기초해, 발전도시 서울은 발전국가가 나타내는 진화의 궤적에 의존해 이중의 발전경로로 이행함

○ 발전도시 경로 I : 이식(포섭)된 발전도시 서울

- 발전국가가 출현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을 선도해 가던 역사적 국면에서 도시는 발전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포섭됨
- 이에 기초해 발전국가가 도시 내에 발전주의 패러다임을 이식·강제하는 과정에서 발전도시 경로를 확립
- 대개 60년대 중반(김현옥 시장)에서부터 90년대 초·중반의 시기로 볼 수 있음

○ 발전도시 경로 II : 자기주도적 발전도시 서울

- 발전도시는 발전국가의 정치경제적 통제력 상실, 지방자치제 등의 제도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자립 및 자율적 기반을 확립함
- 이러한 국면에서 발전도시는 기존의 이식된 발전도시에서 탈피해, 발전국가 양식의 모방과 학습 혹은 자체적 필요 등 내생적 과정에 의해 스스로 발전주의 패러다임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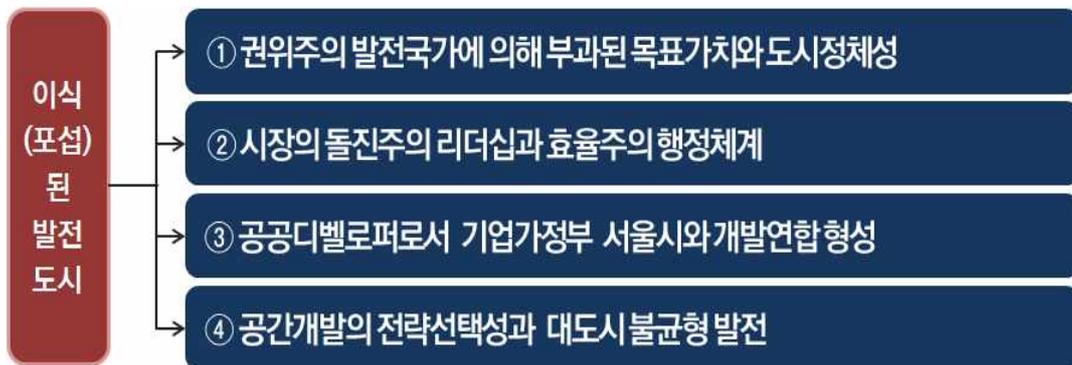
<그림 3> 발전도시의 경로: 이식된 발전도시와 자기주도적 발전도시

3) 영어의 development는 발전과 개발의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로, 발전도시가 가지는 특수한 관계와 역할을 고려하면 발전도시는 개발도시, 그리고 발전주의(developmentalism) 패러다임은 개발주의 패러다임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임.

3. 발전도시 서울의 어제와 오늘 : 발전도시 이중경로

1) 이식(포섭)된 발전도시 서울 : 돌진주의 개발행정체제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60년대~90년대 기간 동안 성장일변도와 효율주의에 기반한 국가의 경제 정책에 의해 규정되어 대도시 서울의 시정 기조와 정책, 조직체계가 확립됨
 - 이와 같이 발전국가에 의해 구조적·체계적으로 포섭된 대도시 서울에 대해 “이식된 발전도시” 또는 “포섭된 발전도시”로 규정할 수 있음
- 이식(포섭)된 발전도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근간으로 작동함



① 권위주의 발전국가에 의해 부과된 정책 목표가치와 도시정체성

- 대도시 서울은 발전국가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확인했듯이, 오랜 자본주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온 자본주의 도시와는 상이한 목표가치가 작용
 - 서구의 (대)도시는 자립적 기반을 갖춘 경제와 시민사회 주체들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중심으로 경쟁과 갈등이 전개되고 시장실패가 초래됨
 - 한국의 (대)도시는 이러한 갈등의 중재하고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하는 서구의 도시와 다른 정책가치가 작용
- 특히, 발전국가의 최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통치권자(박정희 대통령) 개인이 서울에 대해 가지는 정책가치와 도시관(都市觀)이 도시를 강하게 규정
 -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된 발전국가 고유의 목표가치로서 i) 성장제일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개발주의에 더해, ii) 도시미관주의, iii) 안보 및 체제경쟁 등임
 - 당시 도시에 대한 관한 대통령의 인식은 서구 자본주의 도시역사 초기에 발견되는 ‘도시미화운동’이 기초하고 있는 인식, 즉 “아름답고 질서있고 깨끗한 서울”로 집약될 수 있음
 - 여기에 더해 한국동란과 남북분단 상황에서 유래한 안보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과 경험 또한 도시 공간구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

- 이러한 정책 목표가치에 의해 6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개발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전개됨
 - 실제, 도시 내부적으로는 무허가 판잣집 철거, 한강종합개발 및 강남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추진되는 한편,
 - 대외적으로도 수도권 그린벨트, 나아가 임시수도 건설로까지 전개됨⁴⁾

② 서울시장의 돌진주의 리더십과 효율주의 행정체계

- 한국의 권위주의 발전국가가 다른 동아시아 발전국가에 대해 가지는 차별성의 하나는 1인 중심으로 정치권력의 집중과 발전국가 내에 도시 및 지역의 체계적 통합, 그리고 이로 인해 국가에 대한 도시의 강한 의존성임
 - 이러한 국가-도시간 관계에 기초해, 발전국가의 각종 정책(전략)이 실효성을 얻고, 또 효율적으로 추진됨
 - 유사한 맥락에서 당시 통치권자(박정희 대통령)의 실행주체인 군부출신의 시장들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정책가치와 통치방식을 충실하게 대리함
 - 이들 시장이 서울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처방은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의 인식과 명령 체계에 맞춰져 있었음
- 이 경우에 시장이 기초하고 있는 리더십은 이른바 “돌진주의 리더십”⁵⁾이라는 개념으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돌진주의적 리더십에 기초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근대적 도시인프라가 축조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시장리더십은 당시 통치권자의 리더십을 학습·모방한 것으로, 어떤 시장은 ‘불도저시장’(김현옥 시장)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함
 - 현재 일부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구조물들, 즉 주요 도로·교량, 터널 등을 조성했고, 서울역 고가, 청계고가, 강변도로, 그리고 도심부의 세운상가, 낙원상가 등도 이 시기에 조성됨
 - 이러한 돌진주의 시장리더십은 다른 군부출신 시장인 구자춘 시장(74년~)으로도 이어져, 대규모 강남개발 프로젝트로 전개됨
- 돌진주의 리더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완료라는 점에서 돌진주의 리더십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요소가 “효율주의” 행정체계임
 - 권위주의 발전국가로부터 이식된 발전도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서 효율주의 행정이 지배하는 사업 추진의 사례는 수없이 많이 발견됨

4)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대도시 서울의 직접적 지휘통제는 경제성장과 인구가동에 따른 과밀혼잡의 문제에 더해, 이념경쟁에 따른 안보문제라는 이중적 사고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 내적으로는 강남개발, 외적으로는 수도권 그린벨트/임시수도건설론 등으로까지 전개되었음

5) 일부 문헌에 따르면, 불도저 시장으로 알려진 김현옥 시장은 ‘돌격’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헬멧을 쓰고 시도 때도 없이 건설현장에 출현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을 속성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전’이라는 슬로건을 즐겨 사용함. 이러한 돌진주의적 인식체계는 후대의 구자춘 시장 시절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함

6) 이외, 한강운중재 건설 등 한강종합개발, 서울 주변부에 판잣집을 16만여 동 정리하고, 그 자리에 시민아파트를 수백동 건설한 것도 돌진주의적 개발행정에 지배된 김현옥 시장 시기에 추진됨

◆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발현된 효율주의 극대화

-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428km에 달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투입해, 불과 2년5개월 만에 완성
- 이러한 효율적으로 행정체계는 8,90년대에도 이어져, 신도시개발과 주택200백만호 건설과정을 살펴보면 89년 1~2월에 밑그림에 그려지고 89년 12월에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외, 발전도시의 대표적 메가프로젝트의 하나인 한강 운중제 개발의 경우에도 이른바 “100일 작전”이라는 이름하에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초고속으로 추진됨

- 이러한 발전도시의 돌진주의 리더십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 효율주의 시정으로, 오늘날 공공에 의한 시민사회의 압도, 절차적 합리성 약화, 6백년 고도서울의 역사성과 도시성 해체 등 우리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겨 줌

- 개발주의와 효율주의에 입각한 ‘돌진주의 개발행정’에 의해 오늘날과 같은 물리적 외관을 가진 근대적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걸린 시간은 채 10년이 걸리지 않음

③ 공공디벨로퍼로서 기업가적 정부 서울시와 개발연합 형성

- 고도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의 집중, 그리고 대량의 인구유입은 단기간에 도시에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수요를 유발

- 실제, 1960년에 245만 명에 불과하던 서울의 인구는 80년에 이르면 836만 명으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가구 수는 45만에서 185만 가구로 증가함
- 이러한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파트로, 60년대에 도입되고 70년대에 확산된 이후, 80년대와 90년대 초반 들어 주택 5백만호(전두환정권)와 주택 2백만호(노태우정권) 등 정권의 사활을 건 사업으로 추진
-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주거양식으로서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공공재원으로, 이를 위해 해방 이후 도입되어 6,70년대를 풍미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나 ‘아파트지구제’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이 강구됨

- 서울시는 이 토지구획정리제나 아파트지구제 등을 활용해, 공공디벨로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본을 동원함

- 70년대 초반만 해도 건설자본은 독자적인 산업경제 영역으로 성장하지 못하던 시대로, 주로 공공(서울시) 주도로 도시개발을 추진함
- 이러한 구조적 여건 속에서 서울시는 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활용해, 한강변 매립지 사업이나 영동지구개발 사업을 추진함

- 본격적인 대규모 아파트개발은 뒤 이은 80년대로, 파격적인 제도적 지원책에 유인되어 대규모 자본들이 주택개발에 동원됨

- 주택건설촉진법(72년)은 건설자본이 미발전한 환경에서 정부주도로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건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주체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
- 이외, 76년의 아파트지구제, 77년의 주택개발업체 등록제 도입 등도 공공주도로 주택시장과 건설자본을 창출한 주요 제도적 수단임

○ 이러한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자본이 주택건설에 동원되어 주택-산업의 결합되는 주산복합체가 형성되고, 다수 주체들이 대형 건설자본으로 성장함⁷⁾

-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건설자본-소유자(투기자)로 이어지는 발전국가/발전도시 특유의 '개발연합'(developmental coalition)도 형성됨
- 정부와 서울시는 자본 측에 저렴하게 토지를 매각하고, 채권 발행을 통해 개발수익을 향유하며,
- 건설자본은 각종 제도적 특혜로 저렴한 토지를 손쉽게 확보하고, 타인자본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건설수익을 창출

○ 이러한 발전도시 특유의 메커니즘에 기초한 개발주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물량주의에 기초한 재벌-대기업의존형 주택공급체계, 민관유착에 기초한 공공-민간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개발과 정에서 도시의 역사성·장소성·공동체성의 해체를 초래함

④ 공간개발의 전략적 선택성과 대도시의 불균형 발전

○ 발전국가와 유사하게 발전도시가 나타내는 핵심적 속성 중 하나는 특정한 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거나 집중 개발하는 '공간개발의 전략적 선택성'임

- 도시의 중심지 육성과 특정지역의 산업적·상업적 개발이 그것으로, 현재에도 대도시의 핵심정책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
- 전통적인 '일극중심 전략'으로부터 60년대 중반 이후 80년대에 이르기까지 3핵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화 전략'⁸⁾으로 이행에 반영됨

○ 공간개발의 전략적 선택성 I : 재개발을 통한 도심부 공간의 구조고도화

- 70년대 중반에 재개발 수법이 도입된 이후, 80년대 들어 아시아게임과 올림픽게임 개최 준비를 계기로 파격적인 수준으로 도심부 재개발이 추진
- 현재 도심에 입지한 대규모 오피스 빌딩은 대개 이 시기에 정부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막대한 제도적 특혜에 힘입어 조성된 것임⁹⁾

7) 여기서도 정부는 건설자본을 동원해 대량의 주택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청약저축제도, 분양가 상한제와 선분양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른바 주산복합체의 면모를 보임

8) 3핵 구상은 과거 60년대 중반 김현옥 시장(66년~)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구상으로 발전하던 시기는 구자춘 시장(74년~)때임. 이 시기에 기존의 단핵 도심의 공간구조에서 3개 도심(구도심-여의도-강남)을 고려한 공간구조가 제안되었는데, 내용적으로는 이미 여의도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므로 사실상 강남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에 다름 아님

9) 현재 도심(4대문내)에 입지하는 대규모 오피스 빌딩은 대부분 86년, 88년 메가이벤트를 명분으로 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막대한 제도적 특혜 속에 조성되었으며, 이후 90년대까지도 이어졌음

- 이를 통해 도심부 공간은 발전국가의 경제성장(본사를 갖춘 대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고차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경제거점 공간으로 전환됨

○ 공간개발의 전략적 선택성Ⅱ : 여의도 개발

- 현재 서울시의 다른 전략적 거점공간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의도의 경우에도 60년대 후반(김현옥 시장)에 윤중제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화
- 한때, 여의도를 중심으로 제2의 서울건설 구상(양택식 시장)으로까지 비약한 여의도 개발은 70년대 초반(양택식 시장)에 시 재정확충 전략의 일환으로 여의도 고급아파트 개발로 구체화되었고,
- 70년대 중반 이후(구자춘 시장)에는 공공의 개입과 유도에 의해 방송시설, 금융기관(증권), 경제단체 입주 등으로 전개됨
- 이러한 공간개발 과정을 거쳐 여의도 또한 서울시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경제성장 거점(금융거점) 공간으로 발전함

○ 공간개발의 전략적 선택성Ⅲ : 강남 개발

- 발전도시가 나타내는 공간적 전략선택성의 정점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70년대 이후 진행된 강남개발¹⁰⁾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영동1지구 개발의 경우(서초·양재동 일대), 60년대 말 경부고속도로 조성(68년)을 계기로 설치된 제3한강교(한남대교)와 연계되어 논의되다, 경부고속도로 조성(68년)을 계기로 70년(양택식 시장)에 본격화됨
 - 영동2지구 개발(삼성·청담·압구정·대치동 일대)에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시가화하고 그 중심부에 당시의 상공부와 산하기관들을 대거 이전·유치시키는 것으로까지 구상이 이루어짐
- 이 강남 개발은 권위주의 발전국가와 여기에 포섭되어 있는 발전도시의 공간개발 메커니즘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에 해당
- 우선, 성장가치와 다른 한 축인 '안보가치'에 지배된 발전국가의 인구분산(강북→강남 이전) 전략을 돌진주의 리더십으로 무장한 시장이 적극화하고,
- 그 전략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의 지원책과 자원 및 활동의 이전 등 공권력을 대대적으로 활용함
 - 상공부 종합청사와 서울시정 이전 구상, 지하철2호선 건설, 고속터미널 입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대규모 아파트지구 지정 등 오늘날은 상상하거나 실행하기 힘든 막대한 공간재배치 전략을 담고 있음
- 이렇게 보면, 오늘날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와 번영의 집중, 높은 재산 가치는 오랜 역사적 과정의 산물로서, 막대한 공적자원의 집중 투자, 그리고 사회의 다른 영역의 희생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임

○ 발전도시의 핵심적 메커니즘으로서 공간개발의 전략적 선택성은 현 시점의 대도시 서울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줌

10) 전체적으로 강남개발의 규모를 살펴보면, 영동1·2지구(9백만평), 잠실지구(4백만평), 개포지구(258만평), 수서 41만평이 토지구획정리를 통해 개발용지로 변모됨. 70년대의 여의도 개발이 80만평 규모인 것과 비교해보면 가히 천문학적 수준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의 개발임. 사실상 이 시기에 서울시와 정부는 공공주도로 중소도시 몇 개를 불과 20년도 채 안된 기간에 완수한 것임

-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불균형을 다른 의도된 불균형의 해소하고자 한 전략이 오늘날 심각한 불균형(강북쇠퇴와 강남중심 성장)을 새롭게 초래하게 된 ‘발전도시의 역설’(paradox of developmental city)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균형의 도시공간구조의 기원을 이룸
- 더 역설적인 점은 결과로 형성된 지역간 불균형(강남일변도의 발전/강북쇠퇴)은 이어지는 시대(후술하는 자기주도적 발전도시)에 강북 뉴타운사업과 같은 새로운 공간개발 전략을 초래했다는 점임
- 아울러, 공간개발 전략선택성은 발전도시의 강력한 개발주의와 맞물려, 도시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생활세계에서 식민화되거나 뿌리 뽑혀 그야말로 공동체가 해체되는 결과를 목도하게 된 점도 중요한 시사점임

2) 자기주도적 발전도시 서울 : 개발주의 패러다임의 회귀

- 80년대 후반 이후, 권위주의 발전국가가 약화되는 국면은 발전도시에서도 새로운 경로의 형성, 말하자면 이식된 발전도시에서도 균열과 틈새를 창출함
- 특히, 기존의 발전도시가 현실에 가져온 다양한 모순과 병폐는 민선시장 이후에 새로운 경로로 이행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됨
 - 대표적인 것인 성수대표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으로, 시정기조나 정책가치의 전환에 관한 많은 공론화 과정이 있었음
 - 이러한 과정에서 민선1기(조순 시장)와 민선2기(고건 시장) 기간에 탈발전도시(post-developmental city)로의 전환이 일부 모색되기도 함
- 지방자치 제도가 더욱 본격화된 민선3기와 4기에 들어서는 다시 새로운 도시경로, 즉 ‘자기주도적 발전도시’의 경로가 나타남
 - 이 시기에는 서울이 가진 자립적 경제기반과 재정자립성, 행정역량을 토대로 국가의 명령과 지시에 의존하기보다는, 독자적인 발전주의 패러다임을 모색
 - 이 과정에서 기존의 도시가 초래한 문제를 물리적 개발을 통해 해결하려는 전략이 모색되는 한편, 글로벌화되는 경제환경을 고려한 도시경쟁력주의가 향상이 새로운 핵심 도시의제로도 부상함
- 물론, 민선3기와 4기의 ‘자기주도적 발전도시’가 전통적인 개발주의 패러다임에서 출발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과거와 차별성도 존재함
 - 실제, 이 시기에 도시는 (경제)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도시의 물리적·비물리적 개발 중심의 정책 목표가치를 공유해, 대도시 성장과 개발을 위한 다양한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경제의 글로벌 경쟁을 근거로 한 경쟁력주의라는 새로운 목표가치가 부상하는 가운데 소프트 전략이 점차 강화됨
- 이러한 맥락에서 민선3기와 4기 사이에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바, 이 연구에서는 민선3기를 ‘경성(hard) 발전도시’로 규정한다면, 민선4기는 ‘연성(soft) 발전도시’의 시대로 구분하고자 함

- 이하에서는 민선3기와 4기를 대표하는 4개의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자기주도적 발전도시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함

① 경성 발전도시 I : 도심개발을 선도하는 청계천 복원과 동남권 유통단지

- 민선3기의 대표적 사업인 청계천 복원은 대도시 발전사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준 것이 사실이나 발전도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그것은 이식된 발전도시 시대의 역사적 유산이었던 청계천이 민선시장의 공간개발 전략에 의해 해체되고 재구성된 프로젝트로서 의미를 가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물리적 환경의 개조를 통해 복원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개발과 토건의 관점에 입각
- 제한된 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효율주의 기반의 기술합리성에 크게 의존한 양상을 보여줌

- 더욱이 이 사업은 해당 장소의 환경적·역사문화적 생태와 복원에 한정되기 보다는 도심부 개발 프로세스와 의도적·전략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개발주의를 작동시키는 효과적 기제로 작용

- 실제, 이 사업과 함께 추진된『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04년)에서는 현대도시의 효과적인 개발수단인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있음(*기존 기준용적률을 300%⇒향후 600%로 상향 조정)

- 이 사업의 개발지향적인 인식과 태도, 그리고 전략의 실행은 도심부 산업의 이전대체지로 모색된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에도 반영되어 있음

- 이 단지 조성에서 서울시는 기업간 연계와 산업간 복잡한 관계 등 생태계에 관한 심층적 고려가 없이 사업을 추진
- 그 결과 사업은 단순히 이주상인 수용을 위한 물리적 시설 조성으로 전략

② 경성 발전도시 II : 공간개발의 전략적 선택성과 뉴타운사업

- 이식된 발전도시가 추진한 강북개발 억제와 강남중심 개발의 경로의존성은 오늘날 강북의 발전지 체라는 구조적 모순을 초래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색된 공간개발 전략이 민선3기의 ‘새로운 기성시까지 재개발 모델’로 설정되어 추진된 ‘뉴타운 사업’임

- 이 뉴타운 사업은 개발주의 패러다임의 핵심 기제였던 공간개발의 전략적 선택성과 효율주의가 집약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발전도시의 맥락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으로 인식 가능

- 당초 3개의 시범지구로 출발한 사업이 전략적 프로세스가 작용하면서 35개 지구(262개 구역)로 확대되었는데,
- 이렇게 대규모의 이해관계도 참여한 개발프로젝트가 단기에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효율주의’의

발전도시 메커니즘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작용함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활용, 턴키(Turn-Key) 방식의 사업체계, 과도한 토지보상 등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 이와 같이 뉴타운 사업의 극대화된 개발주의, 효율주의 일변도는 궁극적으로 생활세계를 식민화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갈등적 구조로 만들어내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노정함

③ 연성 발전도시 I : 발전도시의 전략거점으로서 한강변의 개발

- 70년대에 거점형 공간개발 전략으로 추진된 사업의 하나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강종합개발’과 이어지는 한강변 아파트지구 개발로, 이것이 민선4기에 들어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되돌아옴
 - 이 사업은 ‘한강종합개발사업’ 이래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8개의 주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한강수변부와 주변지역을 물리적으로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 총사업비는 31조원, 연면적 320만㎡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 오피스 면적만 여의도지역의 절반 규모, 쇼핑시설도 코엑스의 6배에 달함

- 이 경우에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용산업무지구 개발프로젝트는 과거 권위주의 발전국가 시대 개발주의(developmentalism) 패러다임이 초래하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함
 - 계획수립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철저한 배제, 적정 보상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은 물론, 민간 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

④ 연성 발전도시 II : 도시경쟁력 향상을 향한 발전도시의 고도화, 디자인서울

- 민선4기를 대표하는 다른 정책은 잘 알려진 ‘디자인서울 정책’으로, 다양한 물적·비물적 사업이 결합된 패키지형 정책으로 추진
 -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조성 등의 디자인 정책에 더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 디자인관련 정책들로 구성되어 추진됨
 - 발전도시의 이행경로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면, 디자인서울 정책은 2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됨
- 우선, 이 사업이 도시의 새로운 의제로 설정된 ‘도시경쟁력주의’와 결합되는 가운데 물리적 환경의 조성에 주력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개발주의”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고 있음

- 기실 이식(포섭)된 발전도시 시대에 개발주의를 추동했던 요소의 하나가 당시 통치권자의 도시미관 주의였음을 고려해 볼 때, 디자인서울은 이러한 도시관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한편,
- 내용에 있어서는 공공주도 하에 물리적 개발 일변도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세계에 다양한 영향을 초래하고 많은 논란도 불러일으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 문화(디자인) 등 연성적 성격의 정책가치 지향은 발전도시 고유의 경로 의존성을 넘어 탈발전도시(post-developmental state)로의 전환가능성도 함축하고 있음

4. 대도시 서울의 도전과제와 새로운 도시정체성

1) 위기 속의 발전도시 서울의 도전과제

-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한국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는 21세기 들어 새로운 국가모델로 자리를 내 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도시 서울에도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 지난 4,50여년에 걸친 발전도시 서울의 이행경로, 즉 ‘이식된 발전도시 서울’로부터 ‘자기주도적 발전 도시 서울’로의 이행이 그것임
- 오늘날 대도시 서울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적 요소들(1장 참조)은 상술한 발전도시 서울이 각 역사적 국면에서 창출된 각종 구조적 현안문제들이 누적·중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 즉 “도시 진화의 퇴적층”으로 형성된 것임
- 이하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위기적 요소들을 고려해, 향후 대도시 서울이 해결해야 할 도전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① 뉴노멀 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경제의 확립

- 발전국가 그리고 여기에 구조적으로 통합된 발전도시의 시대에 우리경제는 지난 70년 이래 크고 작은 경제위기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 70년대에 있었던 금융위기와 국제무역수지 위기, 79년~80년의 외채위기 등은 국가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경제적 교란의 성격이 강하다면,
 - 이어지는 97년과 08년의 글로벌 위기 등은 국가와 도시 모두에서 그 위기가 보다 근원적이고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줌
- 이런 가운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국제적으로 고도 경제성장이 무너지고 저성장이 정상이 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돌입
 -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통계적 구조에 기인한 바 크나,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

- 대도시 서울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고도성장/압축성장을 경험한 이후인 탓에 저성장의 정상화가 주는 임팩트는 깊고도 무겁게 다가오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 저성장의 여건 속에 국가경제는 물론 도시경제 또한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산업의 경쟁력 또한 날로 약화되는 있는 실정

- 특히, 국가 지식서비스의 공간적 집적지로서, 그리고 산업혁신의 중심지로서 서울경제의 지속가능성은 일차적으로 서울이 직면하는 도전적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러한 여건에서, 발전국가 시대를 지배하던 요소투입형, 투자주도형 경제시스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재벌·대기업과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전략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

② 성장지상주의·개발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 재성찰

○ 시장경제의 미발달, 자원의 부족 속에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은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은 물론, 서울경제의 양적·질적 발전에 기여한 것이 사실임

- 국가경제의 축적의 공간, 노동력 재생산의 저수지로서 서울은 다양한 개발 전략을 선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성장 전략을 전후방에서 뒷받침함
- 아울러, 2000년대 이후에는 도시경쟁력 강화가 글로벌 도시의 새로운 정책의제로 부상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 또한 모색됨

○ 그러나, 앞서 강조된 바와 같이 오늘날 국가는 물론 도시 차원에서도 성장제일주의는 더 이상을 유효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개발지상주의 시대 또한 서서히 역사의 뒀안길로 저물어가고 있음

- 21세기 들어 경제사회의 구조변화로 인해 사회계층의 분화가 활발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치에 더해 탈근대적, 탈물질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들이 경쟁, 충돌하는 가치의 다원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성장과 개발의 가치에 의해 지배되던 발전국가로부터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로의 이행은 상기의 다원화된 가치와 이해관계를 포용하고, 또 실현하는데 제한적인 정책환경을 제공함

○ 향후에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인문학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적 패러다임이 요구됨

- 여기에는 복지실현, 차별과 배제의 해소, 불평등의 완화, 연대와 협력 등의 사회적가치는 물론,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포용과 배려, 소통과 경청의 행정문화 확립 등의 인문학적 가치 등도 포함함
- 이러한 대안적 패러다임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고 사회적 관계의 토대를 이루면서도 발전국가의 시대에 약화되었던 사회의 공감능력을 확대·강화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을 것임

③ 계획합리성과 효율주의의 지배적 원리로부터 대전환 모색

- 발전국가 그리고 여기에 통합되어 있던 발전도시가 채택하고 있는 주요 행동양식은 계획합리성이었으며, 특히 기술합리성은 각종 경제개발 및 공간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준거가 되었음
 - 실제, 이 계획합리성은 복잡하고 불안정한 정치영역과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한 현실로부터 정책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 효과적 수단이 되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움
 - 아울러, ‘돌진주의 리더십’으로 요약되는 단기 실적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던 효율주의, 즉 효율일변도의 정책추진체계는 짧은 기간에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한 주요한 수단이었던 것이 사실임
 - 이는 발전국가가 해체되고, 발전도시로 이어지는 현 시대에도 민영화나 성과주의에 용해되어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기술합리성 중심의 계획합리성과 효율주의는 현재와 같이 글로벌화된 시장경제와 시민사회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복잡하고 불확실한 계획 환경에서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 대안적인 국정 및 시정 운영에서는 기술합리성 기반의 계획합리성에서 탈피해, 다양한 차원의 합리성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정책에서 절차적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에 관한 인식의 확산, 이에 기초한 상향적 계획이나 참여적 계획원리의 실천 등이 그 일환으로 보다 적극화될 필요가 있음

④ 과잉개발주의에 따른 공동체 해체와 생활세계의 식민화의 극복

- 돌진주의 개발행정, 그리고 이어지는 자기주도적 발전도시가 보여준 역사는 개발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도시개발의 역사에 다름 아님
 - 토지구획정리, 대규모 아파트개발, 재개발 수법에 매개되어 도심/여의도/강남을 중심으로 추진된 일단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이러한 역사를 극명하게 대변함
 - 이는 뒤이은 자기주도적 발전도시, 특히 경성발전도시에서도 나타나, 도시공간구조와 사회구성체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 것이 사실임

- 이러한 발전도시의 개발주의 패러다임, 그 결과로 창출된 도시의 성장과 번영이란 실상 해당 지역 구성원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생활세계의 식민화, 나아가 공동체의 해체를 대가로 한 것임
 - 실제, 60년대 후반 무허가판자촌 철거에서부터 7,80년대 달동네 재개발, 그리고 최근 뉴타운사업에 이르는 일련의 재개발 사업과 이로 인한 빈번한 주거이동은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세계로부터 뿌리채 뽑히는 결과를 초래
 - 향후에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자신의 생활세계를 재영토화하는 반성적(반향적) 기획(프로젝트)이 모색되어야 함

⑤ 대도시 내에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완화·해소

○ 오늘날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도시경제가 번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 또한 확대되고 있음

- 더욱이 발전도시가 오랜 기간 모색해 온 선별적 공간개발 전략은 오늘날 공간적으로 불평등, 즉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초래함
- 비록 이러한 불평등이 자본주의에 본원적이기는 하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전이 되고 있음
- 더욱이 최근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범사회적 대응이 긴요함

○ 주목할 점은 이러한 불평등의 기원이 발전국가에서는 공공에 의해 유도된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다는 점임

-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된 전략적 선택성은 자본 대 노동의 희생,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희생, 특정 부문의 특혜와 다른 부문의 희생에 의한 것으로, 그 불평등은 대도시에서 자산소유와 부동산 개발을 매개해 더욱 극적인 형태로 발전
- 발전국가와 그 대리인이었던 서울시에 의해 이루어진 7,80년대 전략적 선택성에 기반한 공간개발전략(3극 중심)은 오늘날 강남북간 불균형 발전을 포함한 지역간 불균형으로 귀결되고 있음

○ 향후에는 기회의 형평성, 공공시설 및 서비스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간 물적·제도적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임

⑥ 공공주도형 거버넌스의 심화에 따른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의 미발전

○ 이 연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가 가지는 강한 국가, 그리고 이어지는 발전도시 서울의 공공주도성은 고도 성장기에 일정한 강점

- 그러나 가치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분화되고, 경쟁·충돌하는 시기에 근본적인 제약요약으로 작용함
- 더욱이 공공주도성은 도시 사회발전의 근본적 동력인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발달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실제, 빠른 경제성장과 경제규모의 양적 팽창을 통해 서구 선진국에 비견될 정도의 경제수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 최근 '지역의 미래는 지역 스스로 결정한다'는 사회정치적 분위기에 힘입어 서울시 등 다양한 도시 및 지역 단위에서 재생정책,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여건에서 공공주도성에 대비되는 약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는 이들 정책들이 활력을 가지고 또 실효성을 가지는데 근본적 제약이 되고 있음

2) 새로운 도시정체성의 정립 : '서울형 포용도시'를 기원하며

- 앞서 논의된 도전과제에 직면해, 우리 도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도시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가?
- 이 연구에서는 최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정책화가 모색되고 있는 '포용도시'(Inclusive City)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인식함
- 포용도시는 비교적 오랜 연원을 가진 개념으로, 이미 60년대부터 유럽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다가 개념의 외연이 확대되고 국제사회에서 공식화
 - 당초 포용도시는 '사회적배제'-사회적안전망 밖의 계층-라는 협소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으나, 점차 빈곤과 실업의 증가로부터 사회적결속(포용)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논의가 확대됨¹¹⁾
 -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EU가 유럽사회헌장(89년), 암스테르담 조약(97년), 리스본 정상회담(00년)에서 사회적배제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구조기금을 목적으로 사회배제 해결을 언급하면서 공식화됨
 - 최근(15년)에 UNDP는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2030 아젠다를 공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포용도시를 포괄적 의미로 정식화
 - 포용도시 의제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지속가능성, 참여, 통합이 실현되는 정주환경을 계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의 향상(UNDP-SDG 11.3)
- 2000년대 이후에는 OECD, ADB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포용도시에 관한 상이한 접근, 즉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기반의 포용도시론"**도 출현
 - 여기서 '포용성장'은 전통적인 경제성장이 초래한 불평등의 심화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대안적 성장전략으로서 개념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성장을 향한 경제정책 토대 위에 '기회형평성'과 '재분배'(결과의 형평성)를 향상시키는 사회정책 및 재정정책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다차원적·통합적 성장전략**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기회형평성 차원에서 주거, 교육, 건강 분야 사회정책들이 강조되는 한편,
 -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즉 관련 기관, 절차, 정책수단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공조,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의 마련도 강조됨
- 이 글에서는 앞서 제기된 우리 시대 대도시 서울의 도전적 과제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포용성장 기반(지향)의 포용도시론에 입각해 우리가 나아갈 도시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함
 - 이하에서는 대도시 서울의 도시정체성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포용도시가 지향해야 할 4가지 전략의 방향을 제언함

11) 60년대에 프랑스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는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자를 지칭하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과 실업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결속의 균열을 지칭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유럽 각국으로 확산됨

①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구축

○ 앞서 강조된 바와 같이 대도시 서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대도시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은 궁극적으로 견실한 경제적 기반,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의 번영과 과실을 모든 계층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대도시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다음의 3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 산업적 다양성 : 과거와 같이 전략적 선택과 집중의 원리보다는 기술과 산업의 다양화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도시경제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함
- ㉡ 혁신주도형 도시경제 실현 : 현재 대도시 경제는 투자주도형 경제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할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는바, 창조와 융합에 기초한 혁신주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모색함
- ㉢ 경제적 리질리언스(economic resilience) 강화 : 거의 10년에 한번 도래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크고 적은 경제적 교란에 직면해 탄력적 적응·조정

② 소통과 배려의 공감도시(empathic city) 실현

○ 오늘날 공감은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존속시키는 인간의 본성이며, 생물학적(신경생리학적) 토대를 가짐(제레미 리프킨, 2010)

- 이러한 공감력이 자본주의 도시화가 가지는 개인화와 발전국가의 개발만능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침식되고 있음
- 21C 청소년, 청년, 노인 계층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고립과 단절감, 소외와 갈등은 새로운 패러다임, 즉 공간역량의 강화가 긴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공감도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접근하며, 이 경우 공감정책에서는 기존과 다른 정책원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 소통역량의 강화 : 공공영역 내부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교류를 학습·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
- ㉡ 배려의 사회적·정치적 문화의 촉진
- ㉢ 사회참여 촉진 : 구성원이 고립과 단절,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참여활동을 유도·촉진함

○ 공감도시와 관련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요소는 공감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는 사실임

- 과거의 정책에서는 목표-수단-결과간의 연쇄 고리가 어떤 정책의 타당성을 규명할 수 있는 준거였으나,
- 공감영역에서는 별도의 정책논리가 요구되는 바, 과정 자체, 소통 자체, 참여 그 자체가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치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

③ 더불어 번영하는 형평과 균형의 도시

- 발전국가에서 기원하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극심해진 오늘날의 다면적인 불평등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 통합성을 위해 사회 전체가 적극 대응해야 할 도전적 과제에 해당함
- 앞서 논의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의 패러다임을 고려해 볼 때, '형평과 균형의 도시 실현'은 다음의 3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 기회의 형평성 강화
 -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근본적 소득의 불평등에서 유발되고, 이것이 주로 경제활동참여 내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의 불평등에서 기원
 -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의 차별과 불안정 해소, 교육과 훈련으로의 접근성 개선, 공공 서비스와 건강, 주거 격차 해소에 주력함
- ㉡ 재분배의 강화
 - 도시 구성원들에 대해 사회보장체계(부담-급여)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 과세의 부담을 중심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지출을 통해 계층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대폭 재정비함
- ㉢ 지역간 균형발전 모색
 - 정책설계 시, 경제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더해 지역간 균형인식적 시각이 반영할 수 있는 정책프레임을 도입·운영하며,
 - 공공서비스 및 공공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적절한 공간적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에 관한 최저 기준선을 정립함

④ 공동체 회복과 생활세계의 재영토화

- 발전국가·발전도시의 역사적 유산으로서 성장·개발·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정책목표가치의 내재화는 공동체의 해체와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초래
 - 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생활세계를 재영토화해야 한다는 성찰과 다양한 정책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 현재 민선 5,6기에 전개되고 있는 사회혁신 제도와 사업들, 가령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은 여기에 일조할 것임
 - 이들 사회혁신형 제도와 사업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⑤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협치)의 고도화

- 오늘날 가치와 이해관계의 다원화, 참여요구의 비약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는 중요한 도전적 과제
 - 이에, 참여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중의 과제가 부여되고 있는 실정
- ㉠ 참여와 협력의 제도화
 - 협치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시민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 협치친화적·인지적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프레임을 새롭게 확립
- ㉡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시민·지역의 자산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과 시민사회-지역사회를 가교하는 중간지원기구 확대

참고문헌

-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 권원용, 2006, 월간 도시문제지를 통해 본 개발연대 한국 도시문제의 궤적, 도시행정연구 제21집.
- 김경민, 2011, 도시개발, 길을 잃다, 시공사.
- 김덕현, 1994, 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지역불균등발전,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편, 지역불균형연구, 한울.
- 김일영, 1999, 1960년대 한국 개발국가의 형성과정: 수출지향형 지배연합과 개발국가의 물적 기초의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121-143.
- 김양배·박세훈 역 1996,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M. Savage & A. Wade, 1993, *Urban Sociology, Capitalism and Modernity*, Macmillan)
- 김찬호 외 역, 1991, 도시와 사회이론, 풀빛.(P. Saunders., 1984, *Social Theory and The Urban Question*, London:Hutchinson & Co)
- 대한민국 정부, 1971,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 문돈·정진영, 2014, '발전국가모델'에서 '신자유주의모델'로, 아태연구 21(2), 129-164.
- 박은홍, 1999, 발전국가론의 재검토: 이론의 기원, 구조, 그리고 한계, 국제정치논총, 39(3), 117-134.
- 박은홍, 2003, 동아시아의 전환: 발전국가를 넘어, 아르케.
- 박인수, 2006, 서울시 뉴타운 정책 다시 생각하기: 도심형 뉴타운 계획을 중심으로, 건축과 사회 가을호, 38-45.
- 박태균, 2007,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손정목, 1997, 만원 서울을 해결하는 첫단계, 한강개발, 국토 7월호, 109-120.
- 손정목, 1997, 여의도 건설과 시가지가 형성되는 과정, 국토 10월호, 117-131.
- 손정목, 1998, 강남개발계획의 전개, 국토 11월호, 87-99.
- 손정목, 1998, 다핵도시 구상의 파급효과, 국토 8월호, 100-111.
- 손정목, 2003, 서울도시계획이야기 :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한울.
- 손정목, 2005,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한울.
- 손정원, 2006, 개발국가의 공간적 차원에 관한 연구, 공간과 사회, 통권 25호, 41-79.
- 심용택, 2015, 박정희 경제강국 굴기18년: 국토종합개발, 동서문화사.
- 안창모, 2010, 강남개발과 강북의 탄생과정 고찰, 서울학연구 41, 63-98.
- 유철규 편, 2004,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함께읽는책.
- 윤상우,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2002, 나남출판.
- 윤일성, 2001, 서울시 도심재개발 30년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47-167.
- 이병천, 2014, 한국 자본주의 모델 : 이승만에서 박근혜까지, 자학과 자만을 넘어, 책세상.
- 이정남 역, 공감의 시대, 민음사, (Jeremy, R., 2009, *The Empathic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Crisis*, Penguin)
- 이제민 외 지음, 2016년, 한국의 경제 발전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이주영, 2015, 한국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해서 본 발전국가론 '계획합리성' 비판, 공간과 사회, 25(3), 11-53.
- 임동근·김종배, 2015,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반비.
- 장경석, 2006, 발전국가의 공간개발, 공간과 사회, 통권 25호, 194-212.
- 조명래, 2005, 청계천 복원의 성과와 한계, 대한토목학회지, 53(11).

- 조희연, 1997, 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36권, 46-76.
- Amsden. A.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 Deyo. F. C(ed).,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Cornell Univ. Press.
- Evans, P., 1995,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Johnson. C.,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L. Weiss & J. M. Hobson., 1995, States and Economic Development: A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Cambridge, UK: Polity Press.
- Wade. R.,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사회적 경제와 대안적 도시만들기*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 본 연구는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선 한국의 도시가 더 이상 개발이익을 토대로 한 과거의 성장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발전모델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그 단초를 사회적 경제에서 찾고자 함
 -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상당 부분 정부에 의존하거나 관료화되는 등의 문제점도 존재
 -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부문이 어떻게 시장에서 자립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대안적 도시 만들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논의
- 한국의 도시는 저성장·인구감소·도심쇠퇴라는 구조적인 전환기에 들어서 있으며, 과거와 같은 개발이익에 기반한 도시발전전략이 한계에 이룸
 - 인구감소, 쇠퇴, 재생에 관한 논의가 확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는 감소, 제조업 중심의 도시경제기반이 몰락했으나 이를 대체해야 할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은 뚜렷하지 않음
 -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로 과거 도시개발의 기반이 되었던 개발이익 창출이 불가능해지는 반면,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국가의 복지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
- 이러한 도시의 여건이 이제 우리의 도시가 물리적, 물량중심적 발전이라는 경성적 도시전략보다 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추구하는 연성적 도시전략이 필요함을 의미
 - 연성적 도시전략은 단순히 개발사업을 중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개발중심주의, 개발만능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
 - 나아가 사회문화적 부문에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동력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 최근 사회적 경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하에 사회적 양극화, 일자리 감소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도시내 쇠퇴지역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조직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며 나아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짐

* 본 원고는 한국공간환경학회·서울연구원 공동심포지움(2016년 6월 24일)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아직 완성된 원고가 아니며 향후 수정·보완될 예정임을 밝힘

- 2007년 사회적기업진흥법이 제정된 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급속히 증가하여 오늘날 수 만개소에 이름

○ 그러나 동시에 작금의 사회적 경제 부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생력 부족 :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생존하며 시장에서 독립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함
- 지역사회와의 유리 :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 취약
- 사회적 경제부문의 관료화 : 초기 혁신적인 사회적 가치를 제기했던 사회적 경제조직도 장기간 정부 지원을 받거나 정부의 위탁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관료화되는 경향 존재

○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문제적 상황에 직면하여, 본 연구는 시장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어떻게 사회적 경제가 오늘날 한국의 도시사회에서 대안적 도시만들기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함

2. 도시전략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 개념적 논의와 분석방법

1) 사회적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

○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산업자본주의의 문제점과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라는 학문영역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사회개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적 전통으로까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음

- 1945~75년 서구 복지국가의 등장은 민간 자본주의 부문과 공공부문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사회적 경제의 변화를 야기
- 1990년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에 따른 대량실업과 복지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됨
- 2000년대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위해 시민사회의 집합적 대응전략으로 사회적 경제의 재등장

○ 사회적 경제를 보는 관점은 2가지로 대별됨

- 소극적 관점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보완으로써 보는 시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줄어든 국가의 역할을 '사회적경제'가 국가를 대신해서 취약계층의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
- 적극적 관점 : 신자유주의를 넘는 하나의 대안경제체제로 보는 시각으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본주의로부터의 해방 가능성을 찾으려는 입장

○ 국내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음

- OECD(1998)는 “사회적 경제란,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권한 보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재정적 결정,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용 등을 강조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로 정의함
- 드푸르니(Defourmy, 2008)의 경우 “이윤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하고,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1주 1표제 제외),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이해 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라 정의함
- 신명호(2009)는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란 협동조합들 가운데 사회적 목적, 자율성 및 민주적 의사결정, 이윤배분 제한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일부 협동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동조합, 비영리민단단체 중에서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의 경제활동과 무관한 단체를 제외한 NGO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함
- 장원봉(2007)은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Participatory economy) 방식”이라고 정의함

○ 이렇듯 빈곤과 분배를 둘러싼 경제, 문화, 사회관계 속에서 ‘사회적 배제’로 확대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대두 됨

- 우리나라도 2006년 12월 국회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안이 통과되었고, 2007년 7월부터 법안이 시행되고 36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로 대상이 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선정하여 지원

○ 오늘날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음

- 지역중심형 사회적 경제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 경제의 구축 가능
- 현재의 도시정비/지역개발정책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지 못함
- 주민주도의 지역정책, 지속가능한 지역정책의 추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 역할 필요

○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 형식을 통해 해결하고, 여기에 얻은 이익은 다시 지역에 환원하여 도시재생의 주요 목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을 달성하는 수단이 됨

-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 지원 : 지역 고용창출 및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
- 사회 서비스의 확대 : 복지, 환경개선, 문화 등 행정서비스가 미진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공급
- 공동체 활동 강화 : 지역자산 활용, 주민참여 등을 통해 공동체 활동 자극, 지역사회 활성화



출처: 서울시(2014)

<그림> 사회적 경제와 지역정책의 전환

2) 사회적 경제의 사회경제적 기반

○ 최근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배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와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화된 서비스 수요의 증가

- 전통적으로 도시서비스는 시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공급하였으나, 최근 서비스 수요가 지역화되고 다변화되면서 이에 대한 공급이 어려워짐
- 저소득층 지역의 교육서비스, 저소득층 집수리, 지역화된 문화예술교육 등이 그 전형적인 예임. 이러한 서비스들은 시장의 실패와 공공의 실패를 의미
- 사회적 기업가들은 이렇게 도시의 새로운 수요에 착안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 노력

○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의 성장

-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원조직은 넓은 의미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 해당. 최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센터 설립 활발
- 이 중간지원조직의 목적은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협력을 촉진하므로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임.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등의 정책목표가 기존의 정부 서비스로 해결되지 않는 여건을 반영함
- 많은 혁신적 기업가들이 중간지원조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와 협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원래 모 법인(시민사회단체)이 있어 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도 있고, 수탁을 위해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음

○ **정부 공모·위탁사업의 다양화**

- 최근 정부의 공모·위탁사업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 역시 다변화되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기존의 공모·위탁은 대체로 기술적인 계획도서 작성(도시기본계획 등)이나 각종 시공·건설과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문화예술사업, 커뮤니티 활성화, 마을만들기, 주민교육 등 사회혁신과 관련된 사업이 등장
- 이러한 위탁사업은 사회적 기업가의 활동기반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3) 분석대상과 방법

○ **분석대상**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익구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경제조직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이름	직책	조직	조직의 주요활동
박학룡	대표	(주) 동네목수	· 집수리 · 마을협의회 운영 · 마을카페 운영
김제선	센터장	(전) 대전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장	·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 사회적자본 지향 행정 · 협동네트워크 도시
이현선	사무국장	안산 좋은마을 만들기지원센터	· 마을만들기, 주민대학운영 · 조직지원사업, 교류협력 사업
임경수	센터장	(전)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 커뮤니티비즈니스 운영 · 로컬푸드 사업 ·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
유다희	대표	공공미술 프리즘	· 문화기획 및 프로모션 · 지역재생 컨설팅 · 공공디자인, 시설물 디자인
이현정	대표	사하품앗이	· 지역화폐 · 주민 청소년 교육 · 환경관련사업

○ (분석범주) 오늘날 사회적 경제의 핵심적 과제는 행정의 제도적 완전히 포섭되지 않고 시장경제에서 생존가능하면서도 도시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 범주를 생각할 수 있음

- 지역성 : 사업의 콘텐츠가 얼마나 지역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 얼마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활동하며, 그 활동의 결과 역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가?
- 수익성 : 수익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조직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항. 그러나 한편으로 생존 문제를 넘어서 수익기반의 확보방식 역시 도시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음

- 혁신성 : 단순히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대안적인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정부의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관료화되는 경향 존재(제도적 동형화, institutional isomorphism) 이러한 경향을 탈피하고 어떻게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의 혁신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가?

3. 제도화와 시장화의 사이 : 사회적 경제조직의 도전

1) 지역성 : 도시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o 지역성은 사회적 기업가가 얼마만큼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에 기초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가 여부

- 지역사회에서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것이 기존의 시장질서와 충돌하지 않아야 함
- 궁극적으로 콘텐츠의 내용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회에 대한 가치지향성을 의미 (어떠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o 조사대상 조직들은 지역사회 요구가 있으나 시장에서 공급하지 않는 서비스에 착안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시장질서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가능(많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카페 혹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문제 발생)
- 그러나 지역공동체로부터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역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조직은 많지 않음

“민간기업에서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경사가 급해 일반 공사차량이 들어오지 공사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집수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이것만 잘 파악해도 수익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공공디자인과 도시재생에 특화되어 있고 10년 정도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교육하기도 하고, 주민과 함께 마을만들기,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행정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이 하는 일은 예산과 규정에 얽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는 일은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비교적 그런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부서간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 하는 일, 여러 기관을 연계하는 일, 주민들이 필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o 동네목수(주), 공공미술프리즘은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하여 콘텐츠를 발굴한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며, 사하품앗이의 경우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교육사업을 시행

- 대체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들에 의해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나 지역주민이 기여한 부문은 많지 않음

2) 수익성 :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 수익성은 조직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익기반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

-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익기반을 갖추고 있는 조직은 매우 드물
-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원금(특히 인건비 보조)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정부 보조가 중단되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음
- 수익성의 확보는 지속가능성 문제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혁신성의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혁신성과 정체성 유지가 어려움

○ 바람직한 수익성의 확보방안은 지역공동체 내에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나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음

- 대체로 집수리 및 로컬푸드사업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됨

“저희는 타올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매우 특이하고 운이 좋은 경우라 할 수 있어요. 타올 제작을 통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공동체 활동에 사용합니다. 청소년 교육, 지역화폐, 환경교육 등의 활동을 합니다.”

○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과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등을 수익모델로 하는 단체도 존재하며 향후 정부 지원사업이 확대될 경우 이러한 모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 경우 조직이 지속적으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

“어느 정도라도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각종 공모사업, 민간기업의 SR사업 등을 통해 나머지 운영비를 조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고유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거나, 혹은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 사례 대상의 경우 일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주민이 주도가 되어 창업한 경우, 대부분 운영을 위한 독자적인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움

3) 혁신성 : 사회운동 혹은 행정관료?

○ 혁신성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단순한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

- 상당수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초기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해 설립하였으나 이후 시장에서의 수익활동에 치중
-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관료화되는 현상 발생

○ **아직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사가 깊지 않아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지만,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관료화의 우려가 있음**

“최근 독립적으로 활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행정자료를 요구하고 성과를 요구해요. 행정직원처럼 일하면 센터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래도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죠. 지역에 다른 시민단체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 데 저희는 그런 단체가 없어요.”

“저희도 관료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부 민간단체들도 위탁사업을 계속 운영하다 보면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요구에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많은 경우 단체보다는 개인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한 조직에서 실패할 경우 다른 단체로 이전하여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적인 노력을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우리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역공동체나 정부의 지원보다는 활동가 개개인의 헌신과 역량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함

4. 결론

○ **최근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역할 수행**

- 이러한 활동은 기존의 국가나 민간기업(자본)이 수행하던 방식과는 다른 내용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 시장경제에서 소외되거나 행정체계에서 포괄할 수 없는 한계화된 요구, 다변화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

○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매우 취약한 여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역성과 수익성, 혁신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조직이 명확한 콘텐츠를 가지지 못하거나 정부의 지원에 의존
- 특히 지역시민사회가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조직의 여러 활동들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조직은 정부나 주민이 아니라 일부 헌신적인 활동가들에 의해 운영·유지되고 있음
 - 현재와 같이 지역민사회가 취약한 상황에서 후원회비, 지역활동에 기반한 조직의 운영은 매우 취약하며, 정부의 지원방식 역시 일정한 성과를 전제로 한 직접 지원이 대부분으로 해외와 같이 다양한 간접지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대안적 도시만들기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가 향후 도시만들기의 새로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시민사회와 역량강화와 다양한 정부, 비정부조직의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활동가들을 활동기반이 확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박세훈, 2015, “도시재생의 동력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운영실태와 과제,” 국토, 409, 18-25.
- 박용규·최속희·주영민, 2009,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 서울시, 2014,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 성과보고회 자료집.
-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11-46.
- 양세훈 외, 2013, 마을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원.
- 장원봉, 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눔의집.
- 한국행정연구원, 2013, 사회적 경제 공동체 지원체계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Defourny and Nyssens, 2006, Defining social enterprise, in Nyssens, M.(ed.),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NY: Routledge
- OECD, 1998, Key Employment Policy Challenges Faced by OECD Countries,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31, OECD Submission to the G8 Growth, Employability and Inclusion Conference, London.